

2009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정란 · 정은미 · 이상신

2009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정란 · 정은미 · 이상신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6

2009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09. 12. 31

발 행 2009. 12.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발행인 박명규

저 자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정란·정은미·이상신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4052-4, 874-730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 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가 격 10,000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
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09 통일의식조사 / 박명규, 김병로, 김병조, 박정란, 정은미, 이상신.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p. ; cm.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 6)	
ISBN 978-89-959656-5-8 93330 : ₩1000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10000166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6

2009 통일외식조사



목차

서론	1. 조사목적	5
	2. 조사내용	8
	3. 조사방법	10
제1부 기초분석	I. 통일에 대한 인식	15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6
	2. 통일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19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23
	4. 통일 후 사회문제개선 기대 수준	27
	5. 통일과 민주주의	30
	6. 소결	35
	II. 북한에 대한 인식	39
	1. 북한의 존재 인식	39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43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45
	4. 북한위기의식	49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54
	6. 소결	59
	III.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62
	1. 남북교류의 통일기여도	63
	2. 통일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정책사안	70
	3.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77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84
	5. 소결	93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98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9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100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09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12
5. 소결	117
V.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국민의식에 나타난 세계와 북한: 한국인의 유연한 현실주의	122
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122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2
3.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136
4. 한반도 전쟁과 주변국	141
5.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	143
6. 국제 협력과 통일	145
7. 소결	147

제2부 심층분석

I. 통일의식 속에 나타난 남남갈등의 지형 분석: 지역과 이념	153
1. 지역갈등의 지형 변화	155
2. 이념갈등의 지형 변화	167
3. 소결	181
II.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183
1. 서론	183
2. 통일에 대한 ‘젠더’, ‘세대’의 아비투스: 갈등의 구조	185
3.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190
4. 결론	232

	III. 민주주의와 통일 :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외식	235
	1. 통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	235
	2. 민주화 선호경향 추출방법	237
	3.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246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254
	5. 소결	263
	참고문헌	266
	IV. 통일외식에 나타난 이성과 감성	268
	1. 감성적 통일선호와 이성적 통일선호	269
	2. 통일과 북한	282
	3. 소결	294
결론	1. 2009년 조사에 나타나는 통일외식의 특징	299
	2. 대북정책에의 태도와 함의	305
	3. 통일외식의 심층구조	309
부록	1. 응답자 특성	319
	2.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320
	3. 설문지	416

표목차

[표 1-Ⅱ-1]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성향별 신뢰도	47
[표 1-Ⅲ-1]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65
[표 1-Ⅲ-2]	통일이 되려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항	71
[표 1-Ⅲ-3]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78
[표 1-Ⅲ-4]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절성	80
[표 1-Ⅲ-5]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81
[표 1-Ⅲ-6]	대북 지원의 효과와 대북 지원규모 간의 관계	82
[표 1-Ⅲ-7]	남북경제협력에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	83
[표 1-Ⅲ-8]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85
[표 1-Ⅲ-9]	하위집단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교	86
[표 1-Ⅲ-10]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88
[표 1-Ⅲ-11]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89
[표 1-Ⅲ-12]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지원	90
[표 1-Ⅲ-13]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91
[표 1-Ⅲ-14]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92
[표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 연령별	125
[표 1-V-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 세대별	133
[표 1-V-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 지역별	135
[표 1-V-4]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137
[표 1-V-5]	교차분석 -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140
[표 1-V-6]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각국의 태도 예상	142
[표 1-V-7]	남북한 통일을 주변국들은 얼마나 원하는가?	144

2009 통일인식조사

[표 1-V-8]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146
[표 1-V-9]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 국가별	146
[표 2-I-1]	지역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ANOVA 결과	155
[표 2-I-2]	지역별 북한의 대상인식	159
[표 2-I-3]	대화·타협 가능 상대로서의 북한인식과 지역(2009)	160
[표 2-I-4]	지역별 주변국 선호도(2009)	165
[표 2-I-5]	지역별 주변국 선호도(2008)	166
[표 2-I-6]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성향 분포(2009년)	168
[표 2-II-1]	세대와 젠더에 따른 의견 차이·공감 문항수	191
[표 2-II-2]	ANOVA와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도 항목	192
[표 2-III-1]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평균(표준편차))	238
[표 2-III-2]	성분행렬	240
[표 2-III-3]	민주화 선호 변수와 집단구분(2007~2009년)	242
[표 2-III-4]	민주화 선호 변수와 관용성(2009년)	243
[표 2-III-5]	민주화 선호경향과 정치성향	244
[표 2-III-6]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245
[표 2-III-7]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2009년)	248
[표 2-III-8]	북한에 대한 인식(2009년)	251
[표 2-III-9]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09년)	255
[표 2-III-10]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2009년)	261
[표 2-IV-1]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통일 필요성 교차분석	269
[표 2-IV-2]	교육수준 / 통일인식 유형 교차분석	272
[표 2-IV-3]	통일선호집단의 연령별 분포	273
[표 2-IV-4]	북한사회 경험도 분포	276

[표 2-IV-5]	촛불 시위에 대한 각 집단별 태도 점수 분포	281
[표 2-IV-6]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각 통일선호집단의 평가	283
[표 2-IV-7]	각 통일선호집단이 보는 북한	284
[표 2-IV-8]	통일과 개인이익	288
[표 2-IV-9]	통일과 국가이익	289
[표 2-IV-10]	통일인식유형과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 T검정	291
[표 2-IV-11]	통일선호와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 T검정	293

그림목차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17
[그림 1-I-2]	통일의 이유	19
[그림 1-I-3]	통일의 추진속도	21
[그림 1-I-4]	통일의 가능 시기	22
[그림 1-I-5]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도	25
[그림 1-I-6]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도	27
[그림 1-I-7]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수준	30
[그림 1-I-8]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계	33
[그림 1-I-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관계	33
[그림 1-I-10]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35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41
[그림 1-II-2]	북한의 변화 정도	44
[그림 1-II-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46
[그림 1-II-4]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48
[그림 1-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50
[그림 1-II-6]	한반도 전쟁 가능성	53
[그림 1-II-7]	북한사회 인지도	54
[그림 1-IV-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100
[그림 1-IV-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102
[그림 1-IV-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104
[그림 1-IV-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106
[그림 1-IV-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108
[그림 1-IV-6]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11

[그림 1-IV-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13
[그림 1-IV-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15
[그림 1-IV-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116
[그림 1-IV-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17
[그림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123
[그림 1-V-2]	연령별 미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	126
[그림 1-V-3]	연령별 북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	128
[그림 1-V-4]	진보성향집단의 미국 및 북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추이	129
[그림 1-V-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2
[그림 2-I-1]	지역별 통일의 필요성 인식 추이(2005~2009)	156
[그림 2-I-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2009)	162
[그림 2-I-3]	지역별 이념성향 분포(2009)	169
[그림 2-I-4]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인식(2007~2009)	172
[그림 2-I-5]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2009)	174
[그림 2-I-6]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7~2009)	176
[그림 2-I-7]	대북정책의 만족도(2007~2009)	177
[그림 2-I-8]	보수의 주변국선호도(2007~2009)	180
[그림 2-I-9]	진보의 주변국선호도(2007~2009)	180

2009 통일의식조사

[그림 2-Ⅲ-1]	2009년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후)	241
[그림 2-Ⅲ-2]	분야 별 ‘안다(잘 안다+조금 안다)’는 응답 비율 (2009년)	253
[그림 2-Ⅲ-3]	대북정책별 통일에 도움 주는 정도 (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257
[그림 2-Ⅲ-4]	대북 사안별 시급한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258

IPUS

2009 통일외식조사

서론



■ 서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역류 사건 등으로 경색과 갈등 일변도로 지속되었던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모습과 가변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중반까지는 2차 핵실험과 강력한 대남비방을 지속하던 북한이 중반 이후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서울에 온 특사 조문단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근본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긴장 완화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조용하려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임진강 댐방류로 인한 인명피해로 새로운 긴장도 생겼으나 곧이어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2년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재개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그동안 위기론이 제기되던 개성공단 사업도 북한이 무리한 임금인상과 토지임대료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치료제의 대북지원으로 새로운 협력가능성도 논의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 2009년이였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된 상반기였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북미관계 및 북중관계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진행된 한 해였다. 오랫동안 북미 양자대화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왔던 북미관계가 9월 들어 타협점을 찾게 되고 마침내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양자대화가 현실화되었다. 북한 당국이 6자회담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포괄적 논의의 가능성을 피력함으로써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새로운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해인 북중 관계 역시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방문을 전후하여 더욱 긴밀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한반도 안팎의 변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있을까? 이런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남남갈등을 우려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염려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며 얼마나 과장된 것일까? 명분과 당위론으로 덮여진 상식화된 주장들의 내면에 실제로는 어떤 경제적 이해와 집단적 계산이 깔려있을까?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은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매우 절실하게 물어져야 할 것들이다. 물론 손쉽게 답해지기 어려운 물음들이고 단시일에 확정할 성질도 아니지만 진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매년 수행하는 통일의식조사의 분석결과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감성(affect), 인식 혹은 인지구조(cognition), 그리고 행태(behavior)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통일의식조사는 일반적 남한 국민이 통일 및 북한, 남한의 정치, 대외관계, 그리고 현 대북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지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평가와 생각, 지향이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이자 실태조사



서라 할 수 있다. 2007년도 통일의식조사와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는 이미 그 자체로서도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9년도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정책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 함의를 가짐은 물론이고 일회적인 정책적 찬반 조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심층적 의식과 가치, 정서의 흐름을 분석적으로 확인하려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단순한 설문조사보고서 차원을 넘어서 2009년도 한국사회의 가치체계와 집단정서의 구조를 드러내는 학술연구서로 이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¹

1. 조사목적

이런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심층적 평가와 재정립에 도움을 주려는 뜻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09년에 들어서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경색과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선의 조짐과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국민들의 평가 역시 새 정부출범 직후의 상황과는 적지 않게 달라지고 있다.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뚜렷하게 발견했던 ‘정부교체 효과’가 2년을 경과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¹ 물론 매년의 조사시기가 7-8월이기 때문에 2009년도 통일의식조사가 후반부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조사와 연속해서 검토해야 좀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환경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집단적 의식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래준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성적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적인 함의가 적지 않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정책 논의가 활성화될 수록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가치지향과 정책적 평가경향에 대한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확인작업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민감한 대북인식, 통일의식, 대외인식 등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런 변화가 말해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 조사는 앞으로도 그 의의가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사연구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감가능한 대북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하는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로 이 조사는 좀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심도 갖고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과학 및 역사학에서 힘을 얻고 있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의하고 문제를 규정하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성해가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정책형성이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는 한국사회의 자기정체성의 주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통일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은 그 자체로 독립변수로 작동하게 마련이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평면적 조사가 아닌, 종합적이면서도 시계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매년 상당한 공을 들여 이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의 하나는 매년 달라지는 환경



들에 반응하면서도 그 심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직은 자료의 축적이 충분치 못하지만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있는 변화와 흐름들이 확인된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비교됨으로써 일종의 한국인의 집합적 가치지향, 정체성의 동학, 집단정서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매우 흥미있는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로 이 일련의 조사작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는데 의미 있는 역사사회학적 비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한반도의 현 분단구조는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고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런 역사적 전환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이 확산될 수도 있다. 주변국의 반응과 개입방식,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 남북관계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판단, 집합적 의지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와 가치지향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크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 등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하는가를 시계열별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의 패턴, 정서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조사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합의식의 구조와 그 지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보고서는 늘 앞서 발간된 책자와

함께, 비교하면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 조사내용

2007년 시작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는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몇 설문 문항에서 세부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한 채 200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새터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이다.

2009년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 책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부문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개별 대북정책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태도, 남북 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설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가능성 및 북한 정권이 얼마나 신뢰 가능한 가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며 남북한의 차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등도 조사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 정책이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기타 평가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개성공단, 대북지원의 북핵연계, 대북 뼈대 살포문제,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조치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찬반 문항도 이 부문에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네 번째,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은 새터민에게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새터민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위상이 무엇이며 이들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들이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남한 정부는 통일을 위해 이 나라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들어 있다.

이상이 이 설문조사의 뼈대를 이루는 다섯 개 부분의 문항 구성이다. 이 밖에도 기초적 배경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이 조사되어서 다양한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일의식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변수를 포함했는데,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

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구체적 정치적 태도를 묻는 질문들로는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향쟁, 6월항쟁,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1970년대의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또 주요 사회 이슈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반미정사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시위나 파업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평가도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2007년부터 3년째 축적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2009년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요약 뿐만 아니라, 이전 인식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경향을 추적하였다. 제 1부인 기초 분석에서는 위의 기본 다섯 설문 부문에 대한 기초적 기술 통계를 소개하는 한편 지난 3년간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였으며, 제 2부인 심층 분석에서는 이 인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종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더욱 흥미로운 합의 도출에 목표를 두었다.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인 부록에는 응답자 특성,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설문지를 수록하여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3. 조사방법

2009년 통일인식조사는 2009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16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모두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pm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전국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하고 난 후, 각 지역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통/반)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조사된 표본의 수는 1,203명이었다.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 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책임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뽑힌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꾀하였다. 또 면접원들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여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빈도(frequency)는 이 책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 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 분석 자료를 포함하였다. 이외의 변수와의 교차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인식조사는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 1회 실시되고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해 통일인식조사의 내용에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설문조사의 각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2007년과 2008년의 문항을 변화시키지 않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문항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였으며, 이전 통일인식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문항의 경우엔 설문 문항의 내용이나 답지 구성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IPUS

2009 통일외식조사

제1부 기초분석



I. 통일에 대한 인식

지난해는 이명박 정부의 6.15선언과 10·4합의 재검토와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급변사태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억류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경색되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북측이 김기남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 등 핵심적인 대남사업 고위간부들로 구성된 특사 조문단을 남측에 파견하면서 남북관계는 서서히 해빙의 분위기를 맞게 되었다. 2년여 만에 이산가족상봉이 다시 재개되었고, 그동안 북한이 무리한 임금인상과 토지임대료를 요구함으로써 위기상태에 빠졌던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이 기존의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정상화되어가고 있

다. 또한 비핵화와 관련 하여 오랫동안 북미 양자대화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왔던 북미관계가 9월 들어 타협점을 찾게 되어 북한 당국이 6자회담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와 달라진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2009년의 조사결과를 2007년, 2008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난 3년 동안 나타난 통일인식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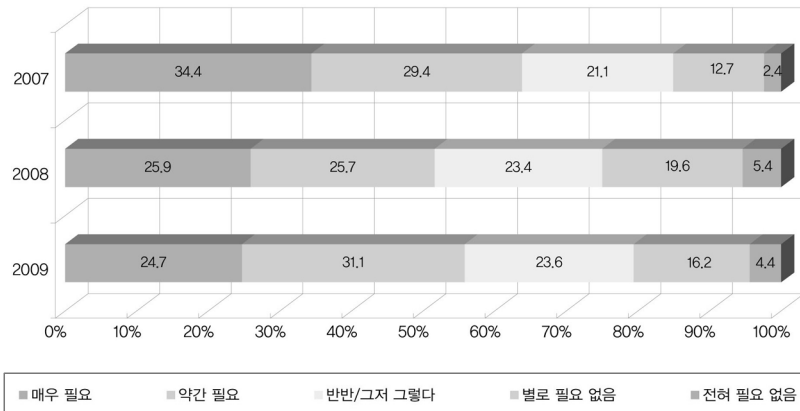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5.8%를 차지해, 반반이라는 응답(23.6%)과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20.6%)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08년 조사에서 나타난 51.6%보다는 4.2%가 상승한 것이나 2007년의 응답률 63.8%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른 불안감의 반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영남권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호남권



의 전체 응답자 중 75.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영남권의 경우 51.9%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 지역간의 격차는 23.7%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2008년에 두 지역간의 격차가 15.4%였던 것에 비해 더욱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 변수에서는 작년에 비해 올해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전체 응답자 중 64.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수적 성향의 경우는 52.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성향간의 격차는 11.7%이다. 반면 2008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는 13.7%였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올해 통일외식에 대한 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2) 통일의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까’(44.0%)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23.4%),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8.6%),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8.5) 순서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7.1%)가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14.5%)를 앞질렀던 것에 비해 올해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안보적 이유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 실험 등 공세적인 군사적 행동을 자주 보임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안보 불안감이 의식조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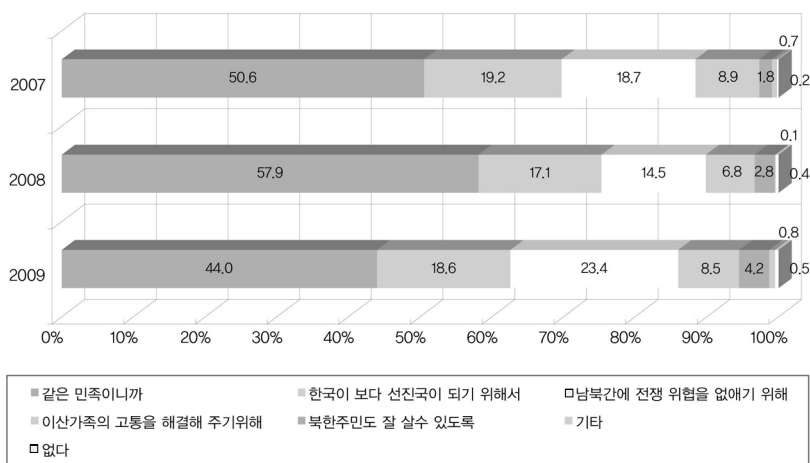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지난해에 비해 13.9%나 줄어들었고, 반면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응답률이 각각 8.9%, 1.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통일문제를 민족적 동질감의 차원보다는 경제적·군사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 차원과 연계시켜 사고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을수록 통일을 경제적·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민족적 동질감 차원에서 통일을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36.6%에 불과한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20대의 경우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를 꼽은 응답률은 각각 26.2%와 24.5%였던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는 각각 23.4%, 9.2%로 나타났다.

지역차원에서는 응답 문항에 따라 다양한 응답률의 분포가 나타났다. 통일의 이유로 민족적 동질감을 가장 많이 꼽은 지역은 중부권(47.5%)이고, 남북간 전쟁위협 해소를 가장 많이 꼽은 지역은 예상밖으로 제주



도(38.5%)이며,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중부권(25.4%)이고,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를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27.8%)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통일의 이유로서 ‘북한주민이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를 선택한 응답률(8.5%)이 전체평균 응답률(4.2%)에 비해 두 배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I-2] 통일의 이유

2. 통일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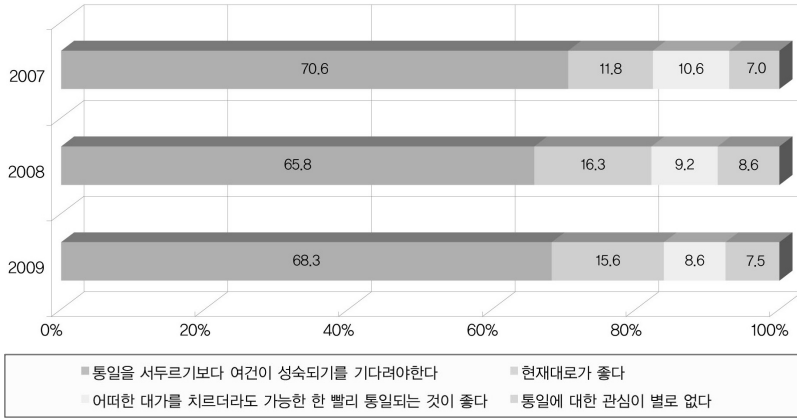
1) 통일의 추진 속도

국민들 대부분은 급속한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68.3%인 반면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8.6%로 나타나 두 응답률간의 격차(59.7%)는 2008년에 비해 더욱 벌어졌다. 2008년의 경우 전자의 응답률은 65.8%, 후자의 응답률은 9.2%로 두 응답률간의 격차는 56.6%였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대호가 좋다'는 응답률은 15.6%로 2008년 16.3%에 비해 약간 줄었다. 또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도 7.5%로 작년 8.6%에 비해 약간 줄었다. 이는 안보적 불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너무 빠른 통일보다는 통일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적인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점진적인 통일의 항목에서는 40대가 7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현상태 유지의 항목에서는 20대가 2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빠른 통일의 항목의 경우는 50대가 12.1%로 가장 많았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20대가 가장 많이 보였으며, 20대의 10명 중 1명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점진적 통일의 경우 제주도(76.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빠른 통일에는 호남권이 전체평균(8.6%)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응답률(19.3%)을 보였다. 현재 상태 유지의 경우는 영남권의 응답률(2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도 영남권의 응답률(16.7%)이 전체평균 응답률(7.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I -3] 통일의 추진속도

2) 통일의 가능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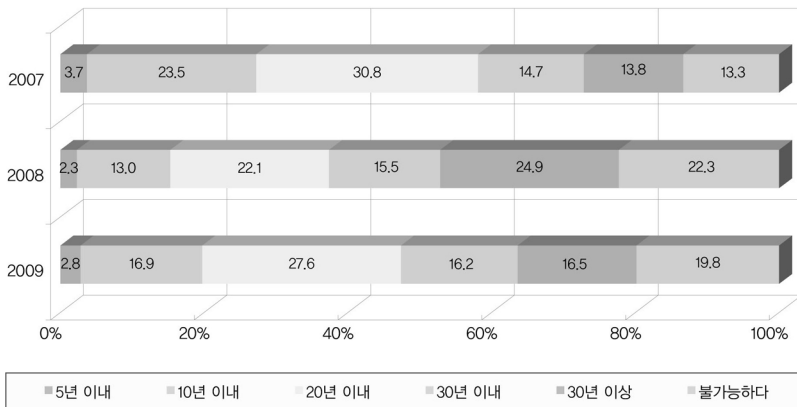
우리 국민은 통일이 20년 이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이 20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경우 19.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0년 이내가 16.9%, 30년 이상이 16.2%, 30년 이내가 16.2%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지난해 조사에서 통일의 가능 시기를 30년 이상으로 본다는 응답률(24.9%)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시기가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2007년 조사에서 20년 이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과 같다. 하지만 2009년 조사 결과와 2007년 조사 결과간의 차이는 통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통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은 2007년에 13.3%였던 데 비

해 2009년 조사에서는 6.5%가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의 가능 시기가 지난해 조사에 비해 크게 단축된 데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북한 붕괴설 등이 지속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주 노출되면서 통일의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2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에 20대와 30대의 경우는 통일이 되는데 30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화이트칼라 응답자보다는 블루칼라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 응답자보다는 저소득층 응답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의 응답자가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교별로는 불교가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I-4] 통일의 가능 시기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1)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를 묻는 질문은 통일이 가져올 이익과 불이익,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문화적인 것 등 매우 다면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익이란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제한된 것이다.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53.2%인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6.8%로 나타나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정적인 기대감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보인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능 시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증가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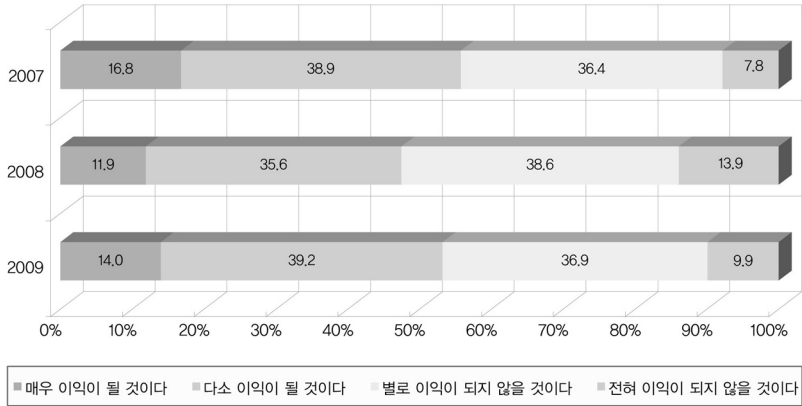
이번 조사의 결과는 2008년의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인 반면에, 2007년의 조사와는 비슷한 결과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27.5%)은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52.5%)보다 낮았다. 2007년의 경우는 전자가 55.8%, 후자가 44.2%였다. 2009년 조사의 결과는 2007년의 조사 결과 유형으로 회복됐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은 다소 감소된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 응답자(49.3%)보다는 남자의 경우(57.0%)에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응답자(56.8%)에서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50대 이상의

응답자(47.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고소득일수록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위기감이 고조되었던 2008년의 조사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일수록 통일에 대한 이익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던 것과 대조된다. 반면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소득별 분포는 2007년의 분포 유형과 유사하다.

지역별로는 2008년 조사에서 수도권(45.6%)과 호남권(53.2%)에서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2007년 조사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던 것에 반해 2009년 조사에서는 수도권(56.3%)과 호남권(61.3%)의 긍정적 기대감이 200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76.9%)에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영남권(40.7%)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2008년 조사에서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던 데 반해 2009년 조사에서는 중도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지난해에 보다 10.2% 크게 줄었고 보수적 성향에서도 3.6%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격차는 21%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두 성향간의 격차는 2008년 26.7%였던 데 비해 6.7% 좁혀진 것으로 통일에 대한 정치이념적 대립 현상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I-5]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도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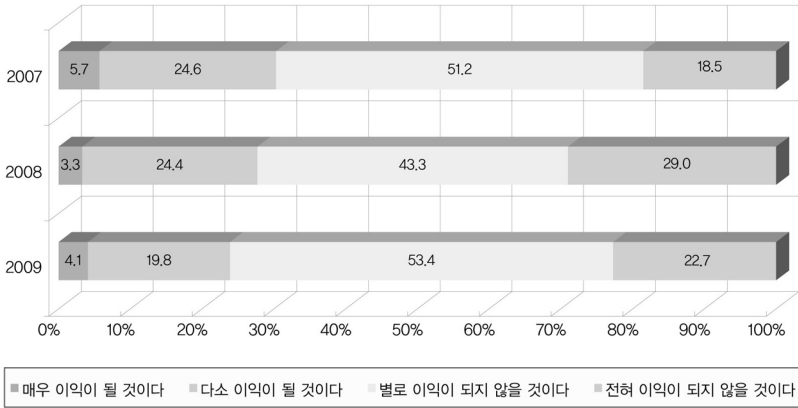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9%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한 경우 76.1%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7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보다 부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앞서 통일 남한 전체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전 해보다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더욱이 하락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와 2008년 조사에서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감은 각각 30.3%, 27.7%로 2.6%가 감소한 반면에, 2008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감이 각각 27.7%, 23.9%로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록 통일이 남한 전체 차원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통일이 개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이 사회전체, 즉 집단과 개인에게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 비록 개인의 이익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의 이익 증대에는 통일이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의 필요에 의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비록 통일이 개인의 이익에 크게 관계가 없을지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있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 응답자의 경우 27.8%가 긍정적 기대감을 갖는 반면에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19.8%에 불과하여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종사자가 26.7%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반면에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11.5%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의 응답률이 38.5%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반면 영남권의 응답률이 17.0%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진보적 정치성향과 보수적 정치성향간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좁혀졌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진보적 정치성향의 응답률은 30.8%, 보수적 정치성향의 응답률 19.8%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격차가 11%이다. 이 격차는 2008년 조사에서 두 집단간의 격차가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통일인식에서 정치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I -6]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도

4. 통일 후 사회문제개선 기대 수준

조사는 통일 후 한국의 사회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예측해보기 위해 현재 남한의 주요 사회문제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개선되거나 아니면 악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어보았다. 질문에 포함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6가지이다. 통일 이전에 사회문제는 일차적으로 남한사회에 한정된 것이지만, 통일 이후에 사회문제는 남북한 지역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은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인식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대할 것이고, 반대로 기대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늘어날 것이다.

조사결과, 모든 사회문제 항목에서 통일 이후 개선 기대수준이 대체

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2008년 조사결과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늘었고,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갈등과 이념갈등 항목에서 통일 이후 개선 기대수준이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보인 긍정적 응답률의 회복 수준은 200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주요 사회문제들 중에서 통일 이후 개선 기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실업문제로 27.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반대로 개선 기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범죄문제로 전체 응답자 중 불과 9.3%만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 경제개발 붐이 일어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에,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이 급증하여 범죄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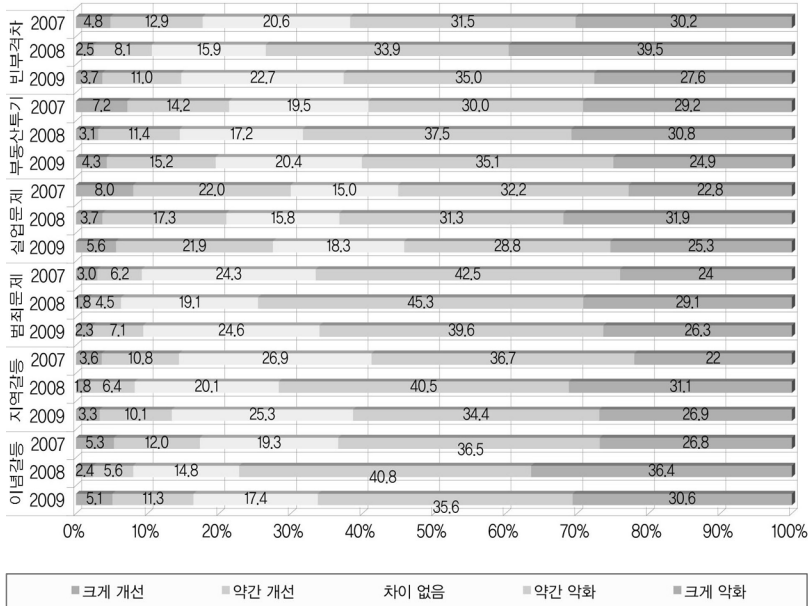
2008년 조사에서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에 대한 개선 기대수준은 각각 8.2%, 8.0%에 불과했지만, 2009년 조사에서 두 항목의 기대수준은 각각 순서대로 13.3%, 16.4%로 상당히 늘어났다. 이 결과는 이 항목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서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진보적 성향의 응답률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 간의 격차가 지난해 조사에서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이념갈등의 개선 기대수준에 대한 두 집단간의 응답률 격차는 2008년 5.6%(진보 12.1% vs. 보수 6.5%)에서 2009년 2.5%(진보 17.7% vs. 보수 15.2%)로 좁혀졌다. 이는 통일인식에 대한 정치이념적 대립현상의 약화가 통일 이후의 이념갈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빈부격차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남자 응답자가 여자 응답자에 비해 통일 이후 사회문제의 개선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실업문제와 범죄문제 항목에서 20대와 30대가 다



른 연령대에 비해 개선 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의 관심선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와 부동산투기, 지역갈등 항목에서는 4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개선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갈등 항목에서는 30대와 40대의 기대 수준이 높고 반면 20대와 50대 이상의 기대수준은 낮게 나타나 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동산 투기, 범죄문제, 이념갈등 항목에서 제주지역 응답자의 개선 기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항목에서는 호남권 응답자의 개선 기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이념갈등 항목에서 강원지역 응답자의 개선 기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빈부격차, 실업문제 항목에서는 영남권 응답자의 개선 기대수준이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갈등 항목에서 수도권 응답자의 개선 기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대거 수도권 지역에 인입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통일 과정에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정책에 대해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1-I-7]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수준

5. 통일과 민주주의

1) 통일과 남북한의 민주주의 관계

1945년 8월 해방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 모두 통일과 민주주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민족적·시대적 과제이다. 분단은 남북한 양측 모두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을 가로막아 왔으며, 특히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해왔다. 분단과 군사적 대치, 그리고 이념적 대립은 남북한의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고,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도구로 오랫동안 기능해왔다. 반면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통일을 단순히 분단된 민족의



통합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 및 완성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시민사회는 본격적인 분화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기본적인 민주화가 성취되고 냉전체제의 해체, 문민정부의 등장, 북한의 대규모 기근 발생 등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는 신사회운동이 전개되고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원화되었다.

조사는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또한 31.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1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통일을 이루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민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이 통일을 견인하고 실현가능하게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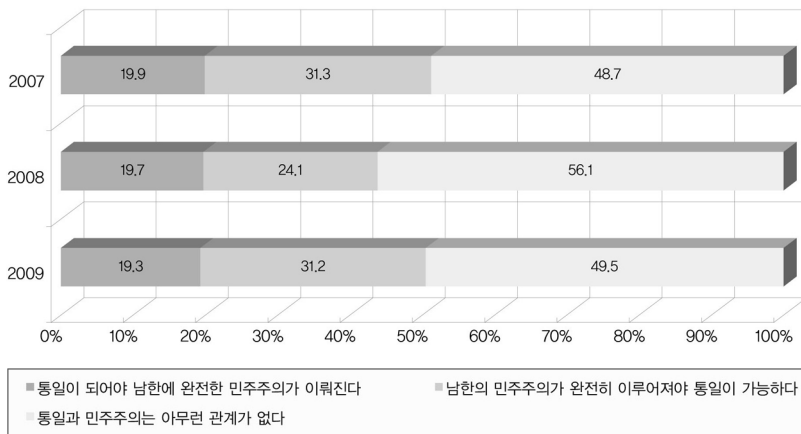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응답 분포는 2008년 조사 결과와 다르지만 2007년 결과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008년 조사에서 보다 7.1% 증가하였고, 반면 통일과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에서 보다 6.6% 감소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 사회 전체에 거세게 일어났던 촛불집회의 효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진 것이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질문항목은 2009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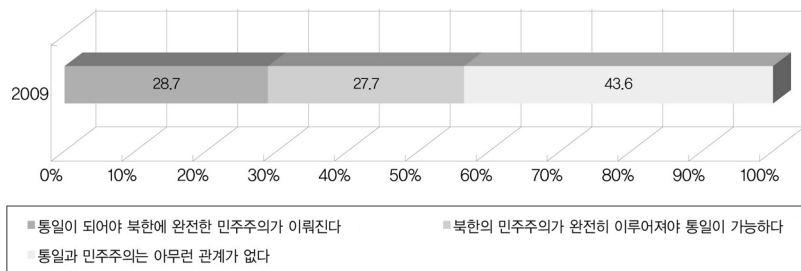
계와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를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남북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이 되어야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응답 비율(28.7%)이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27.7%)을 앞서 남한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민주주의가 자력으로 완성되기 보다는 통일과 같은 외생적 환경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수도권 지역의 응답자가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반면 영남권 응답자가 가장 적게 응답했다. 두 지역간의 응답비율은 각각 37.4%, 19.4%로 거의 두배 가까이 격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별·교육수준·직업·소득·지역 등의 변수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1- I -8]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계



[그림 1- I -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관계

2)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2007년과 2008년의 두 차례의 통일의식조사에서 미래의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이기를 희망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사용된 선택항목의 용어의 의미가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어 2009년 조사에서는 체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2009년 조사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사용했던 ‘민주주의’ 용어 대신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로 대체했고, '사회주의' 용어 대신에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로 변경했다. 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절충형'을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로 표현을 바꿨으며, 마지막으로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선택항목의 표현을 변경하여 조사를 실시해 보니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률이 39.1%,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13.3%, '통일이 이루어지기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률은 4.0%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두 번째 선택항목으로 2007년과 2008년 조사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을 택한 것이 각각 22.6%와 16.9%였던 데 반해 2009년에는 39.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결과는 6.15남북공동선언이 2항으로 제시한 '남한의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의 공통성을 남북한의 정상이 인정한 것처럼 절충형 통일 체제를 우리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 국민은 10명 중 4.4명만이 남한의 현 체제가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체제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연령별 변수에서 40대 응답자의 경우에는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희망하는 응답률(38.6%)보다 남한과 북한의 절충형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률(40.5%)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평균응답률 분포와 반대



되는 응답률 경향은 대졸 이상의 응답자와 화이트칼라의 응답자 집단에서, 또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서, 그리고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와 천주교 응답자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응답자들은 모두 미래의 통일한국 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보다는 남과 북한의 절충형 체제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I -10]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6. 소결

2008년 통일의식은 200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냉소적이고 보수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 대북포

용정책의 무용론 증가, 이명박 정부의 강경적인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경색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² 하지만 2009년은 다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려는 경향—물론 2007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거나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이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3년간의 통일이식은 “V”자의 경향성을 보였다.

2009년에는 정권교체의 효과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들이 자주 일어나 불안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국민들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희구하는 욕구가 증대되다. 이러한 욕구는 결과적으로 통일 지향적, 대북 우호적 성향을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른 불안감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대북강경정책과 남북간 교류와 왕래의 중단은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핵실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 도발적인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북 비판의식과 불안의식은 매우 높아졌다. 또한 교류와 왕래의 급감으로 인해 북한 체험이나 정보 습득의 기회가 줄어들어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리감은 더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체제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정서적 또는 감성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통일이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통일이식은 분절적이면서 동시에 유연한 특성을 지닌다. 먼저, 세대 차원에서 20대와 40대의

²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영호·정은미, 『2008 통일이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p. 33.



통일의식은 다른 세대와 다른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이것은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산물이기도 하다. 386세대로 불리는 40대는 1989년 이후 이른바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세대로 이러한 역사적·집단적 경험이 북한에 대한 진보적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0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관심도 낮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큰 20대는 일반적으로 보수화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경향성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촛불시위 등의 사건으로 20대의 진보적·비판적 사고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인의 통일인식은 분단체제에서 사회변동과 호응하는 역사적·사회적 구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상화된 비판적 대북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유연성을 지닌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번번이 감행하며 신뢰적이지 못한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지 않으며, 맹목적인 남한체제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다. 또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 현상도 격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달리 2009년 통일의식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념적 대립현상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은 미래의 통일한국의 체제를 남한식 또는 북한식의 어느 하나의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체제를 선택하였다.

통일의식의 유연성은 통일의식수준의 고저(高低)를 조절하는 일정한 조정 기능을 갖는다. 한편으로 통일의식의 유연성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장의 산물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을 통일이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의식의 유연성

의 기저에는 ‘우리의식’ 또는 ‘민족적 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마사오 오코노기(2008)³가 민족성을 상실한 대북정책이 국민적인 반발을 초래하거나 여야간 대립을 격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한국민들은 ‘차가운’ 대북정책보다는 ‘따뜻한’ 대북정책에 익숙해져 있다.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통일국가에 대한 이상이나 도덕적 열망, 규범적 당위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질적이고 경쟁적인 실체(북한)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단일적이거나 통합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외형적으로는 부침(浮沈)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심층 의식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비판적인 대북인식과 평화공존적 민족연대의식이라는 양가적 인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3- 마사오 오코노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그 주변-일본으로부터의 전망”, 『통일, 평화, 그리고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전과 쟁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학술회의(2008.5.20), p. 71.



Ⅱ. 북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존재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50.7%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20.6%, 지원대상 17.4%, 적대상 9.0%, 경쟁대상 2.3%로 각각 응답했다. 예년과 같이 2009년에도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그 규모는 예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 즉 2007년에 56.6%, 2008년에는 57.6%였으나, 올해는 50.7%로 떨어졌다.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협력대상’ 인식이 2009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북한의 대상인식에서 2009년에 가장 현저하게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과 ‘경계대상’의 응답이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2007년 11.8%, 2008년 11.3%로 ‘지원대상’(각각

21.8%, 21.9%)으로 보는 사람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지원대상’(17.4%)이라는 의견보다 ‘경계대상’(20.6%)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 동시에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2007년 6.6%, 2008년에 5.3%로 많지 않았으나, 올해는 9.0%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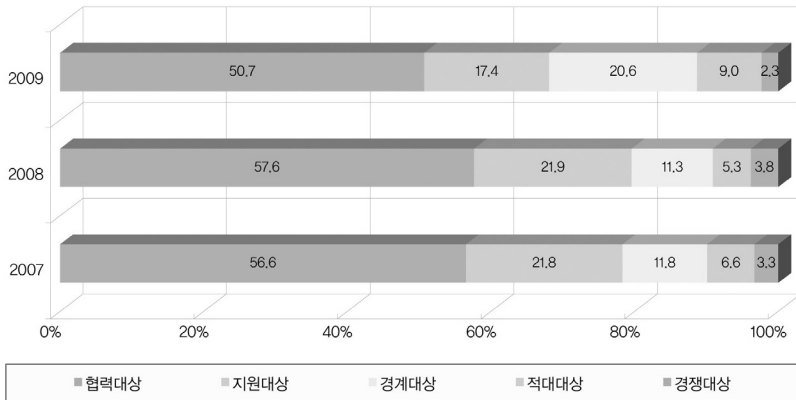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한 인식을 ‘긍정’(협력대상+지원대상)과 ‘부정’(경계대상+적대대상)으로 묶어 보면, 2009년에는 작년과 판이하게 달라진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각각 78.4%, 79.5%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에는 68.1%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8.4%, 16.6%였으나 2009년에는 29.6%로 크게 상승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높아진 것은 2009년 들어 개성공단 근로자 역류 문제가 쟁점화하면서 대북 비판의식이 커진데다 로켓발사(4.5)와 핵실험(5.25) 등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결과를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우선 남자보다 여자가 북한을 지원대상 내지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성별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여자(70.2%)는 남자(66.0%)보다 지원·협력대상에 더 많은 응답을 했으며, 남자(31.9%)는 여자(27.4%)보다 경계·적대대상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을 경계·적대의 시각으로 볼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원·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북 대립으로 인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성향과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40대와 50대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의식이 20대~40대는 각각 52.6%, 54.9%,



52.6%로 비슷하며, 50대는 41.9%로 10%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즉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작년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30대와 5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30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이 22.0%→13.1%로 8.9% 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경계대상'이라는 의견은 7.9%→19.9%로 12.0% 포인트나 높아졌다. 50대도 마찬가지로 '협력대상' 응답이 53.3%→41.9%로 11.4% 포인트가 떨어진 반면, '경계대상' 응답은 14.3%→26.2%로 높아졌다.



[그림 1-Ⅱ-1] 북한의 존재 인식

교육수준과 대북인식에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지원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은 낮았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특이했다. 즉 다른 직업집단에서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모두 50%를 넘었는데, 자영업군만 43.7%를 기록했다. 또한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직업군은 모두

16~19%로 20% 미만인데 비해 자영업군은 28.0%를 기록했으며, 적대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자영업집단에서 11.4%로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들은 다른 직업집단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별로 보면,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영남권과 수도권권이 각각 24.1%, 22.3%로 중부권(17.8%)과 호남권(10.1%)에 비해 높았다.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호남권이 2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다. 예년과 비교하면 중부권의 변화가 의외였다. 중부권에서 작년에 ‘지원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14.4%(07년)→24.9%(08년)로 급증했으나 2009년에는 다시 13.6%로 급감하여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작년에는 정권교체로 인해 중부권의 의식이 요동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일상적 패턴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지역변수의 특징은 호남권과 다른 지역이 구분되는 전형적인 지역변수의 특징을 드러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진보(60.9%) > 중도(49.9%) ≒ 보수(42.7%)이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는 보수(22.9%) ≒ 중도(22.1%) > 진보(15.5%)로 중도의 대북인식이 보수화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중도성향의 사람들이 대북 인식에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나, 2009년에는 보수쪽의 대북인식에 훨씬 가까워졌다.

또 다른 특징은 작년에 정권교체 이후 요동했던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인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고 인도주의 지원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나타났었다. 즉 2007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했으나, 2008년에는 보수정권으로의 교체



가 이루어졌고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보수는 지원대상 인식을 철회(29.7%→19.7%)했고, 진보는 지원대상 인식을 강화(15.8%→20.6%)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정권변화로 인한 효과가 사라지고 지원대상 인식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권교체로 인해 참여하게 같던 작년과는 달리 대체로 국민들의 의식이 ‘일상화’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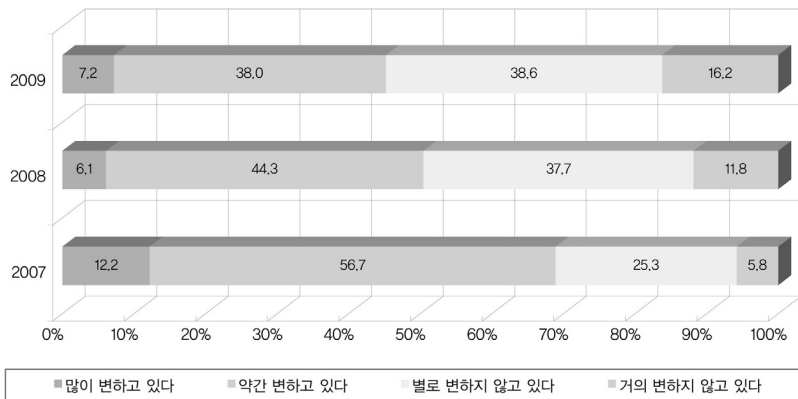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연 변화했다고 보는가,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변하고 있다”(45.1%)는 응답보다 “변하지 않고 있다”(54.9%)는 응답이 9.8%나 많았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은 31.1%(07년)→49.5%(08년)→54.9%(09년)로 지난 2년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북 비판의식은 2008년에 18.4% 포인트 늘어난데 이어 2009년에도 5.4% 포인트가 늘어나 2년 사이에 23.8%가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이른바 38세대였던 40대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한 반면, 30대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가장 강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데 대해 40대는 50.3%가 동의한 반면, 20대, 30대, 50대는 각각 44.1%, 41.2%, 45.0%만이 동의하였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0대가 49.7%로 가장 적었고 20대와 50대는 각각 55.9%, 55.0%인 반면, 30대는 58.8%로

가장 높았다.

지난 2년과 비교하면 40대가 가장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20대의 비판적 의식이 높았던 반면, 2009년에는 30대의 비판의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강하게 띠었던 20대가 30대로 전환되는 시간적 경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20대가 2008년 촛불시위 등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인지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64.7%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데 반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등은 각각 44.5%, 44.1%, 39.2%로 낮게 응답하였다. 작년에는 중부권과 제주지역에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 내지 불만이 크게 늘었으나, 2009년에는 2007과 비슷한 지역적 패턴으로 복귀하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60.0%) > 중도(55.5%) > 진보(48.1%)로 보수일수록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비판의식이 강하였다.



[그림 1-Ⅱ-2] 북한의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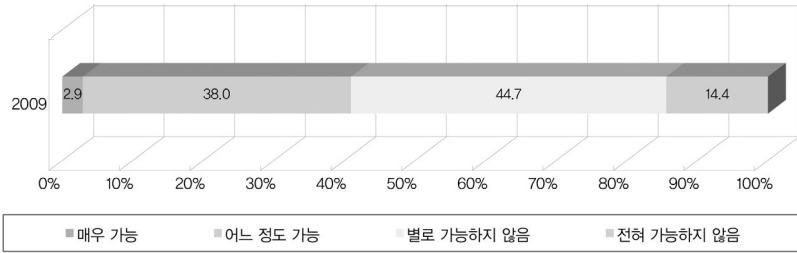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1) 통일을 논의할 상대로서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2008년과 2009년에 질문방식을 약간 변경하였다. ‘김정일 정권’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 정권’으로, 그리고 “신뢰하는가”라는 표현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것으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2008년 조사에서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6%에 불과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라는 이름과 ‘신뢰’를 연결시키다보니 결과적으로 “김정일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되어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통일을 논의할 상대로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2008년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 나왔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매우 가능하다” 2.9%, “어느 정도 가능하다” 38.0%로 전체의 40.9%가 북한정권을 통일문제를 논의할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별로 가능하지 않다” 44.7%, “전혀 가능하지 않다” 14.4%로 전체의 59.1%는 북한정권과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질문의 내용이 ‘김정일정권’에서 ‘북한정권’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59.1%로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 인식이 68.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

인 반면,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라는 일반적 이미지와 정치적 실체로서의 북한정권을 국민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II-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통일논의 대상으로서 북한정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에서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63.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은 각각 38.7%, 43.2%, 34.3%로 낮았다. 또한 정치적 성향과 북한을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인식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있음이 발견되었다. $p=.000$ 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념갈등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주장을 가장 신빙성있게 증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표 1-Ⅱ-1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성향별 신뢰도

	대화·타협 가능하다	대화·타협 가능하지 않다
진보	56.1	43.9
중도	40.1	59.9
보수	28.2	71.8

2)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한다” 21.2%와 “원하지 않는다” 78.7%로 나타났다. 이 문항도 ‘김정일정권’ 대신 ‘북한정권’으로 질문방식을 바꾸었다. 작년에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한다” 9.6%, “원하지 않는다” 90.4%로 원하지 않는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질문형식을 바꿈으로써 응답비율이 약간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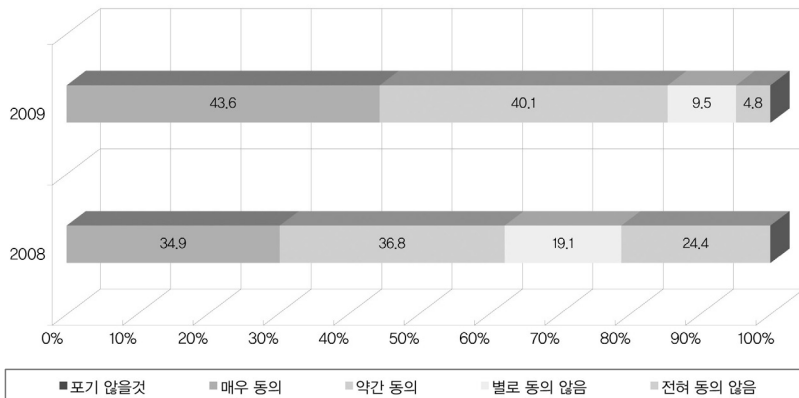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제주가 북한정권의 통일희망정도를 31.9%, 46.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질문방식이 달라졌지만, 작년과 비슷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보(28.4%) > 중도(21.3%) > 보수(14.3%)로 진보적일수록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았으며, 보수적일수록 북한정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3)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3.7%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2008년의 71.7% 보다 12.0%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북한이 2006년에 이어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경향이 작년에 비해 더 높아졌으나, 세부 변수별로 살펴보면, 20대 연령층, 중졸이하 학력자,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호남 지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인식을 다른 집단보다 5% 포인트 정도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견해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각각 85.5%, 85.1%로 거의 비슷했고,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가 13.5%, 13.0%로 대동소이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이처럼 인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바로 ‘북핵포기여부’가 아닌가 싶다.



[그림 1-II-4]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4. 북한위기의식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6.9%, “다소 위협을 느낀다” 47.4%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7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07년)→61.3%(08년)→74.3%(09년)로 작년에 조금 낮아졌던 위기의식이 금년 들어 다시 높아졌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교육수준이나 지역, 정치적 성향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연령집단에서는 20대(75.3%)와 50대(78.4%)가 30대와 40대(각각 71.9%) 보다 북핵위협을 조금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직업군으로는 농·수·축산업과 전업주부가 각각 84.6%, 82.7%로 71~71%의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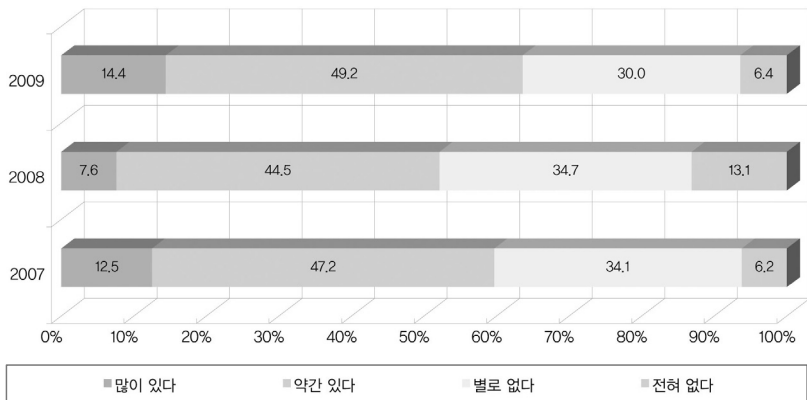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63.6%)는 응답이 “없다”(36.4%)는 응답보다 27.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14.4%, “약간 있다”가 49.2%, “별로 없다” 30.0%, “전혀 없다” 6.4%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우려하였다.

지난 3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59.7%(07년)→

52.2%(08년)→63.6%(09년)으로 변화했다. 즉 작년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2007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높아진 것이다. 이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2007년에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불안감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008년에 위기의식이 누그러졌고, 2009년에 2차 핵실험으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20대(71.0%) > 30대(60.8%) > 40대(60.0%) > 50대 이상(58.2%)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북한이 선불리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란 현실 판단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별로는 여자(64.3%)가 남자(62.9%)보다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가 남자보다 군사적 긴장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러한 경향은 지난 2년간 유사한 패턴을 유지했다.



[그림 1-II-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46.1%, 고졸 35.2%, 대졸이상 35.25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영남권과 중부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에 영남권과 중부권은 각각 54.6%, 57.6%로 응답하여, 수도권(68.7%), 호남권(36.7%), 강원(77.8%), 제주(61.5%)에 비해 낮았다. 즉 영남권과 중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2008년에는 조금 달라져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수도권과 영남권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2009년에는 수도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68.7%로 예측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북한이 감행한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안보불안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보수(67.9%)가 진보(63.5%)에 비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과 비교하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작년에는 보수적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2008년에는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보수(52.2%) > 중도(47.7%) > 진보(42.9%)로 보수집단이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가졌다. 이는 2008년에 보수가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보수집단이 안보적 측면에서 안도

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2007년에는 보수(64.7%)가 오히려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아마도 진보정권이 집권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수집단이 안보불안을 크게 느꼈고 그것이 보수층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2009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양상이 발생했다. 즉 보수가 진보보다 안보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에 진보-보수의 의식지형이 뒤바뀐 것을 ‘정권교체의 효과’였다고 한다면, 올해 진보-보수의 북한인식 지형이 다시 뒤바뀐 것은 ‘북한효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북한이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위협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적 행동 내지 시위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북한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른바 ‘북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보수정권이 주는 안보상의 안도감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9년의 비판적 대북인식이 높아지고 보수의 안보불안이 커진 것은 정권교체 효과를 상쇄하는 북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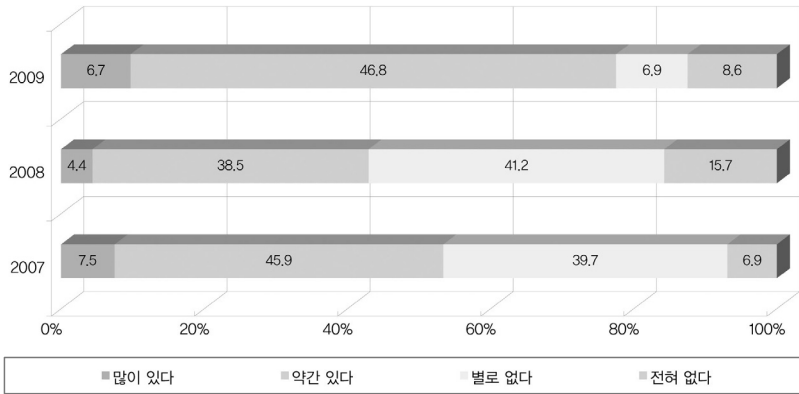
3) 한반도 전쟁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53.5%)는 견해가 ‘없다’(46.5%)는 의견에 비해 더 많았다. 작년에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56.8%로 ‘있다’(42.9%)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는데, 올해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발생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각각 54.5%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었다. 작년에는 진보(45.6%)가 보수(41.1%)에 비해 전쟁가능성을 더 우려했으나, 금년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009년에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발생하여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에 비해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수층이 더 늘어났는데, 이 역시 올해에는 ‘북한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51.7%)보다 여자(55.3%)가, 연령별로는 20대(59.7%)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56.1%)의 전쟁 불안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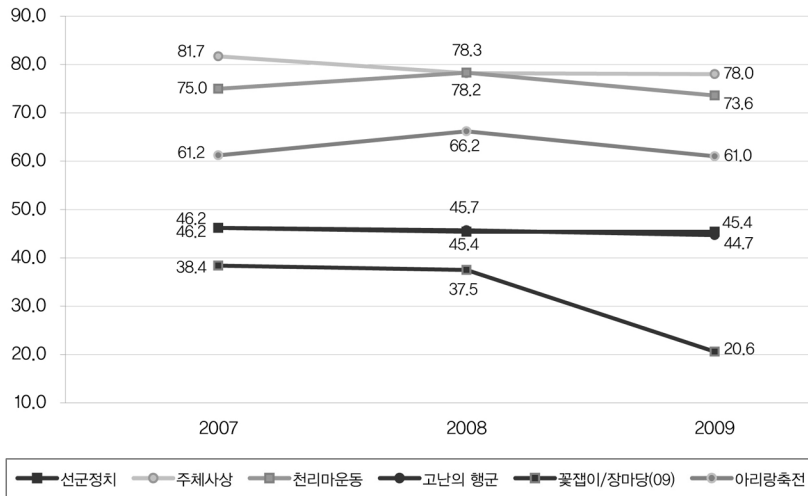


[그림 1-Ⅱ-6] 한반도 전쟁 가능성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대체로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 꽃잡이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 아리랑축전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였다.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개념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주체사상(78.0%) > 천리마운동(73.6%) > 아리랑축전(61.0%) > 선군정치(45.4%) > 고난의 행군(44.7%) > 장마당(20.6%) 등으로 열거된다.



[그림 1-II-7] 북한사회 인지도

대체적으로 지난 3년간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천리마운동과 아리랑축전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상승했다가 2009년도에 다시 2007년 수준으로 낮아졌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고난의 행군, 꽃집이/장마당 등은 인지도가 낮아졌거나 정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교류와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관련 사건과 보도가 활발히 전달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왕래나 대화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일 건강, 후계자문제, 핵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만 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새 정부가 남북왕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안보를 중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북한관련 지식에 대해 자기검열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으로 활발할 때에는 응답자들이 어렵듯이 아는 내용도 모른다고 했을 때 혹시 사회적으로 뒤쳐진 사람으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안다”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남북관계보다 안보 의식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애매한 용어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들어본 적 있다”거나 “모른다”로 안전하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관련 지식에 있어서 성별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안다”는 의견이 1.5배 가량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20대는 북한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특히 40대 연령층의 북한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40대는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연령층으로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에 대학·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다. 따라서 40대는 북한과 관련한 이념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40대가

북한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이 북한관련 사건과 지식을 가장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부권이 그 다음을 차지하며, 수도권과 영남권은 북한관련 사건과 지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완전히 뒤바뀌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중부권의 인지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15~20% 포인트 가량 높게 나왔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호남권의 대북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영남권과 수도권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호남권의 대북인지도가 영남권과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영남권보다 낮았다. 천리마운동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2007년과 2008년에 호남권(각각 30.3%, 30.0%)이 영남권(각각 26.0%, 24.9%)이나 수도권(25.4%, 20.5%), 중부권(18.6%, 14.6%)보다 많아, 호남권의 대북인지도가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의 경우에도 비슷하였다. 그런데 2009년에는 모든 항목에서 호남권의 대북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영남권과 수도권의 대북 인지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가 ‘보수’나 ‘중도’보다 위에 제시한 6개의 북한사회 과련 개념과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도는 진보보다 보수에 더 가까운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진보’의 북한사회인지도가 높아진 반면, ‘보수’의 북한사회인지도는 낮아졌다. 선군정치를 예로 들면, 지난 2년 동안 ‘진보’의 북한사회인지도는 58.4%(07년)→47.2%(08년)→52.0%(09년)로 변한데 비해, ‘보수’는 41.6%(07년)→48.8%(08년)→44.4%(09년)로 변화했다. 즉 ‘진보’는 북한사회인지도가 작년에 크게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올라갔으며, 보수는 작년에 올라갔다가 올해는 떨어지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이 역시



2008년에 ‘정권교체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남북교류와 인적 왕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북경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관련 경험이 공중파를 통해 전달되는 북한방송을 듣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금강산관광을 다녀오거나 평양, 개성을 방문하고, 탈북자(새터민) 정착을 돕는 등 북한관련 경험이 늘어났고 방법도 다양화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46.2%였으며, 금강산이나 개성 등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4.2%, 탈북자(새터민)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0.9%,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1.4%에 불과하였다. TV의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방송이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영화, 예술 등 북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탈북자를 접해본 경험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방송·소설을 접해본 경험자는 40.8%→31.2%→46.2%로 작년에 감소한 후 올해 크게 늘어났으며, 북한방문경험자도 4.5%→3.5%→4.2%로 작년 감소에 이어 올해는 다시 늘어났다.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9%→9.3%→10.9%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새터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새터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활동과 단체참여 경험자는 지난 3년간 2.8%→2.4%→1.4%로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대북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대북지원 활동과 단체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한 경험은 40대가 52.8%로 가장 많았고 30대(48.3%), 20대(43.8%), 50대(39.3%) 순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접해본 경험이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중부권(60.2%)과 강원(69.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수도권 44.8%, 호남권 42.0%, 영남권 42.4%). 정치성향은 진보(51.5%) > 중도(45.8%) > 보수(42.1%)로 진보적일수록 북한 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 남북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어사용과 생활풍습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5.8%가 남북간에 선거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며, 생활수준과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97.3%, 95.8%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남북간에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92.8%였으며, 관혼상제 등 생활풍습이 다르다는 응답은 88.2%,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95.5%였다.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국민들의 남북동질성 인식은 작년에 상당히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낮아졌다. 남북간 언어사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7.4%→17.5%→7.2%로 달라졌고, 생활풍습도 11.2%→17.6%→11.8%로 작년에 동질의식이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이질의식이 늘어났다. 선거방식과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도 비슷한 변화패턴이 관찰되었다. 즉 남북간에 “차이가 없다”는 동질성 인식이 선거방식과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 각각 2.8%→5.7%→4.2%, 1.7%→4.6%→2.7%, 3.3%→4.9%→4.2%로 각각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불만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6. 소결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남북간 교류와 왕래가 거의 중단됨으로써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 및 핵실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 도발적인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작년에 이어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31.1%(07년)→49.5%(08년)→54.9%(09년)로 지난 3년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고, 북한을 경제대상이라는 응답도 20.6%로 예년의 11%에 비해 2배 가량 많아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83.7%로 작년의 71.7%보다 12.0% 포인트 늘어났다.

둘째, 북한문제로 인한 불안의식이 한층 높아졌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있다”(63.6%)는 의견이 “없다”(36.4%)는 의견보다 27.2%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도 74.3%로 매우 높다. 이러한 북한도발로 인한 전쟁불안의식은 59.7%(07년)→52.2%(08년)→63.6%(09년)으로 높아졌으며, 북한 핵무기로 인한 위협의식도 68.2%(07년)→61.3%(08년)→74.3%(09년)로 높아졌다.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과 로켓발사 등 군사적 모험주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보았으며 20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71.0%로 가장 크게 우려하였다. 또한 20대가 북한 관련 지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0대의 이념적 보수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30대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가장 강하며,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13.1%로 다른 연령층(20대, 40대, 50대 각각 16.2%, 19.3%, 21.3%)에 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30대에서 가장 강하였다.

386세대로 불리는 40대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우호적 인식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데, 이는 40대가 북한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이 가장 많고 북한사회의 지식이 가장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대는 1989년 이후 이른바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세대로 이러한 역사적·집단적 경험이 북한에 대한 진보적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86세대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되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경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20대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유화적 인식이 17.2%로 다른 연령층(30대, 40대, 50대 각각 12.8%, 14.9%, 12.1%)에 비해 높고 남북간에 문화적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20대의 보수화’ 현상은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촛불시위 등의 사건으로 20대의 진보적·비판적 사고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북한인식 가운데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집단 간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북한인식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북한인식에 대한 이념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이러한 주장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해 준다.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대북인식에서 ‘정권교체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했었으나, 2009년에는 북한의 위협변수가 북한인식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한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하였다. 북한의 위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보수정권이 주는 안보상의 안도감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보불안의식이 높아졌고 특히 보수층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2009년에는 정권교체 효과를 상쇄하는 북한효과가 전반적인 북한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북한은 특사 조문단을 남측에 파견한다. 뒤이어 8월 20일에는 작년 12월 이후 실시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조치 및 개성공업지구 운영 및 출입제한조치 등을 8월 21일부로 해제한다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다. 이후 추석에 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출범이후 2009년 8월초까지 남북관계는 단절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대화나 교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2008년 3월 이후 북한은 모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중단하고 접촉을 거부한다. 2008년 11월에는 적십자 중앙위 성명을 통해 판문점 남북직통전화선을 단절하였고, 12월에는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중단, 개성·금강산 상주체류인원 절반 감축 등 소위 '12.1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2009년 4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남한은 그동안 여러 번 남북 대화나 교류를 제의하였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북한의 로켓발사 및 핵실험에 대응하여, 남한은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구상(PSI)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대결이 강화되었다.

2009년 통일의식조사는 7월 15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09년 조사결과를 2007년 및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남북교류의 통일기여도

1) 남북교류 각 측면별 비교

2009년도에도 남북교류를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등 4개 측면으로 구분하고, 국민들은 이들 남북교류 각각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1-Ⅲ-1>은 2009년 조사에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다소 도움)’는 의견이 많은 순서로 남북교류 제 측면을 배열한 것이다. 측면별로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교류에 대해 과반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교류 활성화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

라는 점이다.

금년 조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기적 남북간 회담(73.3%)’이 통일에 도움(매우 도움+다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사회·문화교류(68.1%)’, ‘남북한 경제협력(64.2%)’순이었으며, ‘인도적 지원(54.0%)’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남북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남북교류 단절현상이 통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교류 단절현상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교류가 필요함을 오히려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조사결과를 2008년 및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08년도에는 2007년에 비해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줄었지만, 2009년에는 반대로 2008년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북교류가 통일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나 주장이 자주 언급되었고, 그 결과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난 남북교류 단절이 통일에 주는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2009년도에는 교류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표 1-III-1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2009년 (매우 도움+다소 도움)	2008년 (매우 도움+다소 도움)	2007년 (매우 도움+다소 도움)
정기적 남북간 회담	73.3	64.3	74.7
사회문화교류	68.1	59.9	69.7
남북한 경제 협력	64.2	57.3	72.5
인도적 지원	54.0	51.8	57.4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조사결과와 2007년 조사결과가 비슷하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에 한해서는 2009년 조사결과가 2007년도 조사결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정치관계가 풀려야 남북한경제교류도 활성화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서 각 분야별로 나타난 2009년도 조사의 특징을 통일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다소 도움)’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한다.

2) 인도적 지원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54.0%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 45.9%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상당수가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순수한’ 인도정책으로 통일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보고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경우

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측의 인도적 지원이 역으로 북한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통일을 저해한다고 보는 경우이다.

그리고 배경변수 별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 주는 정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중에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낸 사람(56.2%)이 여자(51.7%)보다 많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인도적 지원이 통일이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예년과 같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남녀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에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일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이제는 40대가 된 386세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통일'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 부분도 그런 현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 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중이하 47.7%, 고등학교 52.7%, 대재이상 56.5%). 그리고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권(72.3%)에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히 의견이 많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예년과 같은 조사결과이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64.2%)가 중도(54.1%)나 보수(44.3%)보다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진보 > 중도 > 보수 간의 차이가 명확하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중도가 진보와 보수의 가운데에 위치하기보다 보수와 유사한 의견을 보였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중도의 의견이 진보와 보수 가운데에 위치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중도의 의견이 보수와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3) 사회문화 교류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 68.1%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 31.8%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다.

2009년 조사결과를 배경변수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남자 67.8%, 여자 68.4%로 성별 차이가 없다. 2007년, 2008년 조사에서는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일문제에 대해 남녀 간 인식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이 부분에서도 감지된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이하 64.3%, 고등학교 64.5%, 대재이상 72.0%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고등학교이하와 대학이상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지역별로는 호남권(77.3%)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부권(71.2%)이며, 수도권(66.7%)과 영남권(65.4%)은 비슷하다.⁴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지역별 동의 순서는 예년과 동일하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73.4%) > 중도(68.1%) > 보수(63.1%) 순으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2007년 2008년 조사에서 중도의 의견과 보수의 의견이 비슷했다면,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중도’와 ‘보수’간의 의견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⁴ 표본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를 언급하지 않는다.

4) 남북한 경제협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64.2%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 35.7%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다. 작년과 비교하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늘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도보다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낮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면 남북한에 경제적 의존성이 생기고, 이 점이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남북한 경제교류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정치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조사결과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남북한 경제 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자 63.5%, 여자 64.9%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동안 남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어졌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 62.1%, 고등학교 61.1%, 대재이상 67.3%가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 집단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다소 많다. 한편 예년과 비교하면 교육수준 중학이하 집단과 고등학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지역별로는 2007년도,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호남권(74.8%)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호남권에 이어 중부권(67.8%), 수도권(63.8%), 영남권(58.6%) 순이었는데, 2008년도와 동일한 순서이다.

2009년도 조사에서 정치성향별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은 진보(71.1%), 중도(63.1%), 보수(59.7%)의 순이다. 2008년



도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해 진보가 통일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2008년도 비해서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차이가 줄어든 조사결과이다.

5) 남북한 정기 회담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에 대해서는 73.3%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 26.6%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이다. 일부 국민들은 남북회담 역시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남북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조사결과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에서 남자(72.6%)와 여자(73.9%) 간에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68.6%)에서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71.9%)나 고등학교(69.8%)보다 대재이상(76.5%)에서 남북 정기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5.7%)에서 다른 지역보다 남북 정기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80.3%)가 중도(73.2%)와 보수(66.9%)보다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배경변수별 특징을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2008년도에는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는데 금년에 성별차이가 없어졌다. 그밖에는 대체로 예년과 유사한 유형의 분포를 보였다.

2. 통일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정책사안

1) 사안별 비교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북한의 개혁과 개방’, ‘군사적 긴장 해소’,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의 인권개선’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통일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표 1-Ⅲ-2>는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순서로 제시한 것이다.

2009년도 조사에서 국민들은 통일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군사적 긴장해소(83.5%)’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군사적 긴장해소’ 보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보다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09년도에 다시금 ‘군사적 긴장해소’가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된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2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군사적 긴장해소를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아지는 반면,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 인권 개선이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도 조사에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80.2%)’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도 남북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아진 것과 관련된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 보인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야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하기 쉬울 것이며, 역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



방과 개혁을 하면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표 1-III-2 통일이 되려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항

(단위 :%)

	2009년 (매우 시급+다소 시급)	2008년 (매우 시급+다소 시급)	2007년 (매우 시급+다소 시급)
군사적 긴장해소	83.5	70.6	79.9
북한의 개방과 개혁	80.2	68.9	78.3
북한의 인권개선	76.2	76.0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72.9	72.2	79.9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72.0	61.7	66.8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24.9	30.3	31.1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2009년 조사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76.2%)’과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72.9%)’,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72.0%)’ 등은 시급성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의 경우 2007년이나 2008년 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군사적 긴장완화나 북한 개방·개혁보다는 덜 시급하지만 남북한 정상회담이 남북한 간의 관계 경색을 풀어주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9년도 조사에서도 ‘주한미군 철수(24.9%)’가 통일과정에 시급하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또한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2007년, 2008년에 비해 2009년도 조사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통일과정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보다 낮아졌다. 주한미군철수가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이라

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각 사안별로 통일에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시급하다(매우 시급+다소 시급)’와 ‘시급하지 않다(별로+전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 ‘시급하다’는 의견이 72.0%,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27.8%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2007년, 2008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조사결과이다.

배경변수별로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조사에서 성별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남자(72.4%)와 여자(71.6%)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2007년, 2008년 조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과 비교해서 달라진 결과이다.

연령별로는 20대(67.6%)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소 낮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연령별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해 의견이 유사한 것은 예년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75.6%)에서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역시 예년과 유사한 경향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7년 2008년에는 호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크게 높았는데, 2009년 도의 경우 중부권(78.0%)이 호남권(79.8%)과 유사한 정도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 색다르다.

정치성향 면에서는 진보(84.0%) > 중도(70.1%) > 보수(64.4%) 순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007년 2008년의 경우 남북한 정상회담 정례화의 시급성에 대해서 중도가 보수와 유사한 의견을 나타냈으나, 2009년도에는 중도의 의견이 보수와 다소 달라졌다는 특징을 이 질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진보(72.7%→84.0%)와 중도(58.4%→70.1%)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지만 보수(58.0%→64.4%)는 크게 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간에 의견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3) 북한의 개방과 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는 80.2%가 ‘시급하다’, 19.5%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북한의 개방·개혁이 통일 과정에 시급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북한이 폐쇄나 고립정책을 고수하는 남북한이 통일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2009년도 조사에서는 통일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남자(81.4%)와 여자(79.1%)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80%전후로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여 연령별로도 북한 개방·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교육수준 별로는 대재이상(83.7%)이 고등학교(76.8%)나 중학이하(77.9%) 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9.1%)에서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반면, 영남권(75.0%)에서 통일과정에서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84.6%)가 중도(78.7%)나 보수(78.9%)

에 비해 통일과정에서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2008년도에는 통일을 이루는데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진보(78.1%)와 중도(64.9%), 보수(68.2%)간에 차이가 매우 컸다. 그에 비하면 2009년도에는 북한 개방·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정치 성향별 의견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4) 군사적 긴장 해소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해서는 83.5%가 ‘시급하다’, 16.3%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도에 비해 군사적 긴장 해소가 통일과정에서 시급하다는 의견이 보다 많아진 결과이다.

배경변수 별로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성에 대해 남자(85.7%)와 여자(81.2%)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다른 사안에서는 성별 편차가 줄어들 것인데 비해,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해서만은 남녀 간의 의견차이가 다소 벌어졌다. 통일문제 전반에 대해서 남녀 간의 의견 차이가 줄어들 것인 것과 달리 군사문제에 대해서 남녀 의견차이가 커진 것은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민감한 사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령별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재이상(87.4%)에서 중학이하(78.2%)나 고등학교(80.2%)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지역별로는 중부권(89.8%)에서 다른 지역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하지만 수도권(82.9%), 호남권(83.1%), 영남권(82.4%) 등 다른 지역에서도 80%이상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어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



다고 할 수 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8.5%)가 중도(81.0%)나 보수(83.2%)보다 군사적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조금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 조사에서 정치성향별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의견차이 보다는 정치성향별 차이가 크게 줄었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군사적 긴장완화가 통일과정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5)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남한에서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가 24.9%, ‘시급하지 않다’가 74.9%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시급하다는 의견보다 3배 이상 많다. 2008년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은 5%정도 늘었고, 반대로 시급하다는 의견은 5%정도 줄었다. 주한미군이 통일을 저해한다는 북한 주장에 공감하는 남한 국민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22.7%, 여자 27.1%로 여성 중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많다. 200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통일을 이루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줄어들었지만, 남자의 경우 30.1%에서 22.7%로 크게 줄어든 반면, 여자는 31.2%에서 27.1%로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줄어든 결과이다.

연령별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50대 이상(19.2%)에서 가장 적었으며, 이는 예년과 같은 특성이다. 교육수준 별로는 역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27.1%)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는데, 이 역시 예년과 같은 특성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41.2%)에서 타 지역에서 보다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35.8%)가 중도(23.3%)나 보수(17.6%) 보다 남한에서 미군철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008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 비율이 진보(36.3%→35.8%)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중도(29.3%→23.3%)에서 줄어들고, 보수(28.1%→17.6%)에서는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성향별로 주한미군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6)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72.9%,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26.9%로 2008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2007년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77.2%)에서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2007년 2008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별 의견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2.4%)에서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 별로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진보(79.3%)에서 중도(71.9%)나 보수(68.8%)보다 많았다. 진보가 중도나 보수보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향이다.



7) 북한의 인권개선

북한의 인권개선이 시급한지에 대한 의견조사는 2007년에는 없었으나 2008년 조사에서 추가한 것으로 2009년도에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2009년 조사에서 통일을 위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한지 여부에 대해, 76.2%가 ‘시급하다’, 23.7%가 ‘시급하지 않다’로 나왔는데, 이는 2008년도와 매우 유사한 조사결과이다.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통일을 위해 북한인권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는 의견은 성이나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재이상(80.4%)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역시 2008년도 조사 결과와 경향이 같다. 지역별로는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보다 수도권(74.1%)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소 적게 나왔지만, 2008년도에 비하면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2009년도 조사에서 정치성향 별로는 진보(81.8%)가 중도(74.5%)나 보수(74.0%)보다 북한 인권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2008년도와 같은 경향이였다.

3.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1) 대북지원의 효과성

금년에도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지 알아보았다(<표 1-Ⅲ-3>). 2009년도 조사에서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8.0%)’거나 ‘약간 도움이 된다(37.6%)’는 의견은 합해서 46.6%이다. 반면에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생활에 ‘별도 도

움이 되지 않는다(38.5%)’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5.9%)’는 의견은 합해서 54.4%이다.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다소 많다. 2008년도 조사에 비교했을 때,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약간 늘었지만 대체로 유사한 의견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 대규모 대북지원이 없었지만, 북한에서 대규모 기아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 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예년과 유사한 의견 분포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표 1-III-3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매우 도움	약간도움	별도 도움 되지 않음	전혀도움 되지 않음	모름 /무응답
2009	8.0	37.6	38.5	15.9	0.0
2008	6.0	38.2	41.2	14.5	0.2
2007	8.1	41.4	38.9	11.4	0.2

이어서 2009년도 조사에서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하위집단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48.2%)가 여자(43.0%)보다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2008년도에 비하면 남녀 간 의견차이가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40대(53.3%)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대 이하가 40대 이상 보다 대복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약간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달라진 조사결과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48.9%)이 중학이하(40.8%)나 고등학교(43.0%)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2007년 2008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60.5%)에서 다른 지역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역시 2007년, 2008년 조사결과와 같은 특성이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58.8%)가 중도(44.2%)나 보수(35.7%)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진보가 중도나 보수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치성향별 의견 변화를 살펴보면,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진보(53.0%→58.8%)는 늘었고, 보수(41.6%→35.7%)는 줄어들었다. 정치성향별로 대복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2) 대복지원 규모의 적절성

대복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2009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0.9%)’는 의견과 대복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조금+대폭)(40.2%)’가 비슷하고, 대복지원을 ‘늘여야 한다(대폭+조금)(18.9%)’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표 1-III-4>).

표 1-III-4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절성

	대폭 늘여야	조금 늘여야	현재 수준 유지	조금 줄여야	대폭 줄여야
2009	4.2	14.7	40.9	24.7	15.9
2008	2.5	12.8	45.3	26.0	13.3
2007	3.8	12.3	44.8	26.8	12.4

과거 조사결과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하나, '현재 수준 유지' 비율이 줄어들고, '늘여야한다'는 의견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늘어났다. 특히 양 방향으로 '대폭'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대북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양극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하위 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집단에서 '현재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각각 40% 내외를 차지하고, '늘여야한다'는 의견이 15%~25%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21.9%)가 여자(15.9%)보다 대북 지원규모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12.4%)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북 지원규모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었다. 반면,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22.1%)에서 대북 지원규모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성, 연령, 교육수준별로 나타난 특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이다.

2009년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호남권(43.7%)에서 대북 지원규모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07년, 2008년도에도 호남권에서 대북지원을 늘여야한다는 의견이 타 지역보다 높았지만, 2009년 조사만큼 두드러지게 높지는 않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호남권이 농업(쌀) 생산 지역이라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대북지원의 핵심인 쌀 지원이 없어졌다. 그 결과 비축 쌀 재고가 쌓여 농업중심의 호남권 주민에게는 북한



에 대한 지원 없음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⁵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30.5%)가 중도(17.2%)나 보수(11.2%)보다 대북 지원규모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2007년, 2008년 조사결과와 같은 특성이다.

3) 대북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이유

2009년도에도 대북지원을 줄여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왜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표 1-Ⅲ-5>).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알아보면 2009년도의 경우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59.9%로 2008년보다 많아졌다. 대신 ‘대북지원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9.1%)’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그 밖에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준다(16.0%)’거나 ‘대북지원이 국내 정치에 이용 된다(12.8%)’는 의견은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

표 1-Ⅲ-5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국민 부담이 커지므로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므로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므로	기타	모름/무응답
2009	59.9	9.1	16.0	12.8	2.3	0.0
2008	48.3	25.8	12.9	11.3	1.3	0.3
2007	51.5	18.5	14.7	13.8	1.2	0.2

5- 2009년 9월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지원을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적어진 것은, 2008년도에 비해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졌는데, 이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대북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표 1-Ⅲ-6>).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경우 대북지원 규모를 ‘늘여야 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59.3%이며, ‘다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늘여야 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27.0%이다. 하지만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서는 ‘늘여야 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9.3%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사람은 ‘늘여야 한다(대폭+조금)’는 의견이 2.0%에 불과하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대북지원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대북지원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질 것이다.

표 1-Ⅲ-6 대북 지원의 효과와 대북 지원규모 간의 관계

(단위: %)

	대폭 늘여야	조금 늘여야	현재 수준 유지	조금 줄여야	대폭 줄여야
매우 도움	26.0%	33.3%	25.0%	11.5%	4.2%
약간 도움	3.8%	23.2%	55.4%	15.0%	2.6%
별로 도움 되지 않음	1.3%	8.2%	39.8%	35.3%	15.4%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0%	1.0%	17.2%	28.6%	52.1%



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2008년도 조사에 이어 2009년도에도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하였다(<표 1-III-7>).

2009년 조사 결과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된다(66.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27.0%)’는 의견이다. 2008년도와 비교하면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크게 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줄어든 결과이다. 그리고 양극적인 의견, 즉 ‘매우 도움이 된다(8.1%→12.8%)’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3%→6.5%)’는 의견이 모두 늘었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극적인 평가가 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 관련해서, 남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III-7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모름/무응답
2009	12.8	66.3	27.0	6.5	0.2
2008	8.1	52.0	35.5	4.3	0.0

2009년도 조사에서 하위집단별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매우 도움+약간 도움)’는 의견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67.1%)와 여자(65.5%) 간에 차이가 없었다. 2008년도에는 남자(62.3%)가 여자(58.0%)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었던 점을 상기하면, 전

반적으로 남녀 의견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60.9%)이 타 연령층보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 비율이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이상(73.8%)이 중학이하(53.7%)나 고등학교(60.8%) 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지역별로는 호남권(84.0%)에서 타 지역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특성은 2008년도와 동일하다.

한편 정치지향별로는 진보(77.8%)가 중도(66.7%)나 보수(54.9%)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도 조사결과를 2008년도와 비교하면 진보(72.1%→77.8%), 중도(55.5%→66.7%), 보수(58.1%→54.9%)로 정치성향별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1)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다(<표 1-III-8>). 2009년도 조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2.7%)’과 ‘다소 만족(29.0%)’을 합치면 31.7%이다. 반면에 ‘다소 불만족(52.6%)’과 ‘매우 불만족(17.4%)’을 합치면 68.2%이다. 2009년 조사결과를 2007년 및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정부 대북정책의 만족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III-8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2009	2.7	29.0	52.6	15.6	0.1
2008	3.3	30.0	48.9	17.4	0.4
2007	1.4	28.8	54.8	14.9	0.2

그러나 전체적인 만족도 평가는 유사하지만, 지난 3년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하위집단별로 다소 변했음을 알 수 있다(<표 1-III-9>). 하위집단 별로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정권교체시점을 계기로 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작은 차이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남녀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표 1-III-9 하위집단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교*

	2009년	2008년	2007년
	만족 (매우+다소)	만족 (매우+다소)	만족 (매우+다소)
성별			
남자	31.4	28.6	32.3
여자	32.0	31.4	28.0
연령별			
20대이하	28.9	28.0	30.8
30대	27.2	30.3	34.4
40대	33.2	34.8	22.3
50대 이상	38.2	40.7	29.0
교육수준			
중졸이하	40.2	36.5	28.9
고졸	35.5	35.6	28.1
대재이상	26.7	29.9	32.4
지역별			
수도권	31.3	29.0	26.7
중부권	22.9	29.8	28.8
호남권	19.3	16.1	43.7
영남권	41.7	49.6	31.3
정치성향			
진보	27.1	27.6	40.6
중도	32.2	32.2	29.2
보수	35.2	40.0	22.0

* 모름/무응답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합이 100.0%가 되지 않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수준 별로 보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재이상 층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한 2008년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2009년도에



는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지역 및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드러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에는 호남권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영남권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정치성향별로 ‘진보 > 중도 > 보수’ 순으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수 > 중도 > 진보’ 순으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아진다. 2009년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조사결과와 특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별, 정치성향별 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2)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조사결과에서도 대북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표 1-III-10>).

2009년도 조사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 반영’ 1.0%, ‘대체로 잘 반영’ 21.2%로 합하면 22.2%만이 대북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두 해가 지났지만 정부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표 1-III-10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매우 잘 반영	대체로 잘 반영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함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함	모름 /무응답
2009	1.0	21.2	58.6	19.2	0.0
2008	1.7	21.7	57.5	19.1	0.0
2007	0.5	17.8	66.9	14.7	0.2

그러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2007년과 2008년 사이 정권교체 효과가 나타났고, 2009년도는 정권교체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2009년도 조사에서도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은 40대 이상,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정치성향 별로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이 다소 많다. 하지만 하위집단 별 격차는 2008년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치성향별 정부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 변화이다. 2007년, 2008년, 2009년 조사에서 정치성향별로 정부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하면, 진보(23.8%→18.9%→20.7%), 중도(15.7%→20.9%→22.4%), 보수(17.4%→25.5%→23.2%)로 변화였다. 정치성향별 의견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명박 정부 1년차와 2년차 의견에 차이가 난다(<표 1-III-11>). 2008년도 조사에서는 전 정부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이명박 정부에서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8.1%가 ‘매우 동의’, 33.9%가 ‘다소 동의(33.9%)’로 합치면 동의를 42.0%였다. 그리고 전 정부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계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31.8%)’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0.6%)’를 합쳐 42.4%였



다. 그리고 15.6%가 ‘잘 모른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2009년도 조사에서는 전 정부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10.9%)’와 ‘다소 동의(39.2%)’를 합쳐 50.1%가 동의하고 있고, 전 정부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계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35.2%)’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5%)’를 합쳐 42.4%이다. 그리고 ‘잘 모른다’는 의견이 크게 줄어 7.2%이다. 부동의는 변하지 않은 반면, 잘 모름이 줄고, 동의를 늘었다. 2008년도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거의 같은 비율이었지만, 2009년도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표 1-III-11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2009	10.9	39.2	35.2	7.5	7.2
2008	8.1	33.9	31.8	10.6	15.6

하위집단별로 2008년도 조사결과와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교하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타 지역에서는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늘어났지만, 영남권(46.2%→40.4%)에서는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줄었다. 한편, 정치성향별로는 진보(57.9%→66.1%)와 중도(38.7%→49.8%)에서는 계승해야한다는 의견이 늘었지만, 보수(34.1%→35.9%)는 큰 변화가 없다. 지역별, 정치성향별로는 정부정책 계승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2009년 통일의식조사가 이루어지기전까지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남북교류나 대북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대북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들이 북핵문제와 대북지원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표 1-Ⅲ-12>). 2009년 조사 결과를 2008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2008년도에 비하면 2009년도에 많아졌다. ‘반반/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줄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늘어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는 형상이다.

표 1-Ⅲ-12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지원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모름/ 무응답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09년)	15.8	31.6	30.0	18.4	4.2	0.0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11.5	30.0	39.2	16.3	2.9	0.0

2009년도에는 개성공단유지, 대북빼라 살포, 북한 인권문제 제기,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동참과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하



1여 조사하였다(<표 1-Ⅲ-13>).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매우+다소)이 61.4%로 반대(다소+매우) 8.7%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매우+다소)이 56.4%, 반대(다소+매우) 12.6%보다 매우 많다.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 핵문제 개발 억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북빠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한다’거나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의 두 질문과 마찬가지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 보다 많다. 그러나 앞의 두 의견과 비교했을 때, 찬성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비율이 많아진다. 국민들은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북한 핵개발이 억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또 다른 정책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 강경과 온건 정책을 정교하게 배합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Ⅲ-13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모름/무응답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한다	11.5	37.1	31.0	15.6	4.8	0.0
대북빠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17.2	34.1	34.2	11.9	2.2	0.3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 해야 한다	16.6	44.8	29.8	7.5	1.2	0.1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한다	14.0	42.4	30.9	9.3	3.3	0.1

4)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금년 통일의식 조사시점인 2009년 8월 초까지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각 국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대해 남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표 1-Ⅲ-14>는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순서대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를 보면 남북관계가 나빠진 데는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국민 과반수(57.8%)가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20%미만의 국민만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아주 크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1-Ⅲ-14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없다	모름/ 무응답
북한의 책임	57.8	30.3	10.2	1.4	0.3	0.1
미국의 책임	18.3	43.0	28.9	7.8	2.0	0.0
한국의 책임	13.9	39.5	30.7	13.6	2.3	0.0
중국의 책임	13.0	34.3	40.7	10.1	1.8	0.0
일본의 책임	8.8	29.6	45.4	13.1	3.1	0.0

그렇다고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북한에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비록 ‘아주 크다’는 의견인 20%미만이지만 ‘조금 크다’는 의견을 합치면, 미국 같은 경우는 61.3%, 한국과 중국은 각각 53.4%와



47.3%가, 일본에 대해서는 38.4%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북한에 이어 국민들은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남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에게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한 것은 남북관계가 한반도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말해 준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하위집단별로 세분해서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교육수준은 낮은 집단에서, 지역별로는 중부권과 수도권에서,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 이상과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은 대재 이상과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층에서 다소 많았다.

5. 소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변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 8월 초까지 남북관계는 점차 경색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남북교류는 줄어들고 남북관계는 소원해진 상황이다. 이 절에서는 이처럼 남북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국민의식 특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조사결과는 2007년 조사결과와 비슷하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줄어들었지만, 2009년도에는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시 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민들이 2008년 이후 경험한 소원해진 남북관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들은 남북 당국 간 정기 회담이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남북교류이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해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국민들이 남북관계에서 정치 및 군사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남북 교류 경색을 경험하면서 남북교류 활성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측면 보다 남북한 간에 정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두드러진 대북지원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정치성향별로 대북지원을 보는 인식격차는 보다 커졌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은 '지난 정부가 체결한 남북한 합의사항을 계승'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비록 전체적으로는 계승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 차이는 보다 커졌다.

넷째, 앞에서 정치성향 면에서 진보와 보수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 조사에서 정치성향별로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서 중도와 보수 간에 차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8년까지는 중도와 보수가 대북정책에 대해 비슷한 응답유형을 나타냈다. 그 결과 대북정책과 관련된 대립구도가 ‘진보’ 대 ‘비진보’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도 조사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가 서로 다른 응답 유형을 보인다. 앞에서 진보와 보수간에 의견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남남갈등이 격렬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보’ 대 ‘비진보’ 라는 이항 대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지향이 진보, 중도, 보수라는 3집단으로 분화되면서 중도의 중재 기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군사문제 등 특정부분을 제외하면 통일의식에서 남녀 간 의식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종전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남북 교류 등이 보다 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남녀 간 의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난 낮은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로 바뀌어도 크게 높아지지 않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나 방향보다 현실적인 남북관계를 기초로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보다 긴밀해졌거나 통일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들은 대북 강경정책과 온건 정책을 정교하게 배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모로 대북정책에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불만족 집단이 바뀌었고 2009년도에도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지역별로는 호남지역,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영남권, 보수 성향 집단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 경향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여덟째,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통일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라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이 북한에만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북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도 상당정도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이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대북정책을 좋게 평가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현재의 대북정책을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민들은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히 구사해달라는 매우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



북관계 경색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국민들은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우선 바뀔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조사결과이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한국의 대북정책보다 북한이 어떠한 대남정책을 펴느냐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 북한이 대남 적대정책을 취하는 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의 상황이 그러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위해 무리하게 조급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하면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통일의식조사가 끝난 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이제부터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2010년에는 입국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들의 현재 남한 사회에서의 삶은 남북한 통합과정의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 우리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와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통일의식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일’이 제도적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가를 독일을 비롯한 통일 국가의 선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추이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남북한 사회 통합의 중요한 준



거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설문 문항을 구조화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쟁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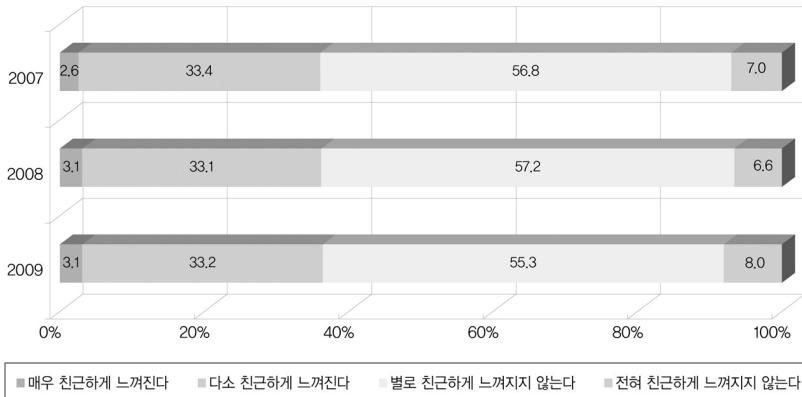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로 나타났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36.3%였다. 이는 2007, 2008년도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이 10~30대에 비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19~29세 34.6%, 30대 32.7%, 40대 38.8%, 50대 이상 39.2%)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직업별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친근감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41.4%로 다른 소득 수준 응답자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400만원 소득 수준 이상 가구에서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33.3%로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8% 가량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부권과 호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더 친밀감(중부권 44.1%, 호남권 42%)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친밀감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친밀감을 나타내는 응답자가 43.3%였는데 반해 보수적이라는 응답자는 28.8%로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15%가량 낮게 나타났다. 중도는 이의 중간 수준인 36.8%가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종교별로는 근소한 차이로 기독교(40%)인 응답자가 친밀감을 가장 많이 드러냈으며, 다음이 천주교 37.3%, 불교 36.9%의 순이었다.



[그림 1-IV-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가. 동네 이웃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 관계를 맺는 데에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5.1%로 과반수 가까이 나타났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주민과 동네 이웃으로 관계 맺기를 꺼리는 것은 2008년도와 비교할 때 6%가량 낮아진 것으로 2007년도의 14.1%와 비슷한 양상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17.8%로 나타나 19~29세에서 12.9%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30대와 40대는 꺼린다는 응답이 각기 14.1%, 14.8%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력별로 보면 꺼린다는 응답이 중졸이하가 2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고졸이 16.1%, 대재 이상이 11.7%였다. 반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재 이상이 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고졸이 43%, 중졸 이하가 4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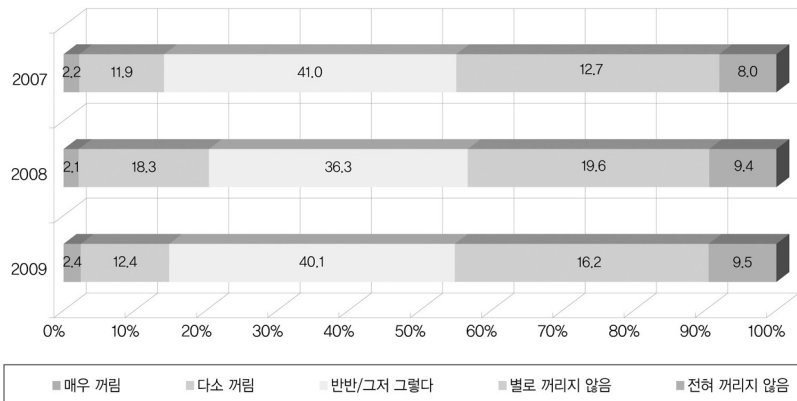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꺼린다는 응답에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30.8%로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자영업 종사자가 16.8%, 전업주부 16.1%, 블루칼라 14.5%, 화이트칼라 14.2%, 학생·무직·기타 응답자가 9.5%로 나타났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학생·무직·기타 응답자가 16.4%로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농·수·축산업 응답자의 경우가 15.4%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가 10.1%, 블루칼라는 9.2%, 자영업 8.4%, 전업 주부는 4.4%였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이 제주권이 2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이 강원(16.7%), 수도권(15.9%), 중부권(15.3%), 영남권 13.9%. 호남권이 10.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제주가 근소하게 높은 응답률(46.2%)을 보였으나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적이라는 응답자가 꺼린다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19.5%)으로 나타났고, 중도(13.5%), 진보(12.4%)는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가 47.4%, 중도 46.6%, 보수 4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천주교(48.5%), 불교(46.9%), 기독교(45.9%)인 응답자가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 42.9%, 기타 37.3%가 북한이탈주민과 동네 이웃 맺기를 꺼리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림 1-IV-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나. 직장 동료

북한이탈주민과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0%, 꺼린다는 응답은 16.3%로 나타났다. 2008년도와 비교할 때 꺼린다는 응답이 4% 가량 낮아진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



며, 2007년도 14%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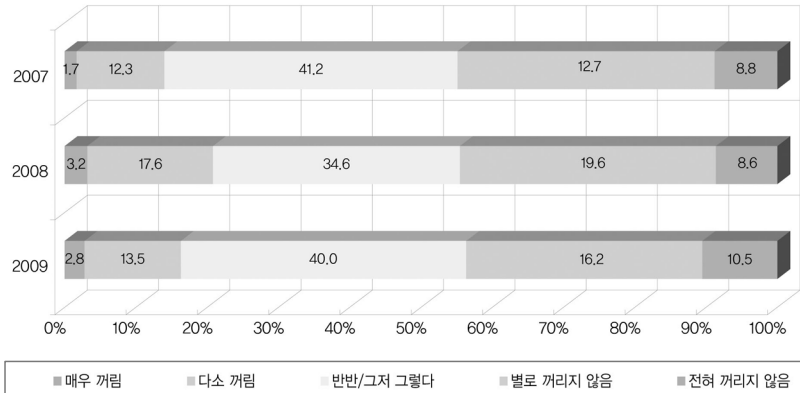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성(14.8%)에 비해 여성(17.8%)이 꺼린다는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이 46.9%, 여성이 40.2%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꺼린다는 응답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29세는 16.2%, 30대와 30대가 각각 14.1%, 14.8%로 나타났다. 반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가 43.1%, 19~29세가 42.9%, 50대 이상이 4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 응답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꺼린다는 응답이 중졸이하에서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18.6%, 대재 이상에서는 12.3%에 그쳤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재 이상이 4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고졸이 40.7%, 중졸 이하가 33.6%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수·축산업의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30.8%로 나타나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큰 격차로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블루칼라 18%, 전업주부 17.7%, 자영업 17.6%, 화이트칼라 13.3%, 학생·무직·기타는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비교적 이에 상응하게 나타났는 바, 학생·무직·기타가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화이트 칼라가 48.6%, 블루칼라 45.1%, 자영업 40.5%, 전업주부 37.5%, 농·수·축산업 30.8%였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꺼린다는 응답에서 제주가 23.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강원(8.3%)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근소한 차이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영남 17%, 중부·수도권 16.9%, 호남권 12.6%) 정치적 성향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에

서 진보적 성향인 응답자가 47.1%로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 39.3%에 비해 높은 응답률로 차이를 나타냈다. 중도 성향의 경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44.2%였다.

종교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를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천주교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불교, 천주교인 응답자는 5% 가량 낮은 45.5%, 45.2%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40.2%, 기타 37.3%가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IV-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다. 사업 동업자

사업 동업자로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꺼린다는 응답이 38.4%로 나타나 지금까지 동네 이웃,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것에 비해 꺼린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25.2%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8년도와 거의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2007년도 26.6%만이 사업동업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를 꺼린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10% 가량 높은 응답률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35%)에 비해 여성(41.9%)이 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6.3%가 꺼린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19~29세 36%, 30대 37.4%, 40대 34.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2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10~29세 23.1%, 30대 25.3%, 40대 30.6%)

교육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중졸 이하가 꺼린다는 응답이 48.1%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고졸은 40.3%, 대재 이상은 34.7%가 꺼린다는 응답이었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와 역순으로 대재 이상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 23.1%, 중졸 이하 20.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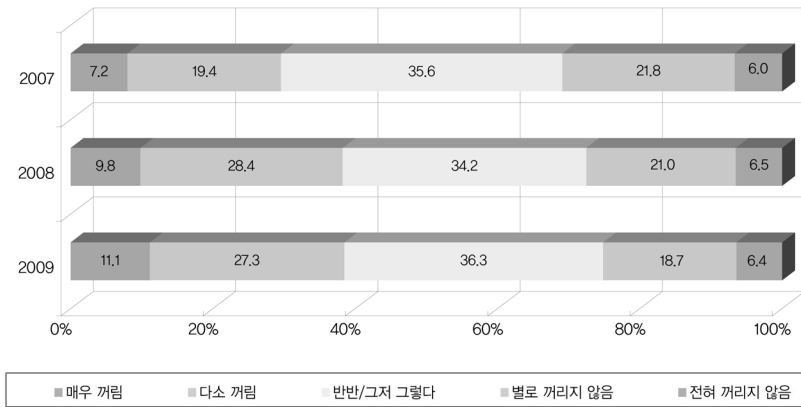
직업별로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꺼린다는에 농·수·축산업 종사의 과반수인 50%가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 45.5%, 전업주부 41.9%, 블루칼라 35.7%, 화이트칼라 33.8%, 학생·무직·기타가 31.8%의 순이었다. 꺼리지 않는다는에 대해서는 별다른 격차는 보이지 않았으나 학생·무직·기타가 29.6%, 블루칼라 25.9%, 화이트칼라 25.5%, 전업주부 25%, 농·수·축산업 23.1%, 자영업 21.2%의 순이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앞선 질문에 비해 큰 응답 격차를 보였는데, 꺼린다는 응답에 월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44.7%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00~399만원 소득 가구가 38.6%, 200~299만원 소득 가구 37.7%, 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32.7%가 꺼린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에 수도권과 호남권이 각기 40.5%, 40.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강원 38.9%, 영남 37.2%, 중부 31.4%, 제주 23.1%의 순이었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제주가 38.5%, 호남권 31.1%, 수도권 24.8%, 중부권 24.6%, 영남권 23.5%, 강원 22.2%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에 보수적 성향 응답자가 45.3%로 비교적 큰 격차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 바 중도 37.9%, 진보 32.1%로 나타났다. 꺼리지 않는다는 데에는 이와 역으로 진보 29.4, 중도 24.5%, 보수 22.3%의 순이었다.

종교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천주교인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만나기를 꺼린다는 응답률이 31.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0.6%로 가장 높아 다른 응답자에 비해 유연한 의식을 보였다.



[그림 1-Ⅳ-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라. 결혼상대자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꺼린다는 응답이 48.5%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그저그렇다는 응답은 28.9%였으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에 못미치는 22.6%였다.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2007년도 47.7%, 2008년도 49%와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41%)에 비해 여성(56.1%)이 꺼린다는 응답이 현저히 많게 나타났다. 반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이 16.4%, 남성이 28.7%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에서 꺼린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이 30대(51.1%), 50대 이상이 50.2%, 40대 이상은 40.2%였다. 반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40대가 2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0대 이상이 21%, 19~29세 20.5%, 30대가 19.8%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20~30대에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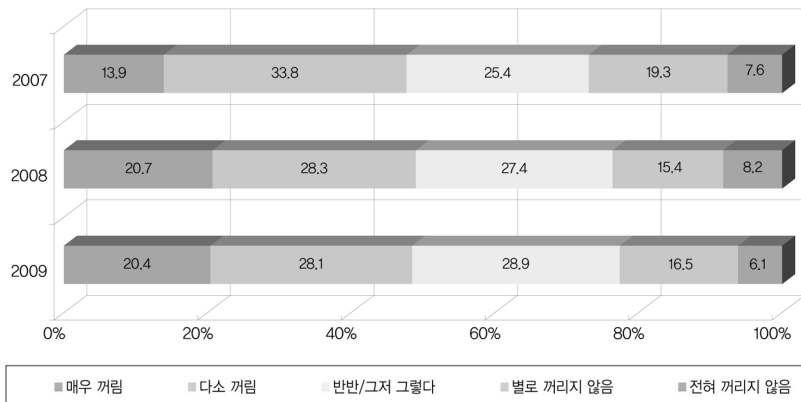
교육수준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대재 이상이 25.1%로 중졸 이하(21.3%), 고졸(19.9%)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다른 직종 응답자에 비해 꺼린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57.7%)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업주부가 52.4%, 자영업이 50.5%, 화이트칼라와 학생·무직·기타가 각각 47.9%, 47.6%였으며, 블루칼라가 42.9%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업주부가 18.1%로 다른 직종에 비해 5~7%가량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00만원 이상이 54.8%로 나타났으며, 300~399만원과 200~299만원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48.5%, 48.9%, 200만원 미만은 40.8%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거리까지 않는다는 응답도 이에 상응하게 400만원 이상이 18.7%, 300~399만원 22.2%, 200~299만원 22.6%, 200만원 미만이 27.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꺼린다는 응답이 수도권에서 과반수 이상(50.8%)을 차지한 반면 제주는 30.8%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른 지역은 영남권 48.9%, 강원 44.4%, 중부권 44.1%, 호남권 43.7%였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도 이에 상응한 반응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성향별로도 비교적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보수적인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54.9%로 진보적 성향의 43.1%와는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중도는 47.7%였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 모두 근소한 차이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IV-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도 52%였던 것과 비교하면 2008, 2009년 각기 43.6%, 46.6%로 2007년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07년~2009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도 43.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0.3%에 머물렀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여성 44.9%, 남성 48.2%)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2%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40대가 55.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44.7%, 19~29세는 43.9%, 30대는 42.4%의 순서로 나타났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는 30대와 19~29세가 각각 47.6%, 47.2%였으며, 50대 이상은 41.8%, 40대는 35.7%였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50대 이상의 13.5%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4% 내외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이 원하는 사람 ‘모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과반수 이상(50.5%)이 찬성했으며, 고졸은 44.5%, 중졸 이하는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는 교

육수준에 무관하게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에 중졸 이하가 18.1%로 고졸 12.4%, 대재 이상 6.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는 30.8%의 응답률에 그쳐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선택적’, 또는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각각 50%, 19.2%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화이트 칼라의 경우 대조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51.3%,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43.8%,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데에는 4.9%에 그쳐 북한이탈주민 입국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전업주부가 42.4%, 블루칼라 44.4%, 학생·무직·기타 48.4%, 자영업자 48.7%로 나타났으며,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데에 전업주부가 14.5%, 자영업 11.1%, 블루칼라 10.4%로 상대적으로 전업주부, 블루칼라가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400만원 이상이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데에 52.5%가 찬성하고 반면 ‘선택적’(38.1%)이나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9.8% 응답률에 그쳐 다른 소득수준 응답자에 비해 가장 수용적 태도를 드러냈다. 그 외에 다른 소득 수준에서는 응답률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데에 200만원 미만 소득 응답자들이 13.3%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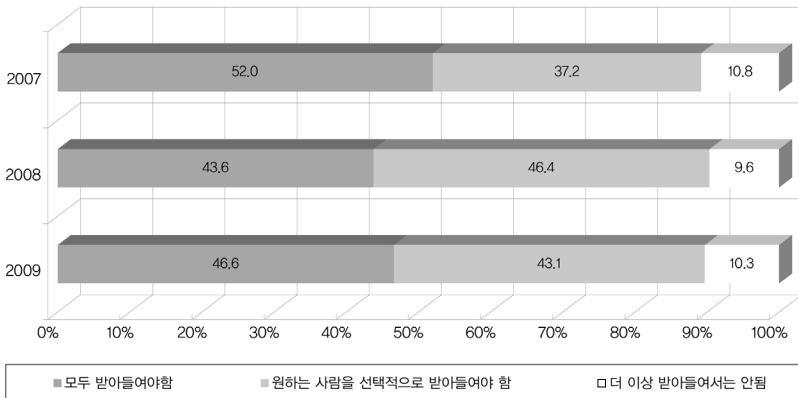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주가 69.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찬성률을 나타냈으며, 강원은 55.6%, 수도권은 47.6%, 호남권 47.1%, 영남권 43.8%, 중부권 43.2%의 순이었다. ‘선택적’으로



나 '더 이상 안된다'는 응답도 이와 상응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바,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데에 영남권이 16.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해 보면 진보적 성향인 경우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51.5%가 찬성했으나 보수는 41.5%, 중도는 46.8%가 찬성하고 있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는 1~2% 차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더 이상은 안된다는 데에는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의 응답자가 14%로 진보적 성향(6.4%)에 비해 8% 가량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59%로 가장 높은 응답률(기타 응답자 제외)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기독교로 48.1%, 종교없음 응답자 44.3%, 불교가 43.8%로 나타났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이와 상응한 양상으로 응답자의 종교별 견해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림 1-IV-6]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54.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다.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도 45.7%에 비해 9% 이상 높아진 것으로 2007년도 53.8%에 가까이 회귀하고 있다.

성별로는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와 19~29세가 각각 60.4%, 57.4%였으며, 50대 이상이 47.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 내외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이 이질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58.6%가 동의하였으나 중졸이하는 43.1%로 대재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졸의 경우는 5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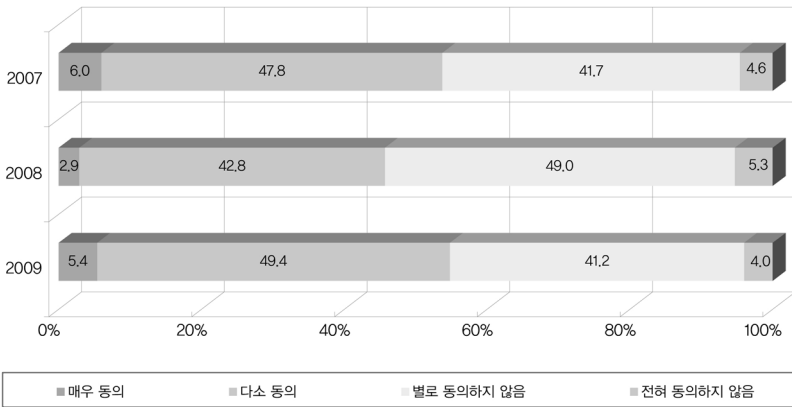
직업별로 보면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화이트칼라가 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학생·무직·기타가 58.9%, 블루 칼라가 55.3%였다. 이에 비해 자영업(51.8%), 전업주부(50.1%), 농·수·축산업(50%)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수준으로 보면 동의한다는 데에 200만원 미만이 5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나머지 소득 계층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동의율이 84.6%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강원이 75%로 그다음 순위였으며, 중부권 65.3%, 수도권 54%, 호남권 53.8%, 영남권이 49.4%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영남권은 동의하지 않는다는데 50.6%가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에서(63.9%)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도는 52.7%, 보수적 정치성향인 경우 50.2%가 동의한다는 의견이었다.

종교별로 보면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이 기독교인 응답자 60.2%로 나타나고 있으며, 천주교 58.9%, 불교 53.8%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림 1-Ⅳ-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체의 53.3%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의견에 비해서는 7%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반대 의견도 과반수에 가까운 46.7%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비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률은 8% 이상 높아진 것이며, 2007년도 59.1%에는 못 미치는 상황

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작년의 54.8%에 비해서 8% 가량 낮은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6%, 여성이 50.6%의 동의율을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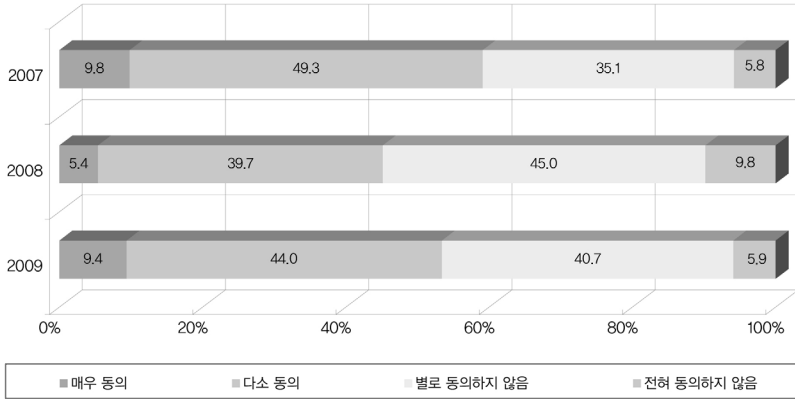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8.3%가 동의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이 62.4%의 동의 응답률을 보여 고졸 46%, 중졸 이하 40.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가 동의하는 응답이 65.7%(반대 3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생·무직·기타가 61.5%(반대 38.5%), 자영업 50.4%(반대 49.6%), 블루칼라 46.8%(반대 53.2%), 전업주부 46.5%(반대 53.5%), 농수·축산업 42.3%(반대 57.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300~399만원인 경우 55.2%였다. 이에 비해 200~299만원,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각 49.6%, 49.9%로 300만원 이상에 비해 5% 이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의한다는 데에 제주 지역이 92.3%로 대다수가 응답했고, 영남권이 42.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동의 의견이 6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보수적 정치 성향인 경우 47.2%, 중도는 52.3%였다.

종교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이 천주교가 70.4%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가 56%, 불교인 응답자가 48.5%,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 43.4%가 동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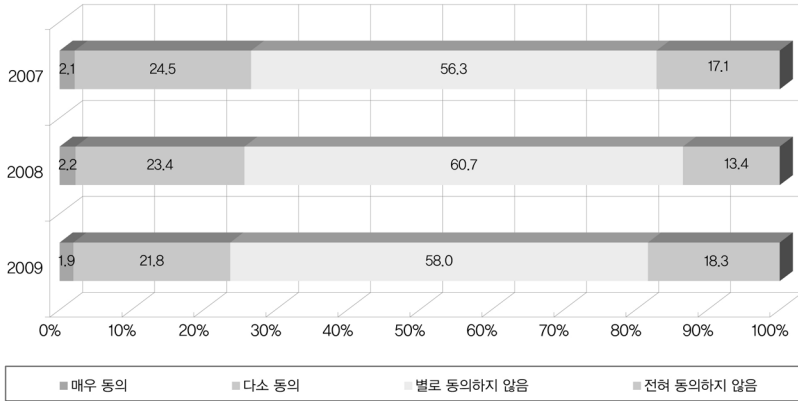


[그림 1-IV-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다.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전체의 23.7%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6.3%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2007, 2008년도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2~3% 정도 근소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 비해 성별이나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가구소득수준, 정치적 성향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직업별, 지역별에 따라서는 비교적 민감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26.9%가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반면 화이트칼라는 17.5%에 머물러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36.1%가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답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중부권이 15.3%만이 응답해 강원 지역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 1-IV-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라.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쟁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 전체적으로 68.4%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7, 2008년도에 각각 63.7%, 63.5%로 거의 비슷했던 것에 비하면 5% 가량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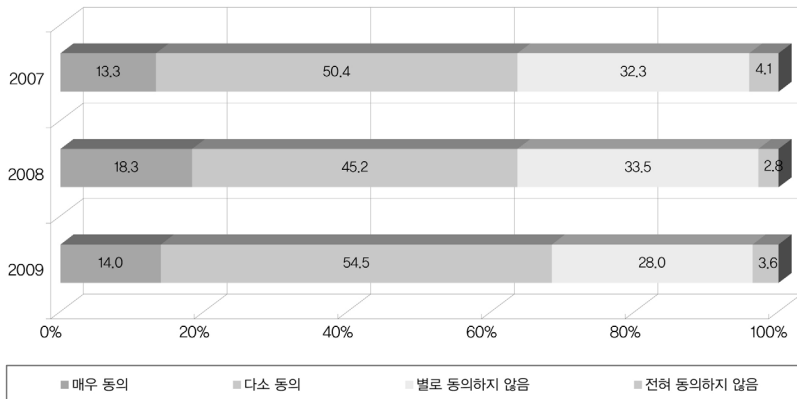
성별로는 이에 대한 의견에 거의 일치한 응답률을 보였는 바, 연령대 별로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답변(74.2%)을 보인 반면 19~29세는 64.6%가 동의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도 큰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중졸 이하(72.2%)가 대재 이상(67.1%)에 비해 5%가량 더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직업별, 지역별로 나타났는데, 직업별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88.5%가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학생·무직·기타의 경우 61%, 화이트칼라 67.9%, 전업주부 68.6%, 블루칼라 69.8%, 자영업 70.8%가



동의해 농·수·축산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의 동의율이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부권이 77.1%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 외에 호남권은 72.3%, 강원은 72.2%, 영남권 69.4%, 수도권은 6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 불교인 응답자가 71.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 69.3%, 기독교가 66.1%, 천주교 64%의 순이었다.



[그림 1-IV-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5. 소결

2009년도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하지 않다는 응답이 63.6%로 친근하다는 응답을(36.3%)을 두 배 가까이 앞

지르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을 동네이웃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5.1%로 꺼린다는 응답(14.8%)을 크게 앞섰으나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 반응도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3.6%로 꺼린다는 응답 16.3%에 비해 크게 앞섰으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0%였다. 그런데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보다 사업동업자나 결혼 상대자로서의 만남은 꺼린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즉, 사업동업자로 관계맺기가 거리긴다는 응답이 38.4%였으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6.3%인 것이다.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 유형에 비해 꺼린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꺼리지 않는다는 22.6%에 비해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한 만남에서는 상대적으로 관계 형성에 거리낌이 적으나, 한 가족이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사업동업자로서의 만남에서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취업에 있어 경쟁상대로 여기는 경계 대상으로 보기보다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남한 사회에서 포용해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23.7%에 그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76.3%로 압도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도 관용적 태도가 더 우세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46.6%)던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43.1%)는 수용적 입장이 대다수였고,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과반수를 넘는 의견 동의(53.3%)가 있었다.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2008, 2009년도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의식의 변화와 지속의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007년도부터 2008, 2009년도 의식 조사까지 3개년 결과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의식의 지속과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우선 2007-2009년도 조사 결과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성을 보이는 문항은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정도,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등이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7년도나 2008, 2009년도에도 여전히 60% 이상을 넘어서고 있으며,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꺼린다는 응답에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률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70%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과반수 내외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2007년도에는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52%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8, 2009년도는 각기 43.6%, 46.6%로 여전히 2007년도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7-2009년도 의식조사에서 변화를 보이는 문항은 무엇이며, 변화의 추이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변화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2007년도 당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문항과 2007년도 이후 응답률의 상승세를 보이는 문항으로 대별된다.

2007년도 당시로 회귀하는 문항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 관계 맺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009년도 조사에서 45.1%였

는데, 이는 2007년도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이다. 직장 동료로서 북한이 탈주민과 관계 맺기에 대해서는 꺼린다는 응답자도 2007년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 과반수이상으로 이는 2007년도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2007년도 53.8%, 2009년도 54.8%) 해를 거듭할수록 응답률의 상승세를 보이는 문항은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관계 형성은 무방하나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이르는 데에는 경계를 두는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경쟁자이기 보다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과반수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부정적 인식 보다 긍정적 인식, 포용적 인식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다. 연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직에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경쟁적 상대자로서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이 되고 있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확산되어 중산층이 경제·사회적으로 하향 계층화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경제적 비용과 ‘함께 살아가기’에 대한 부담감을 실감하는 계층의 확산 가능성과 연계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은 물론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에 현존하는 ‘차별과 배제’가 통일시대에 남북한 사람들 간의 그것으로 확대·심화될 가능성을 연계해 포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통합과정이 이질적 대상에 대한 위계화를 구조화하는 ‘타자화(otherring)’의 시선을 넘어,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래로부터의’, ‘다양성 속에서의 일체’를 지향하는 통일 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V.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⁶

국민의식에 나타난 세계와 북한: 한국인의 유연한 현실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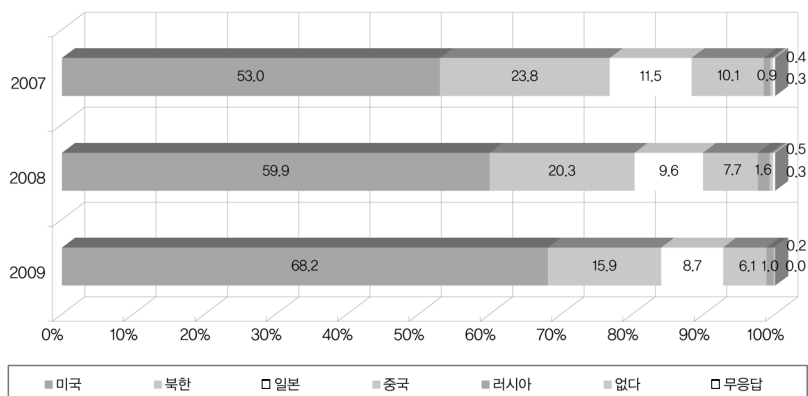
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대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이 4대 주변국의 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다. 남 북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차대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 4대 주변국은 6자회담의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이 주변국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 지는 통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 주변 4개국과 북한 등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가

⁶ 이 논문은 『세계지역연구논총』(2009) 제27집 3호에 게재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깝게 느껴지는 가를 물어보았다.



[그림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3년 동안 이들 5개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변화추이를 보면, 일단 가장 뚜렷하고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호감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다. 2007년에도 전체 설문대상자들의 절반이 넘는 53%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숫자는 2008년에 다시 7%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또 2009년에 오면 무려 68.2%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는 2008년 봄에 시작되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그 여진이 2009년까지 이어진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매우 의외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한때 10% 대로 떨어뜨리는 등 한국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책임이 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받아들였으며, 일부 보수 언론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촛불 시위가 반미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8.3%나 상승하였다. 이 기간 뚜렷이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진전이나 기타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과 취임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연령, 성(性), 거주지역, 직업, 교육 수준, 정치성향, 소득수준, 종교 등 전 인구학적 변수의 모든 층위에서 골고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것은 한국에만 고유한 현상이 아니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포함하여 25개국에서 미국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대폭 상승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미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목할만큼 좋아졌는데, 이것은 버락 오바마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견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약 10년 전의 긍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⁷⁾

따라서 이번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그 원인 또한 위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특히,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30대에서 미국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7-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9. “Confidence in Obama Lifts U.S. Image Around the World: Most Muslim Publics Not So Easily Moved.” In *25-Nation Pew Global Attitudes Survey*: Pew Research Center.



것이 주목을 끈다(<표 1-V-1>). 이는 아무래도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젊은 대통령 오바마의 인기가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어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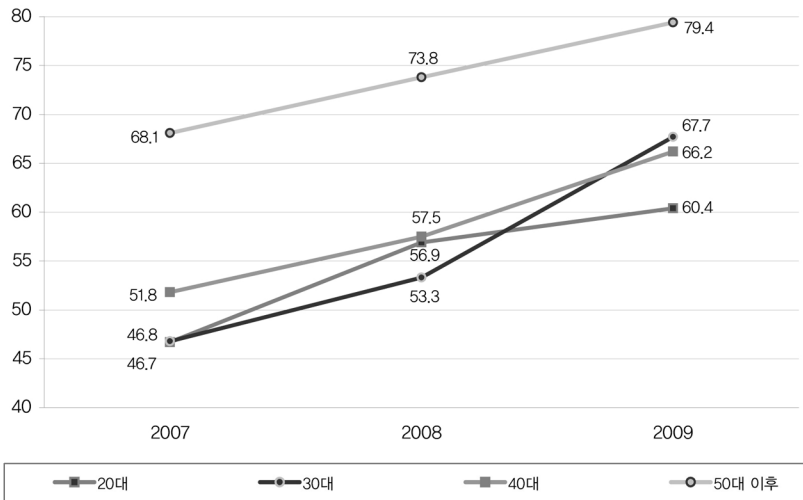
(단위: %)

연령별	연도별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없다	무응답
20대	2007	46.7	21.5	19.5	10.6	1.3	0.3	0.0
	2008	56.9	13.8	18.2	6.7	3.4	0.7	0.4
	2009	60.4	18.5	12.2	7.9	0.7	0.3	0.0
30대	2007	46.8	24.8	13.1	12.4	1.6	0.6	0.6
	2008	53.3	26.5	8.6	9.9	1.0	0.3	0.3
	2009	67.7	17.3	9.3	4.5	1.3	0.0	0.0
40대	2007	51.8	29.8	8.2	8.9	0.3	0.7	0.3
	2008	57.5	26.2	6.9	7.2	1.4	0.6	0.3
	2009	66.2	17.4	7.2	7.9	1.3	0.0	0.0
50대 이상	2007	68.1	18.6	4.7	8.2	0.4	0.0	0.0
	2008	73.8	12.6	5.1	7.1	1.0	0.0	0.3
	2009	79.4	10.0	5.7	3.9	0.7	0.4	0.0

2007년 20대의 46.7%, 30대의 47.1% 만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하였는데, 2008년에는 20대의 57.1%, 30대의 53.5%로 특히 20대의 호감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2009년에 설문에서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20대의 비중은 60.4%로 전년도에 비해 3% 정도 상승하였지만, 특이하게도 30대는 무려 14% 이상이 상승한 67.8% 이었으며, 이는 66.2%인 40대의 비중보다도 오히려 높은 것이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30대의 비중은 46.8%에서 67.7%

까지 20.9%나 상승하였고, 이는 다른 모든 연령층의 상승폭보다 높은 것이다. 그림 1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한때 미국에 대해 가장 덜 호의적이었던 30대가 이제는 오히려 40대보다도 더 큰 호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50대 이상 계층에서 미국을 가장 가깝다고 말한 사람들은 무려 79.4%에 이르렀으며, 이는 20대의 60.4%보다 19%나 높은 비율이다. 또 30대와 40대의 비율보다도 10% 이상 차이를 보여 노장년층과 젊은 세대 사이의 인식 격차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V-2] 연령별 미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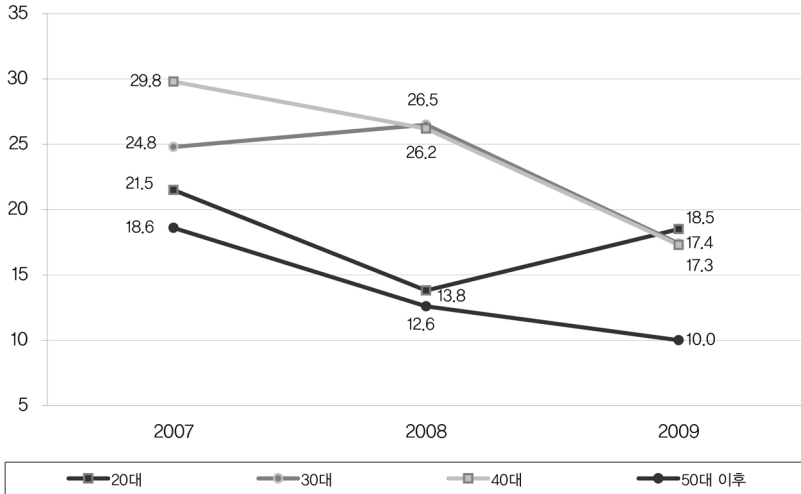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30대의 미국 선호도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진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이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에 힘을 실는 간접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전 연령층에 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것에 반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변화는 2009년 5월 25일 벌어진 북한의 제 2차 북핵 실험 및 뒤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의 재개 및 핵 연료봉 플루토늄 추출 등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증가된 탓으로 이해된다.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2007년에 23.8%, 2008년에 20.3%, 그리고 2009년에 15.9%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일본, 중국, 러시아보다도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이다. 북한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거나(2007년과 2008년의 경우), 혹은 똑같았다(2009년).

연령별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면,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2007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경우 오히려 2008년에 비해 북한을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0대 중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했던 비율은 2007년 21.5% 이었다가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의 영향으로 13.8%로 대폭 하락하였다. 그런데 2009년에는 다시 18.5%로 4.7% 정도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30대에서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2008년 26.5%에서 2009년 17.3%로 9.8%나 하락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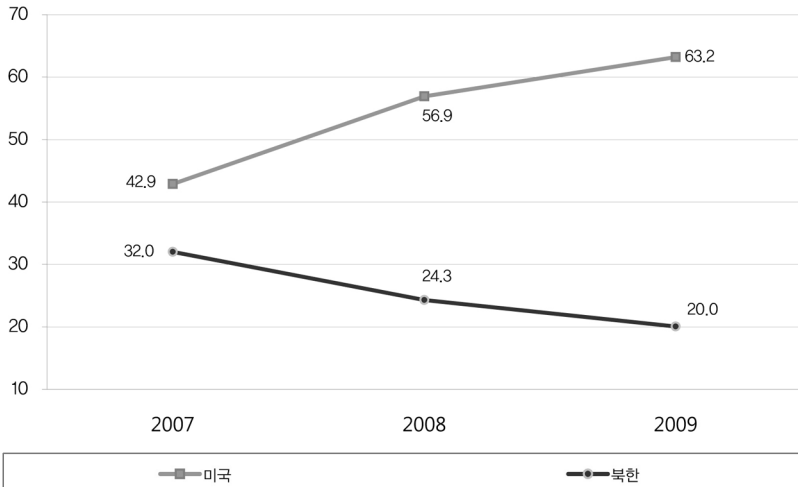
[그림 1-V-3] 연령별 북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 이 나라들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이 특기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향은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변화하였다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사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심대한 변화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의 순위는 미국 - 북한 - 일본 - 중국 - 러시아 순으로 3년 동안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50대 이상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북한 10%, 일본 5.7%, 중국 3.9%, 러시아 0.7%). 단 한 번, 2008년에 20대 국민들 중 북한보다 일본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북한 13.8%, 일본 18.2%). 그러나 2009년에는 이 숫자가 북한 18.5%, 일본 12.2%로 다시 역전되



었다.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일본과 중국을 가장 가깝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20대에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집단은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이었다. 2007년에 보수성향 집단은 59.7%가 미국을 가장 가깝다고 답한 것에 비해 진보성향 집단은 42.9%만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집단은 56.9%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63.2%를 기록, 69.4%인 보수성향 집단에 못지않은 미국 선호도를 보였다. 2007년과 2009년 사이 진보성향 집단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42.9%에서 63.2%로 상승, 무려 20.3%에 달하는 큰 변화를 보였다. 이에 못지않게 이 집단의 북한에 대한 태도도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2007년 32%였던 북한 선호도는 2009년에 20.1%로 12% 가까이 추락하였다.



[그림 1-V-4] 진보성향집단의 미국 및 북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추이

성별로 보면 2009년에 남성(71.7%)이 여성(64.7%)보다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런 경향은 2007년과 2008년에도 관찰되었으나 그 차이가 2%에서 3% 정도 그다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2009년에 오면 남녀 간 미국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는 7.3%로 벌어지면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p < 0.05$)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비율은 여성(17.2%)이 남성(14.6%)보다 2009년에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 지역별로도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다. 표본 수가 적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2009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정도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73.4%로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중부권 63.6%, 호남권 54.2%, 영남권 67%). 2007년에는 수도권의 미국 선호도는 55.3% 였으며 따라서 2년 동안 수도권의 미국 선호도는 18.1% 상승하였다. 영남권(2007년 51.7%)과 호남권(2007년 38.7%)도 2년 전에 비해 1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미국 선호도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권에서는 북한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답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2007년에 호남권의 북한 선호도는 31.9%(수도권 21.8%, 중부권 18.6%, 영남권 25.4%)였는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으로 기타지역에서는 일제히 북한 선호도가 하락한 2008년에도 호남권의 반응은 30.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에는 호남권도 북한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 북한을 가장 가깝다고 대답한 비율이 24.6%로 낮아졌다. 이는 하지만 다른 지역(수도권 14.8%, 중부권 16.1%, 영남권 14.8%)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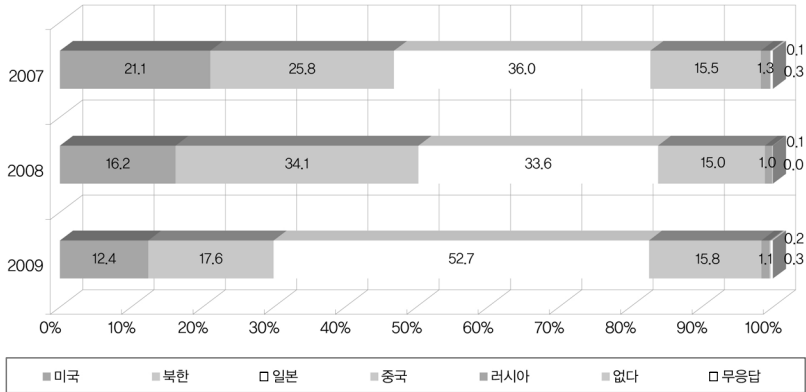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2009년 조사에서 미국에 가장 호감을 보인 직업군은 자영업자였고(74.7%), 전업 주부(71.6%) 및 농·수·축산업자들(69.2%)이 그 다음 순위였으며, 블루 컬러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63.2%).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09년 조사에서는 화이트 컬러 직업 종사자들이 비교적 북한을 가까운 나라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20.6%), 전업 주부들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11.3%).

2007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3년간의 기간 동안 변함없이 드러나는 패턴 중 하나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이 항상 미국에 대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여 왔다는 것이었다. 2009년 조사에서도 이 패턴은 바뀌지 않아서, 중졸 이하 응답자의 74.1%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응답자는 66.7%만이 미국을 가장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대재 이상 응답자의 58.3%가, 2007년에는 48.9% 만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대재 이상 학력자가 미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20% 가까운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2007년 중졸 이하 학력 응답자의 69.7%가 미국을 선호하여 중졸 학력자와 대재 이상 학력자들은 미국 선호도에서 21%가 약간 넘는 차이를 보였지만, 2009년에는 이 차이가 불과 7.4%로 좁혀졌다. 미국에 대한 호감이 2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보인 반면, 북한에 대한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의 정도나 학력 수준별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다. 2009년에 대재 이상 학력자들의 17.6%가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반면 고졸 학력자들의 비율은 14%로써 사실상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한국 국민들은 어떤 국가를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놓고 이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2009년도 조사에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미국을 가장 위협한 국가라고 답한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답한 비율은 반대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일단 2007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1.1%로 15.5%인 중국보다도 높았지만, 2009년 조사에서는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중은 불과 12.4%로 2년 동안 9% 가까이 감소하여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덜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림 1-V-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반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007년 36%에서 2009년 52.7%로, 응답자 과반수가 북한을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일본을 위협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7년 25.8%에서 2008년 34.1%, 그리고 2009년에는 17.6%로 들쭉날쭉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대일관계에서 심각할 정도의 분쟁이나 관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에 대한 호오감은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영향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표 1-V-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세대별/연도별 분류, 단위: %)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20대	2007년	33.9	20.3	32.9	12.0	1.0	0.0
	2008년	21.6	31.0	32.8	13.4	1.1	0.0
	2009년	20.2	17.6	51.7	9.6	1.0	0.0
30대	2007년	23.0	28.1	34.5	13.1	1.0	0.3
	2008년	17.2	36.1	31.8	14.6	0.3	0.0
	2009년	13.5	17.6	50.0	18.0	1.0	0.0
40대	2007년	15.4	31.5	32.8	18.4	2.0	0.0
	2008년	15.8	33.6	33.9	14.4	2.0	0.3
	2009년	12.1	19.3	51.8	15.4	1.3	0.0
50대 이상	2007년	11.5	23.0	45.0	19.1	1.4	0.0
	2008년	9.6	36.9	36.2	16.0	1.4	0.0
	2009년	3.6	16.0	58.4	20.6	1.1	0.4

이러한 경향은 세대별 분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미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경향은 각 세대에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낀다는 비중은 모든 세대에서 50% 이상이었다.

그러나 세대 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

로 본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모든 세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20대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한 20대의 비율이 20.2%였던 것에 비해, 30대는 13.5%, 40대는 12.1%, 그리고 50대 이상은 불과 3.6%에 불과했다. 20대와 50대 이상 세대의 미국에 대한 인식 차이는 16.6%에 이르러,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비해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는 비율에선 세대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50대 이상 세대의 58.4%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반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30대에서도 50%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변, 그 세대 간 격차는 8.4%에 그쳤다.

미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보는 인식에서 성별 차이는 2009년에 남성 11.6%, 여성 13.4%로 큰 차이가 없었고,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도 각각 54.5%와 51.2%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일본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여성이 19.8%인데 비해 남성은 15.5%로 차이가 있었고, 중국의 경우도 여성이 13.9%, 남성이 17.7%로 약 4%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위협적인 국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지역별 분석에서 매우 흥미롭게 드러난다. 아래 표에서 보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한 사람은 2007년 중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에서 20% 이상이였다. 그러나 2008년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국을 위협 국가라고 대답한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 10% 대로 내려왔다. 2009년 조사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미국을 위협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10.8% 및 11.1%가 되었는데, 호남권에선 이 비율이 여전히 2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V-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지역별/연도별 분류)

	연도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수도권	2007	20.6%	25.0%	37.8%	15.1%	1.5%	0%
	2008	13.1%	37.0%	33.2%	16.4%	0.4%	0%
	2009	10.8%	18.1%	56.1%	13.5%	1.4%	0.2%
중부권	2007	14.4%	24.6%	39.0%	20.3%	1.7%	0%
	2008	15.6%	54.7%	15.6%	13.3%	0.8%	0%
	2009	13.7%	19.7%	45.3%	20.5%	0.9%	0%
호남권	2007	27.7%	29.4%	28.6%	13.5%	0.8%	0%
	2008	22.3%	31.5%	34.6%	6.9%	4.6%	0%
	2009	22.9%	22.0%	38.1%	14.4%	2.5%	0%
영남권	2007	20.7%	28.5%	34.4%	15.2%	1.2%	0%
	2008	18.8%	25.5%	38.8%	15.2%	1.5%	0.3%
	2009	11.1%	14.5%	54.3%	19.8%	0.3%	0%

이러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격차는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을 가장 위협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까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07년에는 호남권이 28.6%인 반면 다른 지역은 30%대 중반정도에 머물렀는데, 2008년에 오면 중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30%대 중후반으로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나 2009년 조사에서는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한 비율이 호남에선 38.1%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 중부권에선 모두 이전 해 조사결과에 비해 15%에서 30%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보는 시각에서 호남권은 지난 3년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보면,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진보, 중도, 보수가 각각 18.4%, 11.1%, 9.6%로 예상대로 진보와 보수의 상당한 격차가 관찰되었다. 반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순서대로 49.5%, 54.1%, 53.7%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4.2%에 불과하였다. 2007년 조사에서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진보가 26.7%, 보수가 40.4%로 그 차이가 14.3%에 달했던 것을 비교하면, 북한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있어 정치 성향별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밖에 종교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차이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차이를 찾기 힘들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를 찾자면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1.5%로, 자영업(57.1%), 블루 컬러(47.6%), 화이트 컬러(49.8%), 전업주부(55.3%), 기타(53.2%)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3.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크게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병행하여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 등 단기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여기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았을 때는 지금까지의 분석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나라별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협력, 경쟁, 경계, 혹은 적대대상인가를 물었을 때의 결과를 아래 <표 1-V-4>에 정리하였다. 우선 미국을 협력대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009년에 73.7%였으며, 경쟁대상이



나 경계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3.7%와 11.7%, 그리고 적대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0.9% 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는 이와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49.4%의 국민이 경쟁대상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추세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7년과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46.4%와 35.5%의 국민이 일본을 경쟁상대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일본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2009년은 이전 해에 비해 약간 낮아진 26.2%였다.

표 1-V-4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국가별 / 연도별 분류)

국가	연도	구호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미국	2007		53.1%	21.9%	21.9%	2.9%
	2008		70.2%	13%	14.8%	2%
	2009		73.7%	13.7%	11.7%	.9%
일본	2007		14.6%	46.4%	30.2%	8.5%
	2008		16.7%	35.5%	31%	16.7%
	2009		19.5%	49.4%	26.2%	4.9%
중국	2007		19.3%	46.3%	30.9%	3.3%
	2008		23.7%	38.1%	32.8%	5.1%
	2009		21.1%	42.0%	33.3%	3.6%
러시아	2007		22.8%	40.2%	32%	4.7%
	2008		28.7%	35%	31.8%	4.1%
	2009		28.1%	39.8%	29.8%	2.3%
북한	2007	21.8%	56.6%	3.3%	11.8%	6.6%
	2008	22.3%	56.9%	3.5%	11.9%	5.4%
	2009	17.4%	50.7%	2.2%	20.6%	9.1%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시각도 이와 비슷했다. 매년 약 40% 정도의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대상이라고 답하였으며 2009년에도 크게 변함없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답한 비율은 42%, 러시아를 경쟁상대로 답한 비율도 39.8%로 비슷하였다. 두 나라를 경계의 대상이라도 답한 비율도 비슷하였는데, 중국은 33.3%, 러시아는 29.8%였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태도이다. <그림 1-V-1>과 <그림 1-V-5>를 보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혹은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서 러시아를 선택한 사람은 거의 매년 1% 선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문제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서는 매년 70%에 가까운 사람이 경쟁상대 혹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추측해보면 한국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러시아와의 거리는 아직까지 다른 한반도 주변국들에 비교해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그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1-V-4>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나 하는 물음에 2007년과 2008년은 거의 같은 설문 결과가 나온 반면, 2009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을 구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이들의 비율이 2008년의 22.3%에서 2009년에는 17.4%로 줄었고, 협력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56.9%에서 50.7%로 감소하였다. 반면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2008년 11.9%에서 올해는 20.6%로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앞 단락에서 분석한 바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즉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고 북한으로부터의 느끼는 위협감이 증대한 것과 궤를 같이 하여, 북한을 도와야 한다거나 협력해야 한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반면 북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9년에 와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아직도 9.1%에 불과할 뿐이며, 구호대상이나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이들을 합친 비율은 전체의 68.1%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비율은 2007년에 78.4%, 2008년에는 79.2%로 2009년에 거의 10%정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국민들이 북한을 돕거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50.7%의 국민이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고 답한 것은 일본(19.5%)이나 중국(21.1%), 러시아(28.1%)를 협력 대상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북한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그림 1-V-5>에서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라고 답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답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2007년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설문응답자의 36%, 2008년에는 33.6%, 2009년에는 52.7%였다. 이들이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지 교차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V-5>에 정리되어있다.

표 1-V-5 교차분석 -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구호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25.9%	45.4%	3.0%	14.8%	10.9%
2007(전체)	21.8%	56.6%	3.3%	11.8%	6.6%
2008	21.1%	55.4%	2.2%	14.7%	6.6%
2008(전체)	22.3%	56.9%	3.5%	11.9%	5.4%
2009	18.3%	40.7%	1.9%	26.0%	13.1%
2009(전체)	17.4%	50.7%	2.2%	20.6%	9.1%

위의 <표 1-V-5>에서 “(전체)”로 표시된 행은 각각 조사년도 설문 응답자 전체의 비율이며 회색으로 표시된 행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다. 각각의 행을 비교해 보면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답한 이들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에선 나머지 응답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비교적 북한을 적대대상 혹은 경계대상이라고 답할 확률이 다른 이들에 비해 높은 반면, 여전히 이들의 다수는 북한을 구호 혹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하였다. 2009년을 보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꼽은 사람들 중 59.1%가 북한을 여전히 구호의 대상 혹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응답자의 비율 68.1%보다 9% 낮은 것이지만,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현상 이면에는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일견 모순되는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 전쟁과 주변국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에 가상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각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서도 미국에 대한 호감 증대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데, 2008년에 57.4%의 응답자가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은 남한을 도울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2009년에는 이 비율이 65.1%까지 올라갔다. 아직까지 공산당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북한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 되어 주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반도 전쟁에서 남한 편을 들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07년 26.8%였던 것이 2009년에는 38.5%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예측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러시아가 과거 공산국가이며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이 전쟁 발발 시 북한을 도울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한국을 도울 것이라 대답한 비율도 높은 편은 아니었다. 2009년에 65.1%의 응답자가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 답한 것에 비해,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 답한 이들은 24.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이 전 조사들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결과라는 것이 눈에 띈다. 2008년에 14.7%만이 일본이 남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한 것에 비교하면 그 수치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우선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 1-V-6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각국의 태도 예상

국가	연도	한국 도움	북한 도움	자국 이익	중립
미국	2007	50.6%	1.3%	45.5%	2.6%
	2008	57.4%	1.4%	37.4%	3.8%
	2009	65.1%	0.7%	32.3%	2.0%
일본	2007	16.2%	3.3%	72.7%	7.9%
	2008	14.7%	4.3%	69.3%	11.5%
	2009	24.5%	3.7%	66.0%	5.7%
중국	2007	5.3%	26.8%	56.4%	11.4%
	2008	4.5%	30.3%	52.2%	12.9%
	2009	3.1%	38.5%	50.7%	7.7%
러시아	2007	3.7%	19.0%	59.1%	18.2%
	2008	6.0%	20.9%	54.6%	18.4%
	2009	4.3%	22.5%	57.6%	15.5%

그러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을 제외한 각 나라들이 취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거나, 전쟁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어 38.5%의 응답자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응답자는 중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취하거나(50.7%) 혹은 중립을 지킬 것(7.7%)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국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본의 경우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것이 흥미롭다. 2007년에는 무려 72.7%가, 2008년에는 69.3%, 2009년에도 66%가 일본은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경



협과 한국 전쟁 당시 일본이 군수기지의 역할로 피폐한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냉소적인 시각은 미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여전히 30%에서 40%의 응답자는 미국 또한 자국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국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이런 현실주의적 시각은, 과연 각 나라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어느 정도나 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다. <표 1-V-7>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다.

미국에 호의적인 의견이 두드러진 2009년 결과에서도 미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의 3분의 2인 66.6%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일본의 경우 2008년에 90.8%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이 2009년에는 79.9%로 좀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7년 이후 계속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1-V-7 남북한 통일을 주변국들은 얼마나 원하는가?

		(1) 매우 원한다	(2) 원하는 편이다	(1)+(2)	(3) 원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3)+(4)
미국	2007	4.6%	25.3%	29.9%	53.7%	16.3%	69.9%
	2008	5.5%	21.7%	27.2%	51.1%	21.7%	72.8%
	2009	4.4%	29.0%	33.4%	55.1%	11.5%	66.6%
일본	2007	1.3%	14.7%	16.0%	59.6%	24.3%	83.8%
	2008	1.2%	7.9%	9.2%	56.9%	33.9%	90.8%
	2009	1.4%	18.7%	20.1%	60.3%	19.6%	79.9%
중국	2007	1.3%	14.8%	16.0%	63.3%	20.5%	83.8%
	2008	2.1%	10.2%	12.4%	59.4%	28.2%	87.6%
	2009	1.2%	12.7%	13.9%	65.8%	20.4%	86.1%
러시아	2007	1.4%	15.9%	17.3%	64.6%	17.9%	82.5%
	2008	2.1%	12.4%	14.5%	60.5%	24.8%	85.3%
	2009	1.2%	15.1%	16.3%	68.6%	15.1%	83.7%
북한*	2007	1.4%	11.6%	13.0%	54.8%	32.2%	87.0%
	2008	1.2%	8.2%	9.4%	42.5%	48.1%	90.6%
	2009	2.8%	18.4%	21.2%	51.9%	26.9%	78.7%

* 북한의 경우, “김정일 정권(2007년, 2008년)” 혹은 “북한 정권(2009년)”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 국민들은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견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높은 편이었으나(2009년 33.4%), 이의 두 배에 달하는 응답자가 미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라고 대답한 비율이 2009년에 68.2%에 달



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약간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순되는 결과는 오바마의 취임 및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기 고조 등 단기적 이슈로 인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세기 한국 역사의 쓰라린 기억은 강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감을 뿌리 깊게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심어 놓았으며,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국제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현실주의적 시각은 동맹관계인 미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을 정도이므로, 지난 20세기 끊임없는 갈등의 대상이었던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 국제 협력과 통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시각이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라면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때와 조건에 따라서는 타협과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지 않고,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 편을 들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그러나 남북한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이들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표 1-V-8>을 보면 통일을 위해 주변국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 35%에서 2009년 43.4%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주변국 협조가 필요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2007년 17.5%에서 2009년

에는 9.5%로 낮아져서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결국 국제사회의 공조가 없이는 힘들다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표 1-V-8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조사연도	(1) 매우 필요	(2) 약간 필요	(1)+(2)	(3) 별로 필요없음	(4) 전혀 필요없음	(3)+(4)
2007	35.8%	46.7%	82.5%	14.8%	2.8%	17.5%
2008	35.0%	52.9%	88.%	9.5%	2.6%	12.0%
2009	43.4%	46.9%	90.4%	6.7%	2.8%	9.5%

각 국가별로 어떤 나라의 협조가 통일에 있어 가장 필요할지를 물어 보았을 때, 역시 응답자들은 무척이나 현실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1-V-9>를 보면 우선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전체의 92.9%가 달했으며, 이중 45.2%는 미국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1-V-9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 국가별

국가	조사연도	(1) 매우 필요	(2) 약간 필요	(1)+(2)	(3) 별로 필요없음	(4) 전혀 필요없음	(3)+(4)
미국	2008	42.0%	48.9%	90.9%	7.1%	2.1%	9.2%
	2009	45.2%	47.7%	92.9%	5.2%	1.8%	7.1%
일본	2008	18.5%	52.4%	70.9%	22.9%	6.2%	29.1%
	2009	20.4%	58.9%	79.3%	16.2%	4.5%	20.7%
중국	2008	25.3%	55.4%	80.7%	15.2%	4.1%	19.3%
	2009	29.7%	53.5%	83.2%	13.3%	3.4%	16.7%
러시아	2008	17.2%	57.8%	74.9%	20.9%	4.%	24.9%
	2009	19.9%	53.6%	73.5%	22.6%	3.9%	26.5%



미국에 이어 남북한 통일에 꼭 협조를 구해야 할 대상은 중국으로 드러났는데, 전체적으로 83.2%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매우 필요 29.7%, 약간 필요 53.5%). 상대적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간 낮은 편이었지만(일본 79.3%, 러시아 73.5%), 여전히 이들도 한반도의 통일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할 주변국은 그 중요성의 순서대로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가장 독보적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이들 4대 강국의 고른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7. 소결

2009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해 본, 한국인들이 국제 정치를 보는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주의적이면서도 그 내용에서 매우 유연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realism)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의 기본을 갈등이라고 파악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힘(power)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지난 3년간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한국인들은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미국과 북한, 일본 등에 대한 호감과 적대감이 자주 변화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한국인들이 주도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그것이 한반도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및 북핵 위기의 고조는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이 큰 폭으로 증가한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평가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막강한 힘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한반도의 통일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66.6%에 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을 돕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충실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2.3%에 이르는 것에서 이러한 의구심이 짙게 드러난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일견 모순되는 태도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지나친 불신과 적대감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한국인들의 현명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 즉 현실주의적 시각과 유연함은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북한 정부의 잇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난 3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전체의 59%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실주의와 유연함이 대단히 잘 조화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런 국제 인식은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우리가 견뎌내 온 온갖 간난과 역경을 통해 체험으로 익힌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은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해 대단히 잘 발달된 인식 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 견실한 현실주의적 안목과 유연함은 앞으로 어떠한 국제관



계에서의 어려움이 닦쳐온다고 해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민족적
저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IPUS

2009 통일외식조사

제2부 심층분석



I. 통일 의식 속에 나타난 남남갈등의 지형 분석: 지역과 이념

지역과 이념은 한국의 정치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구조적 갈등의 두 산맥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하고 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은 남북분단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의해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정권수립 시기부터 좌우익 대립이 치열했고 70~80년대를 거치며 이념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제3공화국 시기부터 깊이 뿌리박힌 영호남의 지역갈등은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담론이 되었다.

세계적 탈냉전의 도래와 한국사회 민주화의 진전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사회주의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7.7선언을 시작으로 1989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

의서 발효 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시작됨으로써 지역·이념 갈등은 냉전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남북교류와 왕래가 시작됨에 따라 통일문제와 북한문제, 대북정책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견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 대립, 즉 ‘남남갈등’이 첨예화되었다. 남남갈등은 남북갈등에 대칭하는 의미의 용어로서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특히, 남남갈등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크게 부상하였다.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의 대립은 대북지원에 대한 ‘퍼주기’ 논쟁과 분배의 투명성 문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저자세 태도 등에까지 이어졌다. 대북정책과 북한인식, 통일에 대한 생각,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 측면에서의 의견 차이는 이른바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남남갈등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은 완화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대북정책을 보수적 시각에서 바로 잡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남갈등의 양상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10~20년 간의 남북관계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해 오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는 사뭇 달라져 새로운 도전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은 지역과 이념 변수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009년 8월 현재 지역과 이념에 따라 통일·북한·대북정책·새터민·주변국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2008년 이후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남남갈등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지역갈등의 지형 변화

1) 통일인식

통일인식에 나타난 지역 응답 분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2- I -1>에서 보이듯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던컨(Duncan)의 사후검증을 해본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간의 성향 차이가 나타났다. 제주와 강원을 예외로 하면, 호남지역이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영남지역이 가장 낮으며, 수도권과 중부지역은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 즉 2009년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 지형은 호남권·제주, 수도권·중부권, 영남권·강원의 세 권역에서 다른 성향을 보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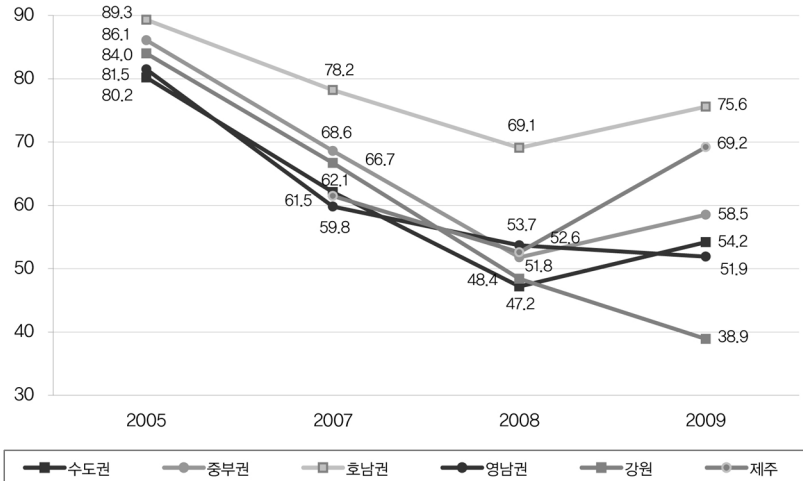
표 2- I -1 지역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ANOVA 결과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2009)	Between Groups	32.680	5	6.536	4.471	.000
	Within Groups	1764.489	1207	1.462		
	Total	1797.170	1212			

2009년 통일인식의 지역별 차이를 2008과 비교해 보면, 통일인식에 대한 지역간 성향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ANOVA 분석

과 던컨의 사후검증 결과 2008년에 다른 성향을 보인 지역의 평균이 각각 호남권 2.05와 중부권 2.70인데 반해, 2009년에는 다른 성향을 보인 지역집단의 평균이 각각 1.92(호남)과 2.65(영남), 2.75(강원)로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태도의 격차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더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의 개괄적 추이는 [그림 2- I -1]에서 볼 수 있다.

통일인식의 지형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수도권 80.2%, 중부권 86.1%, 호남권 89.3%, 영남권 81.5%로 호남권·중부권이 한 궤를 이루고 수도권·영남권이 다른 한 궤를 형성하는 호남·중부권-수도·영남권의 지형을 갖추었다. 이 지형이 2007년에 이르러 중부권이 호남권에서 다소 떨어져 수도권으로 가깝게 이동하였다. 즉 호남권이 78.2%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중부권(68.6%), 수도권(62.1%), 영남권(59.8%) 순으로 낮아졌다.



[그림 2- I -1] 지역별 통일의 필요성 인식 추이(2005~2009)



2008년에는 통일인식의 지역적 응답분포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호남권이 69.1%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부권과 수도권에서 통일 필요성 응답이 각각 51.8%, 47.2%로 영남권(53.7%)보다 낮아졌다. 호남권-수도·중부권-영남권 순으로 형성되었던 지형에서 2008년에 수도권·중부권과 영남권의 뒤바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수도권과 중부권이 통일인식에서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기존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말 대선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면서 대통령선거의 학습효과가 통일의 식조사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추이를 보면 [그림 2- I -1]에서 보이듯 호남권(75.6%)이 높은 위치를 유지한 반면, 수도권·중부권이 다시 영남권과 분리되어 호남권-영남권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2007년의 지형으로 복귀하였다. 호남권과 영남권(51.9%)의 격차가 23.7%로 크게 벌어지고, 수도권(54.2%) 중부권(58.5%)이 중간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보면, 2008년에는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했으나, 2009년에는 정권교체 효과가 사라지고, 영호남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존의 지역갈등 형태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났다.

통일인식의 지역별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역간 인식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점 커지고 있다. 1994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92.0%, 영남권 91.6%, 호남권 93.3%, 중부권 93.4%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역간에 의견 차이가 큰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다.⁸ 그러나 2005

년 이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호남권에서는 비교적 높게 유지된 반면 다른 지역, 특히 영남권에서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수도권과 중부권, 강원, 제주 등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호남권이 김대중 정부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며⁹⁾, 수도권과 중부권도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통일과 대화의 필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북한인식

북한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역 차이는 <표 2- I -2>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영남권과 수도권이 각각 24.1%, 22.3%로 중부권(17.8%)과 호남권(10.1%)에 비해 높았다.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호남권이 2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다. 예년과 비교하면 중부권의 변화가 의외다. 중부권에서 작년에 ‘지원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14.4%(07년)→24.9%(08년)로 급증했으나 2009년에는 다시 13.6%로 급감하여 예년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작년에는 정권교체로 인해 중부권의 의식이 요동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일상적 패턴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식에서 전반적 지역변수의 특징은 호남권과 다른 지역이 구분되는 전형적인 지역변수의 특징을 드러냈다.

8. 최수영 외,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86.

9. 호남권은 통일필요성 의식이 높을 뿐 아니라 ‘급진통일’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난다. 2009년 조사에서 ‘급진통일’에는 호남권이 전체평균(8.6%)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응답률(19.3%)을 보였다. 2007년에는 ‘급진통일’ 의견이 수도권(8.1%), 영남권(8.7%), 중부권(15.3%)에 비해 호남권은 21.0%로 상당히 높았고 2008년에도 17.7%로 비교적 높았다. 호남권에서는 ‘현상유지’를 반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표 2-I-2 지역별 북한의 대상인식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지역 교차분석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지원대상	빈도	106	16	29	51	4	3	209
	%	17.9%	13.6%	24.4%	15.7%	11.1%	23.1%	17.4%
협력대상	빈도	276	74	64	168	19	9	610
	%	46.5%	62.7%	53.8%	51.9%	52.8%	69.2%	50.7%
경쟁대상	빈도	9	2	7	6	3	0	27
	%	1.5%	1.7%	5.9%	1.9%	8.3%	.0%	2.2%
경계대상	빈도	132	21	12	78	5	0	248
	%	22.3%	17.8%	10.1%	24.1%	13.9%	.0%	20.6%
적대대상	빈도	70	5	7	21	5	1	109
	%	11.8%	4.2%	5.9%	6.5%	13.9%	7.7%	9.1%
Total	빈도	593	118	119	324	36	13	12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53.2,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호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은 현저하다. <표 2-I-3>에서 보이듯,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호남권은 63.9%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은 각각 38.7%, 43.2%, 34.3%로 낮게 응답했다. “최근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질문에서도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각각 64.7%, 53.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서 긍정적 평가는 각각 44.5%, 44.1%, 39.2%로 낮게 나타났다.¹⁰ 시기별로 보면 2008년에 중

¹⁰ ANOVA를 실시한 결과,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킨 사후검증 결과 2009년에 나타난 지역집단간의 성향의 차이는 2008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에는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지역간 성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호남권, 중부

부권과 제주지역에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지역적 분포를 나타냈다.

표 2-1-3 대화·타협 가능 상대로서의 북한인식과 지역(2009)

		북한정권 대화·타협 가능 상대·지역 교차분석(2009)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매우 가능하다	빈도	19	3	8	3	0	2	35
	%	3.2%	2.5%	6.7%	.9%	.0%	15.4%	2.9%
어느 정도 가능하다	빈도	210	48	68	108	17	6	457
	%	35.4%	40.7%	57.1%	33.3%	47.2%	46.2%	38.0%
별로 가능하지 않다	빈도	278	53	35	157	13	2	538
	%	46.9%	44.9%	29.4%	48.5%	36.1%	15.4%	44.7%
전혀 가능하지 않다	빈도	86	14	8	56	6	3	173
	%	14.5%	11.9%	6.7%	17.3%	16.7%	23.1%	14.4%
Total	빈도	593	118	119	324	36	13	12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53.3,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지역별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른바 ‘정권교체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작용하였다. 2007년에는 강원 69.4%, 수도권 62.9%, 중부권 60.2%, 호남권 56.3%, 영남권 55.1%, 제주 23.1% 등으로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휴전선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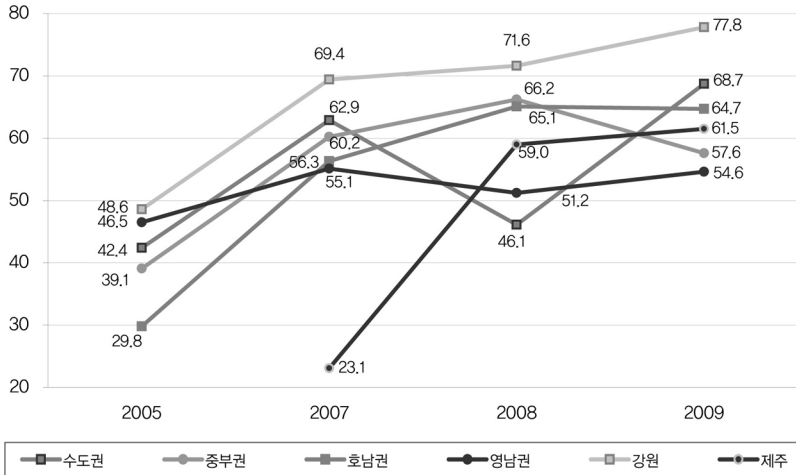
권·수도권, 영남권의 세 지역에서 다른 성향을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



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수도권 지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2008년에는 조금 달라져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 지역의 경우 71.6%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나, 수도권은 46.1%로 가장 낮았으며, 영남권도 51.2%로 낮은 편에 속했다. 중부권과 호남권, 제주는 각각 66.2%, 65.1%, 59.0%로 높은 편이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비해 중부권과 호남권은 높게 보고 있다. 즉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아마도 수도권과 영남권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생각으로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해 신뢰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에는 영남권과 중부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에 영남권과 중부권은 각각 54.6%, 57.6%로 응답하여, 수도권(68.7%), 호남권(64.7%), 강원(77.8%), 제주(61.5%)에 비해 낮았다. 즉 영남권과 중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단지, 수도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68.7%로 예측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56.1%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는 2009년 북한이 감행한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이른바 ‘북한효과’가 작용하여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I-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2009)

북한인식과 관련하여 중부권에서 북한사회 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15~20% 가량 높게 나온 점이 특이하다. 북한방송을 접한 경험도 2009년에 중부권(60.2%)과 강원(69.4%)이 다른 지역(수도권 44.8%, 호남권 42.0%, 영남권 42.4%)에 비해 많았다. 2009년에는 호남권의 북한사회 인지도가 급상승했지만, 중부권이 그 뒤를 이으며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유지했다. 중부권이 북한방송을 접한 경험이 많고 북한사회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나 계층 변수는 일정한 방향과 추세로 변화하는 반면, 지역변수는 남북관계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경향이 발견된다.¹¹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인 수도권과 강원은 안보불

11. 김병로, “북한·통일 관련 세대·계층·지역별 인식,” 『제3차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범적 연구 - 세대, 일, 그리고 신뢰: 국제비교』(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차 심포지움, 2006.5.18, 대한상공회의소).



안익식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08년 이후 국내 정치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정권교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북인식에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었으나, 2009년에 다시 2007년의 상황으로 복귀하였다.

3) 대북정책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도 지역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2009년 대북정책 만족도는 영남권이 41.7%로 가장 높고 수도권 31.3%, 강원 25.0%, 중부권 22.9%, 호남권 19.3%, 제주 15.4% 순이었다.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는 영남권-수도권-중부·호남권의 세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의 조사와 비교할 때 지역 간 차이가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2008년에는 영남권이 49.6%로 매우 높았고, 강원 33.1%, 수도권 29.0%, 중부권 29.8%, 호남권 16.1%로 영남권과 수도권·중부권 및 호남권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었다. 이처럼 지역격차가 2009년에 좁혀진 이유는 2009년에 수도권·호남권의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영남권·중부권의 불만이 상승하여 지역간 차이를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영남권과 중부권의 대북정책 불만이 늘어난 것도 현 정부에 대한 이 지역의 지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권교체 이전인 2007년에는 대북정책 만족도가 호남권에서 43.7%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 31.3%, 수도권 26.7%, 중부권 28.8% 등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불만이 매우 높았었다. 2008년에 정권교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영남권의 만족도가 31.3%→49.6%로 급상승한 반면, 호남권의 만족도는 43.7%→16.1%로 급락했다. 2009년에는 영호남 간의 이런 충격이 완화되었고, 중부권에서 불만이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지역별

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4) 주변국 호감도

2009년의 경우, 국가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인식하였다. 미국선호도는 수도권 73.4%, 중부권 63.6%, 호남권 54.2%, 영남권 67.0%, 강원 58.3%, 제주 61.5%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미국 선호도가 73.4%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순이었다. 호남지역에서는 미국선호도가 54.2%로 가장 낮은 반면 북한에 대한 선호도는 24.6%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미국선호도가 73.4%로 가장 높은 반면, 북한선호도는 14.8%로 영남권(14.8%)과 함께 가장 낮았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미국선호도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지역에서 각각 55.0%, 61.0%, 51.7%, 52.8%인데 비해 호남권에서는 38.7%로 매우 낮았었다. 그에 비해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은 호남권에서 31.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38.9%로 그 뒤를 잇고, 영남권, 수도권, 중부권에서는 각각 25.4%, 21.7%, 18.6%였다. 2008년에는 특이하게도 중부권에서 미국선호도가 45.0%로 가장 낮고 북한선호도는 32.5%로 가장 높았다. 2008년 중부권에서 이처럼 미국선호도가 낮고 북한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선호도가 2009년에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아 2008년에 특정 사건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중부권이 북한방송 접촉 경험이 많고 북한사회 인지도가 높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2003~2005년에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미국선호도가 낮고 북한선호도는 높은 반면, 중부권과 영남권 및 강원지역에서는 미국선호도가



높고 북한선호도는 낮았다.¹² 2007년 이후에는 미국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반면, 북한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져 지역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07년 이전에 미국선호도가 낮았던 호남권과 수도권에서도 지난 3년 사이 각각 38.7%→50.4%→54.2%, 55.0%→62.9%→73.4%로 상승한 반면, 북한선호도는 두 지역에서 각각 31.9%→21.8%→24.6%, 21.7%→18.7%→14.8%로 하락했다.

표 2-1-4 지역별 주변국 선호도(2009)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지역 교차분석								
국 가		지 역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미국	빈도	435	75	64	217	21	8	820
	%	73.4%	63.6%	54.2%	67.0%	58.3%	61.5%	68.2%
일본	빈도	42	11	11	31	9	0	104
	%	7.1%	9.3%	9.3%	9.6%	25.0%	.0%	8.7%
북한	빈도	88	19	29	48	3	4	191
	%	14.8%	16.1%	24.6%	14.8%	8.3%	30.8%	15.9%
중국	빈도	24	10	12	23	3	1	73
	%	4.0%	8.5%	10.2%	7.1%	8.3%	7.7%	6.1%
러시아	빈도	3	2	2	5	0	0	12
	%	.5%	1.7%	1.7%	1.5%	.0%	.0%	1.0%
Total	빈도	593	118	118	324	36	13	12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47.9, p=.004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12. 김병로, “북한·통일 관련 세대·계층·지역별 의식,” 『제3차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범적 연구 - 세대, 일, 그리고 신뢰: 국제비교』,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차 심포지움(2006.5.18).

표 2-I-5 지역별 주변국 선호도(2008)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지역 교차분석								
국 가		지역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미국	빈도	379	54	60	197	28	9	727
	%	62.9%	45.0%	50.4%	60.8%	75.7%	69.2%	59.8%
일본	빈도	54	7	13	39	2	3	118
	%	9.0%	5.8%	10.9%	12.0%	5.4%	23.1%	9.7%
북한	빈도	113	39	26	63	6	0	247
	%	18.7%	32.5%	21.8%	19.4%	16.2%	.0%	20.3%
중국	빈도	39	16	18	20	1	0	94
	%	6.5%	13.3%	15.1%	6.2%	2.7%	.0%	7.7%
러시아	빈도	10	4	2	4	0	0	20
	%	1.7%	3.3%	1.7%	1.2%	.0%	.0%	1.6%
Total	빈도	603	120	119	324	37	13	121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78.4,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결론적으로, 2009년의 통일·북한인식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2008년에 비해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호남권과 제주지역은 좀더 통일 지향적, 대북 우호적 성향으로 변화했고, 반대로 영남권과 강원지역은 보수적, 대북 비판적 성향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수도권과 중부권은 2008년에 보수적, 대북 비판적 성향 쪽으로 기울었던 데 반해, 2009년에는 통일지향적, 대북 우호적 성향 쪽으로 이동하여 중립적 성향을 보였다. 수도권의 이동은 '북한효과'가 억제되어 소폭 움직한 반면, 중부권은 국내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대함으로써 수도권보다는 빠른 속도로 통일지향, 대북우호적 성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간 격차는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반의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으로서 지역간 통일외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원만한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일부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간 성향 차이가 매우 대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현상을 보이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남남갈등이 초래되어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이념갈등의 지형 변화

1) 이념지형의 기본구조

2009년 7월말 현재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24.9%, 중도 48.3%, 보수 26.8%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스스로 밝힌 결과이다. 이러한 구성은 2007년 및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진보 25.3%/23.7%, 중도 47.3%/48.4%, 보수 27.3%/27.8%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스스로 밝힌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진보 25%, 보수 27%, 중도 48%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이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진보적 의식이 강하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화이트칼라는 자영업이나 블루칼라, 농축산업 종사자보다 진보적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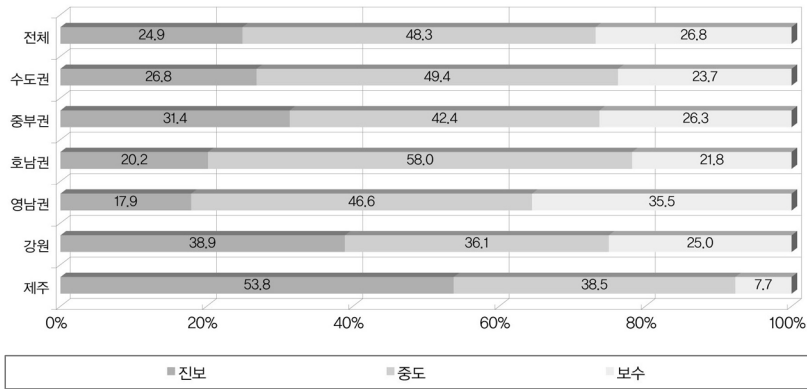
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은 2007년과 2008년에도 거의 비슷하였다.

표 2-1-6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성향 분포(2009년)

		진보(%)	중도(%)	보수(%)	통계적 유의미 정도
정치적 성향		24.9	48.3	26.8	
연령	20대	29.0	51.8	19.2	chi-square=50.3 p=.000
	30대	27.4	48.6	24.0	
	40대	24.9	49.9	25.2	
	50대 이상	17.4	42.5	40.1	
교육	중졸이하	12.2	43.7	44.1	chi-square=44.9 p=.000
	고졸	20.8	51.0	28.2	
	대졸이상	31.2	47.0	21.8	
지역	수도권	26.8	49.4	23.7	chi-square=59.0 p=.000
	중부권	31.4	42.4	26.3	
	호남권	20.2	58.0	21.8	
	영남권	17.9	46.6	35.5	
	강원	38.9	36.1	25.7	
	제주	53.8	38.5	7.7	
직업	농·수·축산업	11.5	50.0	38.5	chi-square=44.5 p=.000
	자영업	24.2	46.1	29.7	
	블루칼라	26.4	46.4	27.2	
	화이트칼라	29.4	49.6	21.0	
	전업주부	18.5	52.0	29.5	
	학생·무직·기타	28.4	47.4	24.2	
소득	200만원미만	23.3	46.2	30.5	chi-square=28.4 p=.028
	200~299	20.9	48.6	30.5	
	200~399	27.3	49.5	23.2	
	400만원이상	27.9	48.3	23.9	
성별	남자	27.8	44.3	27.9	chi-square=19.6 p=.001
	여자	21.9	52.4	25.7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성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Chi-Square=58.97,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경향은 해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2007년에는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9.4%로 다른 지역(수도권 23.5%, 중부권 21.2%)에 비해 높았으며, 2008년에는 호남권이 27.6%로 늘었고 영남권은 22.4%를 기록했다. 그러다 2009년에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진보가 각각 20.2%, 17.9%로 최저로 낮아진 반면, 중부권은 31.4%로 급상승하였다. 영남권에서는 진보가 줄어든 대신 보수가 35.5%로 크게 늘어났으며, 호남권에서는 진보의 감소가 중도로 옮겨가 중도가 58.0%로 대폭 증가하였다. 즉 2009년에는 영남권에서 진보가 보수로 이동하였고, 호남권에서는 진보가 중도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림 2- I -3] 지역별 이념성향 분포(2009)

먼저, 진보와 보수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2009년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 즉 빈부격차나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등의 심각성에 대해 진보와 보수 간에 의견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 지역갈등(77.1%, 75.0%), 이념갈등(66.9%, 67.3%), 반미정서(53.2%, 57.0%)의 심각성에 대해 진보-보수 간 의견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2007년에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진보-보수 간에 뚜렷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2008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진보-보수 간에 빈부격차(chi-square=58.1, p=.000), 실업문제(71.4, p=.000), 범죄문제(54.4, p=.000), 지역갈등(50.0, p=.000), 이념갈등(37.6, p=.001), 반미정서(74.4, p=.000) 등을 바라보는 견해가 서로 달랐다. 부동산투기에 있어서만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같았다. 2008년에는 빈부격차(22.0, p=.038), 부동산투기(33.9, p=.006), 지역갈등(32.6, p=.008), 이념갈등(28.6, p=.027)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진보-보수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실업문제(21.5, p=.159), 범죄문제(9.3, p=.9), 반미정서(21.5, p=.161)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진보-보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이로 보면, 2007~2009년 기간에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이념지형이 갈등구조에서 통합구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진보-보수간에 의견대립이 심각했으나, 2008년에 실업문제, 범죄문제, 반미정서 등이 심각하다는데 진보-보수가 공감했으며, 2009년에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진보-보수의 의견차이가 없어졌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진보-보수 간에 의견 차이가 없어져 이념갈등은 약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진보-보수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¹³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평가하는 데서는 진보와 보수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5.16과 10월유신 및 4.19(73.2%, 59.1%), 광주민주화운동(71.8%, 53.6%), 6월항쟁(70.2%, 46.4%), 남북정상회담(85.6%, 71.5%),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73.9%, 87.2%) 평가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4.19, 5.16, 10월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정상회담, 박정희전대통령업적 등의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는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2007년과 2008년에도 동일하였다.

지난 3년간 진보-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연령, 성별, 교육, 소득, 직업,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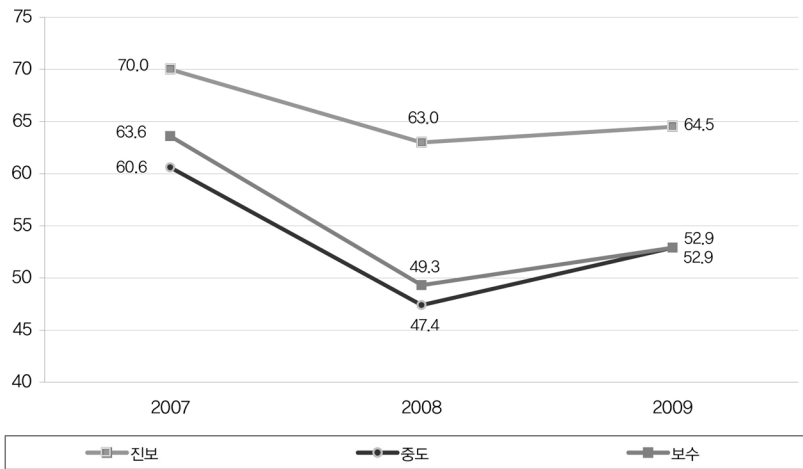
2) 통일인식

그렇다면 이념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북한 인식에서 진보-보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대체로 북한 및 미국 관련 이슈

13-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들의 평가는 2008년에 다소 낮아졌으나 2009년 들어 높아졌다. 2007~2009년의 변화를 보면, 빈부격차 97.7%→96.6%→98.1%, 부동산투기 96.9%→92.7%→94.1%, 실업문제 96.6%→96.7%→97.0%, 범죄문제 88.3%→85.3%→87.4%, 지역갈등 72.9%→65.3%→75.0%, 이념갈등 60.2%→58.5%→67.6%, 반미정서 51.7%→59.6%→58.2% 등으로 높아졌다.

14- 4.19(chi-square=65.8, p=.000), 5.16(60.2, p=.000), 10월유신(72.1, p=.000), 광주민주화운동(81.4, p=.000), 6월항쟁(97.1, p=.000), 정상회담(94.3, p=.000), 박정희전대통령업적(73.3, p=.000) 등으로 진보와 보수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진보-보수 간에 차이가 있다. 진보는 통일이 필요하다는데 더 찬성을 하고 보수는 통일이 필요없다는데 더 찬성을 한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2009년에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전체 응답자 중 64.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수적 성향의 경우는 52.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 성향간의 격차는 11.7%이다. 반면 2008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는 13.7%였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올해 통일인식에 대한 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I -4]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인식(2007~2009)

통일에 대한 남한의 기대이력과 개인의 기대이력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¹⁵ 2008년 조사에서

15. 통일에 대한 남한의 기대이력과 개인의 기대이력 항목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각각 $\chi^2=62.1, 51.2,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던 데 반해 2009년 조사에서는 중도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지난해에 보다 10.2% 크게 줄었고 보수적 성향에서도 3.6%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격차는 21%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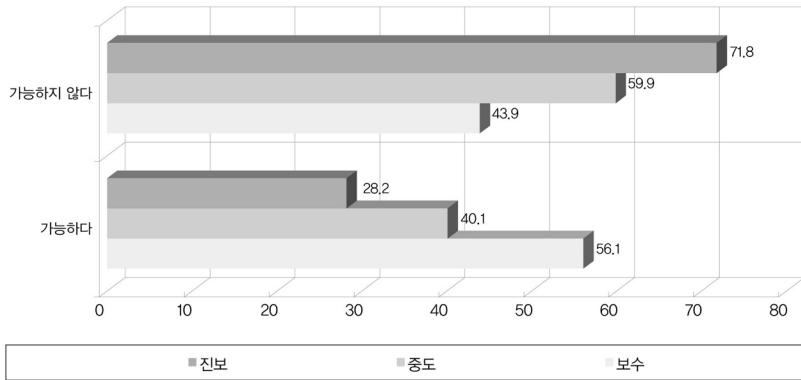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조사결과에서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좁혀진 것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진보적 정치성향의 응답률은 30.8%, 보수적 정치성향의 응답률 19.8%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격차가 11%이다. 이 격차는 2008년 조사에서 두 집단간의 격차가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통일인식에서 정치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 북한인식

다음으로 북한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진보(60.9%)>중도(49.9%)≒보수(42.7%)이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는 보수(22.9%)≒중도(22.1%)>진보(15.5%)로 중도의 대북인식이 보수화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중도성향의 응답자는 대북인식에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나, 2009년에는 보수쪽에 훨씬 가까워졌다. 즉 중도의 대북인식 보수화가 진행된 것이다.

북한정권을 대화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이 엇갈렸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진보(56.1%)>중도(40.1%)>보수(28.2%),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진보(43.9%)<중도(59.9%)<보수(71.8%)로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연하게 달랐다.

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념갈등이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주장을 신빙성 있게 증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림 2-I-5]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2009)

북한비판의식은 보수(60.0%) > 중도(55.5%) > 진보(48.1%) 순서로 나타나 보수 성향일수록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진보(28.4%)>중도(21.3%)>보수(14.3%)로 순서로 나타나 진보적 성향일수록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보수적 성향일수록 북한정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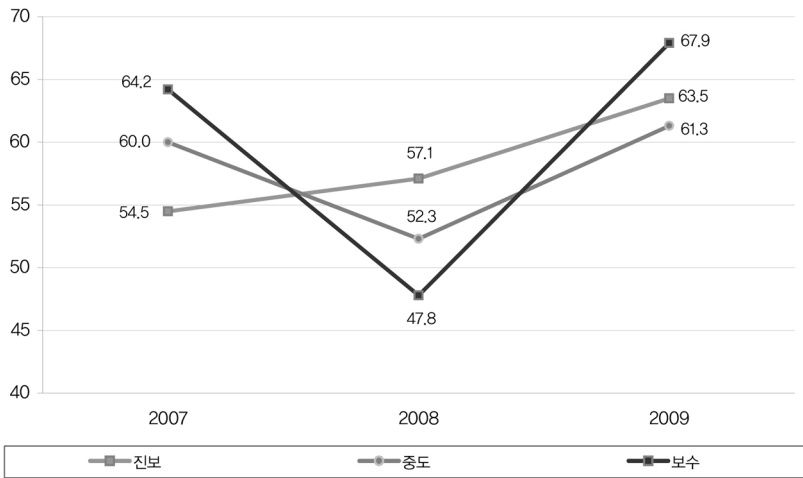
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견해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각각 85.5%, 85.1%로 거의 비슷했고,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응답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13.5%, 13.0%로 대동소이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작년에 정권교체 이후 요동했던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인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고 인도주의 지원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나타났었다. 즉 2007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했으나, 2008년에는 보수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보수는 지원대상 인식을 철회(29.7%→19.7%)했고, 진보는 지원대상 인식을 강화(15.8%→20.6%)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정권교체로 인한 효과가 사라지고 지원대상 인식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권교체로 인해 첨예하게 갈등하던 작년과는 달리 대체로 국민들의 의식이 2007년 이전으로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로 인한 효과 이후 일상화되는 이러한 추이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보는 시각에서 뚜렷이 관찰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보수(67.9%)가 진보(63.5%)에 비해 더 높게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작년과 비교하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작년에는 보수적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2008년에는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보수(52.2%) > 중도(47.7%) > 진보(42.9%)로 보수집단이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가졌다. 이는 2008년에 보수가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보수집단이 안보적 측면에서 안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2007년에는 보수(64.7%)가 오히려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는데, 그 이유는 진보정권이 집권한 시기여

서 보수집단이 안보불안을 크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양상이 발생했다. 즉 보수가 진보보다 안보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에 진보-보수의 의식지형이 뒤바뀐 것을 ‘정권교체 효과’였다고 한다면, 올해 진보-보수의 북한인식 지형이 다시 뒤바뀐 것은 인식의 일상화 혹은 ‘북한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위협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적 행동 내지 시위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북한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른바 ‘북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보수정권이 주는 안보상의 안도감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2009년의 비판적 대북인식이 높아지고 보수의 안보불안이 커진 것은 정권교체 효과를 상쇄하는 북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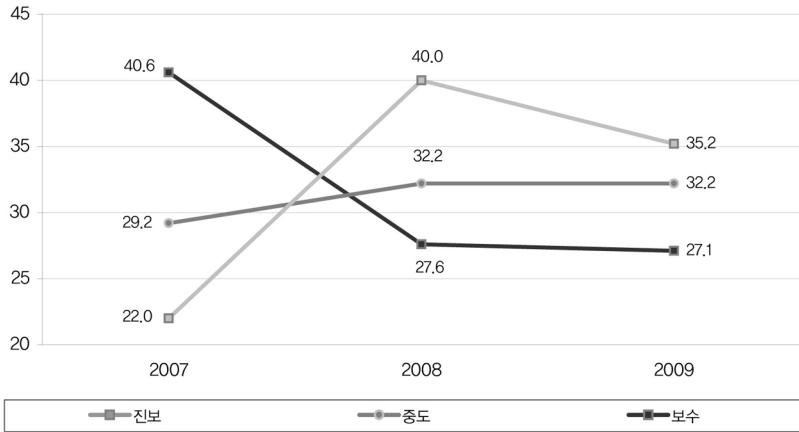


[그림 2- I -6]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7~2009)



4)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도 2009년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면, 진보 27.1%, 중도 32.2%, 보수 35.2%로 중도와 보수가 진보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8년에는 만족도가 보수 40.0%, 중도 32.2%, 진보 27.6%로 보수가 중도나 진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올해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중도가 보수 쪽으로 기우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과 비교하면 정권교체로 진보-보수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즉 2007년에는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진보가 40.6%로 높은 반면 중도(29.2%)와 보수(22.0%)는 매우 낮았다.



[그림 2- I -7] 대북정책의 만족도(2007~2009)

또한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진보는 “늘려야 한다”는데 30.5%가 동의한 반면, 중도는 17.2%, 보수는 11.2%만이 동의했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데 진보는 31.7%만이 동의한 반면, 중도는

39.5%, 보수는 49.5%가 동의하였다. 또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진보는 66.1%가 동의한 반면, 중도는 49.8%, 보수는 35.9%만이 동의했다.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는 63.2%가 동의한 반면, 보수는 39.1%만이 동의하여 24.1%의 차이를 나타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는 42.1%가 동의한 반면, 보수는 54.3%가 동의하였다.¹⁶

대북정책이 통일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대북사안이 어느 정도 시급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는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회담 등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데 보수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다. 또 진보는 보수보다 정상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 미군철수,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북한의 인권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보수가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의 81.8%는 북한의 인권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반면 보수는 74.0%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조사 결과 보수가 진보에 비해 남북문제를 덜 시급하게 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보수가 남북문제에 관심을 덜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새터민에 대한 인식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차이가 나타났다.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진보(43.3%) > 중도(36.8%) > 보수

16. 그러나 “대북빼라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보수(56.2%)>진보(50.2)로 보수가 더 찬성하고 있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 56.2%, 보수 60.6%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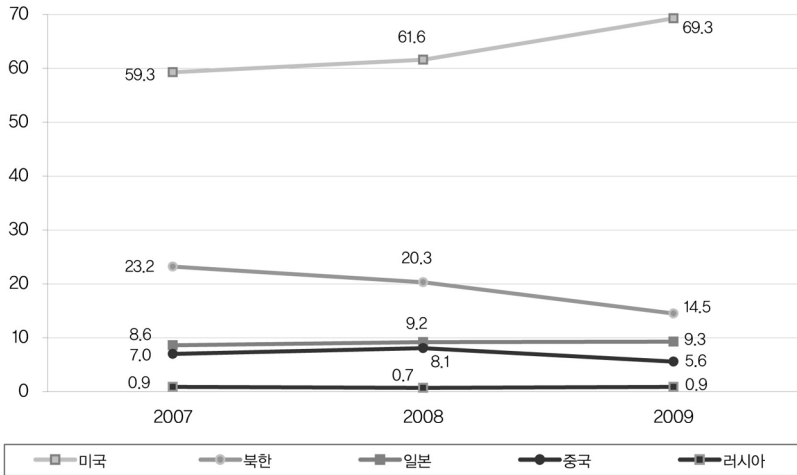


(28.8%) 순서로 나타나 진보-보수 간의 차이가 15%나 되었다. 새터민 수용정책에 대해서도 진보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51.5%가 찬성했으나 보수는 41.5%만이 찬성하여 10%의 차이가 났고, 수용불가의 입장에 대해서도 진보(6.4%) < 보수(14.0%)로 약 8%의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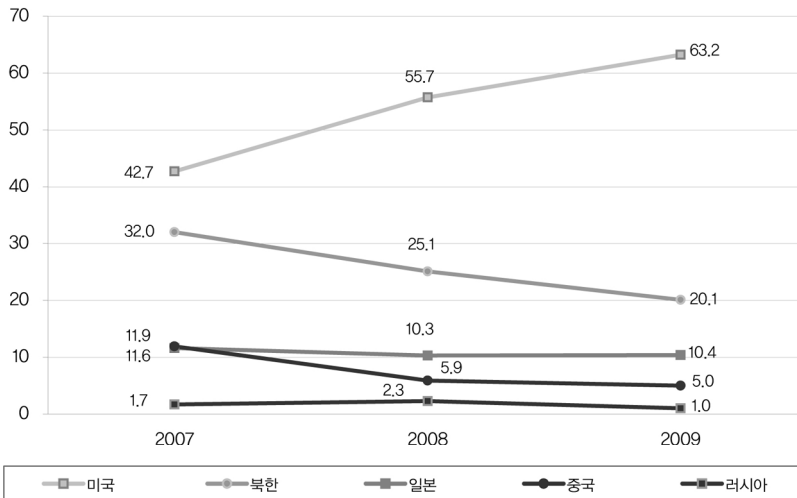
5) 주변국 호감도

이념적 성향과 주변국 호감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는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미국 63.2%, 북한 20.1%로 답한 반면, 보수는 69.3%, 14.5%로 각각 응답하여 이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는 보수보다 주변국들 가운데 일본과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진보는 일본과 미국을 각각 18.4%, 18.3%로 위협적이라고 본 반면, 보수는 15.5%, 9.6%로 각각 응답했다.

한편, 보수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과 중국을 지목했다. 보수는 북한과 중국을 각각 53.5%, 19.2%가 위협적인 국가로 꼽은 반면, 진보는 49.6%, 13.0%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했다. 또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즉 진보는 남북관계개선을, 보수는 한미공조를 더 중시했다.



[그림 2- I -8] 보수의 주변국선호도(2007~2009)



[그림 2- I -9] 진보의 주변국선호도(2007~2009)



3. 소결

한국사회에서 통일·북한문제와 관련한 지역·이념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호남·제주권-영남·강원권-수도·중부권의 세 집단에 각각 다른 성향이 형성되어 있으며, 호남·제주권은 통일지향적, 대북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영남·강원권은 통일·대북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대북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호남권과 영남권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정권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권교체 이전에는 호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영남권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영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호남권이 가장 낮게 나왔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2008년에 통일·대북 비판 성향으로 기울었다가 2009년에 통일지향, 대북 우호적 태도로 바뀌었다.

통일·북한인식의 이념적 차이는 진보와 보수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존재하나,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인식에서는 진보-중도-보수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고 확연하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도의 보수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정권교체로 인한 진보-보수의 뒤바뀐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와 같은 안보불안은 정권교체로 인해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정반대의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진보정권이 통치하던 2007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안보불안을 크게 느낀 반면, 보수로의 정권교체가 단행된 2008년에는 진보가 안보불안을 보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식의 특징은 지난해에 비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반면, 이념갈등은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통일·북한 의식이 높았던 과거에는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의식의 분화가

발생하면서 지역간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보수-진보의 이념 차이는 2008년 정권교체로 인해 크게 벌어졌으나 2009년에 조금 완화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완화되었지만 2007년 이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져 2009년 이후 통일·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최근 몇 년간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한 지역간 인식의 격차는 커졌지만 과거와 같은 영·호남의 갈등양상과 같은 것은 아니다. 호남권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상당수사람들이 중도 쪽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옮겨가고 있으며, 중부권이 새로운 진보집단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보인다. 반면, 영남권은 더욱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도 통일·대북 정책에 더 비판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일·북한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사회 내 보수-진보 간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처럼 격차가 줄어든 것은 정권교체로 격화되었던 이념대립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누그러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호남권의 약 8%가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하는 등 이념지형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변형된데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이념갈등이 완화되었으나 심층에는 잠복해 있어 남북관계의 환경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남북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Ⅱ.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1. 서론

남남갈등은¹⁷ 일반적으로 남한 사회 내의 갈등 일반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남남갈등 양상이 다른 내적 갈등과 복합적·중층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남갈등은 단순한 이념적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사적, 현실적 이해 관계가 맞물린 구성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남남갈등에 대한 분석에 있어 주로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적 갈등으로 과잉 단순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진보 대 보수

¹⁷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남남갈등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 더 심각”이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함인희, “남남갈등 해소와 여성의 기여방안”, 『분단, 평화, 여성』, 통권 6호, 2002, p. 62.

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로만 남남갈등을 본다면 갈등의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고, 갈등을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삼기란 어렵다. 남남갈등에 대한 진보·보수의 이분법을 넘어 남남 갈등과 연계된 중층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세대와 젠더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살피볼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갈등은 정보화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는 ‘정보를 사용하는 세대와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 간의 우월과 소외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네트(Net) 세대’의 도래로 그들만의 의식과 태도의 블록화가 주목되고 있다. 그들 세대만의 공간에서 형성된 의식과 태도는 문화의 담론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되어 가는 양상이다. 이는 더 이상 위로부터의 하향식 권위주의의 종속을 거부하는 것이며 윗세대에 ‘권위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기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대 차이’보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앞서가는 ‘세대 뿔기(generation lap)’에 주목하고 있다.

젠더 또한 불평등 외에 전통적 질서와 전후 문화에서 생성된 구조와 맞물려 남성과 여성의 의식과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젠더 체계(gender system)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젠더 행하기(doing gender)’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대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남남갈등에서도 이와 같은 세대간 갈등과 ‘젠더 행하기’는 유효하다. 통일·대북인식의 발현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간, 성별간 통일·대북 인식의 차이는 그 현상 자체의 파악도 필요하지만 현상 뒤에 맞물려 있는 남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와 젠더를 역



사적 구성체인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로 본다. 세대와 젠더는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으로 행위자의 구체적 실천을 매개하는 ‘전략의 발생 원리’인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세대와 젠더에서 나타나는 통일·대북인식의 차이라는 현상 뿐 아니라 그 현상이 세대간, 젠더에서 나타나는 ‘발생 원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차이’를 곧 ‘갈등’으로 인식하지도 않으며, ‘갈등’ 자체를 전통적 갈등의 개념으로만 국한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빨리 사라져야 할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차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므로 이러한 ‘차이’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갈등’과 어떻게 연계되며, 그러한 갈등이 부정적·파괴적이 될 가능성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기로 한다. ‘차이’와 더불어 세대와 젠더를 넘어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안도 주목할 것이다. 이는 대북·통일 정책과 현안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일 뿐 만 아니라 공통된 요구이자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남갈등을 분석함에 있어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자 하는 것은 조사 결과가 특정 이해집단의 ‘갈등의 사유화’ 내지, ‘편향성의 동원’으로 오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현재의 갈등이 통일 미래를 밝혀줄 긍정적 갈등이 되길, 부정적 갈등은 진정 극복되길 바라는 의지이다.

2. 통일에 대한 ‘젠더’, ‘세대’의 아비투스: 갈등의 구조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제시한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획득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의 체계나 틀로 정의될 수 있다. 아비투스는 각 행위자의 구체적 실천

을 매개하는 일종의 ‘전략 발생 원리’이다. 즉, 행위자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행위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젠더’나 ‘세대’의 아비투스¹⁸는 세대별, 젠더간에 형성된 역사적 구성 체계로서 그들 간에 형성된 의식, 행위 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응 전략의 발생 원리가 되는 것이다.

2009년 통일외식 조사에서 나타난 젠더와 세대간의 의식·태도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대응 전략으로서 그 이면의 형성 구조로 다음과 같은 젠더, 세대의 아비투스¹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경제·사회적 불평등

국제 성평등 지수인 성격차 지수(GGI)와 성평등지수(SIGI) 등을 비롯한 각종 성별 격차 지수에서 한국의 불평등 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젠더 불평등은 여성이 ‘출산, 결혼, 일’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갈림길을 놓아가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비단 여성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남성과 가족의 문제,

18. 젠더는 페미니스트 아카데미즘의 역사 속에서 확립된 사회 분석 범주로 자리잡아 왔다. 담론이론과 탈구조주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을 경유하며 성이나 정체성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어떤 원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받아들인 페미니즘은 여성을 총체화하기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여기서 젠더의 개념은 ‘여성’ 혹은 ‘남성’을 구성해 내는 힘, 현실 속에 주체들과 의미들을 생산해 내는 어떤 분류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국면 속에 주체를 생산해 내는 분류체계로서의 젠더라는 개념은 문화주의, 구조주의, 담론 이론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젠더는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다. 오늘날 젠더는 문화가 대상을 구별하고 이항대립들을 설정하고 위계질서들을 생산하는 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론적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별 학문의 한계나 국가의 한계는 물론이고 자연/문화 혹은 몸/정신 같은 구분까지 초월하는 하나의 메타 범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연구』, Vol. 4, No. 1 (2004), 55-100, p. 91.



사회 문제로 확산되어 국가경쟁력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현재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킨다. 앞서 보았던 성별 역할 고정성은 여성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래 ‘남북한의 통일상’이나 현재의 대북·통일 정책이라는 거대담론화된 논의 보다는 ‘현재’, ‘눈 앞’의 문제만으로도 피로(fatigue)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불평등이 삶의 기본적 터전 마련을 위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세대간 갈등으로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IT 버블을 겪으면서 당시 부를 축적 했던 한 세대의 일원들은 다음 세대가 정규 노동으로 집을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구축해 나갈 기회는 물론 희망까지 잃게 했다거나, 젊어진 40·50대 세대가 20·30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세대간 불평등과 갈등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대간에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면서 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영역에까지 세대간 불평등과 갈등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에 경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가 아직은 열세인 차세대를 억압한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20·30대의 경우 전쟁이나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한 체감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동시대의 비동시대성’(Mannheim, 1952)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외된 세대는 현재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을 여타 세대에 비해 더 많이 공감한다. 여기에다 전후 세대를 한 세대 더 지난 이들에게 현실 문제보다 통일이나 대북 현안, 이산가족, 탈북자 등 인도

적 문제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실현되기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쉽지 않다.

2) 전통문화와 군사문화에서의 젠더 스테레오타이핑 (stereotyping)

전후 형성된 군사문화는 성별을 둘러싼 고정된 선입견(gender stereotype)을 만들어 내곤 한다. 국제관계, 정치, 군사영역은 전형적 남성의 영역이자 남성성으로 인식되고 전쟁과 안보의 주체로 인식되나 여성은 비정치적·안보적 영역의 행위자로서 피보호자의 전형성이 구조화된다. 또한 강인함, 정복은 남성성으로 눈물, 약함, 동정은 여성성으로 담론화된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남녀 간 젠더의식이 형성된다. 여성과 남성 이미지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이 정치·군사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 전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젠더의식을 형성해 간다. 젠더의식이란 남녀의 특성, 역할 그리고 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를 말한다. 남성이 여성과 달라야 하는 욕구, 여성보다 우월해야 하는 욕구, 독립적이고 자기의존적이어야 하는 욕구, 타인보다 더 힘이 세어야 하는 욕구를 남성 젠더의식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보고 있다.¹⁹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남북 대립의 극복 과정에서 반공교육이 강화되었고, 학교 조직의 병영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우리 사회에 구조화된 국가 민족주의와 가부장제는 행위 주체자로서의 남성과 보조적, 피동적 역할의 여성을 구체화 했다.

학교교육을 통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희생이 여성에게만 강요된

19. 이수연,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젠더리뷰』, 2009 여름 (Vol. 13), p. 76.



것은 아니었다. 학교와 사회의 군사화된 과정을 통해 유포된 폭력과 가부장적 의무는 남성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젠더 체계 내에서 형성된 젠더 의식과 스테레오타이핑은 대북인식과 통일인식과 무관 할 수 없다.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화된 논의에 있어 남성은 앞서야 한다는 부담과 여성은 뒤에서 있는 피동적 행위자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3) Net세대, 그들만의 블록화와 세대 뒹기(generation lap)

최근 사회문화적 세대 구분법으로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로 나타나는 사이버세대, 넷트세대인 20~30대와 그 이후 세대의 구분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사에서 신세대와 구세대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개항 이후, 즉 서구 문명과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이며 그 후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신·구세대간 갈등이 커져갔다.

이제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대간 정보 격차가 야기한 사회문화적 갈등 외에도 이른바, Net 세대의 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스콧(1999)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차이(generation gap)에서 기성세대의 권위를 앞질러 주도하기까지 하는 세대뒹기(generation lap)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고 그들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Net 세대는 2002년 월드컵과 ‘촛불’이라는 광장 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일정부분 주도해 나가기까지 하고 있다. 넷트 세대 문화의 특징을 설명한 탭스콧(1998)은 강한 독립성과 적극성(strong independence), 포용성(social inclusion), 자유로운 표현력(free expression and strong view) 등을 들고 있다. 그들의 자유로운 표현력과 적극성, 독립적 성향은 이전 세대의 ‘일방적’ 권위보다는 상

호 소통 가운데 이뤄지는 ‘쌍방향적’ 권위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대북 인식에서도 이들 Net세대는 이전 세대의 의식과 태도의 일방적 전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의식과 태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웹’의 공론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1) 세대, 성별 분석 과정

본 연구의 자료는 windows용 SPSS/PC+ ver.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통일인식·대북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내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하였다. 성별, 세대별로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젠더간 의견의 차이 정도는 독립표본 T검정, 세대 간의 의견 차이 정도는 F검정(ANOVA)을 통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해 내고, 이에 따라 각 집단간 차이와 공감 문항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전체 116문항 중 세대별로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은 54문항이었고 공감대가 형성된 문항은 56개 문항이었다. 전반적으로 세대별 의견 차가 성별 의견 차에 비해 더 많은 문항에서 나타났다. 성별 견해차는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나는 문항 수에 비해 현저히 적었는데, 성별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9 문항이었고, 공감대를 형성한 문항은 77문항이었다.

성별 차이에 비해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인식의 하위문항에서였다.

세대와 성별간 모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식, 해방 이후 한국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였다. 반면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항은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였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와 성별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항이 차이를 보이는 문항 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II-1 세대와 젠더에 따른 의견 차이·공감 문항수

구분	문항 수	세대		젠더	
		차이	공감	차이	공감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4	9	5	3	11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0	0	10	3	7
북한에 대한 인식	23	10	13	12	11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15	6	9	0	15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10	3	7	3	7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20	10	4	4	16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4	9	5	10	4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10	7	3	4	6
합 계	116	54	56	39	77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표 2-II-2 ANOVA와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도 항목

구분	내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4문항)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000	.003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000	.005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003	.034	
	○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018	-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035	-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033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009	-
	○ 대북 사안별 시급성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044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	-
		㉢ 군사적 긴장 해소	-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047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	-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0문항)	○ 통일의 이익 정도	㉠ 남한	-
㉡ 자기 자신			-	.001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		㉠ 빈부격차	-	-
		㉡ 부동산투기	-	-
		㉢ 실업문제	-	-
		㉣ 범죄문제	-	-
		㉤ 지역갈등	-	.027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	-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	



구분	내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북한에 대한 인식 (23문항)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041	
	○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	.050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003	-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	-	
	○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000	.000	
	○ 북한 사회 인지도	㉠ 선군정치	.001	.000
		㉡ 주체사상	.000	.000
		㉢ 천리마운동	.000	.000
		㉣ 고난의 행군	.000	.000
		㉤ 장마당	.000	.000
		㉥ 아리랑 축전	.000	.000
	○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006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	.038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008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	-
	○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 선거방식	-	-
		㉫ 생활수준	-	-
		㉬ 법률제도	-	-
		㉭ 언어사용	-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	-
		㉯ 가치관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	.000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007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15문항)	○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줄여야 할 시 그 이유)	-	-	
	○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000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	-	

구분	내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 지난 정부의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동의 정도	○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㉗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	-
		㉘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022	-
		㉙ 대북 빠리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	-
		㉚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	-
		㉛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	-
	○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㉜ 북한의 책임	.000	-
		㉝ 한국의 책임	.041	-
		㉞ 미국의 책임	.018	-
		㉟ 중국의 책임	-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10문항)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
		○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㉑ 동네 이웃	-
㉒ 직장 동료			-	.037
㉓ 사업 동업자			-	.003
㉔ 결혼상대자			.003	.000
○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027	-	
○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㉕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031	-
		㉖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
		㉗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
		㉘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	-



구분	내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 인식 (20문항)	○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000	-	
	○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000	-	
	○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	-	
	○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 미국	-	-
		㉡ 일본	-	-
		㉢ 중국	-	-
		㉣ 러시아	.034	-
	○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 미국	.000	-
		㉡ 일본	-	.014
		㉢ 중국	-	-
		㉣ 러시아	-	-
	○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미국	.001	.035
		㉡ 일본	-	.010
		㉢ 중국	-	.002
		㉣ 러시아	-	-
○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 미국	.007	-	
	㉡ 일본	.006	-	
	㉢ 중국	.043	-	
	㉣ 러시아	.033	-	
○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		.034	-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4문항)	○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4.19	.000	.000
		㉡ 5.16	.000	.000
		㉢ 10월유신	.000	.006
		㉣ 광주민주화운동	.001	.000
		㉤ 6월 항쟁(1987년)	-	.000
		㉥ 남북 정상회담	-	.002
○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000	.020	

구분	내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 빈부격차	.004	-	
	㉡ 부동산투기	-	-	
	㉢ 실업문제	.004	.005	
	㉣ 범죄문제	-	.000	
	㉤ 지역갈등	-	-	
	㉥ 이념갈등	.013	-	
	㉦ 반미정서	.018	.035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10문항)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006	.000	
	○ 정치적 성향	.000	-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	.005	
	○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001	-	
	○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000	.000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000	-
		㉩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	-	.006
	○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	.000	-	
	○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	-	-	
	○ 한반도 전쟁 가능성	.001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ANOVA,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개요

가. ANOVA 결과에 나타난 세대간 의견의 공감과 차이

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 북한사회 인지도,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정치·사회·경제적 현



실 인식 등에서 세대간 견해차가 나타났다.

특히,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14개 하위 문항 중 4문항을 제외한 10문항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 다른 어떤 문항보다도 세대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10문항 중에서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서 세대간 견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북정책별 통일도움정도에서도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즉,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예술·체육·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금강산관광·개성 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등이 통일에 주는 도움 정도에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북사안별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등에서 세대간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는 세대를 초월하여 의견에 일치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23개 하위 문항 중에서는 10개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13개 문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뚜렷한 세대간 격차를 읽을 수 있었다.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5문항 중 세대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항은 6문항으로 특히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주변국(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책임 정도에 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5문항 중 세대간 공감미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문항은 9개 문항이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9개 하위 문항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개 문항이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9문항 중 6문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인 탈북자와 ‘㉠ 동네 이웃,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로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 탈북자 관련 인식으로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 같이 경쟁해야’한다는 데에는 세대간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한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 인식을 묻는 총 20개 문항 중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0개 문항으로 특히 ‘미국’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견해차를 읽을 수 있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관련 하위 문항 총 14개 중 5개를 제외한 9개 문항에서 세대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간 견해차가 큰 것과는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성별 간에는 4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총 14문항 중 5개 문항은 세대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관련 하위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10개 하위 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7문항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간 견해 차이가 4문항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세대간 견해차가 더 많은 문항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 나타난 젠더간 의견의 공감과 차이

성별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보면 통일관련 인식을 묻는 하위 문항 가운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시기 등 4개 문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에서는 통일이 남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지역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23개 하위 문항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1개 문항으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북한사회인지도(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탈북자와 만나본 경험,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였다.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15개 하위문항 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 영역의 하위 문항에서는 총 10문항 중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개 문항으로 3개 문항 모두 탈북자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직장동료, 사업 동업자, 결혼 상대자)를 묻는 것에서였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을 묻는 20개 하위문항 중에서는 4문항에서 견해차가 있었는데,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견해에서 남녀간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해방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하위 문항 14개 중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은 10문항으로 다른 질문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남북 정상회담 등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 성별 견해차를 보였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서도 남녀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실업문제, 범죄문제, 반미정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심각성 평가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었다.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인식을 묻는 10개 하위문항 중 성별 견해를 보이는 문항은 4문항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에 대한 견해,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에서였다.

다. 세대·젠더간 공통적 의견 차이 문항

영역별 하위 문항에 따라 세대와 성별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영역에서는 총 3문항에서 세대별, 성별 차이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는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시기에서 였다.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세대와 성별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총 23문항 중 7문항에서 세대별, 성별로 모두 견해의 정도 차이를 보였다. 즉,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북한사회 인지도(선군사상,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에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에서도 세대별, 성별로 모두 차이를 드러내는 견해는 없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 관련 하위 문항에서는 총 10문항 중 한 개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성별간 모두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 인식 영역의 하위 문항 총 20개 문항 중에서도 세대간, 성별간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한 개 문항으로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미국'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 성별 모두에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3) 세대간 의견 차이 분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하위 문항 총 14문항 중 4문항을 제외한 10문항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 다른 어떤 문항보다도 세대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서 세대간 견해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며, 대북정책별 통일도움정도에서도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즉,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예술·체육·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금강산 관광·개성 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등이 통일에 주는 도움 정도에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북사안별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등에서 세대간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서는 19~29세 응답자들의 28.5%가 공감하고 있어 여타 세대가 이에 대해 20% 미만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는 구분된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세대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 대다수가 동감하면서도 19~29세는 '현재대로가 좋다'는 유보적 입장(22.8%)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 또는 무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40대의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나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에 50대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

가 분포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시급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40대의 경우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 다른 연령대 보다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여 통일에 신중한 입장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연령대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50대 이상의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데에 다른 어느 연령대 보다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 연령대에 걸쳐 20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럼에도 세대간 차이를 읽을 수 있었는데 50대 이상은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라는 응답의 합이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빠른 시기에 통일을 바라는 염원, 기대와 더불어 포기도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19~29세의 경우 20년 이내와 30년 이상에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였으며, 30대는 마찬가지로 20년 이내와 더불어 30년 이내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되었고, 40대는 20년 이내라는 응답을 중심으로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응답률을 보여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가장 희망적 기대를 보이는 연령대라 할 수 있다.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를 묻기 위한 질문에서 ㉠ 쌀·비료·의약품 지원,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등 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세대간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4가지 사안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공감하면서도 세대별로 공감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



데, 두드러진 특징은 40대의 경우, '㉠ 쌀·비료·의약품 지원,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한다는 점이다. 30대의 경우에는 '㉣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공감하고 있었다.

대북 사안별 시급성과 관련된 하위 문항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은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이었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의 필요성은 전 연령대에서 대다수가 공감하는 바이나 40대가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필요성을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었다.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연령대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19~29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반해 50대 이상은 미군 철수에 대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는 세대를 초월하여 의견에 일치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관련 하위 문항 총 10문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50대 이상을 제외 하고 다른 연령대 모두에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에 과반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50대 이상의 경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이익이라는 응답에 비해 5%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다수의 응답

자가 의견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 세대를 막론하고 통일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㉒ 빈부격차, ㉓ 부동산투기, ㉔ 실업문제, ㉕ 범죄문제, ㉖ 지역갈등, ㉗ 이념갈등 등이 통일 후 개선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데에 세대를 초월해 동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도 세대를 막론하고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데에 과반수 내외의 응답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했으며, 다음으로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의 순으로 응답률 분포가 나타났다.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해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남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견해가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40대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를 앞서고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세대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못했다.

다.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 총 23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13개 문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의견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카테고리 문항 별로 세대간 공감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뚜렷한 세대간 격차를 읽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해 세대를 초월해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는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고, 50대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세대가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 보다 있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특히 19~29세의 연령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반면 50대 이상이 40대와 근소한 차이지만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게 드러냈다.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 사회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 관련 경험(㉠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에서는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은 50대 이상이 가장 적은 반면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5문항 중 세대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항은 6문항으로 특히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주변국(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책임 정도에 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우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전세대에 걸쳐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그럼에도 세대별

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찬성 견해가 반대 견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세대별로 찬·반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세대간에 책임 정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30대와 50대 이상이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한국의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동감하고 있었다. 미국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30대와 40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5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의 책임이 적다는 인식이었다.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40대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적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

마.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9문항 중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탈북자와 ‘㉠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와 탈북자 수용에 관한 견해, 탈북자에 대한 인식으로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세대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 관계 맺기에 대한 세대별 견해를 보면 결혼 상대자로 꺼린다는 응답이 19~29세, 30대, 50대 이상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의 경우 40.2%로 다른 연령대 대비 꺼린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28.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수용적 태도를 드러낸다 하겠다.

40대의 이러한 수용적 태도는 탈북자에 대한 호감도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탈북자에 대한 인식으로 '㉞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6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19~29세 57.4%, 30대 53%, 50대 이상 47.8%)

바.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한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 인식을 묻는 총 20개 문항 중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0개 문항으로 특히 '미국'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견해차를 읽을 수 있었다.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는 전세대에 걸쳐 미국이라는 견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도 50대 이상이 79.3%의 응답률로 19~29세에서 60.4%에 그친 것과 차이를 보였다. 19~29세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대한 친근감 인식이 낮은 반면 북한에 대한 친근감(18.5%)과 일본(12.2%)에 대한 친근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50대 이상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친근감을 느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10%)이나 일본(5.7%)에 대해서 가장 낮은 친밀감을 드러냈다.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이상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

고 보면서도 그 정도에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0대 이상이 북한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위협적으로 느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19~29세의 경우 북한과 더불어 미국을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끼는 응답자(20.1%)가 많았으며, 40대는 북한과 더불어 일본을 위협적 국가로 지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에 대한 견해 차가 다른 주변국가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반도 전쟁 시 태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남북한 통일에 협조 필요 정도 등에서 미국의 예상 태도에 세대간 의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가장 호의적 태도와 우방으로서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19~29세의 경우가 50대 이상 연령대와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가 크게 나타났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견해에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동감하고 있었다(78.7%). 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데에는 50대 이상 응답자의 19.9%만이 동감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35% 내외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어 차이를 드러냈다.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가 필요한 정도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일본, 중국, 러시아 각국에 대한 세대간 견해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 세대에서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체로 공감의 이루어지면서도 그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조 필요성에 가장 동감하는 연령대가 40대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 가장 두드러진 양상이라 하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세대간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전 연령대의 주요 답변은 ‘남북관계 개선(39%)’과 ‘똑같이 중요(41.8%)’하다는 견해였는데, 30·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19~29세, 50대 이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우선 보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여 30~40대와 차이를 드러냈다.

관계 인식에서는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등에 있어서 세대간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의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에서도 미국에 대한 견해는 세대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와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에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에서 미국 외에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관련 하위 문항 총 14개 중 5개를 제외한 9개 문항에서 세대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견해차가 많이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이다. 남녀 성별간에는 4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세대간 의견

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6월 항쟁(1987년)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10월 유신을 제외하고 4.19, 5.16,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10월 유신의 경우 50대 이상이 긍정적(37.5%)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40대의 과반수가 가까이(49.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9~29세의 경우 해방 이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응답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이는 19~29세 연령대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의 결여 내지는 평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가 79.8%로 부정적 평가(13.8%)에 비해 압도적이나 연령대별로 긍정적 평가의 정도치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50대 이상의 90.5%(부정적 평가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9~29세의 경우 62.1%가 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24.8%)를 하는데 그쳤다.

주요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응답자의 대부분(98.1%)이 공감하고 있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97%)가 심각하다는 반응이었는데 이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응답자들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7.6%가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는데, 50대 이상은 74.7%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성에 가장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19~29세는 63.1%가 심각하다



는 인식을 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미 정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8.2%가 갖고 있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이 심각성을 가장 많이 우려(66.7%)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30대(53%)와 19~29세(56.9%)가 심각성을 낮게 평가했다.

아.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관련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총 10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7문항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녀 성별 의견 차이가 4문항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세대간 차이가 젠더 차이 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정치적 성향,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으로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42.7%,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가 57.3%로 관심 있다는 응답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드러냈다.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고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에서도 세대별 정도의 차이를 읽을 수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73.9%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비해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랑스럽다는 응답률이 67.1%로 가장 낮았으며,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도 3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 관련 문항인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정도를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촛불 시위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55.2%)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세대별로 보면 40대의 61.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 19~29세, 30대가 각각 긍정적 평가율이 59.4%, 59.3%로 과반수이상을 훌쩍 넘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긍정적 평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39.4%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도 34.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서 ‘없다’는 응답을 약간 앞서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19~29세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4) 젠더간 의견 차이 분석²⁰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60.2%)이 여성(51.4%)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통일에 대한 견해에서 남녀 모두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남 68.7%, 여 67.9%)면서도 현재대호가 좋다는 데에 여성이 17.4%, 남성이 13.9%로

²⁰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총 15 문항에 대해 남녀 간 통계학적 유의미한 견해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



여성이 통일 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유보적 의견을 드러내었다.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남성 10.7%, 여성 6.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남성 6.7%, 여성 8.4%로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통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남녀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22.3%, 남성이 17.4%로 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5%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통일 시기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먼 훗날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나.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3문항이 있었는데, 이는 세대 간에는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하위 문항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는 비교 되는 것이다.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의 하위 문항에서 성별 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통일이 ㉠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것, 통일이 ㉡ 자기 자신에 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에 대해 지역 갈등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는 정도의 차이이다.

우선 통일이 ㉠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남 57.0%, 여 49.3%) ㉡ 자기 자신에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해 남녀 모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이었으나(남 72.2%, 여 80.2%)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8% 높은 응

답률을 보였다.(남 27.8%, 여 19.8%)

다음으로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에 대해 ‘㉠ 지역갈등’이 통일 전에 비해 통일 후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남 58.1%, 여 64.6%)

다.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인 총 23문항 중 14문항이 남녀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9문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북한 사회 인지도(㉡ 선군정치, ㉢ 주체사상, ㉣ 천리마운동, ㉤ 고난의 행군, ㉥ 장마당, ㉦ 아리랑 축전), 북한 관련 경험에서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에도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인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대 대상, 경계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 앞선 질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을 지원대상이자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 인지도(㉡ 선군정치, ㉢ 주체사상, ㉣ 천리마운동, ㉤ 고난



의 행군, ㉞ 장마당, ㉞ 아리랑 축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각 하위문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북한 관련 경험에서는 ‘㉞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㉞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㉞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㉞ 대북 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등에서는 남녀의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0문항 중에서 남녀간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나머지 7문항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녀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3문항은 특히 탈북자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에서 두드러졌다. 탈북자와 ‘㉞ 동네 이웃’으로 관계 맺기 이외에 ‘㉞ 직장 동료, ㉞ 사업 동업자, ㉞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형성에 대해 남녀의 의견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㉞ 직장 동료, ㉞ 사업 동업자, ㉞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의 관계 형성을 꺼린다는 응답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하위문항 총 20문항 중 남녀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4문항이었으며, 나머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남녀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관련 문항으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예상에서 남녀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났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 전쟁 시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일본이 한국을 돕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따르거나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았다.

또한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해서는 '㉠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에 남여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과 남성 공히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기보다 원하지 않는다는데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관조적 견해를 드러냈다.

바.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은 젠더와 세대 모두에서 의견의 차이가 다른 질문 영역에 비해 두드러진 분야이다. 관련 문항 총 14 문항 중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0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주요 사건(㉡ 4.19, ㉢ 5.16, ㉣ 10월유신, ㉤ 광주민주화운동, ㉥ 6월 항쟁(1987년),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는 주요 사건으로 제시한 6 가지 사건에서 남녀 모두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편이었으나 그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문항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잘모른다는 응답이 10% 내외에서 더 많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남녀 모두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면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잘모른다는 응



답이 우세했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는 ㉠ 실업문제, ㉡ 범죄문제 등 사회문제에서 남녀의 의견차가 드러났는데, 남녀 모두 실업문제와 범죄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각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0개 중 남녀 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4개항이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P < 0.001$),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와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도 통계학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는 문항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20%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쪽에 대다수의 의견이 실렸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동의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현재 경제 상황 만족도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나 남녀간 비교 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만족스러움을 더 표출하고 있었다.

5) 세대와 젠더 간 의견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

가. 세대 간 의견 차이의 심층 분석

통계학적으로 세대 간에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19~29세 Vs. 40대, 19~29세 Vs. 50대 이상, 30대 Vs. 50대 이상, 40대 Vs. 50대 이상의 견해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19~29세와 30대가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이는 응답은 없었다. 이와 같은 개별 세대간의 격차 외에도 2-3개 세대가 공통적 의견을 가지고 다른 세대와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즉, 19~29세 Vs. 30·50대 이상, 19~29세 Vs. 40대·50대 이상, 19~29세, 30·50대 이상 Vs. 40대, 19~29세, 50대 이상 Vs. 30·40대, 19~20대, 30·40대 Vs. 50대 이상, 19~29세, 40대 Vs. 30·50대 이상의 견해 차이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개별 세대 간 의견 차이

(가) 19~29세 Vs. 40대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19~29세 Vs. 낮은 40대²¹,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4.19와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40대 Vs. 19~29세의 부정적 견해가 나타났으며,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19~29세 Vs. 40대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21. 이후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세대의 견해는 앞에서 대조적으로 언급한 세대의 견해와 반대 견해를 지닌다.



(나) 19~29세 Vs. 50대 이상

대북사안별 시급성에서 남한에서 미군 철수문제가 시급하다는 19~29세와 시급성을 가장 적게 인식하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북한 관련 경험 유무에서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이 가장 적게 나타난 19~29세와 상대적으로 가장 경험이 많은 50대 이상,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50대 이상과 북한의 책임을 가장 적게 인식하는 19~29세, 한국과 주변국 인식의 하위 문항 중에서는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에 대해 미국에는 친근감을 보이나 상대적으로 북한과 일본에는 낮은 친밀감을 보이는 50대 이상 Vs. 19~29세의 대립되는 견해가 눈에 띈다.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50대 이상과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가장 많이 보인 19~29세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주변국가의 통일 희망정도에도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50대 이상과 부정적인 19~29세의 견해차가 있었다.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진보적이라는 19~29세와 관심이 높고 보수적인 50대 이상 세대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도 빈부격차, 실업문제, 이념갈등 등은 전 세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임에도 세대간 상대적 차이를 보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50대 이상과 심각성을 다른 세대 대비 가장 적게 인식하는 19~29세의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19~29세와 긍정적인 50대 이상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다) 30대 Vs. 50대 이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경계, 경쟁 대상으로 보는 50대 이상과 협력 대상으로 보는 30대의 견해차가 두드러진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에 대한 견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30대와 다른 세대 대비 가장 긍정적인 50대 이상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반미 정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50대 이상과 우려가 가장 적은 30대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진다.

(라) 40대 Vs. 50대 이상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 중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예측을 보인 40대와 대조를 이루는 50대 이상,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이 가장 많다는 40대와 가장 적은 50대 이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40대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50대 이상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에 대해 40대가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시 한 데 반해 50대 이상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는 긍정적인 40대와 다른 세대 대비 가장 부정적인 50대 이상의 견해차를 볼 수 있었다.

(2) 복수 세대 간 의견 차이

(가) 19~29세 Vs. 30·50대 이상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30·50대 이상의 긍정적 평가에 비해 19~29세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나) 19~29세 Vs. 40대·50대 이상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주로 19~29세와 40·50대 이상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하는 19~29세 Vs. 40대·50대 이상의 견해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에는 19·29세 Vs. 50대 이상 또는 40대의 견해차가 두드러진다. 전세대에 걸쳐 대다수가 주변국의 도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대간 견해의 정도는 차이를 보였는데, 19~29세 연령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게 인식하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이,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40대가 도움의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 19~29세, 30·50대 이상 Vs. 40대

40대는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서 탈북자를 결혼상대자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하며, 탈북자들을 남한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세대(19~29세, 30·50대 이상)와의 견해차이를 보였다.

(라) 19~29세, 50대 이상 Vs. 30·40대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크게 본 30·40대와 이에 비해 미국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19~29세, 50대 이상과 일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50대 이상 세대의 견해차이가 나타났다.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에서도 가장 긍정적이며,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40대와 이에 비해 공감도가

떨어지는 19~29세, 50대 이상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마) 19~20대, 30·40대 Vs. 50대 이상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중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는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19~20대, 30·40대와 가장 대조적인 견해를 보이는 세대는 50대 이상이었다.

(바) 19~29세, 40대 Vs. 30, 50대 이상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19~29세, 40대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인 30·50대 이상의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3) 세대별 의견의 특징

(가) 19~29세

첫째,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일·대북 현안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남한 사회 일반에 대한 무관심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²² 그러면서도 비교적 뚜렷한 견해 표명으로 특히 50대 이상과 견해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다.

둘째, 비교적 대북 인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불신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고,

²²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북한 관련 경험 유무에서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견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며, 주변국가의 통일 희망정도에서는 미국이 통일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도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셋째,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북 인식과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 문제와 관념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40대가 대북인식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교류, 탈북자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궤를 함께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50대 이상의 경우 대북인식과 탈북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 제반에 대해 다른 연령대 대비 부정적 인식으로 일관하는 것과도 구분되는 것이다.

19~29세 연령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표출하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은 가장 우려하는 연령대이다. 현실적인 북한의 안보위협이나 탈북자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19~29세 연령대에서 대북·통일인식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 크다는 점과 연계해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뚜렷한 견해가 미정립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윗세대에 비해 다양한 현실·미래 상황을 분리해 판단, 대응하는 이들 사고의 유연성으로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넷째,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치에 무관심하고 진보적인 특성이 나타

나면서도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는 탈 진보적 성향을 보여 그간 정형화 시켜온 진보 유형의 틀을 깨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4.19와 5.16, 10월 유신,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령대에서 10월 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4.19,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상반된 경우를 보이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여섯째,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이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도 빈부격차, 실업문제, 이념갈등 등은 전 세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다수 입에도 세대간 상대적 차이를 보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나) 30대

첫째, 19~29세와 마찬가지로 대북 인식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탈북자 수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여, 현안에 대한 접근법과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9~29세에 비해서는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40대에 가까운 의견을 보이고 있어 19~29세, 40대의 견해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서는 40대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는데, 탈북자를 결혼상대자, 남한에 수용,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30대는 19~29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식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위치는 탈북자 수용



에 대해서나 대북 지원 등에 있어 ‘마음’은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적극적 수용, 지원이 어렵다는 이들 세대의 특징을 말해준다 하겠다.

둘째, 30대도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40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책임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미 정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적게 나타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19-20대와 비슷한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19세-40대까지는 50대 이상에 비해 미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는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40대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다) 40대

첫째, 현실적 대응과 신중한 접근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역사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관 등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보의 전형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현안에 대한 대응 태도에 있어서는 신중함과 현실적 대응을 보이고 있어 ‘진보’라는 전형적 틀로 재단하기 어렵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건과 대북·통일 현안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통일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주변국으로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의 책임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인식이었으며, 남북관계 개

선과 한미 공조 중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이나 중국 등 한반도 통일에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도 긍정적 인식을 내보이고 있었다.

둘째,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북인식에서나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 탈북자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에서도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 중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긍정적인 예측을 보였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장 적은 우려를 나타냈다.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서는 결혼상대자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괜찮다는 의견이었으며, 탈북자들을 남한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 였다.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도 다른 연령대 대비 긍정적 인식을 내비쳐, 전반적으로 탈북자와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가 북한에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탈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 비교적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50대 이상이 북한과 탈북자 모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도 구분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30대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4.19와 5.16,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다.



(라) 50대 이상

첫째, 북한에 대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대북 인도적 지원·남북한 교류, 탈북자 수용 및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연계되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가장 크게 인식 하고 있었으며,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적게 나타났으며,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경계 의식은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도 맞물려 나타난다.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서는 탈북자를 결혼상대자, 남한에 수용,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 40대의 긍정적 인식과 대비를 이룬다.

둘째, 북한 방문 경험은 있으나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북한 관련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나나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과 관련된 교과 과정 경험 면에서나 정보 접근성 면에서 가장 떨어진 세대라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에 대한 전반적 긍정적 인식을 보이면서 그 외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경계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40대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면서도 통일에 있어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19~29세에 비해 우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40대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과 주변국 인식의 하위 문항 중에서는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에 대해 미국에는 친밀감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북한과 일본에는 낮은 친밀감을 보였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경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50대 이상은 한미 공조, 미국의 도움 및 도움 필요성, 통일희망정도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다른 세대 보다 앞섰다. 반미 정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응답률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대북사안별 시급성에서 남한에서 미군 철수문제에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에 대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두드러졌다.

넷째, 역사적 인식에서도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촛불 시위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식은 다른 연령대와 상대적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다섯째, 주요 사회 문제에도 심각하다는 우려를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도 빈부격차, 실업문제, 이념갈등 등은 전 세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임에도 세대간 상대적 차이를 보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이 보였다. 주요 사회 문제에 가장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섯째,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보수적인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세대간의 차이가 뚜렷해 갈등의 장기화가 예견되는 몇 가지 양상도 눈에 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갈등이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세대간 평가가 엇갈리는 국가는 미국, 일본이다. 50대 이상은 미국에 대해 가장 큰 기대와 신



퇴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40대의 경우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조국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50대 이상과의 접촉면을 형성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 대북 지원에서는 40대와 19~29세, 30대, 50대 이상의 견해차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남갈등에서 대북지원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20·30대의 사고의 유연성과 40대의 현실적·전략적 접근 태도이다. 50대 이상이 한국 전쟁을 전후한 세대라는 점에서 반공 의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구조화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화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정되어 대북·통일 인식의 ‘보수적 전형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고착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나. 젠더 간 의견 차이의 심층분석

첫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한 사회, 대북 인식, 통일 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총체적·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 실업문제, 범죄문제 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각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구조와 범죄 노출에 있어 여성 취약성을 대변한다 하겠다. 현재 경제 상황 만족도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불만족스러움을 표출 하고 있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 ㉢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의 관계 형성을 꺼린다는 응답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것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통일에 대한 견해에서 남녀 모두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여성이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유보적 의견을 드러내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통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하겠다.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남녀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통일 시기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먼 훗날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것은 통일이 여성 자신과 남한에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3문항이 있었는데, 우선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불안감은 남한 사회 내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일종의 학습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미래’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불안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통일 미래에 대한 우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안감과 불평등 인식과 맞물려 현재에 있어서는 탈북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나아가 미래 통일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남한 사회, 역사적 사건, 대북 인지도 등에서 무관심이 나타난다는 점이다.²³ 이는 그간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축소의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활동

²³ 이는 앞서 보았던 20대~30대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현상적 차원에서 동일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20% 가량이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한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 하에 형성된 ‘관심이 필요 없는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가부장적 구조 하에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과 같이 통일 시대도 남성이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아쉬운 점이다.

여성이 현재 처한 자리에서 ‘일상 속 평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북한과 남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상에 대한 관심은 일상에서의 평화를 향한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부나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쪽에 대다수의 의견이 실리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동의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더 모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보수적 경향이라고만 해석 할 수는 없다. 여성의 사회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이자 남성에 비해 갈등을 드러내기보다 ‘인내’해야 한다는 전통적 담론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 갈등 상황을 적절히 표출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 의지는 일상 속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여성은 물론 남성의 경우도 우리 사회에 형성된 권위주의의 구조 하에서 잠재되고 억눌린 정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웹과 ‘촛불’이라는 광장은 이와 같은 ‘억눌림’의 폭발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북한의 일인 독재체제가 가지고 있는 억눌림의 정서

는 우리의 그것보다 한층 더 한 것일 수 있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더욱 분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탈권위주의에 대한 욕구를 사회 발전의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능력 습득이 요구된다 하겠다.

4. 결론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 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항이 더 많았다. 전체 116 문항 중 세대간 견해 차를 보이는 문항은 54문항이었고 공감대가 형성된 문항은 56개 문항이었다. 성별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은 세대별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다. 성별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9문항이었고, 공감대를 형성한 문항은 77문항이었다. 전반적으로 세대별 의견 차가 성별 의견 차에 비해 더 많은 문항에서 두드러진다고 하겠다.²⁴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견해차이 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차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차이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긍정적 갈등 중 어디로 갈 것인지, 또한, 차이와 갈등, 공감 그 현상 뒤에 맞물려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남남

24. 성별 차이에 비해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의 하위문항에서였다. 세대와 성별간 모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식, 해방 이후 한국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었다. 반면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항은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 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와 성별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항이 차이를 보이는 문항 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갈등 뒤에 가려진 남한 사회 내의 제반 문제와 맞물린 남남 갈등 발생 구조에 대해 포괄적 이해를 시도하며, 이를 통해 갈등이 사회 발전적 방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대간 갈등 지형상으로 보면 50대 이상과 여타 세대간의 갈등이 큰 상황이었는바, 이는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간차에서 오는 갈등임과 동시에 세대간 기회의 불평등에서 오는 ‘불안정성의 체감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도 일컬어지는 20대~30대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현재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에 불거질 불평등 문제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20대~30대의 현실적 피로감은 정서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적인 안보문제, 탈북자 지원,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통일 시대를 관통해 계속된다면 남남 갈등은 이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간 여성들의 통일의식에 대해서 여성들의 의식에 관한 논의가 추가되었을 뿐 사회구조적인 젠더 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젠더 행하기(doing gender)’라는 인식은 간과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통일과 대북 인식에 대한 수동적인 인식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뒤섞여 나오기도 했다. 통일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으로서 행하기를 기대하기에 앞서서는 군사주의와 가부장적 문화에서 파생된 두려움과 여전히 남성에 비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무거운 여성들의 ‘피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통일의식에 있어서도 ‘젠더 체계(gender system)’ 논의의 활성화와 ‘젠더 행하기(doing gende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 갈등의 발전적 해소자이자 통일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남갈등 극복을 위해서는 세대와 젠더를 초월한 ‘권위의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는 더 이상 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정치·사회적 힘의 논리로 행해진 일방적인 권위(unilateral authority)를 점차 용인하지 않고 있다. 상호간의 권위와 영역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 간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개방성과 유연성에 대한 노력은 남남 갈등의 중층적 구조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Ⅲ. 민주주의와 통일 :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²⁵

1. 통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

남북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지향으로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화, 인권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 중 그동안 많이 분석된 것이 ‘민족주의’와 통일과의 관련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하에서 독립을 위해 좌파와 우파가 ‘민족주의’ 우산 하에 결합한 역사적

²⁵ 이 장은 2009년 11월 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일상생활 속의 통일』에서 발표된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이라는 글에서 머리말 부분 및 중간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제한 것이다. 또한 당시 발표된 글 전체는 일부 수정을 거쳐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간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통일과 평화』 제2호에 게재되었음을 밝힌다.

²⁶ 하여선(2009), 전재성(2009), 김수암(2009)은 각각 ‘평화’, ‘민족’, ‘인권’을 남북관계 및 통일연구와 관련해서 개념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험을 갖고 있다. 분단이후에도 민족주의는 남북 대화나 통일 논의의 핵심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민족/민족주의는 ‘국민 대 민족’, ‘민족 대 탈민족’, ‘국가 대 탈국가’ 라는 다중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있다(박명규, 2006). 물론 여전히 한국의 민족주의가 남북 통일을 합의하는 데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지만(송두울, 2000), 민족주의만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데는 분명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평화’와 통일, ‘인권’과 통일을 연계시키는 작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편가치로서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예상외로 민주주의를 통일과 연계시킨 논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박명림(1999)은 한국 현대사 분석을 통해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나지 않는 한 통일이 바람직한 내용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남북한의 민주주의 발전 없이 평화·통일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민족문제를 새롭게 논의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운동의 공(최형익, 2006:63)’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남북한 ‘민족주의’가 남북 간에 화해보다는 대립을 야기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 통일논의가 진정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²⁷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토양이 굳건하게 존재해야 비로소 통일논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평화나 인권 같은 보편가치는 ‘민주주의’

27. 평화, 민족,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에 커다란 인식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매우 느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가치 지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특정 사회운동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사회집단에 의해 사회운동이 촉발 되었을지언정, ‘민주화’ 같은 거대한 사회운동이 소수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일부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성국, 198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2008 등), 특정 집단과 민주주의를 연계시키고 있지만, 이 경우 민주화 이전 단계의 분석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민주화운동세력’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배후에 민주화를 열망했던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도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실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당위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성향처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집단을 식별하기 힘들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지를 활용해서 민주주의 지향집단을 색출하였다.

2. 민주화 선호경향 추출방법

<표 2-III-1>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 제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평균값을 3년 동안 제시한 것이다.²⁸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평가가 지난 3년 동안 큰

²⁸ 각 사건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지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이라는 5응답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변화 없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평균값이 대부분 소수점 2째 자리에서 0.01~0.05차이가 나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10월 유신'의 경우에도 평균에서 0.09의 차이가 날 뿐이다. 표준편차는 더욱 유사해서 가장 큰 차이가 '5.16'의 경우인 데 0.03이다.²⁹

표 2-III-1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평균(표준편차))

사건	2007년 (1,200명)	2008년 (1,213명)	2009년 (1,203명)
4.19	.31(.50)	.32(.51)	.32(.52)
5.16	.07(.55)	.15(.57)	.08(.58)
10월 유신	-.09(.56)	-.00(.58)	-.06(.56)
광주민주화 운동	.28(.59)	.25(.60)	.28(.60)
6월 항쟁	.28(.53)	.22(.52)	.25(.53)

점수부여 : '매우 긍정적=1.0', '대체로 긍정적=0.5', '잘 모름=0.0', '대체로 부정적=-0.5', '매우 부정적=-1.0'

그러나 질문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가 어떤 가치지향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5가지 사건 중 4·19,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은 '민주화' 운동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이견이 적을 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서, 이들이 '반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가졌다고 바로 평가하기

²⁹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달라도 평균값이나 표준편차가 유사할 수 있다. 이에 응답분포를 살펴보니 연도별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단기간에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는 곤란하다. 민주-반민주 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건이 무질서,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을 평가했는지는 5.16이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명확하지 않다. 5.16이나 10월 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와 연계시키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을 기초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이 아니라 근대화, 경제성장, 사회질서 등과 연계시켜 평가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주-반민주’ 축만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민주-반민주’ 축 외에 ‘질서-무질서’나 ‘성장-분배’ 등 다양한 축을 고려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사건을 평가한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 요인분석을 통해 그 잠재변수를 추출하였다. 만일 주성분 분석에서 하나의 요인만 추출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 변수(민주-반민주 축)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주성분 분석 결과는 3개년 모두에서 2개의 요인(Eigen Value 1이상)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아니라 2가지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카이저(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회전된 성분행렬을 구하였다(<표 2-III-2>).

표 2-III-2 성분행렬

	2007년				2008년				2009년			
	성분행렬 ^a		회전된 성분행렬 ^b		성분행렬 ^a		회전된 성분행렬 ^b		성분행렬 ^a		회전된 성분행렬 ^b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1	2	1	2	1	2	1	2	1	2	1	2
4.19	.761	-.069	.705	.295	.738	.033	.526	.518	.754	-.070	.682	.329
5.16	.563	.646	.196	.834	.672	.568	.120	.872	.569	.672	.142	.869
10월 유신	.387	.749	-.008	.843	.295	.601	-.008	.802	.458	.720	.022	.853
광주민주화	.778	-.363	.857	.043	.834	-.558	.860	.024	.743	-.438	.863	.007
6월 항쟁	.764	-.417	.871	-.011	.843	-.518	.863	.080	.749	-.447	.872	.003

a 추출된 2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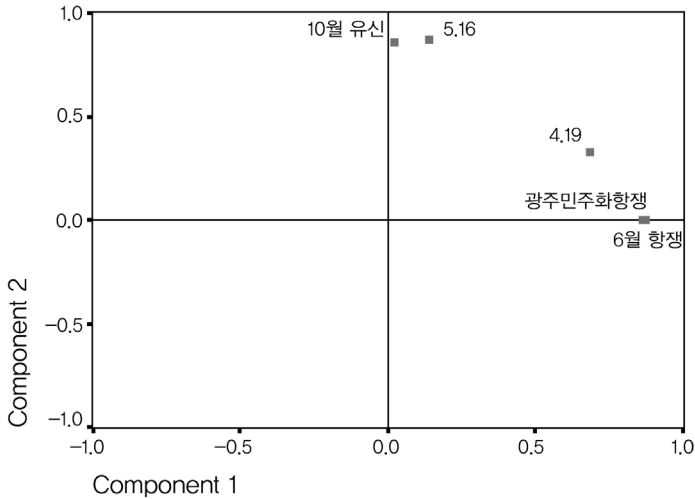
b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 3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그리고 [그림 2-III-1]은 2009년도의 경우에 한정해서 성분도표를 제시한 것이다.³⁰ ‘성분1’이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및 ‘4.19’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분2’가 ‘10월 유신’ 및 ‘5.16’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분1은 통상 민주화 운동에 포함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라는 변수 명을, ‘성분2’는 사회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사건으로 보아 ‘안정 선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민들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민주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30- 2009년도 경우만 제시한 것은 2007년, 2008년도 성분도표도 극히 유사한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Component Plot in Rotated Space



[그림 2-Ⅲ-1] 2009년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후)

이 글이 민주주의 지향가치가 통일 의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민주화 선호 변수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007-2009년 3년간 민주화 선호 변수는 <표 2-Ⅲ-3>과 같은 기술 통계 특성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 변수 값이 0.5 이상인 국민을 ‘강한 민주화 선호 집단(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값이 0.5 미만, -0.5 이상 집단을 ‘중간 정도 민주화 선호 집단(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값이 -0.5 미만 집단을 ‘약한 민주화 선호 집단(민주화 선호 ‘약’)’으로 구분했을 경우, 지난 3년 동안 민주화 선호에 따른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민주화 선호 집단 구분이 성,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이 외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집단 구분이 아니라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이기 는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민주화 선호 경향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집단 구분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III-3 민주화 선호 변수와 집단구분(2007~2009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주화 선호 '강' (0.5이상)	민주화 선호 '중' (-0.5~0.5)	민주화 선호 '약' (-0.5이하)	계(명)
민주화 선호 (2007)	0.0 1.0	-2.72 1.82	32.3 (388)	37.1 (445)	30.6 (367)	100.0 (1,200)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69 2.10	33.0 (400)	32.0 (388)	35.0 (425)	100.0 (1,213)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87 1.83	32.9 (396)	35.6 (428)	31.5 (379)	100.0 (1,203)

실제로 민주화 선호경향은 '관용성(toleranc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2-III-4>).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90%정도가 '시위나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반드시'+ '대체로')'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는 민주화 선호도가 낮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75%이상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민주화 선호변수로 구분된 집단이 실제적인 사회집단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III-4 민주화 선호 변수와 관용성(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chi^2=153.95, p < 0.001$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42.3	20.8	12.1
	대체로 허용해야 한다	49.9	58.4	52.2
	가급적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7.3	18.5	28.5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0.5	2.3	7.1
'촛불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대한 평가 $\chi^2=174.46, p < 0.001$	매우 찬성	38.6	16.8	9.8
	다소 찬성	37.6	32.2	30.3
	반반/ 그저 그렇다	15.7	34.1	28.0
	다소 반대	5.8	11.2	19.3
	매우 반대	2.3	5.6	12.7

이어서 민주화 선호 경향이 정치지향 변수분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통상 보수 보다 진보가 관용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집단 간에 나타난 관용성의 차이가 실은 정치성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³¹

<표 2-III-5>를 보면 '진보'는 40%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고, 반대로 보수는, 2007년을 제외하면, 40%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약한 집단에 속한다. 더구나 연도별로 진보성향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보수의 경우, 민주화 선호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성향과 민주화 선호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고, 약간씩이지만 관련성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³¹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진보는 보수에 비해 관용성이 높게 나온다.

표 2-III-5 민주화 선호경향과 정치성향

(단위: %)

정치성향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명)
진보	2007	42.2	34.3	23.4	100.0(303)
	2008	46.7	29.4	23.9	100.0(289)
	2009	48.5	27.4	24.1	100.0(299)
중도	2007	26.6	38.9	34.5	100.0(568)
	2008	28.3	36.0	35.7	100.0(583)
	2009	29.9	41.1	28.9	100.0(581)
보수	2007	33.3	36.7	30.0	100.0(327)
	2008	29.3	27.3	43.4	100.0(341)
	2009	23.8	33.1	43.0	100.0(323)

그러나 민주화 선호와 정치성향 간의 연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비율이 높지만, 진보성향 중에서도 민주주의 지향이 약한 사람이 20%가 넘는다. 반대로 중도나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최소 20%는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통상 '진보 정치성향'과 '민주주의 선호경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다.³²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과 진보 성향 집단이 서로 중첩되지만, 두 집단 구성원의 일치성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왜냐하면 정치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이 나타나지만, 민주화 선호

³² 한국사회 민주화에 진보 정치성향 집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도나 보수 정치성향 집단에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는 수적으로 중도나 보수가 진보보다 많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2/3는 중도와 보수가 차지한다.



성향 차이는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3년간 계속 물어보았고, 2009년에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다(<표 2-III-6>).

표 2-III-6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단위: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 (명)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7) $\chi^2=11.64$ $p < 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5.0	17.8	17.2	19.9 (239)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0.9	33.3	29.5	31.4 (376)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1	49.0	53.3	48.7 (584)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8) $\chi^2=10.35$ $p < 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1.3	18.8	19.8	20.0 (24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0	22.9	19.8	23.5 (28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0.8	58.2	60.5	56.6 (686)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9) $\chi^2=9.53$ $p < 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3.0	17.1	17.9	19.3 (23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2.8	32.2	28.2	31.2 (37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2	50.7	53.8	49.5 (596)
통일과 북한민주주의 (2009) $\chi^2=18.51$ $p < 0.00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34.8	27.6	23.5	28.7 (345)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5	28.7	25.9	27.8 (334)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6.6	43.7	50.7	43.6 (524)

분석결과 모든 조사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민주화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는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별 민주주의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의 선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남한의 경우에는 ‘남한 민주주의→통일’을 상정하는 경우가 ‘통일→남한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남한 내 민주주의의 공고화 노력이 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전망케 하는 조사결과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북한 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가 ‘북한 민주주의→통일’을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이는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역량이 없다는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 선호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통일의 선후성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남한 민주주의 → 통일 → 북한 민주주의’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민주화 선호경향별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³³ <표 2-III-7>은 남북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33- 2007년, 2008년 자료에 대해서는 과거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능시기,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χ^2 검증결과 참조).

최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통일에 무관심한 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은 70%정도가 통일이 필요(‘매우 필요’+‘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선호 ‘하’ 집단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각각 50.3%, 48.6%로 50%정도이다.

는 2009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표 2-III-7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chi^2=70.63$ $p < 0.001$	매우 필요하다	38.1	19.2	16.9
	약간 필요하다	30.8	31.1	31.7
	반반/그저 그렇다	18.7	26.6	25.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4	18.0	20.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5.1	6.1
통일가능시기 $\chi^2=44.92$ $p < 0.001$	5년 이내	2.3	2.8	3.2
	10년 이내	23.2	14.0	13.7
	20년 이내	31.8	24.5	26.9
	30년 이내	15.4	20.1	12.9
	30년 이후 불가능하다	14.9 12.4	17.3 21.3	17.2 26.1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chi^2=26.44$ $p < 0.001$	가능한 빨리 통일	11.6	7.7	6.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73.2	65.2	66.8
	현재대로가 좋다	10.9	18.7	17.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3	8.4	9.8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chi^2=73.78$ $p < 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4.0	10.7	7.1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2.9	36.0	39.1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27.3	42.8	40.4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8	10.5	13.5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chi^2=46.28$ $p < 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6	2.3	1.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2.2	19.6	17.4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3.3	54.2	52.8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15.9	23.8	28.5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 중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5%미만 이고, 통일보다 현재대로가 좋거나 관심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은 합해



서 15%를 약간 상회한다. 이에 반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은 25% 내외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통일보다 현재대호가 좋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도 25%를 상회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지향 집단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 관심과 욕구가 큰 것은 민주화 선호 집단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는 24%가 통일이 남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은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합치면, 강한 민주화 선호 집단은 2/3정도가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 집단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도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³⁴ 이는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체로는 통일과정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통일지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개인적인 이득보다 사회전체의 이득을 중시하고,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민주화를 추진할 때, 민주화 주도 집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유사한 사고 형태이다. 이 점이 민주화 선호집단

34- 물론 상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에서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 격차는 타 질문에 대한 응답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도 집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데 이어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 2-III-8>).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관계없이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수이며, 이어서 경계대상,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 관계를 보는 인식에 있어서는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 정권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가 민주화 선호 ‘중’ 집단이나 민주화 선호 ‘약’ 집단 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도 75%정도가 북한 정권이 통일을 희망하지 않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III-8 북한에 대한 인식(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chi^2=12.10$ $p = n.s.$	지원대상	15.2	18.7	18.2
	협력대상	57.1	47.7	47.5
	경쟁대상	2.3	2.3	2.1
	경계대상	18.7	22.2	20.8
	적대대상	6.8	9.1	11.3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 $\chi^2=16.17$ $p < 0.05$	매우 원한다	3.8	1.4	3.4
	다소 원한다	20.7	18.9	15.3
	별로 원하지 않는다	51.8	54.9	48.7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7	24.8	32.5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chi^2=15.80$ $p < 0.05$	많이 있다	12.4	12.6	18.5
	약간 있다	45.5	54.2	47.5
	별로 없다	35.4	27.1	27.7
	전혀 없다	6.8	6.1	6.3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chi^2=14.35$ $p < 0.05$	매우 위협을 느낀다	24.6	26.2	29.8
	다소 위협을 느낀다	43.5	51.4	47.2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6.1	18.2	17.7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5.8	4.2	5.3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의견 $\chi^2=12.28$ $p = n.s.$	매우 동의한다	41.9	42.5	46.4
	다소 동의한다	42.7	42.5	34.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9.3	8.9	10.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8	4.7	5.0
	잘모름	1.3	1.4	3.7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chi^2=39.99$ $p < 0.001$	많이 변하고 있다	8.8	4.4	8.4
	약간 변하고 있다	42.9	41.6	28.8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7.6	39.0	39.3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0.6	15.0	23.5
북한정권(대화과 타협이 가능한 상대) $\chi^2=62.27$ $p < 0.001$	매우 가능	5.6	2.6	0.5
	어느 정도 가능	48.7	34.1	31.1
	별로 가능하지 않음	36.6	49.5	47.8
	전혀 가능하지 않음	9.1	13.8	20.6

또한 민주화 선호성향이 강한 집단이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조금 낮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 이 부분 역시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을 ‘친북세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중북세력’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차이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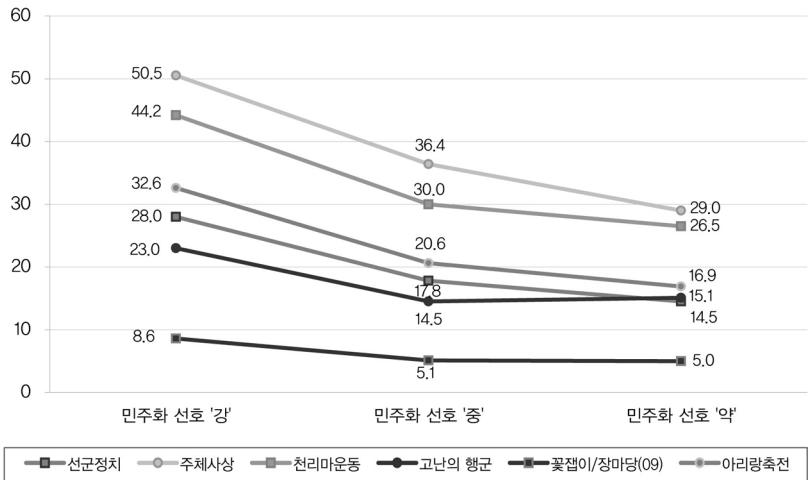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지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현실적인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의 북한 인식에 대한 이상과 같은 해석에 대해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반론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생활수준, 법률제도, 선거방식, 언어생활, 생활풍습, 가치관 등 각각에 대해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모든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선호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사이에 남북한 사회생활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북한사회 인지도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북한을 보다 잘 알고 있었다([그림 2-Ⅲ-3]). 민주화 선호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결과가 나온 한 민주화 선호집단에 대해 북한을 모르는 집단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³⁵



[그림 2-Ⅲ-2] 분야 별 '안다(잘 안다+조금 안다)'는 응답 비율(2009년)

35- 북한 일반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모른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차이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표 2-Ⅲ-8> 참조).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접촉을 통해 북한 변화를 야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대해 관용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III-9> 참조).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많아서 60%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다른 집단은 반대이다. 민주화 선호 ‘중’ 집단에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가 넘고,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2/3정도가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분포는 앞으로도 당분간 대북지원에 대해서 국민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표 2-III-9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67.41$ $p < 0.001$	매우 도움이 된다	12.6	6.5	4.7
	약간 도움이 된다	47.5	36.7	28.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8	41.6	43.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1	15.2	23.0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108.88$ $p < 0.001$	매우 도움이 된다	23.4	8.2	7.2
	약간 도움이 된다	58.1	57.0	44.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2	27.6	39.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3	7.2	9.0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민족도(2009년) $\chi^2=65.50$ $p < 0.001$	매우 만족	0.8	2.8	4.7
	다소 만족	19.2	31.6	36.4
	다소 불만족	55.6	54.3	47.8
	매우 불만족	24.5	11.2	11.1
대북정책결정시 국민의견반영정도 $\chi^2=58.60$ $p < 0.00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1.5	0.7	0.8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14.4	23.1	26.2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3.5	63.3	58.5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0.6	12.9	14.6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은 대북지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80%가 넘고 있다. 물론 타 집단은 민주화 선호 집단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민주화 선호성향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달리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지향이 약한 집단에서도 50%이상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

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모든 집단에서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 50%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비교적 적게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증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의 불만이 높은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³⁶

대북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정부 간 교류가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리라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정책의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을 대북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화 선호집단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정부가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정책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및 열의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민주화 선호집단의 의견에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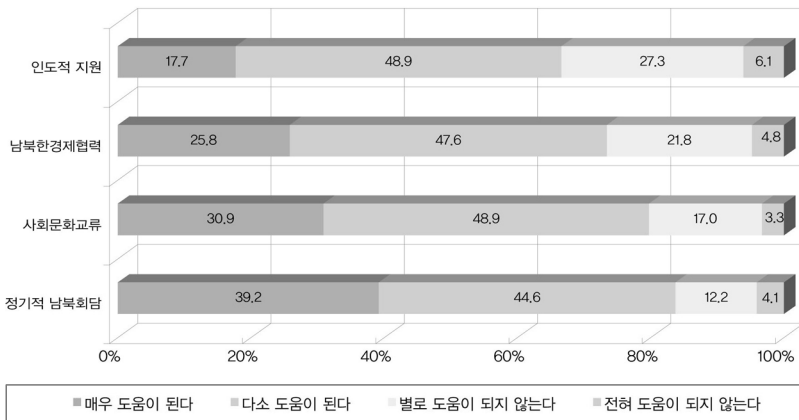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특히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기로 한다. [그림 2-III-4]는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 한정해서 여러 대북정책이 통일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4가지 대북정책 중에서 정

36-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온다. 그런 점에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진술이다. 한편 타 집단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나 국민 의견 반영정도 역시 민주화 선호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 결코 절대수치 면에서 높은 것은 아니다.



기적 남북회담이 통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순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여러 분야 대북 정책 중 정기적 남북회담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이 크다 할지라도, 통일과정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있어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점도 중요하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인도적 대북 정책을 중시하고 있지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점 민주화 선호집단과 대북 인도적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간에 정책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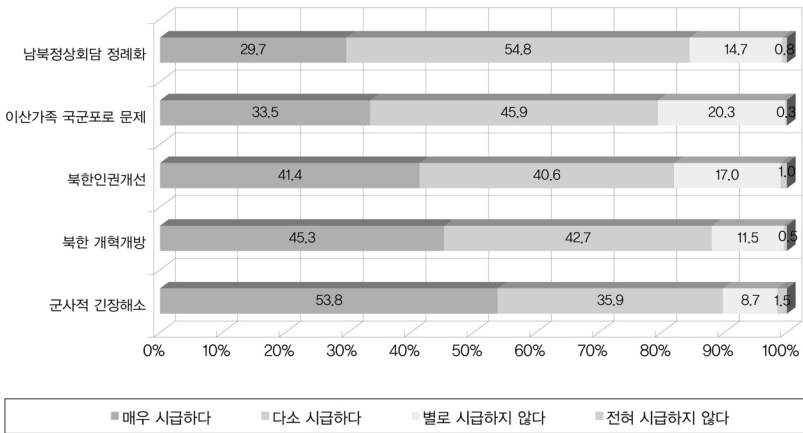


[그림 2-III-3] 대북정책별 통일에 도움 주는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한편, 민주화 선호집단의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그림 2-III-5]와 같다.³⁷ 민주화 선호집단은 군사적 긴장해소가 남북한 간에 합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이 북한 개혁·개

방, 북한 인권개선 순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평가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시급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은 군사적 남북긴장완화가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서 시급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것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주화 선호집단의 생각은 ‘중요한 사항이나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III-4] 대북 사안별 시급한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37- 질문 문항에는 그밖에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군철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에 대해 9.7%가 ‘매우 시급하다’, 20.4%가 ‘다소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집단에 비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30%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며, 또한 타 집단과의 차이도 타 분야보다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대북 현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09년 8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정책 현안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기에 대북정책 현안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크게 한국 요인과 북한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요인을 살펴보자. 한국 요인은 정권교체 요인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고, 전 정부가 남북한 사이에 체결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이 지속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기를 원했다.³⁸ 그리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강화된 것도 남북관계가 경색하게 된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데, 이 역시 남한 측의 정권교체 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어서 북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든 중요한 북한 측 요인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벗어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북한은 2008년 12월북한의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였으며, 12월에는 군사

³⁸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 계승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노무현대통령과 체결한 남북합의 내용보다, 남북합의를 체결한 당사자가 바로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분계선 통행제한,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중단, 개성·금강산 상주체류인원 절반 감축 등 소위 '12.1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개성공단 근무 근로자 억류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경제교류가 크게 위축되었다.

<표 2-Ⅲ-10>은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계승에 찬성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60%정도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이 넘는다. 그리고 타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가 넘는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 내의 다수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데 찬성할지라도 타 집단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는 개성공단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층이 60%이상 두텁게 존재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50%에 못 미치고 있다. 개성공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2-III-10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민주화 선호	민주화 선호
		'강'	'중'	'약'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 $\chi^2=117.04$ $p < 0.001$	매우 동의한다	18.4	8.9	7.1
	다소 동의한다	42.9	34.8	33.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7	36.7	31.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1	16.1	20.6
	잘 모름	3.8	3.5	7.4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chi^2=61.71$ $p < 0.001$	매우 찬성	18.4	8.9	7.1
	다소 찬성	42.9	34.8	33.8
	반반/그저 그렇다	24.7	36.7	31.1
	다소 반대	10.1	16.1	20.6
	매우 반대	3.8	3.5	7.4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 $\chi^2=55.77$ $p < 0.001$	매우 찬성	21.8	14.7	13.5
	다소 찬성	47.6	46.0	40.6
	반반/그저 그렇다	22.3	35.7	31.1
	다소 반대	6.8	3.5	12.7
	매우 반대	1.5	0.0	2.1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chi^2=21.72$ $p < 0.01$	매우 찬성	22.2	13.8	16.1
	다소 찬성	32.4	36.0	34.3
	반반/그저 그렇다	31.6	36.4	34.6
	다소 반대	10.7	13.3	11.6
	매우 반대	3.1	0.5	3.4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chi^2=44.58$ $p < 0.001$	매우 찬성	13.6	14.0	20.1
	다소 찬성	30.1	32.7	31.9
	반반/그저 그렇다	24.5	33.6	31.7
	다소 반대	24.0	17.8	13.5
	매우 반대	7.8	1.9	2.9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동참해야한다 $\chi^2=40.48$ $p < 0.001$	매우 찬성	13.9	13.1	15.0
	다소 찬성	40.4	47.1	39.3
	반반/그저 그렇다	25.5	31.6	35.9
	다소 반대	14.4	7.0	6.6
	매우 반대	5.8	1.2	3.2

한편, 대북 인권문제에 관련해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에서 타 집단보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 데 찬성의견이 많아, 70%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이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예측이 가능했던 조사결과이다. 또한 타 집단에서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 데 50%이상이 찬성한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결과이다.

또한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민주화 선호집단에 속한 사람의 5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북인권문제가 중요하지만, 정부처럼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책임질 수 없는 민간단체가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 효과도 적고 자칫 대화와 타협상대로서의 북한 정부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편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 그리고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이 민주화 선호도가 약한 집단 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상대적으로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아마도 북한과의 교류단절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국제 제재조치에 동참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다. 북핵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을 민주화 선호집단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관



계에 ‘북한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한과 남한국민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북 지원정책이나 남북한경제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지만, 북한 정부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보다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5. 소결

최근 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 열기는 많이 식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했다면, 이들 집단이 통일과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체계로 민족주의가 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족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있다는 이론적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요인분석 해서 ‘민주주의 선호’ 변수를 추출하였고, 변수 값에 따라 일반국민들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관용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단순히 명목상으로 구분되는 가공의 집단은 아니다. 이들은 집단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실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집단이다. 타 집단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통일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선호집단은 향후 통일정책 추진에 주요 지원세력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타 집단 보다 북한 정권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소위 통일지상주의나 북한을 낭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남북대치상황에 대해서는 타 집단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은 타 집단 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하 가운데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제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미래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타 집단에 비해 보다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데 대해 민주화 선호집단은 한국정부 보다 북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부건 통일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통일의식이 높은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인 집단이다.

이 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일치할 경우이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민주화 선호집단의 가치지향과 크게 상치할 경우 정책을 비판할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국. 1989. “민주화운동세력과 제도권의 역관계,” 『사상과정책』 25 : 59-72.
- 김병로·김병조·박명규·서호철·은기수·정은미. 2007. 『2007 통일외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1. 도서출판 늘품.
- 김병조. 2007.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선호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pp. 25-52.
- 김수암. 2009.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인권 개념 분석.”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자료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pp. 56-7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공화국 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 박명규. 2008.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 문화』 41: 245-262.
- 박명규·김병로·김병조·빅영호·박정란·정은미. 2008. 『2008 통일외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도서출판 늘품.
- 박명림. 1999.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16.
- 송두울. 2000.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 전재성. 2009.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민족 개념.”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 1차 자료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pp. 37-55.



- 최형익. 2006.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와 인권』 6(2) : 51-74.
- 하영선. 2009.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한반도
평화개념사.”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자료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pp. 7-36.

IV. 통일의식에 나타난 이성과 감정

지난 3년간의 통일외식조사 결과는 이제 통일을 반론의 여지없는 국가적 당위 혹은 전국민적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2007년에 이미 63.8%에 불과했으며,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의 여파로 51.5%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 조사에서는 약간 회복되어 총 응답자 1,203명 중 55.4%를 기록했다. 이는 이제 국민들이 당연히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북정책을 수립하거나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통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왜 어떤 이들은 통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서 그 내용과 인식 방식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지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통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그 내용과 이유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통일에 대한 접근법과 인식 방식의 차이에



서 비롯된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 방식을 크게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려 한다. 각 인식 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북한 및 북한 정권, 통일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1. 감성적 통일선호와 이성적 통일선호

총 1,203명이 참여한 2009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이들은 297명(24.7%)였으며 “약간 필요하다”라고 답한 숫자는 375명(31.2%)였다. 이 두 집단을 합쳐보면 모두 55.9%(666명)의 응답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통일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 다섯 가지와 이 통일 긍정 집단을 교차분석해보면 아래 <표 2-IV-1>과 같다.

표 2-IV-1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통일 필요성 교차분석 (단위: %)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통일 필요	중립	통일 불필요	합계
(1) 같은 민족이니까	49.2%	38.1%	39.8%	44.6%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6.6%	13.2%	8.8%	8.6%
(3)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20.8%	26.3%	28.9%	23.7%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4.2%	3.6%	5.0%	4.2%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19.3%	18.9%	17.6%	18.8%
합계	100% (665명)	100% (281명)	100% (239명)	100% (1,185명)

* 기타 및 무응답 제외

위 표를 보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답이 아직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44.6%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는데,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보면 집단별로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49.2%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통일에 중립적이거나 통일이 매우 혹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 중 이 답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38.1%와 39.8%에 그쳤다. 대신 이 두 집단에서는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26.3%와 28.9%를 기록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통일을 전쟁 위협제거 같은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족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감성적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 통일에 대한 인식 방식의 두 가지 차원을 각각 이성적 인식과 감성적 인식이라고 우선 정의해보자. 위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감성적 인식에 해당하는 것은 (1) “같은 민족이니까”와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의 두가지 항목이다. 나머지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즉, (3)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4)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통일에 대해 이성적인 인식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인식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보자, 통일 필요성 집단에서 감성적 인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의 비율은 55.9%((1)+(2), 372명), 이성적 인식의 비율은 나머지 44.1%((3)+(4)+(5), 294명)이다. 여기서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개인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주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성적 집단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에선 차이가 없으나,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요인들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첫 번째 집단과 상이하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집단을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이성적 접근을 하는 두 번째 집단을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두 집단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인구학적 변수 차원에서 이 두 집단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합리성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과 민족주의적 감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정치성향과 통일선호집단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통일의식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치성향 변수와 통일선호집단 변수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사이에는 그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사이의 정치 성향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분석해보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답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다($p < 0.001$).

정치 성향에 있어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있

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평소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상대적으로 정치에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점 척도로 측정된 이 정치관심도 변수(1 - 매우 관심; 4 - 매우 무관심)에서 이 두 통일선호집단은 전체 응답자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편이었다($p < 0.001$).

또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교육수준과 연령 등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교육수준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에 비해 높다($p < 0.001$). 구체적으로 <표 2-IV-2>에서 이 차이를 정리하였다.

표 2-IV-2 교육수준 / 통일인식 유형 교차분석

(단위: %)

학력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합계
중졸 이하	16.7%	8.8%	13.2%
고졸	42.7%	33.7%	38.7%
대재 이상	40.6%	57.5%	48.1%
합계	100% (372명)	100% (294명)	100% (666명)

위 표에서 보듯,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학력 수준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보다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고학력자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통일의 근거를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인 감성에 대한 호소가 저학력 층에는 더욱 강력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집단 간의 교육 수준별 차이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비슷한 이유에서, 이성적 통일선호집단과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연령과 세대 면에서도 차이점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극심한 이념갈등 및 남북 대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와 직접 겪고 실천해온 그 윗세대 간에 통일에 접근하는 인식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통일 의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예측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상대적으로 감성적 선호집단에 비해 연령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2-IV-3>에서 보듯,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에 포함된 응답자들 중 62.9%가 40대 및 50대 이상의 노·장년층 인 것에 비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20대에서 30대의 응답자가 과반수가 넘는 5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IV-3 통일선호집단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연령 구분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합계
19~29세	16.1%	24.2%	25.2%
30 대	21.1%	27.6%	26.1%
40대	29.6%	27.2%	25.4%
50대 이상	33.3%	21.1%	23.4%
합계	100%	100%	100%

민족주의와 통일에 대한 선호 역시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간에 민족주의 성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지를 물어 보았다. T 검정 결과, 예상한 것처럼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한 집단의 민족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p < 0.05$). 또 다른 민족주의 성향의 측정 척도로 통일인식조사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을 경우, 어느 쪽을 응원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전자의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91.6%,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8.4%였다³⁹. 후자의 통일비선호집단은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23.4%, 북한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76.7%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001$).

마찬가지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간에도 민족주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소속감을 강조하는 감성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성향이기 때문이다. 비록 월드컵 경기 문항으로 측정된 민족주의 성향에서는 두 집단 모두 90% 이상의 비율로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하여(감성적 통일선호집단 92%,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9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묻는 문항을 통해 민족주의 정도를 측정했을 때(1 = 매우 자랑스럽다 / 4 = 매우 자랑스럽지 않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민족주의 점수는 평균 1.95(SD 0.69)인 반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 점수는 2.01(SD 0.81)로 나타나 예측한 것처럼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민족주의 성향이 더 강했다($p < 0.01$).

일반적으로 태도(attitude)는 사회심리학에서 감성(affection), 행태(behavior), 인지(cognition)의 세 차원을 갖고 있다고 정의된다. 이러한 태도이론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39- “양국 모두 응원”, 혹은 “어느 쪽도 응원하지 않겠다” 등의 답변을 제외하고 계산한 값이다.



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사회 인지도와 북한사회 경험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만들었다.

북한사회 인지도 변수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4점 척도로(1 = 매우 잘 안다, 4 = 전혀 모른다) 각각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하여 측정한 결과, 북한사회 인지도 평균은 18.54, 표준편차는 4.05였으며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6과 24였다.

북한사회 경험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북한과 관련된 1차적 경험의 유무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이 변수는 다음 네 가지 항목을 2점 척도(0 = 경험 없다, 1 = 경험 있다)로 측정하였다.

- (1)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적
- (2) 탈북자 (새터민)과 만나 본 적
- (3)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 (4)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이 북한사회 경험도의 평균은 0.63, 표준편차는 0.70이었으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4였다. 여기서 최소값 0은 위의 네 가지 항목 중 경험해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최대값 4는 네 가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데, 1,201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4점을 기록한 이는 단 한명 뿐이었다. 북한사회 경험도의 분포는 아래 <표 2-IV-4>와 같았다.

표 2-IV-4 북한사회 경험도 분포

(단위: %)

북한사회 경험도	인원수	%
0	586	48.8%
1	494	41.1%
2	107	8.9%
3	13	1.1%
4	1	0.1%
합계	1,201	100%

위 분포표에서 알 수 있듯, 6.15 선언 이후 거의 10년이 지났고 남한에 거주중인 탈북자의 숫자가 2만 명을 웃도는 지금에도 북한에 관계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희귀한 편이다.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네 항목 중 한 가지만 경험 해본 사람도 41.1%에 달해, 이 둘을 합치면 거의 90%에 달하는 비율이 되었다. 아직도 남북대치 상태가 계속 진행 중이고, 국가보안법이 온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6.15 선언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남한 국민들의 북한사회 경험도는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각 항목 별로 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1,203명 중 50명(4.2%), 그리고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7(1.4%)명이었다. 반면 탈북자와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31명(10.9%),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555명(46.2%)으로 조사되어 북한사회에 대한 주된 경험은 주로 탈북자와의 접촉 혹은 북한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변수, 북한사회 인지도와 북한사회 경험도를 각각 T 검정을 통해 통일인식 태도 변수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북한사회 인지도에 있어서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p < 0.01$), 그리고 북한사회 경험도에 있어서는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p < 0.001$)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북한사회 인지도의 경우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18.45,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17.60이었다(전체 평균 18.08, SD 4.15). 경험도에 있어서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0.56,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0.74였다.(전체평균 0.64, SD 0.71), 크지 않은 차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임이 중요하다.

감성적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적은 반면, 간접적인 정보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점은 이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따라서 이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방식은 북한과의 교류와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가기관을 거쳐 선별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포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던 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방식을 결정한 노장년층이 자연스레 간접적인 정보에 만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와 달리 금강산이나 개성관광을 다녀오는 것이 일상적인 경험이 되고, 시장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90년대 중 후반 이후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젊은 세대가 직접적인 경험이 더 높은 것

역시 이상할 것이 없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 접근 방식은 북한에 대해 간접 정보보다 본인이 실제로 겪고 느낀 직접적 경험을 중시하도록 만들어서 이 두 요소는 상호 작용을 통해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짐작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일에 대한 인식 방식에 따라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라는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정치적 성향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교육 수준 및 연령이 확실히 다른 집단이다.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았다. 반면 민족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앞서고 있었다. 북한사회 인지도와 북한사회 경험도를 측정해본 결과, 감성적 유형은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이성적 유형은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연령과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면서도 정치 이념성향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두 집단 간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1 = 매우 긍정적, 4 = 매우 부정적). 전체 응답자들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의 평균점수는 2.48이었는데 비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2.06,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1.99로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적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두 선호집단의 합한 전체 통일선호집단과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통일비선호집단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평균점수를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약 0.4 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01$). 그러나 이성적 통일선호집단과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상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비슷하게 6월항쟁에 대한 견해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역시 1점이 매우 긍정적인, 4점이 매우 부정적으로 코딩되었으며,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먼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을 합한 전체 통일선호집단의 6월항쟁에 대한 평균 태도 점수는 2.58이었으며, 통일비선호집단의 평균점수는 2.96이었다. 이 두 집단 사이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통일선호집단은 6월항쟁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p < 0.001$). 반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두 집단은 6월항쟁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전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크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역사 4점 척도로 조사된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2.04였다(SD 1.05). 그런데 통일선호집단 전체의 평균점수는 1.86으로(SD 0.75) 전체적으로 이들은 박정희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선호집단 전체와 통일비선호집단을 비교했을 때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통일선호집단 내부를 비교해보면 약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1.81,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1.92여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p < 0.05$).

물론 이 두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2.0 이하로, 두 집단 모두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는 이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에서 영향받았다고 생각된다.

박정희 전대통령이나 광주민주화 운동, 6월항쟁에 대한 평가 모두 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화 경험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직 완전하게 합의 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사건들에 대해 이미 고정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직 평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어떨지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위해 2008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던 촛불 시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위의 태도 변수들과는 약간 달리, 촛불 시위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매우 찬성, 3=중립, 5=매우 반대).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문장에 찬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각 집단의 응답 분포는 아래 <표 2-IV-5>에 정리되어 있다.



표 2-IV-5 촛불 시위에 대한 각 집단별 태도 점수 분포

(단위: %)

	전체	감성적 통일 선호집단	이성적 통일 선호집단	전체 통일 선호집단	통일 비선호집단
매우 찬성한다	21.8%	21.5%	33.7%	27.1%	14.2%
다소 찬성한다	33.4%	34.7%	31.3%	33.3%	32.0%
반반/ 그저 그렇다	26.1%	18.0%	26.1%	22.6%	25.1%
다소 반대한다	12.0%	12.1%	11.2%	11.6%	14.6%
매우 반대한다	6.7%	5.1%	5.8%	5.4%	14.2%
평균점수	2.48	2.44	2.24	2.35	2.82
SD	1.15	1.11	1.2	1.15	1.26
N	1,203명	372명	294명	666명	247명

* 전체 통일선호집단 =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 통일비선호집단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집단으로, 통일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은 제외되었다.

우선 전체적 응답자의 촛불시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55.2%, 부정적인 답변이 18.7%로 긍정적 답변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 집단을 먼저 비교해보면, 통일선호 집단의 평균 점수는 2.35, 통일비선호집단은 2.82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물론 통일비선호집단의 경우에도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46.2%, 부정적 답변이 28.8%로 긍정적 답변이 우세했지만 이 두 집단간의 평균 점수를 T검정을 통해 비교하면 통일선호집단이 확실히 촛불시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 0.001$).

그리고 크지 않지만 통일선호집단 내부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2.44,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2.24이다. 두 집단 모두 통일비선호 집단이나 전체 평균에 비해 촛불 시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감성적 통

일선호집단이 상대적으로 촛불시위에 약간 더 비판적이었다($p < 0.05$).

이상 통일선호집단과 민주화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정리하면, 우선 광주민주화운동이나 6월항쟁에 대해서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사실상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 및 2008년의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이 두 집단의 태도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는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집단을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한 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 6월항쟁, 촛불시위 등에 대해 통일선호집단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으며, 유일하게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만은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정치성향에 있어 차이가 없었던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구체적 민주화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태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집단의 세대별 차이, 교육수준, 민족주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추측된다.

2. 통일과 북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그 태도 및 인구학적 변수에 있어 여러 공통점과 함께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통일 문제에 북한에 관련된 여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두 집단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예측을 하고 있었다.



표 2-IV-6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각 통일선호집단의 평가
(단위: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많이 있다	8.1%	15.0%
약간 있다	45.4%	51.0%
별로 없다	39.5%	28.9%
전혀 없다	7.0%	5.1%
합계	100% (372명)	100%(294명)
평균	2.45	2.24
SD	0.74	0.77

$\chi^2 = 14.36 \quad p < 0.01$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4점 척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이 66%에 이르렀는데,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53.5%에 머물렀다. 응답자 전체를 보면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약간, 혹은 많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3.6%였다. 따라서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생각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전체 국민의 평균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비교적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위에서도 설명했듯, 사회심리학의 태도 일관성 이론(attitude consistency theory)에서는 각 개인은 한 대상에 대한 감정, 인지, 행동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충동을 갖는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지적 판단과 그럼에도 북한과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감성적 태도 사이에는 이 태도 일관성에 있어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논리의 측면에서 보면, 무력도발의 가능성

이 상존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통일에 대한 선호 사이에 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접근 위주의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에 속한 개인은 태도 일관성 유지에 있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치를 낮춤으로서 태도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관련 이슈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태도 차이는 북한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두 집단은 태도 차이를 보였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이 질문에는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의 다섯 가지로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표 2-IV-7 각 통일선호집단이 보는 북한

(단위: %)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전체 응답자
지원대상	19.9%	8.5%	17.4%
협력대상	57.5%	61.9%	50.7%
경쟁대상	2.7%	1.7%	2.2%
경계대상	16.4%	19.1%	20.6%
적대대상	3.5%	8.8%	9.6%
합계	100%(372명)	100%(294명)	100% (1,203명)
평균	2.26	2.58	2.53
SD	1.06	1.25	1.25

$$\chi^2 = 24.25 \quad p < 0.001$$



위의 <표 2-IV-7>을 보면 가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19.9%인데 비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8.5%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을 경쟁상대로 보는 이들은 두 통일선호집단 및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남짓하여 이제 북한과 남한의 체제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는 것에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19.9%,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27.9%로 상대적으로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북한을 지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이 차이의 원인은 위에서 살펴본 북한으로부터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마찬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우선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판단하면서도 북한과의 통일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큰 태도 일관성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도 일관성 문제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 받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북한에 대한 판단을 좀더 긍정적으로 변경시켜 통일에 대한 선호와 북한에 대한 태도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 일관성에 대한 추구 정도가 이 두 집단 사이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런 태도 차이는 또 최근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정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 = 많이 변하고 있다, 4 =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해

서 역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보다 북한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p < 0.05$).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측정된 “북한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차이 이긴 하지만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판적이었다($p < 0.1$).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항상 더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다. 통일외식조사에서는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에 대한 책임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를 국가별로 따로 질문하였다. 우선 북한의 책임 정도를 물었을 때(1 = 아주 크다, 5 = 거의 없다)는 이성적 통일선호집단과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지를 물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선호집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는 1.55, 남한의 책임 점수는 2.38, 미국의 책임은 2.23이어서 통일선호집단은 남북한 경색의 책임이 북한에게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미국, 남한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책임의 순서는 통일비선호집단에서 약간 달랐는데, 이 집단이 생각하는 북한의 책임 평균 점수는 1.55, 남한은 2.80, 미국은 2.51이었다. 이 집단은 북한이 가장 큰 책임을, 그 다음으로 미국과 남한 순으로 책임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는 통일선호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p < 0.001$).

북한에 대한 두 통일선호집단의 태도 차이를 정리해보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보다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을 더 위협적인 상대로 보고 있으며,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북한의 변화에 있어서도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좀 더 부정적이었다. 정치적인 성향도 비슷하고, 통일에 대한 선호도 같은 이 두 집단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태도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에 있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통일 문제에 대한 태도 차이는 무엇일까? 물론 이 두 집단은 모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태도의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개인 이익과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 매우 이익이 된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최소값 1에 가까울 수록 통일이 개인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변수에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2.79(SD 0.80),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평균은 2.76(0.81)을 기록했으며 이 두 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를 보면 평균이 2.94였는데(SD 0.77),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3.5%, 전혀 이익이 되지 않다가 22.7%로 나타나 총 76.3%의 응답자가 통일은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 2-IV-8 통일과 개인이익

(단위: %)

통일과 개인이익	통일선호집단	통일비선호집단	전체 응답자
매우 이익이 된다	6.7%	0.8%	4.1%
다소 이익이 된다	26.0%	7.3%	19.8%
별로 이익이 안된다	50.5%	55.9%	53.5%
전혀 이익이 안된다	16.8%	36.0%	22.7%
합계	100% (666명)	100% (274명)	100% (1,203명)
평균	2.77	3.27	2.94
SD	0.80	0.63	0.77

$$\chi^2 = 73.86 \quad p < 0.001$$

* 통일에 중립적인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χ^2 값과 p 값은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집단 비교시 수치이다.

그러나 통일선호집단 전체와 통일비선호집단을 비교하였을 때는 확실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통일선호집단에서는 통일이 매우 혹은 다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32.7%였던 반면, 통일비선호집단은 8.1%에 불과했다. 또 통일이 자신에게 별로 혹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통일비선호집단이 91.9%에 달한 반면 통일선호집단에선 67.3%에 그쳤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선호와 개인 이익과는 확실한 상관관계가 도출되고 있다($r = 0.28$).

통일인식유형집단과 개인이익에 대한 태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일과 국가이익에 대한 태도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표 2-IV-9 통일과 국가이익

(단위: %)

통일과 국가이익	감성적 통일 선호집단	이성적 통일 선호집단	통일 선호집단	통일 비선호 집단	전체 응답자
매우 이익이 된다	16.9%	25.2%	20.8%	3.2%	4.0%
다소 이익이 된다	43.3%	51.0%	46.7%	22.3%	39.2%
별로 이익이 안된다	33.6%	20.1%	27.4%	51.8%	36.9%
전혀 이익이 안된다	6.2%	3.7%	5.1%	22.7%	9.9%
합계	100% (371명)	100% (294명)	100% (666명)	100% (274명)	100% (1,203명)
평균	2.29	2.02	2.77	3.27	2.94
SD	0.82	0.78	0.80	0.63	0.77
	$\chi^2 = 20.33 \ p < 0.001$		$\chi^2 = 150.62 \ p < 0.001$		

* 통일에 중립적인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76.2%가 매우 혹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60.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별로 혹은 전혀 이익이 아니라고 대답한 비율은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23.8%,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39.8%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상대적으로 통일이 남한의 국가이익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선호집단과 비선호집단을 비교했을 때의 차이는 더 커서, 비선호집단의 경우 통일이 국가이익에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겨우 25.5%, 별로 혹은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7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긍정적 답변은 67.5%, 부정적 답변이 32.5%여서 두 집단 간 견해 차이가 극적이라고 할 정도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통일과 개인이익, 그리고 국가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집단의 견해는 두 가지 이익 모두에서 확연하게 달랐다. 두 측면 모두에서 통일비선호집단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통일은 개인의 이익에도, 국가의 이익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통일선호집단의 경우 통일이 개인이익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지만, 통일비선호집단과 비교하였을 때는 개인이익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이익으로 본 통일이라는 문제에서는 통일선호집단은 매우 확고하게 통일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통일인식유형의 구분으로 보면,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에서는 통일의 개인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통일을 국가의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좀 더 확신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통일에 대한 선호와 불호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던 9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이제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통일에 부정적,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개인이 통일을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 이 통일과 개인이익 그리고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왜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선호하느냐를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한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 사이의 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좀 더 강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한 선호와 통일이 가져다 줄 개인적 혹은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 사이의 태도 일관성에 좀 더 충실하다



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통일선호집단의 태도 차이는 그 태도 일관성의 중심축에 이익이 놓여 있는지 혹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애착이 놓여 있는 지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2-IV-10 통일인식유형과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 T검정 (단위: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p
	평균	SD	평균	SD	
빈부격차	3.55	1.14	3.77	1.01	$p < 0.01$
부동산투기	3.45	1.17	3.72	1.12	$p < 0.01$
실업문제	3.30	1.25	3.37	1.29	차이없음
범죄문제	3.66	0.98	3.83	0.91	$p < 0.01$
지역갈등	3.52	1.09	3.86	1.05	$p < 0.001$
이념갈등	3.57	1.17	3.73	1.23	$p < 0.05$

한편, 개인이익이나 국가이익 같은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원에서 통일 후 사회문제의 개선 전망을 물었을 때는 위와 또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 범죄,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여섯 가지 사회문제가 통일 이후 얼마나 개선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지 5점 척도로 물었을 때(1 = 크게 개선, 3 = 차이없음, 5 = 크게 악화), 다섯 항목 모두에서 두 집단 모두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표 2-IV-10>이 다섯 가지 사회문제 변수들은 평균이 3점 이상일 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 모두 여섯 항목 모두에서 거의 일관되게 3.5를 넘는 평균 점수가 기록되었다. 특히 범죄문제의 경우 양 집단 모두 매우 비관적이었고, 표준편차도 크지 않아서 각 개인 간 의견차도 크

지 않은 항목으로 드러났다. 범죄문제가 통일 후 크게 혹은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에서 12.1%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에서 6.9%에 불과했고, 약간 혹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자에서 58.9%, 후자에서는 67.8%였다. 따라서 양 집단에서 모두 통일 이후에는 범죄 문제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범죄문제에 대한 전망 뿐 아니라, 다른 다섯 가지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두 통일선호집단은 모두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실업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항목에 대해 일관되게 감성적 통일선호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의 통일인식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통일을 선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또 통일은 국가이익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동시에 내놓고 있는 등 통일의 각 측면에 대한 태도에 있어 매우 비일관적인 측면을 보인다. 이런 얼핏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이들이 생각하는 통일로 인한 국가적, 개인적 이익이 사회문제를 넘어선 좀 더 추상적인 것이거나 다른 영역에서의 이익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은 통일로 상당 기간 동안 사회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력 및 국가의 위상, 국제 관계에서의 지위, 남북간 무력 분쟁의 해소 등은 이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를 만회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표 2-IV-11 통일선호와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 T검정

(단위: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	통일선호집단		통일비선호집단		p
	평균	SD	평균	SD	
빈부격차	3.64	1.09	3.95	1.05	$p < 0.001$
부동산투기	3.57	1.15	3.74	1.14	$p < 0.05$
실업문제	3.32	1.27	3.75	1.18	$p < 0.001$
범죄문제	3.73	0.95	4.02	0.99	$p < 0.01$
지역갈등	3.67	1.09	3.84	1.07	$p < 0.05$
이념갈등	3.64	1.20	4.00	1.06	

한편, 충분히 예측가능한 결과지만 전체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집단의 통일 후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보면 통일비선호집단이 모든 영역에 있어 더 비관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표 2-IV-11>). 특히 범죄나 이념 갈등 문제에 있어서 통일비선호집단의 태도 점수는 4.0이 넘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이 이 두 문제가 매우 악화될 것임을 예측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74.9%의 통일비선호집단이 부정적 예측을 내놓았고 긍정적 전망은 6.5%에 불과했다. 이념갈등에 있어서도 역시 통일선호집단의 21.1%가 크게 혹은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통일비선호집단의 긍정 답변은 7.3%에 불과했고 부정적 답변의 비율은 역시 74.1%에 달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통일인식유형에 따라 분류한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반면, 북한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북한을 경계 및 적대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통일과 관계해서는 통일이 국가이익에 더욱 이익이 된다고 높게 평가하는 상반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두 통일선호집단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감성적 선호집단이 민족주의적 일체감을 중심으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이성적 선호집단은 그 태도 일관성을 개인 혹은 국가 이익의 개념을 중심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소결

통일은 한때 간절하지만 도달하기에는 너무도 무망하기만 한 소원이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90년대 중반까지의 통일연구원 등의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90%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던 반면 200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5.4%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현대 아산 직원 감금 사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와중에 있는 것을 감안해도, 그 이전 10년 동안 급속히 진전된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이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변화이다.

어쩌면 이러한 태도 변화는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줄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로 급격하



게 현실화되기 시작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통일 이후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오히려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실업, 빈부격차, 지역갈등, 이념갈등, 범죄, 부동산 투기 등의 사회문제가 오히려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는 비단 통일을 불필요하다고 답한 이들 뿐 아니라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통일 후의 사회문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60년 이상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경험해온 남북이 통일되었을 경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집단 모두 통일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적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개인이익 및 국가이익 개념에서 통일을 고민하는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많은 부분 통일에 대해 태도를 공유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다. 우선 이 두 집단의 구성부터 연령 및 교육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북한에 대한 평가, 북한에 대한 경험과 인지의 정도, 통일에 대한 생각 등에서 두 집단은 큰 인식 방식의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은 서로 앞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큰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

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 과정에 있어 두 가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예상된다. 첫째, 통일선호집단과 통일비선호집단의 의견대립이며, 둘째 통일선호집단 내부의 두 집단 간의 견해 차이이다. 전자의 차이는 매우 가시적이며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응이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두 집단 모두 통일의 원칙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 및 대응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점점 현실화되어감에 따라 전자 보다는 후자의 의견 대립이 더욱 정치적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IPUS

2009 통일외식조사

결론



■ 결론

2009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07, 2008년도와 비교하여 몇가지 흥미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변화는 2008년도 조사 이후 전개된 상황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시계열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변화의 경향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년은 북한과 국제사회, 북한과 남한, 또 남한 내의 정치변동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전환과 우리 사회의 집합적 의식변화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래에서 2009년도 상황에서의 변화, 3년간의 추이, 그리고 좀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2009년 조사에 나타나는 통일의식의 특징

(1) V형 변화

2009년도 통일의식의 큰 특징 하나는 2007-2008년 사이에서 나타났던 변화의 흐름과 상반된 방향으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이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냉소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뚜렷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보면 2009년도는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의식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해서 요약하자면 2009년은 다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일종의 “V”자형 변화상

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권교체와 그에 뒤이은 대북 정책의 전환, 남북관계의 경색 등이 미친 효과가 이제 약화되고 새로운 조건들에 대응하려는 정서와 의식이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⁴⁰ ‘정권교체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대신 현실적인 판단과 요구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아직은 2007년 수준에 비추어보면 여전한 경계심과 보수적 정서가 보이지만 2008년 수준의 의식이나 태도로부터는 벗어나는 모습 또한 분명하다.

(2) 양면성

V형 전환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종합적으로는 의식의 양면성이 발견된다. 즉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대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긴장완화를 원하는 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북한문제로 인한 불안의식 역시 증대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보유에 대한 위협인식도 크게 높아졌고 전쟁불안의식도 커짐을 발견한다. 동시에 2009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들이 야기하는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어떤 조치나 변화를 희구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불안정과 위기감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류와 왕래의 급감으로 인해 북한 체험이나 정보 습득의 기회가 줄어들어 북반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리감은 더 늘었으면서도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 함께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 남북간 군사적

40-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영호·정은미,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p.33.



긴장이 고조됨에 따른 불안감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은 탈북새터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의식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을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와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인식에서는 포용적이지만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형성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경쟁원리를 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외국인 노동자의 증대와 함께 ‘함께 살아가기’에 대한 부담감을 실감하는 계층의 확산현상과 맞물린 반응이라 할 수 있다.

(3) 현실주의

2009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보이는 또하나의 특징은 현실주의적 경향의 강화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의 기본을 갈등이라고 파악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힘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지난 3년간의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한국인들은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 일본 등에 대한 호감과 적대감이 자주 변화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일정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이 한반도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민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평가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강하다. 동시에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막강한 힘에 대해 의구심도 뚜렷한데 한반도의 통일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66.6%에 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을 돕는 다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충실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2.3%에 달한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일견 모순되는 태도는, 지나친 불신과 적대감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현실주의적 시각은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북한 정부의 잇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난 3년 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왔으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전체의 5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4) 실용적 유연성

양면성이나 현실주의, 그리고 상황에 따른 의식의 변화 등은 한국사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지향성을 지니는 것을 말해준다. 이때의 실용성은 이데올로기적 견고함이나 냉전적인 적대성, 또는 민족주의적 도덕론과는 구별되는, 상황에 민감한 대응양식을 말한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번번이 감행하며 신뢰하기 어려운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지 않으며, 맹목적인 남한체제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대립 현상이 격화되지 않는 흥미로운 현상



이 발견된다. 지난해와 달리 2009년 조사에서는 위기의식, 불안의식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대립현상은 약화되었다.

통일의식에 나타나는 이런 실용적 유연성의 기저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이고 냉정한 판단과 함께 우리의식 또는 민족적 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민족성을 상실한 대북정책이 국민적인 반발을 초래하거나 여야간 대립을 격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한국민들은 ‘차가운’ 대북정책보다는 ‘따뜻한’ 대북정책에 익숙해져 있다. 통일의식수준의 고저(高低)가 유연하게 조절되는 현상은 반드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전환과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일정한 조정 기능을 행사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외형적으로는 부침(浮沈)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심층 의식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비판적인 대북인식과 평화공존적 민족연대의식이라는 양가적 인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5) 분절성

마지막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09년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로 분절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09년의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식의 특징은 지난해에 비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반면, 이념갈등은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통일·북한 의식이 높았던 과거에는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의식의 분화가 발생하면서 지역간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보수-진보의 이념 차이는 2008년 정권교체로 인해 크게 벌어졌으나 2009년에 조금 완화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완화되었지만 2007년 이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져 2009년 이후 통일·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세대간 갈등은 크게 50대 이상과 여타 세대간의 갈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번 조사는 20대와 40대처럼 좀더 세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386세대로 불리는 40대는 1989년 이후 이른바 “북한바로 알기”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세대로 이러한 역사적·집단적 경험이 북한에 대한 진보적 의식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40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관심도 낮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큰 20대는 일반적으로 보수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난 2년동안 이러한 경향성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사회에서 통일·북한문제와 관련한 지역·이념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호남·제주권-영남·강원권-수도·중부권의 세 집단에 각각 다른 성향이 형성되어 있으며, 호남·제주권은 통일지향적, 대북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영남·강원권은 통일·대북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대북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호남권과 영남권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정권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권교체 이전에는 호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영남권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영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호남권이 가장 낮게 나왔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2008년에 통일·대북 비판 성향으로 기울었다가 2009년에 통일지향, 대북 우호적 태도로 바뀌었다.

통일·북한인식의 이념적 차이는 진보와 보수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존재하나,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인식에서는 진보-중도-보수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고 확연하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도의 보수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정권교체로 인한 진보-보수의 뒤바뀐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와 같은 안보불안은 정권교체



로 인해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정반대의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진보정권이 통치하던 2007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안보불안을 크게 느낀 반면, 보수로의 정권교체가 단행된 2008년에는 진보가 안보불안을 보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북정책에의 태도와 합의

분석결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1) 남북교류협력 지지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조사결과는 2007년 조사결과와 비슷하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줄어들었지만, 2009년도에는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시 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민들이 2008년 이후 경험한 소원해진 남북관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한반도 불안정성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남북간 대결이나 적대적 정책보다 교류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남북 당국 간 정기 회담이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해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국민들이 남북관계에서 정치 및 군사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남북 교류 경색을 경험하면서

남북교류 활성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측면 보다 남북한 간에 정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점에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남북교류정책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에서 강화된 대북비판의식도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증대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남한 정부와 사회를 경시하는 듯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세밀히 검토해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북한의 대남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한국의 대북정책보다 북한이 어떠한 대남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북한이 대남 적대정책을 취하는 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어렵다. 남북 모두 교류협력정책의 기초와 철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2)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지향

2008년도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09년 조사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나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불만족 집단이 바뀌었고 2009년도에도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



년도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영남권, 보수 성향 집단에서 정부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 경향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정부교체에 대북정책에의 불만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정부교체 자체가 가져온 남북관계의 변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다소 의아한 점이다. 아마도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나 방향보다 현실적인 남북관계를 기초로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조율하고 통일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것이다. 당연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초래되면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논리성이나 이념성보다도 강경정책과 온건 정책을 정교하게 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희구한다고 할 수 있다.

(3) 따뜻한 현실주의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통일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이 북한에만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북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도 상당정도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이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현실주의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하다. 그럼에도 북한을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으로만 다루거나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은 장차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과 함께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식이 심화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통일의식에서는 이념적 대립현상이 약화되었고 미래의 통일한국의 체제와 관련해서도 “열린” 개방성을 옹호하였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과 민족관계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에서의 대북의식의 유연성과 통일의식수준의 고저(高低)를 조절하는 독특한 메카니즘을 구성한다. 냉정한 현실주의적 판단이 ‘우리의식’ 또는 ‘민족적 연대감’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다. 이 점에서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통일국가에 대한 이상이나 도덕적 열망, 규범적 당위성에만 뿌리를 두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이질적이고 경쟁적인 실체(북한)에 대한 국제정치론적 현실주의에만 의존하지도 않는다.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외형적으로는 부침(浮沈)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심층 의식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비판적인 대북인식과 평화공존적 민족연대의식이라는 양가적 인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따뜻한 현실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통일의식의 심층구조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의 의식조사를 통해 주목하게 되는 몇가지 측면을 서술하고자 한다.

(1) 민주주의와 통일의식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의식을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통일의식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는 한국의 정치변동과 크게 연동되게 되며 그것은 다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5년마다 새로운 권력이 창출되는 한국의 정치제도를 전제할 때 어떤 정치세력이 어떤 정치적 비전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북정책이 민감한 정치현안이 되기 쉬운 현실에서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정책대결, 국민들의 이해수준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문제가 단기적인 국내 정치세력들의 권력투쟁의 의제로만 논의될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도 발전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 역시 매우 어려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민주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남북관계에도 적극적이고 통일지향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런 집단을 ‘민주화선호집단’이라고 명명했는데, 민주주의적 가치와 통일지향적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이것이 단순하지는 않으며 현실정치 속에서는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통일의 지향과 민주주의적 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정치

발전을 추동하는 주요한 두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민족적 연대의식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양자를 유기적으로, 또 상호보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일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의 하나다.

(2) 민족주의와 통일의식

이번 조사에서도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까’(44.0%)를 꼽았다.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남북관계나 통일을 사고하는데 있어 민족의식이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됨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현실적인 접점이나 통일논의가 민족담론과 민족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과 타당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2008년에 비해 13.9%나 줄어들었고, 반면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응답률이 각각 8.9%, 1.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통일문제를 민족적 동질감의 차원보다는 경제적·군사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 차원과 연계시켜 사고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을수록 통일을 경제적·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민족적 동질감 차원에서 통일을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36.6%에 불과한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20대의 경우 ‘남북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를 꼽은 응답률은 각각 26.2%와 24.5%였던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는 각각 23.4%, 9.2%로 나타났다.

통일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의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



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3년 동안 주변국들에 호감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전 연령층에 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것에 반해,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국제협력이 꼭같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북정책이 냉정한 평가와 따뜻한 민족애를 수반할 것을 요구하는 정서가 있음을 암시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민족의식은 현실정치에서나 국민의식에서나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남북관계의 미래전반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 볼 수는 없다.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의 다차원적인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3) 사회통합과 남북관계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사회의 사회통합과 남북관계의 진전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존재가 사회통합의 숙제로 주어질 있기도 하고, 점차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자의 관련성은 그보다 더욱 깊고 넓다. 이번 조사는 이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도 말한 대로 특히 세대간, 지역간에 대북의식 및 남북관계를 보는 관점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것이 남남갈등의 원인이자 대북정책의 긴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를 통해 지역간 세대간의 차이를 줄이고 합의가능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일은 한국사회 내부통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북통합 역시 민족통합의 차원과 다른 사회통합적 차원이 매우 중

요해지고 있다. 세대간 지역간 편차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세대간 기회의 불평등에서 오는 '불안정성의 체감도'가 대북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도 일컬어지는 20대~30대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현재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에 불거질 불평등 문제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대~30대의 현실적 피로감은 정서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적인 안보문제, 탈북자 지원,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해 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통일 시대를 관통해 계속된다면 남남 갈등은 이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이중적이며 그것이 사회통합의 과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경쟁자이기 보다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과반수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직에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경쟁적 상대자로서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이 되고 있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확산되어 중산층이 경제·사회적으로 하향 계층화 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경제적 비용과 '함께 살아가기'에 대한 부담감을 실감하는 계층의 확산 가능성과 연계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



부에 현존하는 ‘차별과 배제’가 통일시대에 남북한 사람들 간의 그것으로 확대·심화될 가능성을 연계해 포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 점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서 중도와 보수 간에 차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8년까지는 중도와 보수가 대북정책에 대해 비슷한 응답유형을 나타냈다. 그 결과 대북정책과 관련된 대립구도가 ‘진보’ 대 ‘비진보’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도 조사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가 서로 다른 응답유형을 보인다. 앞에서 진보와 보수간에 의견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남남갈등이 격렬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보’ 대 ‘비진보’라는 이항 대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지향이 진보, 중도, 보수라는 3집단으로 분화되면서 중도의 중재 기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의 역할은 사회통합에 있어서나 대북정책에 있어서나 똑같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4) 남북관계에서의 이성과 감성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차원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을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통일에 대한 인식 방식에 따라 감성적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이라는 두 집단으로 분류해 볼 때 이 두 집단은 정치적 성향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은 교육 수준 및 연령에서 확실히 구별되는데,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감성적 통일선호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았다. 반면 민족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는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앞서고 있었다. 북한사회 인지도와 북한사회 경험도를 측정해본 결과, 감성

적 유형은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이성적 유형은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분석은 통일문제를 접근할 때 감성적인 차원과 이성적인 차원이 반드시 유기적이고 정합적인 관계만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통일선호집단과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감성적 통일선호집단이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북한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북한을 경계 및 적대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성적 통일선호집단은 북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면서도 통일이 국가이익에 더욱 이익이 된다고 평가한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정책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과 함께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을 적절히 배려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5) 이익추구와 가치지향

마지막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의 영역과 가치지향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통일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북정책 역시 매우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재조정을 동반하며 그와 관련한 현실적인 계산과 정략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라는 근본적 가치지향의 물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보여주는 이중성, 불일치성, 가변성의 바탕에는 이런 정치와 가치, 현실적 이해와 당위적 지향 사이의 딜레마가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53.2%인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6.8%로 나타나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정적인 기대감보다 더 높았다. 이 결과는 2008년의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인 반면에, 2007년의 조사와는 비슷한 결과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27.5%)은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52.5%)보다 낮았다.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9%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한 경우 76.1%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7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보다 부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앞서 통일 남한 전체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전 해보다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더욱이 하락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일이 남한 전체 차원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통일이 개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지배적인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 비록 개인의 이익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의 이익 증대에는 통일이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상정되는 집단적 가치가 무엇인가가 앞으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평화에 대한 고급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관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장차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

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현실적인 이해의 상충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통일과정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통일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내홍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타 집단 과의 큰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소위 통일지상주의나 북한을 낭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일치할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는 다문화적인 현상이 커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통합을 이루는 지혜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차이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긍정적 갈등 중 어디로 갈 것인지, 또한, 차이와 갈등, 공감 그 현상 뒤에 맞물려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남남 갈등 뒤에 가려진 남한 사회 내의 제반 문제와 맞물린 남남 갈등 발생 구조에 대해 포괄적 이해를 시도하며, 이를 통해 갈등이 사회 발전적 방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부장적 문화를 넘어서서 여성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고 통일인식에 있어서도 ‘젠더’ 적 사고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 갈등의 발전적 해소자이자 통일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상호간의 권위와 영역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 간에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남남 갈등의 중층적 구조를 풀어나가고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IPUS

2009 통일외식조사

부 록



1. 응답자 특성

	사례수	%
■ 전체	(1203)	100.0
■ 성별		
남자	(606)	50.4
여자	(597)	49.6
■ 연령별		
19~29세	(305)	25.4
30대	(313)	26.0
40대	(305)	25.4
50대 이상	(280)	23.3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0.9
고졸	(491)	40.8
대재 이상	(581)	48.3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2.2
자영업	(260)	21.6
블루 칼라	(250)	20.8
화이트칼라	(228)	19.0
전업 주부	(247)	20.6
학생/무직/기타	(191)	15.9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8.6
200~299만원	(353)	29.4
300~399만원	(352)	29.3
400만원 이상	(268)	22.3
모름/무응답	(5)	0.4
■ 지역별		
수도권	(593)	49.3
중부권	(118)	9.8
호남권	(119)	9.9
영남권	(324)	26.9
강원	(36)	3.0
제주	(13)	1.1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4.9
중도	(581)	48.3
보수적	(323)	26.8

2.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표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3)	24.7	31.1	55.8	23.6	16.2	4.4	20.6	100.0
■ 성별									
남자	(606)	30.7	29.4	60.2	19.4	15.1	5.3	20.4	100.0
여자	(597)	18.5	32.9	51.4	27.9	17.2	3.5	20.8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4.8	28.4	43.2	28.3	22.2	6.3	28.5	100.0
30대	(313)	21.8	30.0	51.8	29.0	15.3	3.9	19.2	100.0
40대	(305)	32.2	30.8	62.9	21.6	12.2	3.3	15.4	100.0
50대 이상	(280)	30.5	35.7	66.2	14.6	14.9	4.3	19.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5.8	40.8	66.6	16.7	12.1	4.6	16.7	100.0
고 졸	(491)	20.9	31.7	52.6	25.6	17.3	4.5	21.8	100.0
대재 이상	(581)	27.6	28.5	56.1	23.5	16.1	4.3	20.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42.3	26.9	69.2	15.4	11.5	3.8	15.4	100.0
자영업	(260)	26.2	33.3	59.5	20.6	14.9	5.0	19.9	100.0
블루 칼라	(250)	21.2	35.5	56.7	20.4	17.3	5.6	22.9	100.0
화이트칼라	(228)	31.1	24.2	55.2	27.7	14.0	3.1	17.1	100.0
전업 주부	(247)	19.3	34.6	53.9	26.3	16.5	3.2	19.8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4.1	26.8	51.0	24.7	19.0	5.3	24.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30.9	29.3	60.2	21.5	12.5	5.8	18.3	100.0
200~299만원	(353)	21.6	33.0	54.5	25.1	16.2	4.2	20.4	100.0
300~399만원	(352)	25.2	29.9	55.0	24.2	16.5	4.3	20.8	100.0
400만원 이상	(268)	22.7	32.5	55.2	22.4	18.7	3.8	22.5	100.0
모름/무응답	(5)	39.4	0.0	39.4	40.6	20.0	0.0	2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3.6	30.6	54.2	26.6	15.8	3.4	19.2	100.0
중부권	(118)	30.5	28.0	58.5	23.7	11.0	6.8	17.8	100.0
호남권	(119)	45.4	30.3	75.6	11.8	12.6	0.0	12.6	100.0
영남권	(324)	16.4	35.5	51.9	21.6	20.1	6.5	26.5	100.0
강원	(36)	22.2	16.7	38.9	33.3	19.4	8.3	27.8	100.0
제주	(13)	46.2	23.1	69.2	15.4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5.1	29.4	64.5	18.7	14.1	2.7	16.8	100.0
중도	(581)	21.2	31.8	52.9	28.2	14.4	4.5	18.9	100.0
보수적	(323)	21.4	31.5	52.9	19.9	21.3	5.9	27.3	100.0



표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없다	계
		%	%	%	%	%
■ 전체	(1203)	68.3	15.6	8.6	7.5	100.0
■ 성별						
남자	(606)	68.7	13.9	10.7	6.7	100.0
여자	(597)	67.9	17.4	6.4	8.4	100.0
■ 연령별						
19~29세	(305)	61.6	22.8	5.6	10.0	100.0
30대	(313)	69.3	17.6	6.7	6.4	100.0
40대	(305)	74.4	9.4	10.2	5.9	100.0
50대 이상	(280)	67.7	12.4	12.1	7.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2.0	12.9	12.9	12.2	100.0
고졸	(491)	67.0	16.5	8.1	8.4	100.0
대재 이상	(581)	70.8	15.5	7.9	5.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69.2	7.7	11.5	11.5	100.0
자영업	(260)	74.6	13.0	6.6	5.7	100.0
블루 칼라	(250)	63.3	16.4	9.9	10.4	100.0
화이트칼라	(228)	71.0	13.1	11.0	4.9	100.0
전업 주부	(247)	66.1	17.0	8.1	8.9	100.0
학생/무직/기타	(191)	65.7	20.6	6.8	6.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63.3	16.1	11.2	9.4	100.0
200~299만원	(353)	72.0	15.8	7.0	5.1	100.0
300~399만원	(352)	64.5	17.1	10.5	8.0	100.0
400만원 이상	(268)	72.6	13.1	5.6	8.6	100.0
모름/무응답	(5)	59.9	20.0	2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71.1	14.9	7.9	6.1	100.0
중부권	(118)	70.3	13.6	9.3	6.8	100.0
호남권	(119)	66.4	8.4	19.3	5.9	100.0
영남권	(324)	62.7	21.6	5.9	9.9	100.0
강원	(36)	69.4	11.1	2.8	16.7	100.0
제주	(13)	76.9	0.0	15.4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6.9	10.7	14.7	7.7	100.0
중도	(581)	68.3	18.1	6.7	6.9	100.0
보수적	(323)	69.6	15.8	6.2	8.4	100.0

표 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03)	2.8	16.9	27.6	16.2	16.5	19.8	0.1	
■ 성별									100.0
남자	(606)	3.5	19.0	27.5	14.3	18.1	17.4	0.2	
여자	(597)	2.0	14.8	27.8	18.2	14.9	22.3	0.0	100.0
■ 연령별									100.0
19~29세	(305)	2.6	13.5	23.1	18.5	22.8	19.5	0.0	
30대	(313)	0.7	13.7	28.4	20.1	17.6	19.6	0.0	100.0
40대	(305)	4.0	19.7	31.8	14.0	14.1	16.4	0.0	100.0
50대 이상	(280)	3.9	21.3	27.2	12.0	11.0	24.2	0.4	100.0
■ 교육수준별									100.0
중졸 이하	(131)	3.0	25.1	24.1	9.7	10.7	27.3	0.0	
고 졸	(491)	3.1	16.2	27.8	16.0	15.1	21.6	0.2	100.0
대재 이상	(581)	2.4	15.7	28.3	17.9	19.0	16.6	0.0	100.0
■ 직업별									100.0
농/수/축산업	(26)	0.0	15.4	23.1	11.5	15.4	34.6	0.0	
자영업	(260)	2.0	19.9	30.2	13.6	14.3	19.6	0.4	100.0
블루 칼라	(250)	3.2	17.2	26.1	17.6	15.1	20.8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6	18.8	29.8	18.8	15.0	14.9	0.0	100.0
전업 주부	(247)	2.4	15.3	29.0	15.7	15.0	22.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2	12.6	22.6	16.3	25.3	19.0	0.0	100.0
■ 가구소득수준									100.0
200만원 미만	(224)	2.7	18.8	27.7	12.5	13.4	25.0	0.0	
200~299만원	(353)	3.4	16.1	29.6	17.4	14.8	18.4	0.3	100.0
300~399만원	(352)	2.3	18.2	26.1	15.6	19.4	18.5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2.6	15.3	26.8	18.6	17.6	19.1	0.0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41.1	19.4	19.5	20.0	0.0	100.0
■ 지역별									100.0
수도권	(593)	2.4	15.1	27.6	20.1	17.2	17.4	0.2	
중부권	(118)	3.4	17.8	33.1	10.2	13.6	22.0	0.0	100.0
호남권	(119)	7.6	22.7	30.3	13.4	8.4	17.6	0.0	100.0
영남권	(324)	1.9	16.4	25.6	13.9	17.0	25.3	0.0	100.0
강원	(36)	0.0	27.8	19.4	5.6	38.9	8.3	0.0	100.0
제주	(13)	0.0	23.1	30.8	7.7	15.4	23.1	0.0	100.0
■ 정치적성향									100.0
진보적	(299)	2.7	21.4	30.0	15.0	15.5	15.4	0.0	100.0
중도	(581)	2.3	15.1	27.6	17.9	17.4	19.8	0.0	100.0
보수적	(323)	3.7	16.1	25.6	14.5	15.9	23.9	0.3	100.0



표 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3)	10.8	43.2	54.0	35.8	10.2	45.9	0.1	100.0
■ 성별									
남자	(606)	11.9	44.3	56.2	33.0	10.6	43.6	0.2	100.0
여자	(597)	9.7	42.0	51.7	38.6	9.7	48.3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9.9	40.6	50.5	39.2	9.9	49.2	0.3	100.0
30대	(313)	8.6	43.4	52.0	40.4	7.7	48.0	0.0	100.0
40대	(305)	15.8	45.2	61.0	29.2	9.8	39.0	0.0	100.0
50대 이상	(280)	8.9	43.6	52.4	34.1	13.5	47.6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9.1	38.6	47.7	36.3	16.0	52.3	0.0	100.0
고졸	(491)	8.7	44.0	52.7	36.1	11.2	47.3	0.0	100.0
대재 이상	(581)	13.0	43.5	56.5	35.4	7.9	43.4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23.1	38.5	30.8	30.8	61.5	0.0	100.0
자영업	(260)	12.7	41.6	54.4	32.2	13.4	45.6	0.0	100.0
블루 칼라	(250)	8.7	48.9	57.6	32.4	10.0	42.4	0.0	100.0
화이트칼라	(228)	13.2	42.5	55.7	38.6	5.7	44.3	0.0	100.0
전업 주부	(247)	10.4	41.8	52.3	37.6	10.1	47.7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7.9	43.1	51.0	40.0	8.5	48.5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9.8	37.1	46.9	43.2	9.8	53.1	0.0	100.0
200~299만원	(353)	8.7	46.0	54.7	34.8	10.5	45.3	0.0	100.0
300~399만원	(352)	10.5	45.7	56.2	34.2	9.6	43.8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14.6	40.9	55.6	33.2	10.8	44.1	0.4	100.0
모름/무응답	(5)	20.0	60.6	80.6	19.4	0.0	19.4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0.8	45.1	55.9	34.8	9.1	43.9	0.2	100.0
충부권	(118)	11.0	42.4	53.4	30.5	16.1	46.6	0.0	100.0
호남권	(119)	20.2	52.1	72.3	24.4	3.4	27.7	0.0	100.0
영남권	(324)	6.2	38.0	44.1	42.9	13.0	55.9	0.0	100.0
강원	(36)	16.7	36.1	52.8	41.7	5.6	47.2	0.0	100.0
제주	(13)	23.1	30.8	53.8	38.5	7.7	46.2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5.7	48.5	64.2	29.1	6.7	35.8	0.0	100.0
중도	(581)	9.8	44.3	54.1	36.6	9.2	45.7	0.2	100.0
보수적	(323)	8.0	36.3	44.3	40.5	15.2	55.7	0.0	100.0

표 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④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3)	17.2	50.9	68.1	25.7	6.1	31.8	0.1	100.0
■ 성별									
남자	(606)	18.2	49.5	67.8	24.6	7.5	32.0	0.2	100.0
여자	(597)	16.2	52.3	68.4	26.9	4.7	31.6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7.2	46.4	63.6	28.1	7.9	36.1	0.3	100.0
30대	(313)	15.9	52.8	68.7	26.8	4.5	31.3	0.0	100.0
40대	(305)	21.0	52.1	73.1	22.0	4.9	26.9	0.0	100.0
50대 이상	(280)	14.6	52.4	66.9	26.0	7.1	33.1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4	49.9	64.3	25.8	9.9	35.7	0.0	100.0
고졸	(491)	13.0	51.5	64.5	29.0	6.5	35.5	0.0	100.0
대재 이상	(581)	21.4	50.6	72.0	23.0	4.8	27.8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34.6	50.0	30.8	19.2	50.0	0.0	100.0
자영업	(260)	16.6	46.6	63.2	29.9	6.9	36.8	0.0	100.0
블루 칼라	(250)	15.1	55.7	70.8	22.8	6.5	29.2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1.0	54.8	75.8	20.7	3.5	24.2	0.0	100.0
전업 주부	(247)	16.9	52.0	68.9	26.3	4.8	31.1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6.9	46.6	63.6	28.5	7.4	35.9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7.9	46.3	64.2	26.4	9.4	35.8	0.0	100.0
200~299만원	(353)	15.3	53.4	68.6	26.8	4.6	31.4	0.0	100.0
300~399만원	(352)	16.8	53.9	70.7	23.9	5.4	29.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19.7	47.4	67.1	26.1	6.3	32.5	0.4	100.0
모름/무응답	(5)	20.0	60.5	80.5	19.5	0.0	19.5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7.4	49.3	66.7	27.6	5.6	33.2	0.2	100.0
충부권	(118)	17.8	53.4	71.2	19.5	9.3	28.8	0.0	100.0
호남권	(119)	27.7	49.6	77.3	20.2	2.5	22.7	0.0	100.0
영남권	(324)	10.8	54.6	65.4	27.8	6.8	34.6	0.0	100.0
강원	(36)	25.0	50.0	75.0	13.9	11.1	25.0	0.0	100.0
제주	(13)	46.2	23.1	69.2	30.8	0.0	30.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8.4	45.0	73.4	22.6	4.0	26.6	0.0	100.0
중도	(581)	14.6	53.5	68.1	26.4	5.4	31.7	0.2	100.0
보수적	(323)	11.5	51.7	63.2	27.5	9.3	36.8	0.0	100.0



표 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전체	(1203)	16.6	47.6	64.2	28.5	7.2	35.7	0.1	100.0
■ 성별									
남자	(606)	17.5	46.0	63.5	27.8	8.6	36.3	0.2	100.0
여자	(597)	15.7	49.2	64.9	29.3	5.8	35.1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3.5	50.1	63.5	30.2	6.0	36.1	0.3	100.0
30대	(313)	15.9	47.6	63.5	27.5	8.9	36.5	0.0	100.0
40대	(305)	22.6	45.0	67.5	27.6	4.9	32.5	0.0	100.0
50대 이상	(280)	14.3	47.7	61.9	28.9	9.2	38.1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2.9	49.1	62.1	27.3	10.6	37.9	0.0	100.0
고졸	(491)	15.6	45.4	61.1	31.4	7.5	38.9	0.0	100.0
대재 이상	(581)	18.3	49.0	67.3	26.3	6.2	32.5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38.5	57.7	26.9	15.4	42.3	0.0	100.0
자영업	(260)	16.6	41.5	58.1	32.8	9.2	41.9	0.0	100.0
블루 칼라	(250)	18.7	43.6	62.4	30.0	7.6	37.6	0.0	100.0
화이트칼라	(228)	19.6	53.5	73.2	20.3	6.6	26.8	0.0	100.0
전업 주부	(247)	15.3	51.2	66.5	27.4	6.0	33.5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1.5	50.4	62.0	32.2	5.3	37.5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4.3	43.3	57.6	33.9	8.5	42.4	0.0	100.0
200~299만원	(353)	16.4	48.5	64.9	29.4	5.7	35.1	0.0	100.0
300~399만원	(352)	15.3	49.4	64.7	27.1	8.2	35.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20.5	48.0	68.6	24.0	7.1	31.1	0.4	100.0
모름/무응답	(5)	20.0	20.0	40.1	59.9	0.0	59.9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4.8	49.0	63.8	30.2	5.9	36.1	0.2	100.0
중부권	(118)	16.1	51.7	67.8	19.5	12.7	32.2	0.0	100.0
호남권	(119)	31.9	42.9	74.8	21.0	4.2	25.2	0.0	100.0
영남권	(324)	11.7	46.9	58.6	32.1	9.3	41.4	0.0	100.0
강원	(36)	30.6	38.9	69.4	25.0	5.6	30.6	0.0	100.0
제주	(13)	46.2	30.8	76.9	23.1	0.0	23.1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5.5	45.7	71.1	25.2	3.7	28.9	0.0	100.0
중도	(581)	14.6	48.5	63.1	30.2	6.5	36.7	0.2	100.0
보수적	(323)	12.1	47.6	59.7	28.6	11.7	40.3	0.0	100.0

표 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3)	24.9	48.4	73.3	21.0	5.6	26.6	0.1	100.0
■ 성별									
남자	(606)	29.2	43.4	72.6	20.7	6.4	27.2	0.2	100.0
여자	(597)	20.5	53.4	73.9	21.2	4.8	26.1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2.4	46.2	68.6	23.8	7.3	31.1	0.3	100.0
30대	(313)	25.2	50.2	75.4	20.1	4.5	24.6	0.0	100.0
40대	(305)	29.8	47.3	77.1	19.3	3.6	22.9	0.0	100.0
50대 이상	(280)	22.0	49.9	71.9	20.7	7.4	28.1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9.0	53.0	71.9	20.5	7.5	28.1	0.0	100.0
고졸	(491)	21.5	48.3	69.8	24.9	5.3	30.2	0.0	100.0
대재 이상	(581)	29.1	47.4	76.5	17.8	5.5	23.3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42.3	61.5	26.9	11.5	38.5	0.0	100.0
자영업	(260)	25.0	43.9	68.9	25.0	6.1	31.1	0.0	100.0
블루 칼라	(250)	25.9	45.2	71.1	23.7	5.2	28.9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8.0	50.5	78.5	17.5	3.9	21.5	0.0	100.0
전업 주부	(247)	22.5	54.9	77.4	16.9	5.6	22.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3.6	48.4	72.0	20.5	6.9	27.4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8.1	40.2	68.3	24.6	7.1	31.7	0.0	100.0
200~299만원	(353)	22.4	49.3	71.7	23.5	4.8	28.3	0.0	100.0
300~399만원	(352)	24.1	47.5	71.6	22.4	6.0	28.4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26.4	55.3	81.7	12.7	5.2	17.9	0.4	100.0
모름/무응답	(5)	39.5	41.1	80.6	19.4	0.0	19.4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3.4	48.1	71.4	22.2	6.2	28.4	0.2	100.0
충부권	(118)	32.2	44.9	77.1	13.6	9.3	22.9	0.0	100.0
호남권	(119)	39.5	46.2	85.7	13.4	0.8	14.3	0.0	100.0
영남권	(324)	18.2	52.2	70.4	24.1	5.6	29.6	0.0	100.0
강원	(36)	33.3	38.9	72.2	25.0	2.8	27.8	0.0	100.0
제주	(13)	38.5	46.2	84.6	15.4	0.0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6.1	44.2	80.3	15.7	4.0	19.7	0.0	100.0
중도	(581)	22.5	50.8	73.2	21.4	5.2	26.6	0.2	100.0
보수적	(323)	18.9	48.0	66.9	25.1	8.0	33.1	0.0	100.0



표 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3)	17.5	54.6	72.0	25.4	2.4	27.8	0.2	100.0
■ 성별									
남자	(606)	21.0	51.4	72.4	24.6	2.6	27.2	0.3	100.0
여자	(597)	13.9	57.7	71.6	26.2	2.2	28.4	0.0	100.0
■ 연령별									
19~29 세	(305)	15.5	52.1	67.6	29.4	2.3	31.7	0.7	100.0
30대	(313)	18.2	53.4	71.6	26.2	2.2	28.4	0.0	100.0
40대	(305)	20.4	55.3	75.7	22.7	1.6	24.3	0.0	100.0
50대 이상	(280)	15.6	57.8	73.3	23.1	3.5	26.7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7	55.9	69.7	26.5	3.8	30.3	0.0	100.0
고졸	(491)	13.4	55.0	68.4	28.5	3.0	31.6	0.0	100.0
대재 이상	(581)	21.7	53.9	75.6	22.5	1.5	24.0	0.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57.7	73.1	23.1	3.8	26.9	0.0	100.0
자영업	(260)	16.2	54.2	70.4	25.0	4.6	29.6	0.0	100.0
블루 칼라	(250)	15.5	52.4	67.9	29.8	2.4	32.1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2.3	51.8	74.1	25.0	0.9	25.9	0.0	100.0
전업 주부	(247)	14.1	59.3	73.4	24.2	2.4	26.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0.5	54.7	75.2	22.6	1.1	23.7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8.3	48.5	66.8	30.0	3.1	33.2	0.0	100.0
200~299만원	(353)	14.1	58.2	72.3	25.7	2.0	27.7	0.0	100.0
300~399만원	(352)	18.7	54.0	72.7	25.3	2.0	27.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18.3	56.3	74.6	21.7	3.0	24.6	0.8	100.0
모름/무응답	(5)	80.0	20.0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7.7	55.0	72.7	24.9	2.0	26.9	0.4	100.0
충부권	(118)	22.9	55.1	78.0	16.9	5.1	22.0	0.0	100.0
호남권	(119)	29.4	50.4	79.8	20.2	0.0	20.2	0.0	100.0
영남권	(324)	10.8	54.9	65.7	31.8	2.5	34.3	0.0	100.0
강원	(36)	13.9	58.3	72.2	19.4	8.3	27.8	0.0	100.0
제주	(13)	23.1	46.2	69.2	30.8	0.0	30.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0.8	53.1	84.0	14.7	1.3	16.0	0.0	100.0
중도	(581)	14.2	55.9	70.1	27.3	2.2	29.5	0.4	100.0
보수적	(323)	10.9	53.5	64.4	31.9	3.7	35.6	0.0	100.0

표 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④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2)	30.7	49.5	80.2	16.7	2.8	19.5	0.3	100.0
■ 성별									
남자	(606)	31.0	50.4	81.4	14.8	3.3	18.1	0.5	100.0
여자	(596)	30.5	48.6	79.1	18.6	2.3	20.9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28.1	52.6	80.7	15.9	2.7	18.6	0.7	100.0
30대	(313)	31.5	47.0	78.6	17.6	3.5	21.1	0.3	100.0
40대	(305)	32.9	48.7	81.7	17.3	1.0	18.3	0.0	100.0
50대 이상	(280)	30.3	49.8	80.0	15.7	4.2	20.0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2.6	55.4	77.9	18.3	3.8	22.1	0.0	100.0
고졸	(491)	27.9	48.8	76.8	19.8	3.5	23.2	0.0	100.0
대재 이상	(580)	35.0	48.8	83.7	13.7	2.1	15.7	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23.1	46.2	69.2	26.9	3.8	30.8	0.0	100.0
자영업	(260)	38.1	41.9	80.0	16.6	3.4	20.0	0.0	100.0
블루 칼라	(250)	24.3	54.6	78.9	17.9	2.8	20.7	0.4	100.0
화이트칼라	(227)	34.7	50.7	85.4	12.3	2.2	14.6	0.0	100.0
전업 주부	(247)	26.9	52.1	78.9	17.8	3.2	21.1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0.5	48.9	79.4	17.4	2.1	19.5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4.4	52.3	76.7	20.2	3.1	23.3	0.0	100.0
200~299만원	(352)	28.2	53.1	81.3	16.1	2.6	18.7	0.0	100.0
300~399만원	(352)	30.8	49.2	80.1	17.4	2.3	19.6	0.3	100.0
400만원 이상	(268)	38.7	43.0	81.7	13.8	3.7	17.5	0.8	100.0
모름/무응답	(5)	60.6	39.4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4.1	47.4	81.5	15.7	2.4	18.1	0.4	100.0
충부권	(117)	35.0	46.2	81.2	12.8	5.1	17.9	0.9	100.0
호남권	(119)	35.3	53.8	89.1	10.1	0.8	10.9	0.0	100.0
영남권	(324)	22.2	52.8	75.0	21.9	3.1	25.0	0.0	100.0
강원	(36)	25.0	44.4	69.4	22.2	8.3	30.6	0.0	100.0
제주	(13)	23.1	69.2	92.3	7.7	0.0	7.7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7.7	46.9	84.6	14.0	1.0	15.1	0.3	100.0
중도	(580)	29.1	49.6	78.7	18.0	2.9	20.9	0.4	100.0
보수적	(323)	27.2	51.7	78.9	16.8	4.3	21.1	0.0	100.0



표 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197)	40.0	43.5	83.5	13.5	2.7	16.3	0.3	100.0
■ 성별									
남자	(605)	41.9	43.8	85.7	11.4	2.5	13.9	0.3	100.0
여자	(592)	38.0	43.1	81.2	15.7	3.0	18.7	0.2	100.0
■ 연령별									
19~29 세	(305)	42.3	41.5	83.8	13.2	2.3	15.5	0.7	100.0
30대	(311)	42.4	42.8	85.2	12.3	2.2	14.5	0.3	100.0
40대	(302)	40.1	42.1	82.2	15.5	2.3	17.8	0.0	100.0
50대 이상	(279)	34.7	47.9	82.6	13.1	4.3	17.4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1.8	46.4	78.2	18.8	3.0	21.8	0.0	100.0
고졸	(485)	35.3	44.9	80.2	16.3	3.5	19.8	0.0	100.0
대재 이상	(581)	45.7	41.7	87.4	10.0	2.1	12.1	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42.3	30.8	73.1	23.1	3.8	26.9	0.0	100.0
자영업	(259)	39.9	46.7	86.6	8.9	4.2	13.1	0.3	100.0
블루 칼라	(249)	35.3	47.1	82.4	15.2	2.4	17.6	0.0	100.0
화이트칼라	(228)	42.1	45.2	87.3	10.9	1.7	12.7	0.0	100.0
전업 주부	(243)	35.2	42.2	77.5	19.3	3.3	22.5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9.4	35.7	85.2	12.1	1.6	13.7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2)	37.8	39.8	77.6	18.8	3.6	22.4	0.0	100.0
200~299만원	(351)	37.8	45.5	83.3	13.9	2.5	16.5	0.3	100.0
300~399만원	(350)	36.5	48.9	85.4	12.6	2.0	14.6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48.1	37.7	85.8	10.1	3.3	13.4	0.8	100.0
모름/무응답	(5)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9.9	43.1	82.9	14.2	2.4	16.6	0.5	100.0
충부권	(118)	50.0	39.8	89.8	5.1	5.1	10.2	0.0	100.0
호남권	(118)	44.1	39.0	83.1	16.9	0.0	16.9	0.0	100.0
영남권	(324)	35.2	47.2	82.4	14.5	3.1	17.6	0.0	100.0
강원	(33)	33.3	45.5	78.8	12.1	9.1	21.2	0.0	100.0
제주	(13)	53.8	38.5	92.3	7.7	0.0	7.7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6)	47.9	40.6	88.5	9.5	2.0	11.5	0.0	100.0
중도	(579)	39.0	42.0	81.0	16.2	2.2	18.4	0.5	100.0
보수적	(322)	34.5	48.7	83.2	12.4	4.3	16.8	0.0	100.0

표 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1)	5.7	19.1	24.9	54.3	20.6	74.9	0.2	100.0
■ 성별									
남자	(605)	7.1	15.5	22.7	54.1	22.9	77.0	0.3	100.0
여자	(596)	4.3	22.8	27.1	54.5	18.2	72.7	0.1	100.0
■ 연령별									
19~29세	(304)	8.3	21.1	29.4	50.3	19.6	69.9	0.7	100.0
30대	(313)	4.7	19.8	24.6	54.0	21.1	75.2	0.3	100.0
40대	(304)	5.9	20.0	25.9	57.2	16.9	74.1	0.0	100.0
50대 이상	(280)	3.9	15.2	19.2	55.6	25.2	80.8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4.6	17.4	22.0	50.6	27.4	78.0	0.0	100.0
고졸	(491)	4.9	18.1	23.0	55.3	21.8	77.0	0.0	100.0
대재 이상	(579)	6.7	20.4	27.1	54.3	18.1	72.3	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11.5	23.1	38.5	38.5	76.9	0.0	100.0
자영업	(260)	3.9	16.8	20.7	58.2	20.8	79.0	0.3	100.0
블루 칼라	(250)	5.6	18.3	23.9	56.1	20.0	76.1	0.0	100.0
화이트칼라	(226)	7.5	18.2	25.7	55.3	19.0	74.3	0.0	100.0
전업 주부	(247)	3.6	22.2	25.8	52.5	21.8	74.2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8.4	21.5	30.0	49.9	19.0	68.9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9	24.0	28.9	49.5	21.5	71.1	0.0	100.0
200~299만원	(352)	4.8	17.6	22.4	54.1	23.2	77.3	0.3	100.0
300~399만원	(351)	5.7	16.2	21.9	59.2	18.9	78.1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7.4	20.5	27.9	52.3	19	71.3	0.8	100.0
모름/무응답	(5)	21.1	40.1	61.2	38.8	0.0	38.8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6	17.8	22.4	57.5	19.6	77.1	0.5	100.0
충부권	(117)	5.1	23.9	29.1	41.0	29.9	70.9	0.0	100.0
호남권	(119)	17.6	23.5	41.2	47.9	10.9	58.8	0.0	100.0
영남권	(323)	2.8	16.7	19.5	57.6	22.9	80.5	0.0	100.0
강원	(36)	13.9	19.4	33.3	44.4	22.2	66.7	0.0	100.0
제주	(13)	7.7	53.8	61.5	30.8	7.7	38.5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0.4	25.4	35.8	48.8	15.4	64.2	0.0	100.0
중도	(579)	3.8	19.5	23.3	55.6	20.6	76.2	0.5	100.0
보수적	(323)	4.9	12.7	17.6	56.9	25.5	82.4	0.0	100.0



표 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3)	24.7	48.1	72.9	24.4	2.5	26.9	0.2	100.0
■ 성별									
남자	(606)	25.9	47.4	73.3	23.4	3.0	26.3	0.3	100.0
여자	(597)	23.5	48.9	72.5	25.5	2.0	27.5	0.0	100.0
■ 연령별									
19~29 세	(305)	24.7	46.8	71.6	25.1	2.7	27.8	0.7	100.0
30대	(313)	27.4	46.3	73.7	25.0	1.3	26.3	0.0	100.0
40대	(305)	26.2	49.6	75.8	22.6	1.6	24.2	0.0	100.0
50대 이상	(280)	20.2	50.1	70.2	25.2	4.6	29.8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6.8	48.4	65.2	31.0	3.8	34.8	0.0	100.0
고졸	(491)	22.7	47.2	69.9	26.4	3.7	30.1	0.0	100.0
대재 이상	(581)	28.2	48.9	77.2	21.3	1.2	22.5	0.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23.1	42.3	65.4	26.9	7.7	34.6	0.0	100.0
자영업	(260)	23.7	44.8	68.5	29.2	2.3	31.5	0.0	100.0
블루 칼라	(250)	25.1	45.7	70.9	25.5	3.6	29.1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5.4	50.1	75.4	23.2	1.3	24.6	0.0	100.0
전업 주부	(247)	21.0	52.3	73.4	24.2	2.4	26.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9.8	48.9	78.8	18.0	2.1	20.1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6.3	45.6	71.9	23.2	4.9	28.1	0.0	100.0
200~299만원	(353)	22.3	48.9	71.2	26.8	2.0	28.8	0.0	100.0
300~399만원	(352)	22.7	50.8	73.5	24.8	1.7	26.5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28.3	46.3	74.6	22.4	2.2	24.6	0.8	100.0
모름/무응답	(5)	80.5	19.5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5.6	48.1	73.7	23.8	2.2	26	0.4	100.0
충부권	(118)	32.2	42.4	74.6	19.5	5.9	25.4	0.0	100.0
호남권	(119)	37.8	44.5	82.4	16.8	0.8	17.6	0.0	100.0
영남권	(324)	14.2	51.9	66.0	31.5	2.5	34.0	0.0	100.0
강원	(36)	36.1	47.2	83.3	13.9	2.8	16.7	0.0	100.0
제주	(13)	30.8	46.2	76.9	23.1	0.0	23.1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4.8	44.4	79.3	19.1	1.7	20.7	0.0	100.0
중도	(581)	22.1	49.8	71.9	25.7	2.1	27.7	0.4	100.0
보수적	(323)	20.1	48.7	68.8	27.2	4.0	31.2	0.0	100.0

표 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2)	31.2	45.0	76.2	21.3	2.3	23.7	0.2	100.0
■ 성별									
남자	(605)	29.6	46.9	76.5	20.8	2.3	23.1	0.3	100.0
여자	(597)	32.8	43.0	75.8	21.9	2.3	24.2	0.0	100.0
■ 연령별									
19~29 세	(305)	28.7	46.4	75.1	20.9	3.3	24.2	0.7	100.0
30대	(313)	34.9	44.5	79.5	18.6	1.9	20.5	0.0	100.0
40대	(305)	30.9	45.8	76.7	22.0	1.3	23.3	0.0	100.0
50대 이상	(279)	30.1	42.9	73.0	24.2	2.8	27.0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25.1	45.2	70.3	27.3	2.3	29.7	0.0	100.0
고졸	(491)	27.4	45.3	72.7	24.0	3.3	27.3	0.0	100.0
대재 이상	(581)	35.8	44.6	80.4	17.7	1.6	19.2	0.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53.8	73.1	23.1	3.8	26.9	0.0	100.0
자영업	(260)	30.8	41.6	72.4	24.5	3.0	27.6	0.0	100.0
블루 칼라	(249)	31.4	43.7	75.1	22.1	2.8	24.9	0.0	100.0
화이트칼라	(228)	35.0	44.3	79.3	18.0	2.6	20.7	0.0	100.0
전업 주부	(247)	30.1	46.9	77.0	21.8	1.2	23.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9.9	48.3	78.2	19.0	1.6	20.6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32.6	44.7	77.3	20.0	2.7	22.7	0.0	100.0
200~299만원	(352)	30.2	46.5	76.7	21.9	1.4	23.3	0.0	100.0
300~399만원	(352)	26.1	48.6	74.7	23.6	1.7	25.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36.8	39.3	76.1	19.0	4.1	23.1	0.8	100.0
모름/무응답	(5)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33.1	41.0	74.1	23.4	2.2	25.6	0.4	100.0
충부권	(118)	37.3	42.4	79.7	16.9	3.4	20.3	0.0	100.0
호남권	(119)	39.5	42.9	82.4	16.0	1.7	17.6	0.0	100.0
영남권	(324)	21.9	54.6	76.5	21.3	2.2	23.5	0.0	100.0
강원	(36)	36.1	38.9	75.0	19.4	5.6	25.0	0.0	100.0
제주	(13)	30.8	46.2	76.9	23.1	0.0	23.1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0.4	41.5	81.8	16.2	2.0	18.2	0.0	100.0
중도	(580)	30.1	44.4	74.5	23.3	1.9	25.2	0.4	100.0
보수적	(323)	24.7	49.3	74.0	22.6	3.4	26.0	0.0	100.0



표 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02)	44.0	23.4	18.6	8.5	4.2	0.8	0.5	0.1	100.0
■ 성별										
남자	(606)	44.3	24.9	20.9	4.6	3.5	1.0	0.8	0.0	100.0
여자	(596)	43.7	21.9	16.2	12.4	4.8	0.7	0.2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6.6	26.2	24.5	9.2	2.0	0.7	1.0	0.0	100.0
30대	(312)	39.5	24.4	21.1	8.6	4.2	1.3	0.6	0.3	100.0
40대	(305)	45.9	19.7	18.7	8.9	5.5	1.0	0.3	0.0	100.0
50대 이상	(280)	55.0	23.4	9.2	7.1	5.0	0.4	0.0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53.6	25.2	5.3	9.0	6.8	0.0	0.0	0.0	100.0
고졸	(491)	45.9	21.8	15.4	11.2	4.1	0.4	1.0	0.2	100.0
대재 이상	(580)	40.1	24.4	24.2	6.1	3.6	1.4	0.2	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50.0	23.1	7.7	11.5	7.7	0.0	0.0	0.0	100.0
자영업	(260)	39.1	24.5	21.5	6.5	6.9	0.0	1.2	0.4	100.0
블루 칼라	(250)	43.9	28.9	14.9	6.7	3.6	1.6	0.4	0.0	100.0
화이트칼라	(227)	43.6	18.1	23.8	9.3	4.4	0.9	0.0	0.0	100.0
전업 주부	(247)	50.9	19.0	12.9	12.9	3.6	0.8	0.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1.5	26.8	22.2	6.3	1.0	1.0	1.0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5.4	22.3	16.7	10.2	4.9	0.4	0.0	0.0	100.0
200~299만원	(353)	44.6	22.9	17.3	7.6	5.1	1.4	1.1	0.0	100.0
300~399만원	(352)	43.4	23.0	18.5	9.7	4.3	0.3	0.6	0.3	100.0
400만원 이상	(267)	41.6	25.9	22.4	6.8	2.2	1.1	0.0	0.0	100.0
모름/무응답	(5)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43.7	26.2	18.0	7.1	4.2	0.7	0.2	0	100.0
충부권	(118)	47.5	18.6	25.4	4.2	1.7	0.8	1.7	0	100.0
호남권	(119)	44.5	16.8	21.8	10.1	5	0.8	0.8	0	100.0
영남권	(324)	46.3	21.9	15.7	9.9	4.6	0.9	0.6	0	100.0
강원	(36)	19.4	22.2	19.4	27.8	5.6	2.8	0	2.8	100.0
제주	(13)	30.8	38.5	23.1	7.7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4.5	22.8	18.7	7.7	4.7	1.3	0.3	0	100.0
중도	(581)	45.6	24.8	17.4	8.9	2.1	0.7	0.5	0	100.0
보수적	(322)	40.6	21.4	20.6	8.4	7.4	0.6	0.6	0.3	100.0

표 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전체	(1203)	14.0	39.2	53.2	36.9	9.9	46.8	100.0
■ 성별								
남자	(606)	18.6	38.4	57.0	32.6	10.4	43	100.0
여자	(597)	9.4	39.9	49.3	41.3	9.4	50.7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4.2	40.6	54.7	35.3	10.0	45.3	100.0
30대	(313)	15.7	41.1	56.8	33.9	9.3	43.2	100.0
40대	(305)	15.5	37.9	53.5	38.1	8.5	46.5	100.0
50대 이상	(280)	10.3	36.8	47.1	40.8	12.1	5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0	30.1	33.1	47.8	19.1	66.9	100.0
고졸	(491)	11.0	37.9	49.0	40.7	10.4	51.0	100.0
대재 이상	(581)	19.0	42.3	61.3	31.3	7.4	38.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15.4	23.1	53.8	23.1	76.9	100.0
자영업	(260)	15.8	42.4	58.2	33.8	8.0	41.8	100.0
블루 칼라	(250)	11.3	43.6	54.8	34.4	10.8	45.2	100.0
화이트칼라	(228)	18.4	37.3	55.7	37.8	6.6	44.3	100.0
전업 주부	(247)	7.7	38.6	46.4	41.9	11.7	53.6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8.9	35.2	54.1	34.7	11.2	45.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4.8	34.3	49.2	35.6	15.2	50.8	100.0
200~299만원	(353)	11.7	39.4	51.1	39.5	9.3	48.9	100.0
300~399만원	(352)	14.5	40.6	55.1	37.2	7.7	44.9	100.0
400만원 이상	(268)	16.0	41.0	57.0	34.1	9.0	43.0	100.0
모름/무응답	(5)	0.0	40.1	40.1	40.5	19.5	59.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3.6	42.7	56.3	35.9	7.8	43.7	100.0
충부권	(118)	22.9	37.3	60.2	34.7	5.1	39.8	100.0
호남권	(119)	23.5	37.8	61.3	31.1	7.6	38.7	100.0
영남권	(324)	6.8	34.0	40.7	42.3	17.0	59.3	100.0
강원	(36)	19.4	36.1	55.6	36.1	8.3	44.4	100.0
제주	(13)	30.8	46.2	76.9	23.1	0.0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2.7	40.1	62.9	30.8	6.4	37.1	100.0
중도	(581)	12.1	42.4	54.5	36.9	8.6	45.5	100.0
보수적	(323)	9.4	32.5	41.9	42.7	15.5	58.1	100.0



표 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전체	(1203)	4.1	19.8	23.9	53.4	22.7	76.1	100.0
■ 성별								
남자	(606)	6.0	21.8	27.8	51.2	21.0	72.2	100.0
여자	(597)	2.2	17.7	19.8	55.7	24.4	8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6	18.4	23.1	53.8	23.2	76.9	100.0
30대	(313)	4.2	21.1	25.2	55.5	19.2	74.8	100.0
40대	(305)	5.3	19.0	24.3	54.7	21.0	75.7	100.0
50대 이상	(280)	2.1	20.5	22.7	49.3	28.1	77.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	14.2	15.7	48.6	35.7	84.3	100.0
고졸	(491)	2.2	19.3	21.5	51.8	26.7	78.5	100.0
대재 이상	(581)	6.2	21.4	27.7	55.9	16.4	72.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11.5	11.5	46.2	42.3	88.5	100.0
자 영 업	(260)	4.7	18.7	23.4	54.7	21.9	76.6	100.0
블루 칼라	(250)	3.6	21.5	25.1	51.4	23.5	74.9	100.0
화이트칼라	(228)	6.1	20.6	26.7	56.5	16.7	73.3	100.0
전업 주부	(247)	1.2	17.4	18.6	55.6	25.8	81.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5.8	22.0	27.8	48.9	23.3	7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5	21.8	26.4	44.1	29.5	73.6	100.0
200~299만원	(353)	3.2	19.1	22.3	55.4	22.3	77.7	100.0
300~399만원	(352)	4.8	19.0	23.8	56.6	19.6	76.2	100.0
400만원 이상	(268)	4.1	19.9	23.9	54.0	22.1	76.1	100.0
모름/무응답	(5)	0.0	20.0	20.0	80.0	0.0	8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4	22.5	27.0	54.3	18.8	73.0	100.0
충부권	(118)	7.6	13.6	21.2	60.2	18.6	78.8	100.0
호남권	(119)	6.7	19.3	26.1	50.4	23.5	73.9	100.0
영남권	(324)	1.2	15.7	17.0	51.9	31.2	83.0	100.0
강원	(36)	2.8	27.8	30.6	38.9	30.6	69.4	100.0
제주	(13)	7.7	30.8	38.5	61.5	0.0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7.7	23.1	30.8	52.4	16.8	69.2	100.0
중도	(581)	3.3	19.2	22.5	55.0	22.5	77.5	100.0
보수적	(323)	2.2	17.6	19.8	51.6	28.6	80.2	100.0

표 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203)	3.7	11.0	14.7	22.7	35.0	27.6	62.6	0.1	100.0
■ 성별										
남자	(606)	4.3	9.1	13.5	24.1	35.9	26.3	62.2	0.2	100.0
여자	(597)	3.0	12.9	15.9	21.2	34.0	28.9	62.9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9	9.9	14.9	26.1	30.7	28.0	58.7	0.3	100.0
30대	(313)	3.5	10.3	13.7	25.3	33.3	27.7	61.0	0.0	100.0
40대	(305)	2.7	12.4	15.1	17.7	36.9	30.2	67.2	0.0	100.0
50대 이상	(280)	3.6	11.4	15.0	21.5	39.4	24.1	63.5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0	9.9	12.9	17.4	43.1	26.6	69.7	0.0	100.0
고졸	(491)	3.7	13.1	16.8	22.1	36.2	25.0	61.2	0.0	100.0
대재 이상	(581)	3.8	9.5	13.3	24.4	32.1	30.0	62.2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7.7	11.5	23.1	26.9	38.5	65.4	0.0	100.0
자영업	(260)	3.8	7.3	11.1	26.9	33.8	28.2	62.1	0.0	100.0
블루 칼라	(250)	4.9	12.0	16.9	19.5	37.6	26.0	63.6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6	11.0	13.6	20.1	38.6	27.7	66.3	0.0	100.0
전업 주부	(247)	2.4	13.8	16.2	19.4	35.8	28.6	64.4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7	11.6	16.4	28.4	28.9	25.8	54.7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5.4	12.1	17.5	24.1	31.5	26.8	58.4	0.0	100.0
200~299만원	(353)	3.4	13.0	16.4	19.2	37.5	26.8	64.4	0.0	100.0
300~399만원	(352)	2.8	7.9	10.8	25.0	38.4	25.9	64.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3.4	11.6	15.0	22.3	30.3	32.0	62.3	0.4	100.0
모름/무응답	(5)	20.0	0.0	20.0	60.5	19.5	0.0	19.5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9	10.3	14.2	22.7	35.5	27.3	62.8	0.2	100.0
중부권	(118)	3.4	16.1	19.5	18.6	25.4	36.4	61.9	0.0	100.0
호남권	(119)	7.6	16.0	23.5	31.1	22.7	22.7	45.4	0.0	100.0
영남권	(324)	1.9	8.0	9.9	22.5	43.5	24.1	67.6	0.0	100.0
강원	(36)	5.6	11.1	16.7	13.9	25.0	44.4	69.4	0.0	100.0
제주	(13)	0.0	23.1	23.1	7.7	23.1	46.2	69.2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3	9.7	13.0	25.2	33.1	28.7	61.9	0.0	100.0
중도	(581)	4.5	12.9	17.4	23.1	34.2	25.1	59.3	0.2	100.0
보수적	(323)	2.5	8.7	11.3	19.7	38.0	31.0	69.0	0.0	100.0



표 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201)	4.3	15.2	19.5	20.4	35.1	24.9	60.0	0.1	100.0
■ 성별										
남자	(606)	4.3	15.7	20.0	19.5	33.5	26.8	60.3	0.2	100.0
여자	(595)	4.4	14.6	19.0	21.4	36.7	22.9	59.7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5.0	13.9	18.9	23.3	34.6	22.9	57.5	0.3	100.0
30대	(313)	3.5	14.7	18.3	18.8	35.3	27.7	62.9	0.0	100.0
40대	(305)	4.3	16.7	21.0	17.9	34.1	27.0	61.0	0.0	100.0
50대 이상	(280)	4.6	15.2	19.9	21.9	36.6	21.7	58.2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8	14.3	18.1	23.5	40.9	17.5	58.4	0.0	100.0
고졸	(491)	4.3	15.9	20.2	21.2	33.4	25.2	58.6	0.0	100.0
대재 이상	(579)	4.5	14.7	19.2	19.1	35.2	26.3	61.5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15.4	15.4	30.8	23.1	30.8	53.8	0.0	100.0
자영업	(260)	5.0	14.9	19.9	21.1	32.2	26.8	59.0	0.0	100.0
블루 칼라	(249)	5.3	16.5	21.8	18.8	35.0	24.5	59.5	0.0	100.0
화이트칼라	(228)	3.1	15.3	18.4	19.2	34.7	27.7	62.4	0.0	100.0
전업 주부	(246)	5.3	15.1	20.4	17.7	38.5	23.4	61.9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2	13.6	16.8	25.2	36.9	20.5	57.4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1	14.7	18.8	24.5	31.2	25.5	56.7	0.0	100.0
200~299만원	(352)	5.1	17.6	22.7	17.7	34.3	25.2	59.5	0.0	100.0
300~399만원	(351)	3.7	13.6	17.3	21.4	40.8	20.5	61.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4.1	14.6	18.7	18.2	32.5	30.2	62.7	0.4	100.0
모름/무응답	(5)	20.0	0.0	20.0	8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4.3	15.0	19.3	19.5	36.2	24.8	61.0	0.2	100.0
중부권	(118)	5.9	14.4	20.3	20.3	27.1	32.2	59.3	0.0	100.0
호남권	(118)	6.8	19.5	26.3	21.2	32.2	20.3	52.5	0.0	100.0
영남권	(324)	2.8	14.2	17.0	22.2	39.2	21.6	60.8	0.0	100.0
강원	(36)	5.6	11.1	16.7	19.4	19.4	44.4	63.9	0.0	100.0
제주	(13)	7.7	23.1	30.8	15.4	23.1	30.8	53.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3	15.6	19.9	20.1	30.2	29.7	59.9	0.0	100.0
중도	(579)	4.8	16.1	20.9	22.2	34.4	22.3	56.7	0.2	100.0
보수적	(323)	3.5	13.0	16.5	17.6	40.8	25.1	65.9	0.0	100.0

표 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199)	5.6	21.9	27.5	18.3	28.8	25.3	54.0	0.1	100.0
■ 성별										
남자	(604)	6.0	22.9	28.9	18.2	26.9	25.7	52.7	0.2	100.0
여자	(595)	5.2	21.0	26.2	18.4	30.6	24.8	55.4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3	23.2	29.5	22.5	25.8	21.9	47.7	0.3	100.0
30대	(313)	5.4	22.8	28.2	17.9	27.6	26.4	54.0	0.0	100.0
40대	(303)	7.0	18.5	25.5	13.8	32.6	28.1	60.7	0.0	100.0
50대 이상	(279)	3.6	23.4	27.0	19.3	29.1	24.6	53.8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8	21.8	25.7	20.5	33.3	20.6	53.9	0.0	100.0
고졸	(489)	4.3	22.3	26.5	16.5	29.6	27.3	56.9	0.0	100.0
대재 이상	(579)	7.1	21.7	28.8	19.4	27.0	24.6	51.6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23.1	23.1	19.2	26.9	30.8	57.7	0.0	100.0
자영업	(260)	6.9	18.8	25.6	19.9	27.3	27.1	54.4	0.0	100.0
블루 칼라	(250)	5.7	28.9	34.5	15.1	24.8	25.6	50.4	0.0	100.0
화이트칼라	(227)	4.4	17.2	21.5	20.2	33.0	25.2	58.3	0.0	100.0
전업 주부	(245)	5.3	19.9	25.3	15.9	33.3	25.6	58.8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4	25.4	31.7	21.2	25.3	21.2	46.5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3)	7.2	27.3	34.5	15.3	30.4	19.8	50.2	0.0	100.0
200~299만원	(353)	5.7	16.9	22.6	19.8	29.3	28.3	57.6	0.0	100.0
300~399만원	(349)	4.9	22.9	27.8	18.3	29.0	24.9	53.9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5.2	22.5	27.7	18.6	26.5	26.8	53.3	0.4	100.0
모름/무응답	(5)	0.0	39.5	39.5	39.4	21.1	0.0	21.1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8	21.5	27.3	19.3	28.7	24.5	53.3	0.2	100.0
중부권	(117)	2.6	19.7	22.2	23.1	16.2	38.5	54.7	0.0	100.0
호남권	(119)	12.6	32.8	45.4	15.1	22.7	16.8	39.5	0.0	100.0
영남권	(324)	4.0	17.6	21.6	17.6	37.3	23.5	60.8	0.0	100.0
강원	(35)	5.7	34.3	40.0	8.6	14.3	37.1	51.4	0.0	100.0
제주	(13)	0.0	38.5	38.5	7.7	23.1	30.8	53.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8)	6.6	21.4	28.1	19.5	27.2	25.2	52.4	0.0	100.0
중도	(578)	5.7	23.0	28.8	18.8	29.0	23.2	52.2	0.2	100.0
보수적	(323)	4.4	20.5	24.9	16.4	29.7	29.1	58.8	0.0	100.0



표 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 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201)	2.3	7.1	9.3	24.6	39.6	26.3	65.9	0.1	100.0
■ 성별										
남자	(605)	3.2	6.6	9.8	24.7	40.4	24.9	65.3	0.2	100.0
여자	(596)	1.3	7.5	8.9	24.6	38.9	27.7	66.6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4)	3.3	7.6	10.9	29.1	38.1	21.5	59.6	0.3	100.0
30대	(313)	2.5	6.8	9.3	24.9	35.2	30.6	65.8	0.0	100.0
40대	(304)	2.0	6.9	8.9	21.1	42.7	27.3	70.0	0.0	100.0
50대 이상	(280)	1.1	7.1	8.2	23.3	42.9	25.5	68.4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	6.1	7.6	25.8	43.2	23.4	66.6	0.0	100.0
고졸	(491)	1.8	8.4	10.2	22.5	40.1	27.2	67.3	0.0	100.0
대재 이상	(579)	2.8	6.2	9.0	26.2	38.4	26.2	64.6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3.8	3.8	26.9	42.3	26.9	69.2	0.0	100.0
자영업	(259)	2.7	5.4	8.1	21.9	42.8	27.2	70.0	0.0	100.0
블루 칼라	(250)	3.7	5.6	9.3	26.3	38.8	25.6	64.4	0.0	100.0
화이트칼라	(228)	0.4	7.0	7.5	25.1	40.6	26.9	67.5	0.0	100.0
전업 주부	(247)	1.2	9.7	10.9	23.4	35.1	30.6	65.7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7	8.5	12.2	26.9	40.8	19.6	60.3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3	11.1	13.4	25.5	40.6	20.5	61.1	0.0	100.0
200~299만원	(352)	3.1	6.5	9.7	20.4	42.8	27.2	69.9	0.0	100.0
300~399만원	(352)	1.7	6.2	7.9	28.5	37.5	26.1	63.6	0.0	100.0
400만원 이상	(267)	1.9	5.3	7.2	24.2	37.4	30.8	68.2	0.4	100.0
모름/무응답	(5)	0.0	20.0	20.0	39.4	40.6	0.0	40.6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2.1	7.4	9.5	25.8	38.7	25.8	64.5	0.2	100.0
충부권	(118)	2.5	8.5	11.0	16.9	39.8	32.2	72.0	0.0	100.0
호남권	(118)	4.2	7.6	11.9	28.8	39.0	20.3	59.3	0.0	100.0
영남권	(324)	1.9	5.9	7.7	23.5	42.9	25.9	68.8	0.0	100.0
강원	(36)	2.8	2.8	5.6	33.3	27.8	33.3	61.1	0.0	100.0
제주	(13)	0.0	15.4	15.4	7.7	38.5	38.5	76.9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0	8.0	10.0	29.5	38.5	22.1	60.5	0.0	100.0
중도	(580)	3.0	7.0	10.0	24.3	38.3	27.2	65.5	0.2	100.0
보수적	(322)	1.3	6.2	7.5	20.8	43.1	28.6	71.7	0.0	100.0

표 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203)	3.3	10.1	13.3	25.3	34.4	26.9	61.3	0.1	100.0
■ 성별										
남자	(606)	4.5	9.9	14.4	27.3	32.9	25.2	58.1	0.2	100.0
여자	(597)	2.0	10.2	12.2	23.3	35.9	28.7	64.6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3	8.9	12.2	25.5	34.9	27.1	62.0	0.3	100.0
30대	(313)	1.9	9.2	11.1	26.5	32.4	30.0	62.3	0.0	100.0
40대	(305)	4.3	10.8	15.2	21.5	38.0	25.3	63.3	0.0	100.0
50대 이상	(280)	3.5	11.4	14.9	27.8	32.1	25.2	57.3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4.4	10.7	15.1	29.0	30.9	25.1	55.9	0.0	100.0
고졸	(491)	3.1	10.7	13.8	26.4	35.8	24.0	59.8	0.0	100.0
대재 이상	(581)	3.1	9.3	12.5	23.5	34.0	29.9	63.9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19.2	19.2	30.8	30.8	19.2	50.0	0.0	100.0
자영업	(260)	4.2	9.6	13.8	27.5	32.2	26.5	58.7	0.0	100.0
블루 칼라	(250)	4.9	9.6	14.5	27.5	32.8	25.2	58.0	0.0	100.0
화이트칼라	(228)	1.3	10.1	11.4	24.1	36.3	28.2	64.5	0.0	100.0
전업 주부	(247)	2.4	9.7	12.1	20.3	38.6	29.0	67.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7	10.4	14.1	26.4	32.0	26.8	58.9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4	14.3	18.7	27.3	30.7	23.3	54.0	0.0	100.0
200~299만원	(353)	2.8	9.3	12.1	24.9	36.4	26.6	62.9	0.0	100.0
300~399만원	(352)	3.4	9.6	13.1	25.0	36.4	25.5	62.0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2.7	8.2	10.9	23.8	32.0	32.9	64.9	0.4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0.0	59.4	40.6	0.0	40.6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2	8.1	11.3	23.6	37.0	27.9	64.9	0.2	100.0
중부권	(118)	4.2	8.5	12.7	22.0	28.8	36.4	65.3	0.0	100.0
호남권	(119)	5.9	16.8	22.7	24.4	30.3	22.7	52.9	0.0	100.0
영남권	(324)	2.2	11.1	13.3	29.0	34.0	23.8	57.7	0.0	100.0
강원	(36)	2.8	13.9	16.7	27.8	27.8	27.8	55.6	0.0	100.0
제주	(13)	0.0	15.4	15.4	38.5	30.8	15.4	46.2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7	13.7	15.4	25.8	30.1	28.8	58.8	0.0	100.0
중도	(581)	4.8	8.6	13.4	26.0	35.8	24.6	60.4	0.2	100.0
보수적	(323)	1.9	9.3	11.2	23.5	35.9	29.4	65.3	0.0	100.0



표 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체	(1203)	5.1	11.3	16.4	17.4	35.6	30.6	66.2	0.1	100.0
■ 성별										
남자	(606)	6.3	11.1	17.4	17.4	35.3	29.8	65.0	0.2	100.0
여자	(597)	3.8	11.5	15.4	17.3	35.9	31.4	67.3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5.3	9.9	15.2	19.5	33.0	32.0	65.0	0.3	100.0
30대	(313)	5.1	12.8	17.9	16.2	33.1	32.8	65.9	0.0	100.0
40대	(305)	6.0	12.1	18.1	14.4	37.7	29.8	67.6	0.0	100.0
50대 이상	(280)	3.9	10.3	14.2	19.5	38.9	27.3	66.3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7	10.6	14.3	21.3	35.5	28.8	64.3	0.0	100.0
고졸	(491)	4.5	12.4	16.9	17.4	38.7	27.0	65.7	0.0	100.0
대재 이상	(581)	5.9	10.5	16.4	16.4	33.0	34.0	67.0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11.5	15.4	19.2	26.9	38.5	65.4	0.0	100.0
자영업	(260)	5.7	10.8	16.5	16.7	34.6	32.2	66.8	0.0	100.0
블루 칼라	(250)	5.3	12.0	17.3	19.5	33.2	29.9	63.2	0.0	100.0
화이트칼라	(228)	4.8	10.0	14.9	15.8	36.3	33.0	69.3	0.0	100.0
전업 주부	(247)	3.7	11.3	15.0	16.2	41.1	27.8	68.8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6.3	12.6	18.9	18.4	33.3	28.8	62.1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5	14.3	18.7	20.2	35.2	25.8	61.1	0.0	100.0
200~299만원	(353)	5.7	11.7	17.3	14.6	34.7	33.4	68.1	0.0	100.0
300~399만원	(352)	5.1	9.6	14.8	19.3	38.1	27.8	65.9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4.9	10.8	15.7	15.2	34.0	34.7	68.7	0.4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0.0	59.4	21.1	19.5	40.6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5.1	10.3	15.4	15.8	38.1	30.5	68.6	0.2	100.0
충부권	(118)	5.9	8.5	14.4	16.9	28.0	40.7	68.6	0.0	100.0
호남권	(119)	8.4	18.5	26.9	17.6	28.6	26.9	55.5	0.0	100.0
영남권	(324)	4.3	10.2	14.5	20.1	37.3	28.1	65.4	0.0	100.0
강원	(36)	0.0	13.9	13.9	22.2	22.2	41.7	63.9	0.0	100.0
제주	(13)	0.0	38.5	38.5	7.7	46.2	7.7	53.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0	11.7	17.7	19.1	34.8	28.4	63.2	0.0	100.0
중도	(581)	5.5	10.8	16.4	17.9	36.5	29.1	65.6	0.2	100.0
보수적	(323)	3.5	11.7	15.2	14.8	34.7	35.3	70.0	0.0	100.0

표 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 전체	(1203)	19.3	31.2	49.5	100.0
■ 성별					
남자	(606)	18.7	31.0	50.3	100.0
여자	(597)	19.9	31.4	48.8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8.5	34.6	46.9	100.0
30대	(313)	17.9	34.1	48.0	100.0
40대	(305)	20.9	30.5	48.5	100.0
50대 이상	(280)	19.8	24.8	55.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3.4	18.2	58.4	100.0
고졸	(491)	18.1	31.3	50.6	100.0
대재 이상	(581)	19.3	34.0	46.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30.8	50.0	100.0
자영업	(260)	21.1	26.8	52.1	100.0
블루 칼라	(250)	17.7	30.8	51.6	100.0
화이트칼라	(228)	16.2	38.2	45.6	100.0
전업 주부	(247)	20.9	29.0	5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0.5	32.1	47.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0.5	23.3	56.2	100.0
200~299만원	(353)	20.1	28.2	51.7	100.0
300~399만원	(352)	19.0	32.4	48.6	100.0
400만원 이상	(268)	17.6	40.6	41.8	100.0
모름/무응답	(5)	20.0	0.0	8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9.4	37.4	43.2	100.0
중부권	(118)	19.5	29.7	50.8	100.0
호남권	(119)	21.8	35.3	42.9	100.0
영남권	(324)	17.6	19.4	63.0	100.0
강원	(36)	16.7	27.8	55.6	100.0
제주	(13)	38.5	23.1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5.7	37.5	36.8	100.0
중도	(581)	16.2	31.4	52.4	100.0
보수적	(323)	18.9	24.8	56.3	100.0



표 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 전체	(1203)	28.7	27.7	43.6	100.0
■ 성별					
남자	(606)	27.9	27.0	45.1	100.0
여자	(597)	29.4	28.5	42.1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9.1	28.7	42.3	100.0
30대	(313)	27.6	30.5	41.9	100.0
40대	(305)	31.1	27.6	41.3	100.0
50대 이상	(280)	26.9	23.8	49.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8.8	20.6	50.6	100.0
고 졸	(491)	26.6	27.7	45.7	100.0
대재 이상	(581)	30.4	29.4	4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0.8	23.1	46.2	100.0
자영업	(260)	30.0	26.4	43.6	100.0
블루 칼라	(250)	23.6	27.6	48.8	100.0
화이트칼라	(228)	28.5	31.1	40.5	100.0
전업 주부	(247)	29.1	28.6	42.3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3.1	25.2	41.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32.2	20.2	47.6	100.0
200~299만원	(353)	26.9	27.6	45.5	100.0
300~399만원	(352)	27.8	28.1	44.1	100.0
400만원 이상	(268)	29.4	34.2	36.3	100.0
모름/무응답	(5)	20.0	0.0	8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0.0	30.0	40.0	100.0
중부권	(118)	31.4	27.1	41.5	100.0
호남권	(119)	28.6	36.1	35.3	100.0
영남권	(324)	25.0	21.0	54.0	100.0
강원	(36)	22.2	30.6	47.2	100.0
제주	(13)	53.8	15.4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5.0	32.2	32.8	100.0
중도	(581)	25.3	29.2	45.5	100.0
보수적	(323)	28.8	21.0	50.1	100.0

표 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 전체	(1203)	43.6	39.1	13.3	4.0	100.0
■ 성별						
남자	(606)	45.1	38.7	11.9	4.3	100.0
여자	(597)	42.1	39.5	14.7	3.7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3.7	40.2	13.2	3.0	100.0
30대	(313)	45.8	38.6	12.1	3.5	100.0
40대	(305)	38.6	40.5	16.7	4.3	100.0
50대 이상	(280)	46.7	37.0	11.0	5.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46.2	34.2	12.8	6.9	100.0
고졸	(491)	45.9	34.6	14.4	5.1	100.0
대재 이상	(581)	41.1	44.1	12.4	2.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42.3	46.2	7.7	3.8	100.0
자영업	(260)	44.4	34.9	15.7	5.0	100.0
블루 칼라	(250)	46.3	37.2	11.2	5.2	100.0
화이트칼라	(228)	40.8	43.9	12.7	2.6	100.0
전업 주부	(247)	43.5	36.4	15.3	4.8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2.7	44.2	11.5	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39.2	41.6	13.0	6.3	100.0
200~299만원	(353)	43.8	42.4	10.7	3.1	100.0
300~399만원	(352)	46.5	35.3	14.5	3.7	100.0
400만원 이상	(268)	42.9	37.7	15.6	3.8	100.0
모름/무응답	(5)	60.5	39.5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50.2	37.3	10.7	1.7	100.0
중부권	(118)	32.2	39.0	24.6	4.2	100.0
호남권	(119)	28.6	50.4	14.3	6.7	100.0
영남권	(324)	44.4	34.9	14.2	6.5	100.0
강원	(36)	25.0	55.6	11.1	8.3	100.0
제주	(13)	15.4	76.9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8.2	44.8	13.7	3.3	100.0
중도	(581)	44.4	39.4	12.4	3.8	100.0
보수적	(323)	47.3	33.3	14.5	5.0	100.0



표 13.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 전체	(1203)	17.4	50.7	2.3	20.6	9.0	100.0
■ 성별							
남자	(606)	16.3	49.7	2.2	21.2	10.7	100.0
여자	(597)	18.5	51.7	2.3	20.1	7.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6.2	52.6	3.7	18.6	9.0	100.0
30대	(313)	13.1	54.9	1.3	19.9	10.8	100.0
40대	(305)	19.3	52.6	2.3	18.4	7.5	100.0
50대 이상	(280)	21.3	41.9	1.8	26.2	8.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9.5	44.6	2.3	22.0	1.5	100.0
고졸	(491)	17.1	45.3	3.3	23.0	11.3	100.0
대재 이상	(581)	14.9	56.6	1.4	18.3	8.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0.8	50.0	0.0	19.2	0.0	100.0
자영업	(260)	14.2	43.7	0.8	28.0	13.4	100.0
블루 칼라	(250)	16.0	50.5	4.0	18.4	11.1	100.0
화이트칼라	(228)	18.4	56.5	1.8	16.3	7.0	100.0
전업 주부	(247)	20.5	50.4	2.8	19.8	6.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6.4	54.1	2.1	20.1	7.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8.7	53.6	3.1	17.9	6.6	100.0
200~299만원	(353)	16.6	53.2	2.6	20.1	7.6	100.0
300~399만원	(352)	17.9	45.5	1.4	24.8	10.4	100.0
400만원 이상	(268)	16.4	51.8	2.2	18.3	11.2	100.0
모름/무응답	(5)	21.1	59.5	0.0	19.4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7.9	46.5	1.5	22.3	11.7	100.0
충부권	(118)	13.6	62.7	1.7	17.8	4.2	100.0
호남권	(119)	24.4	53.8	5.9	10.1	5.9	100.0
영남권	(324)	15.7	51.9	1.9	24.1	6.5	100.0
강원	(36)	11.1	52.8	8.3	13.9	13.9	100.0
제주	(13)	23.1	69.2	0.0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6.7	60.9	2.0	15.5	5.0	100.0
중도	(581)	16.8	49.9	2.3	22.1	9.0	100.0
보수적	(323)	18.9	42.7	2.5	22.9	12.9	100.0

표 14.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 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3)	2.9	38.0	40.9	44.7	14.4	59.1	100.0
■ 성별								
남자	(606)	4.5	39.6	44.0	41.1	14.9	56.0	100.0
여자	(597)	1.3	36.4	37.8	48.4	13.9	62.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3	39.5	41.8	43.6	14.6	58.2	100.0
30대	(313)	3.5	38.7	42.2	43.2	14.6	57.8	100.0
40대	(305)	3.3	40.3	43.7	45.2	11.1	56.3	100.0
50대 이상	(280)	2.5	33.1	35.6	47.0	17.5	64.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0	30.3	33.4	49.2	17.5	66.6	100.0
고졸	(491)	2.0	34.2	36.2	47.1	16.7	63.8	100.0
대재 이상	(581)	3.6	43.0	46.6	41.6	11.8	53.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34.6	38.5	46.2	15.4	61.5	100.0
자영업	(260)	4.6	31.4	36.0	49.0	14.9	64.0	100.0
블루 칼라	(250)	3.6	42.0	45.7	40.4	14.0	54.3	100.0
화이트칼라	(228)	2.6	42.9	45.6	43.9	10.5	54.4	100.0
전업 주부	(247)	0.8	36.4	37.2	47.1	15.7	62.8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6	38.4	41.0	42.1	17.0	5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3.6	35.3	38.8	43.8	17.4	61.2	100.0
200~299만원	(353)	2.8	41.3	44.1	42.3	13.6	55.9	100.0
300~399만원	(352)	2.8	37.0	39.8	45.7	14.5	60.2	100.0
400만원 이상	(268)	2.6	36.9	39.5	47.3	13.2	60.5	100.0
모름/무응답	(5)	0.0	59.5	59.5	40.5	0.0	4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2	35.4	38.7	46.8	14.5	61.3	100.0
충부권	(118)	2.5	40.7	43.2	44.9	11.9	56.8	100.0
호남권	(119)	6.7	57.1	63.9	29.4	6.7	36.1	100.0
영남권	(324)	0.9	33.3	34.3	48.5	17.3	65.7	100.0
강원	(36)	0.0	47.2	47.2	36.1	16.7	52.8	100.0
제주	(13)	15.4	46.2	61.5	15.4	23.1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0	50.1	56.1	36.4	7.4	43.9	100.0
중도	(581)	2.4	37.7	40.1	46.6	13.3	59.9	100.0
보수적	(323)	0.9	27.3	28.2	48.9	22.9	71.8	100.0



표 15.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3)	2.8	18.4	21.2	51.9	26.8	78.7	0.1	100.0
■ 성별									
남자	(606)	3.8	17.4	21.3	50.9	27.9	78.7	0.0	100.0
여자	(597)	1.8	19.3	21.2	52.9	25.7	78.7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0	17.8	20.8	53.1	26.1	79.2	0.0	100.0
30대	(313)	2.2	20.1	22.3	50.3	27.1	77.4	0.3	100.0
40대	(305)	5.4	19.7	25.0	53.1	21.9	75.0	0.0	100.0
50대 이상	(280)	0.7	15.6	16.3	51.1	32.5	83.7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0.8	17.4	18.2	47.0	34.8	81.8	0.0	100.0
고졸	(491)	2.5	16.6	19.1	52.7	28.2	80.9	0.0	100.0
대재 이상	(581)	3.6	20.1	23.7	52.3	23.9	76.1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19.2	26.9	42.3	30.8	73.1	0.0	100.0
자영업	(260)	1.5	16.1	17.6	55.2	26.8	82.0	0.4	100.0
블루 칼라	(250)	4.1	18.8	22.9	50.9	26.2	77.1	0.0	100.0
화이트칼라	(228)	4.0	20.2	24.1	53.9	22.0	75.9	0.0	100.0
전업 주부	(247)	1.6	19.3	20.9	48.8	30.2	79.1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6	17.4	20.0	51.5	28.4	80.0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3	16.5	18.7	49.2	32.1	81.3	0.0	100.0
200~299만원	(353)	2.0	21.5	23.5	50.9	25.4	76.2	0.3	100.0
300~399만원	(352)	2.6	18.2	20.7	52.9	26.3	79.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4.9	15.7	20.6	54.4	25.1	79.4	0.0	100.0
모름/무응답	(5)	0.0	41.1	41.1	39.5	19.4	58.9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7	19.0	21.8	54.3	23.9	78.2	0.0	100.0
충부권	(118)	6.8	9.3	16.1	44.9	39.0	83.9	0.0	100.0
호남권	(119)	5.0	26.9	31.9	51.3	16.0	67.2	0.8	100.0
영남권	(324)	0.6	17.3	17.9	51.9	30.2	82.1	0.0	100.0
강원	(36)	0.0	13.9	13.9	44.4	41.7	86.1	0.0	100.0
제주	(13)	15.4	30.8	46.2	30.8	23.1	53.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4	24.1	28.4	47.1	24.4	71.6	0.0	100.0
중도	(581)	2.4	18.9	21.3	54.4	24.1	78.5	0.2	100.0
보수적	(323)	2.2	12.1	14.3	51.8	33.9	85.7	0.0	100.0

표 16.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 전체	(1203)	7.2	38.0	45.1	38.6	16.2	54.9	100.0
■ 성별								
남자	(606)	7.5	38.1	45.6	37.6	16.8	54.4	100.0
여자	(597)	6.9	37.8	44.7	39.7	15.6	55.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8.6	35.6	44.1	39.0	16.9	55.9	100.0
30대	(313)	7.4	33.8	41.2	39.9	18.9	58.8	100.0
40대	(305)	7.6	42.7	50.3	37.9	11.7	49.7	100.0
50대 이상	(280)	5.0	40.0	45.0	37.6	17.3	55.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8.4	39.2	47.6	34.9	17.5	52.4	100.0
고졸	(491)	6.4	34.4	40.7	40.8	18.5	59.3	100.0
대재 이상	(581)	7.6	40.7	48.3	37.7	14.0	51.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34.6	50.0	50.0	0.0	50.0	100.0
자영업	(260)	5.8	36.8	42.6	40.9	16.5	57.4	100.0
블루 칼라	(250)	7.3	39.2	46.4	34.4	19.1	53.6	100.0
화이트칼라	(228)	9.3	43.8	53.1	34.2	12.7	46.9	100.0
전업 주부	(247)	5.3	36.2	41.5	42.7	15.8	58.5	100.0
학생/무직/기타	(191)	7.9	33.6	41.5	39.5	19.0	58.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9.4	39.7	49.1	34.8	16.0	50.9	100.0
200~299만원	(353)	5.4	37.8	43.2	39.8	17.0	56.8	100.0
300~399만원	(352)	6.0	38.0	44.0	40.4	15.6	56.0	100.0
400만원 이상	(268)	9.4	36.2	45.6	38.0	16.4	54.4	100.0
모름/무응답	(5)	0.0	60.5	60.5	39.5	0.0	39.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6.5	38.0	44.5	38.6	16.9	55.5	100.0
중부권	(118)	6.8	37.3	44.1	40.7	15.3	55.9	100.0
호남권	(119)	17.6	47.1	64.7	21.8	13.4	35.3	100.0
영남권	(324)	3.7	35.5	39.2	43.2	17.6	60.8	100.0
강원	(36)	11.1	33.3	44.4	47.2	8.3	55.6	100.0
제주	(13)	23.1	30.8	53.8	38.5	7.7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0.7	41.1	51.9	36.7	11.4	48.1	100.0
중도	(581)	5.9	38.7	44.5	39.5	16.0	55.5	100.0
보수적	(323)	6.3	33.7	40.0	39.0	21.0	60.0	100.0



표 17.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약간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전체	(1203)	14.4	49.2	63.6	30.0	6.4	36.4	100.0
■ 성별								
남자	(606)	14.7	48.3	62.9	29.5	7.5	37.1	100.0
여자	(597)	14.2	50.1	64.3	30.5	5.2	35.7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3.9	47.1	71.0	23.4	5.6	29.0	100.0
30대	(313)	12.8	52.0	64.8	30.1	5.1	35.2	100.0
40대	(305)	9.9	50.2	60.0	32.4	7.5	40.0	100.0
50대 이상	(280)	11.0	47.2	58.2	34.4	7.4	41.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8.4	45.5	53.9	36.2	9.8	46.1	100.0
고졸	(491)	13.5	51.3	64.8	28.3	6.9	35.2	100.0
대재 이상	(581)	16.6	48.2	64.8	30.0	5.2	35.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46.2	61.5	30.8	7.7	38.5	100.0
자영업	(260)	12.7	51.5	64.2	29.7	6.1	35.8	100.0
블루 칼라	(250)	13.3	48.0	61.3	32.0	6.7	38.7	100.0
화이트칼라	(228)	14.5	48.7	63.2	31.5	5.3	36.8	100.0
전업 주부	(247)	10.8	52.1	62.9	31.4	5.7	37.1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2.8	44.6	67.4	24.2	8.4	32.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6.1	46.4	62.5	28.5	8.9	37.5	100.0
200~299만원	(353)	12.8	49.7	62.5	31.4	6.2	37.5	100.0
300~399만원	(352)	12.0	48.8	60.8	32.1	7.1	39.2	100.0
400만원 이상	(268)	18.7	51.0	69.7	26.5	3.7	30.3	100.0
모름/무응답	(5)	0.0	59.9	59.9	40.1	0.0	40.1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7.0	51.7	68.7	27.0	4.3	31.3	100.0
충부권	(118)	21.2	36.4	57.6	34.7	7.6	42.4	100.0
호남권	(119)	9.2	55.5	64.7	30.3	5.0	35.3	100.0
영남권	(324)	8.0	46.6	54.6	35.2	10.2	45.4	100.0
강원	(36)	22.2	55.6	77.8	16.7	5.6	22.2	100.0
제주	(13)	23.1	38.5	61.5	30.8	7.7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5.1	48.3	63.5	31.9	4.7	36.5	100.0
중도	(581)	12.5	48.8	61.3	31.6	7.1	38.7	100.0
보수적	(323)	17.3	50.5	67.9	25.4	6.8	32.1	100.0

표 18-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2)	3.8	16.4	25.2	54.6	100.0
■ 성별						
남자	(606)	5.5	22.0	28.5	44.1	100.0
여자	(596)	2.0	10.7	21.9	65.3	100.0
■ 연령별						
19~29세	(304)	4.0	16.3	20.2	59.5	100.0
30대	(313)	3.8	15.0	27.2	53.9	100.0
40대	(305)	4.6	22.4	26.8	46.2	100.0
50대 이상	(280)	2.5	11.7	26.6	59.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0.8	11.4	20.4	67.4	100.0
고졸	(490)	3.5	13.7	25.3	57.6	100.0
대재 이상	(581)	4.7	19.9	26.3	49.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7.7	15.4	73.1	100.0
자 영 업	(260)	3.1	20.4	24.5	52.0	100.0
블루 칼라	(250)	4.0	20.5	26.5	49.1	100.0
화이트칼라	(228)	5.3	17.1	31.2	46.5	100.0
전업 주부	(246)	1.6	8.5	24.7	65.1	100.0
학생/무직/기타	(191)	5.3	16.3	19.5	58.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0	17.9	22.3	55.7	100.0
200~299만원	(352)	3.1	16.2	22.1	58.6	100.0
300~399만원	(352)	4.2	16.2	28.1	51.4	100.0
400만원 이상	(268)	3.8	15.7	27.3	53.3	100.0
모름/무응답	(5)	0.0	19.4	60.6	2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4.2	13.9	24.9	57.0	100.0
중부권	(118)	1.7	22.0	31.4	44.9	100.0
호남권	(119)	5.9	23.5	26.1	44.5	100.0
영남권	(324)	2.5	16.0	21.6	59.9	100.0
강원	(36)	5.6	19.4	38.9	36.1	100.0
제주	(13)	7.7	15.4	30.8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5.7	19.8	26.4	48.1	100.0
중도	(580)	2.6	14.9	25.2	57.4	100.0
보수적	(323)	4.1	16.1	24.2	55.7	100.0



표 18-2. 북한 사회 인지도 - ④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3)	9.7	29.1	39.2	22.0	100.0
■ 성별						
남자	(606)	13.3	32.6	37.2	17.0	100.0
여자	(597)	6.0	25.5	41.2	27.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6.3	26.8	34.3	32.6	100.0
30대	(313)	9.3	32.9	38.4	19.5	100.0
40대	(305)	14.4	31.1	41.3	13.2	100.0
50대 이상	(280)	8.5	25.2	43.3	23.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0	19.0	41.7	36.3	100.0
고졸	(491)	9.1	26.6	40.2	24.1	100.0
대재 이상	(581)	11.6	33.5	37.8	1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11.5	30.8	46.2	100.0
자영업	(260)	11.2	32.0	39.2	17.6	100.0
블루 칼라	(250)	9.6	30.4	42.7	17.3	100.0
화이트칼라	(228)	13.2	29.4	39.5	18.0	100.0
전업 주부	(247)	6.9	27.5	39.5	26.1	100.0
학생/무직/기타	(191)	7.0	27.3	35.2	30.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9.4	21.5	35.7	33.5	100.0
200~299만원	(353)	8.0	32.2	39.3	20.6	100.0
300~399만원	(352)	9.1	32.1	40.9	17.9	100.0
400만원 이상	(268)	13.1	27.2	39.4	20.2	100.0
모름/무응답	(5)	0.0	38.8	61.2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9.7	29.6	41.6	19.1	100.0
중부권	(118)	11.9	35.6	32.2	20.3	100.0
호남권	(119)	10.1	33.6	38.7	17.6	100.0
영남권	(324)	7.1	23.5	38.9	30.6	100.0
강원	(36)	25.0	30.6	27.8	16.7	100.0
제주	(13)	7.7	38.5	38.5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3.7	35.5	35.1	15.8	100.0
중도	(581)	6.6	30.0	40.4	23.0	100.0
보수적	(323)	11.5	21.6	40.8	26.1	100.0

표 18-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1)	9.0	24.6	40.0	26.4	100.0
■ 성별						
남자	(605)	13.1	27.4	39.9	19.6	100.0
여자	(596)	4.8	21.8	40.2	33.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0	16.9	35.0	44.1	100.0
30대	(312)	7.7	25.1	42.2	25.0	100.0
40대	(305)	14.5	32.2	38.9	14.5	100.0
50대 이상	(279)	10.0	24.2	44.2	21.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2.3	19.7	42.2	35.8	100.0
고졸	(491)	10.1	25.7	40.4	23.8	100.0
대재 이상	(580)	9.5	24.8	39.2	26.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7.7	38.5	46.2	100.0
자영업	(259)	12.7	25.9	44.1	17.3	100.0
블루 칼라	(250)	7.1	30.0	43.2	19.6	100.0
화이트칼라	(228)	11.9	26.7	36.4	25.0	100.0
전업 주부	(246)	6.9	23.5	40.6	29.1	100.0
학생/무직/기타	(191)	5.9	16.9	34.2	43.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7.6	20.7	36.2	35.6	100.0
200~299만원	(352)	7.7	27.5	40.7	24.2	100.0
300~399만원	(351)	10.2	26.3	41.0	22.5	100.0
400만원 이상	(268)	10.5	22.0	40.6	26.8	100.0
모름/무응답	(5)	0.0	19.4	61.2	19.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8.6	23.8	42.7	24.9	100.0
중부권	(118)	13.6	28.0	33.9	24.6	100.0
호남권	(119)	11.8	21.8	45.4	21.0	100.0
영남권	(324)	7.4	24.1	37.0	31.5	100.0
강원	(36)	8.3	33.3	27.8	30.6	100.0
제주	(13)	0.0	46.2	30.8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2.7	27.8	36.5	23.0	100.0
중도	(579)	6.4	24.8	41.9	26.9	100.0
보수적	(323)	10.2	21.3	39.9	28.6	100.0



표 18-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1)	4.6	12.9	27.3	55.3	100.0
■ 성별						
남자	(605)	6.4	15.9	29.8	47.9	100.0
여자	(596)	2.7	9.9	24.8	62.7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6	5.9	24.7	65.7	100.0
30대	(312)	2.2	12.2	31.8	53.8	100.0
40대	(304)	6.6	20.0	29.4	44.0	100.0
50대 이상	(280)	6.0	13.5	22.8	57.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	10.6	24.3	63.6	100.0
고졸	(490)	4.7	10.4	26.4	58.6	100.0
대재 이상	(580)	5.2	15.5	28.8	5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0.0	34.6	57.7	100.0
자영업	(260)	6.1	15.2	27.0	51.7	100.0
블루 칼라	(250)	4.3	14.5	30.5	50.7	100.0
화이트칼라	(228)	5.3	20.7	28.3	45.8	100.0
전업 주부	(246)	2.4	8.2	25.5	63.9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2	6.3	23.7	6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5.8	9.9	25.5	58.8	100.0
200~299만원	(352)	3.1	15.3	24.7	56.8	100.0
300~399만원	(352)	4.8	12.1	29.4	53.7	100.0
400만원 이상	(268)	5.2	13.1	29.1	52.7	100.0
모름/무응답	(5)	0.0	19.4	41.1	39.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4.7	11.6	24.3	59.4	100.0
충부권	(118)	6.8	16.1	33.9	43.2	100.0
호남권	(119)	5.0	13.4	27.7	53.8	100.0
영남권	(323)	3.4	11.8	29.4	55.4	100.0
강원	(36)	5.6	22.2	33.3	38.9	100.0
제주	(13)	0.0	38.5	30.8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3	16.3	27.9	49.5	100.0
중도	(580)	3.4	10.4	28.7	57.5	100.0
보수적	(322)	5.0	14.2	24.3	56.6	100.0

표 18-5.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2)	1.4	4.8	14.3	79.4	100.0
■ 성별						
남자	(605)	2.3	5.8	17.1	74.8	100.0
여자	(597)	0.5	3.8	11.5	84.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7	2.6	11.9	83.8	100.0
30대	(312)	0.3	4.5	14.7	80.5	100.0
40대	(305)	2.3	8.2	18.8	70.7	100.0
50대 이상	(280)	1.4	3.9	11.7	83.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5.3	9.1	85.5	100.0
고졸	(490)	2.2	4.7	13.0	80.1	100.0
대재 이상	(581)	1.0	4.8	16.6	77.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7.7	11.5	76.9	100.0
자영업	(260)	1.5	5.7	14.2	78.6	100.0
블루 칼라	(249)	1.6	7.2	13.7	77.5	100.0
화이트칼라	(228)	1.8	5.2	19.7	73.3	100.0
전업 주부	(247)	0.4	2.8	10.5	86.2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6	2.1	14.2	8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0.9	5.8	12.6	80.7	100.0
200~299만원	(353)	0.9	5.3	12.4	81.4	100.0
300~399만원	(351)	2.5	4.8	15.1	77.5	100.0
400만원 이상	(268)	1.1	3.0	16.8	79.1	100.0
모름/무응답	(5)	0.0	19.4	41.1	39.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1.4	4.7	13.4	80.5	100.0
충부권	(118)	1.7	9.3	15.3	73.7	100.0
호남권	(119)	1.7	5.0	23.5	69.7	100.0
영남권	(324)	1.5	3.7	12.0	82.7	100.0
강원	(36)	0.0	0.0	16.7	83.3	100.0
제주	(13)	0.0	7.7	15.4	76.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6	6.0	17.5	74.9	100.0
중도	(581)	1.4	4.1	14.3	80.2	100.0
보수적	(322)	1.3	4.9	11.5	82.3	100.0



표 18-6.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아리랑 축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3)	6.4	16.9	37.6	39.0	100.0
■ 성별						
남자	(606)	9.6	19.2	37.7	33.5	100.0
여자	(597)	3.2	14.7	37.5	44.6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0	9.2	31.1	56.7	100.0
30대	(313)	7.0	17.6	38.0	37.4	100.0
40대	(305)	8.5	24.3	38.4	28.8	100.0
50대 이상	(280)	7.1	16.7	43.6	32.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3	12.1	48.6	37.0	100.0
고졸	(491)	6.9	16.0	37.9	39.2	100.0
대재 이상	(581)	6.9	18.8	34.9	39.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11.5	46.2	34.6	100.0
자영업	(260)	7.2	20.3	39.8	32.6	100.0
블루 칼라	(250)	5.1	17.6	37.7	39.6	100.0
화이트칼라	(228)	10.6	21.9	36.0	31.6	100.0
전업 주부	(247)	4.0	14.1	40.6	41.2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7	10.0	31.5	5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9	17.0	36.2	41.9	100.0
200~299만원	(353)	6.5	19.5	40.9	33.1	100.0
300~399만원	(352)	6.8	13.5	39.0	40.7	100.0
400만원 이상	(268)	7.0	17.2	32.7	43.1	100.0
모름/무응답	(5)	0.0	58.9	41.1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6.4	15.7	36.2	41.7	100.0
중부권	(118)	5.9	20.3	36.4	37.3	100.0
호남권	(119)	10.1	18.5	45.4	26.1	100.0
영남권	(324)	4.9	16.7	39.5	38.9	100.0
강원	(36)	8.3	19.4	30.6	41.7	100.0
제주	(13)	7.7	30.8	15.4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9.7	19.3	37.5	33.5	100.0
중도	(581)	5.0	16.7	37.3	41.0	100.0
보수적	(323)	5.9	15.1	38.3	40.7	100.0

표 19-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3)	4.2	95.8	100.0
■ 성별				
남자	(606)	3.8	96.2	100.0
여자	(597)	4.5	95.5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3	96.7	100.0
30대	(313)	2.9	97.1	100.0
40대	(305)	3.0	97.0	100.0
50대 이상	(280)	7.8	92.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8	93.2	100.0
고졸	(491)	2.7	97.3	100.0
대재 이상	(581)	4.8	95.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92.3	100.0
자영업	(260)	3.8	96.2	100.0
블루 칼라	(250)	3.6	96.4	100.0
화이트칼라	(228)	5.3	94.7	100.0
전업 주부	(247)	3.6	96.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2	9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5.8	94.2	100.0
200~299만원	(353)	3.1	96.9	100.0
300~399만원	(352)	2.6	97.4	100.0
400만원 이상	(268)	6.4	93.6	100.0
모름/무응답	(5)	0.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2	96.8	100.0
충부권	(118)	5.9	94.1	100.0
호남권	(119)	10.1	89.9	100.0
영남권	(324)	2.8	97.2	100.0
강원	(36)	5.6	94.4	100.0
제주	(13)	7.7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0	96.0	100.0
중도	(581)	3.8	96.2	100.0
보수적	(323)	4.9	95.1	100.0



표 19-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3)	10.9	89.1	100.0
■ 성별				
남자	(606)	12.7	87.3	100.0
여자	(597)	9.0	91.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8.9	91.1	100.0
30대	(313)	11.2	88.8	100.0
40대	(305)	14.4	85.6	100.0
50대 이상	(280)	8.8	91.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7.5	92.5	100.0
고졸	(491)	9.1	90.9	100.0
대재 이상	(581)	13.1	86.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88.5	100.0
자영업	(260)	13.4	86.6	100.0
블루 칼라	(250)	8.8	91.2	100.0
화이트칼라	(228)	14.5	85.5	100.0
전업 주부	(247)	8.4	91.6	100.0
학생/무직/기타	(191)	8.9	9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1.6	88.4	100.0
200~299만원	(353)	7.9	92.1	100.0
300~399만원	(352)	11.6	88.4	100.0
400만원 이상	(268)	13.3	86.7	100.0
모름/무응답	(5)	0.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9.7	90.3	100.0
중부권	(118)	16.9	83.1	100.0
호남권	(119)	17.6	82.4	100.0
영남권	(324)	8.3	91.7	100.0
강원	(36)	11.1	88.9	100.0
제주	(13)	7.7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0.7	89.3	100.0
중도	(581)	8.9	91.1	100.0
보수적	(323)	14.5	85.5	100.0

표 19-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1)	46.2	53.8	100.0
■ 성별				
남자	(605)	47.6	52.4	100.0
여자	(596)	44.9	55.1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3.8	56.2	100.0
30대	(313)	48.3	51.7	100.0
40대	(305)	52.8	47.2	100.0
50대 이상	(278)	39.3	60.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33.7	66.3	100.0
고졸	(490)	45.3	54.7	100.0
대재 이상	(581)	49.8	5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5	61.5	100.0
자영업	(260)	46.8	53.2	100.0
블루 칼라	(250)	51.8	48.2	100.0
화이트칼라	(228)	50.8	49.2	100.0
전업 주부	(246)	37.6	62.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4.9	55.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2)	44.2	55.8	100.0
200~299만원	(353)	43.8	56.2	100.0
300~399만원	(352)	45.5	54.5	100.0
400만원 이상	(268)	52.2	47.8	100.0
모름/무응답	(5)	39.5	6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44.8	55.2	100.0
중부권	(118)	60.2	39.8	100.0
호남권	(119)	42.0	58.0	100.0
영남권	(323)	42.4	57.6	100.0
강원	(36)	69.4	30.6	100.0
제주	(13)	53.8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51.5	48.5	100.0
중도	(579)	45.8	54.2	100.0
보수적	(323)	42.1	57.9	100.0



표 19-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2)	1.4	98.6	100.0
■ 성별				
남자	(606)	2.0	98.0	100.0
여자	(596)	0.8	99.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0	98.0	100.0
30대	(313)	1.0	99.0	100.0
40대	(305)	2.4	97.6	100.0
50대 이상	(279)	0.4	99.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0.0	100.0	100.0
고졸	(491)	1.5	98.5	100.0
대재 이상	(581)	1.7	98.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100.0	100.0
자영업	(260)	1.6	98.4	100.0
블루 칼라	(250)	1.2	98.8	100.0
화이트칼라	(228)	3.5	96.5	100.0
전업 주부	(246)	0.0	10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0	9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3)	1.8	98.2	100.0
200~299만원	(353)	0.0	100.0	100.0
300~399만원	(352)	1.7	98.3	100.0
400만원 이상	(268)	2.7	97.3	100.0
모름/무응답	(5)	0.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1.6	98.4	100.0
중부권	(118)	0.0	100.0	100.0
호남권	(119)	0.8	99.2	100.0
영남권	(324)	1.5	98.5	100.0
강원	(36)	2.8	97.2	100.0
제주	(13)	7.7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0	97.0	100.0
중도	(580)	1.1	98.9	100.0
보수적	(323)	0.6	99.4	100.0

표 2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전체	(1203)	75.1	20.8	95.8	2.7	1.5	4.2	100.0
■ 성별								
남자	(606)	74.5	20.7	95.2	3.1	1.7	4.8	100.0
여자	(597)	75.6	20.9	96.5	2.2	1.3	3.5	100.0
■ 연령별								
19~29세	(305)	75.3	20.1	95.4	3.3	1.3	4.6	100.0
30대	(313)	76.9	18.0	94.9	3.5	1.6	5.1	100.0
40대	(305)	73.5	22.3	95.8	2.3	2.0	4.2	100.0
50대 이상	(280)	74.5	23.0	97.5	1.4	1.1	2.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71.4	26.3	97.7	1.5	0.8	2.3	100.0
고졸	(491)	71.9	22.6	94.5	3.5	2.0	5.5	100.0
대재 이상	(581)	78.6	18.0	96.5	2.2	1.2	3.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3.1	15.4	88.5	7.7	3.8	11.5	100.0
자영업	(260)	79.8	16.4	96.2	1.1	2.7	3.8	100.0
블루 칼라	(250)	68.4	26.4	94.8	3.2	2.0	5.2	100.0
화이트칼라	(228)	75.8	21.5	97.4	2.6	0.0	2.6	100.0
전업 주부	(247)	75.7	20.2	96.0	2.8	1.2	4.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75.8	20.0	95.8	3.2	1.1	4.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71.6	20.9	92.4	4.5	3.1	7.6	100.0
200~299만원	(353)	80.8	15.5	96.3	2.8	0.8	3.7	100.0
300~399만원	(352)	71.3	25.8	97.2	2.0	0.9	2.8	100.0
400만원 이상	(268)	75.7	20.6	96.3	1.9	1.9	3.7	100.0
모름/무응답	(5)	58.9	41.1	10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77.1	20.4	97.5	1.7	0.8	2.5	100.0
중부권	(118)	84.7	11.9	96.6	2.5	0.8	3.4	100.0
호남권	(119)	72.3	21.0	93.3	4.2	2.5	6.7	100.0
영남권	(324)	70.1	24.7	94.8	3.4	1.9	5.2	100.0
강원	(36)	66.7	19.4	86.1	8.3	5.6	13.9	100.0
제주	(13)	69.2	23.1	92.3	0.0	7.7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75.8	19.1	95.0	3.7	1.3	5.0	100.0
중도	(581)	73.3	22.2	95.5	2.8	1.7	4.5	100.0
보수적	(323)	77.5	19.7	97.2	1.6	1.2	2.8	100.0



표 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④ 생활수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전체	(1203)	81.1	16.3	97.3	1.8	0.8	2.7	100.0
■ 성별								
남자	(606)	81.5	15.2	96.7	2.3	1.0	3.3	100.0
여자	(597)	80.6	17.4	98.0	1.3	0.7	2.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81.2	16.1	97.4	1.6	1.0	2.6	100.0
30대	(313)	83.0	14.4	97.4	1.9	0.6	2.6	100.0
40대	(305)	77.8	18.3	96.1	3.0	1.0	3.9	100.0
50대 이상	(280)	82.3	16.3	98.6	0.7	0.7	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76.7	22.6	99.3	0.7	0.0	0.7	100.0
고졸	(491)	79.0	16.3	95.3	3.5	1.2	4.7	100.0
대재 이상	(581)	83.8	14.9	98.6	0.7	0.7	1.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6.9	15.4	92.3	7.7	0.0	7.7	100.0
자영업	(260)	86.2	10.7	96.9	1.5	1.5	3.1	100.0
블루 칼라	(250)	82.8	13.6	96.4	2.4	1.2	3.6	100.0
화이트칼라	(228)	81.6	17.1	98.7	1.3	0.0	1.3	100.0
전업 주부	(247)	76.7	21.8	98.4	0.8	0.8	1.6	100.0
학생/무직/기타	(191)	77.3	19.5	96.8	2.6	0.6	3.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75.6	20.8	96.4	2.2	1.3	3.6	100.0
200~299만원	(353)	82.8	15.8	98.6	1.1	0.3	1.4	100.0
300~399만원	(352)	82.7	15.1	97.7	1.4	0.9	2.3	100.0
400만원 이상	(268)	82.0	13.9	95.9	3.0	1.1	4.1	100.0
모름/무응답	(5)	38.8	61.2	10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82.3	15.8	98.1	1.2	0.7	1.9	100.0
중부권	(118)	89.0	7.6	96.6	2.5	0.8	3.4	100.0
호남권	(119)	75.6	21.0	96.6	2.5	0.8	3.4	100.0
영남권	(324)	77.8	19.8	97.5	1.9	0.6	2.5	100.0
강원	(36)	75.0	11.1	86.1	8.3	5.6	13.9	100.0
제주	(13)	100.0	0.0	100.0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83.6	13.7	97.3	2.0	0.7	2.7	100.0
중도	(581)	79.0	18.4	97.4	1.7	0.9	2.6	100.0
보수적	(323)	82.4	14.8	97.2	1.9	0.9	2.8	100.0

표 20-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법률제도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전체	(1203)	72.9	22.9	95.8	3.2	0.9	4.2	100.0
■ 성별								
남자	(606)	72.7	23.1	95.9	3.1	1.0	4.1	100.0
여자	(597)	73.1	22.7	95.8	3.3	0.8	4.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69.0	25.7	94.7	4.3	1.0	5.3	100.0
30대	(313)	75.0	19.8	94.9	4.5	0.6	5.1	100.0
40대	(305)	71.6	24.9	96.4	2.3	1.3	3.6	100.0
50대 이상	(280)	76.3	21.2	97.5	1.8	0.7	2.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75.9	21.1	97.0	3.0	0.0	3.0	100.0
고졸	(491)	67.9	26.0	93.9	4.9	1.2	6.1	100.0
대재 이상	(581)	76.5	20.8	97.2	1.9	0.9	2.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3.1	15.4	88.5	11.5	0.0	11.5	100.0
자영업	(260)	75.6	21.0	96.5	1.5	1.9	3.5	100.0
블루 칼라	(250)	70.0	24.8	94.8	4.4	0.8	5.2	100.0
화이트칼라	(228)	75.4	22.4	97.8	2.2	0.0	2.2	100.0
전업 주부	(247)	73.0	23.0	96.0	3.2	0.8	4.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70.0	24.7	94.7	4.2	1.1	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66.6	25.8	92.4	6.2	1.3	7.6	100.0
200~299만원	(353)	79.1	18.1	97.2	2.3	0.6	2.8	100.0
300~399만원	(352)	68.8	28.1	96.9	2.3	0.9	3.1	100.0
400만원 이상	(268)	76.1	19.4	95.5	3.4	1.1	4.5	100.0
모름/무응답	(5)	38.8	61.2	10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73.6	22.9	96.5	2.9	0.7	3.5	100.0
중부권	(118)	81.4	15.3	96.6	1.7	1.7	3.4	100.0
호남권	(119)	72.3	19.3	91.6	7.6	0.8	8.4	100.0
영남권	(324)	68.5	28.1	96.6	2.5	0.9	3.4	100.0
강원	(36)	69.4	22.2	91.7	5.6	2.8	8.3	100.0
제주	(13)	92.3	0.0	92.3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73.3	22.4	95.7	3.3	1.0	4.3	100.0
중도	(581)	73.1	22.2	95.4	3.9	0.7	4.6	100.0
보수적	(323)	72.2	24.7	96.9	1.9	1.2	3.1	100.0



표 20-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체	(1203)	50.8	41.9	92.8	5.5	1.8	7.2	100.0
■ 성별								
남자	(606)	46.6	46.3	92.9	5.1	2.0	7.1	100.0
여자	(597)	55.1	37.5	92.7	5.8	1.5	7.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8.2	42.5	90.8	6.9	2.3	9.2	100.0
30대	(313)	51.4	42.5	93.9	4.5	1.6	6.1	100.0
40대	(305)	51.4	41.7	93.1	5.2	1.6	6.9	100.0
50대 이상	(280)	52.4	40.9	93.3	5.3	1.4	6.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47.0	46.3	93.2	6.0	0.8	6.8	100.0
고졸	(491)	51.0	40.3	91.2	6.3	2.4	8.8	100.0
대재 이상	(581)	51.6	42.4	94.0	4.7	1.4	6.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53.8	42.3	96.2	0.0	3.8	3.8	100.0
자영업	(260)	53.2	39.5	92.7	5.0	2.3	7.3	100.0
블루 칼라	(250)	49.0	44.2	93.2	4.8	2.0	6.8	100.0
화이트칼라	(228)	49.1	46.5	95.6	4.0	0.4	4.4	100.0
전업 주부	(247)	56.1	35.5	91.6	7.2	1.2	8.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4.8	45.2	90.0	7.3	2.7	1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4.3	46.8	91.1	5.8	3.1	8.9	100.0
200~299만원	(353)	55.6	37.3	92.9	5.9	1.1	7.1	100.0
300~399만원	(352)	50.2	43.0	93.2	5.4	1.4	6.8	100.0
400만원 이상	(268)	51.1	42.2	93.2	4.8	1.9	6.8	100.0
모름/무응답	(5)	38.8	61.2	10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51.0	42.6	93.6	5.2	1.2	6.4	100.0
중부권	(118)	58.5	36.4	94.9	3.4	1.7	5.1	100.0
호남권	(119)	47.9	45.4	93.3	5.9	0.8	6.7	100.0
영남권	(324)	48.5	42.0	90.4	6.5	3.1	9.6	100.0
강원	(36)	44.4	44.4	88.9	8.3	2.8	11.1	100.0
제주	(13)	76.9	23.1	100.0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7.5	45.5	93.0	5.4	1.7	7.0	100.0
중도	(581)	52.1	40.5	92.6	5.7	1.7	7.4	100.0
보수적	(323)	51.7	41.2	92.9	5.3	1.9	7.1	100.0

표 2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전체	(1203)	43.9	44.3	88.2	10.7	1.1	11.8	100.0
■ 성별								
남자	(606)	40.9	45.8	86.8	12.1	1.2	13.2	100.0
여자	(597)	46.9	42.7	89.6	9.4	1.0	10.4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6.4	48.1	84.5	14.5	1.0	15.5	100.0
30대	(313)	45.0	44.1	89.1	10.3	0.6	10.9	100.0
40대	(305)	43.6	44.6	88.2	9.5	2.3	11.8	100.0
50대 이상	(280)	51.1	40.0	91.2	8.5	0.4	8.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49.2	39.4	88.6	11.4	0.0	11.4	100.0
고졸	(491)	46.3	41.3	87.6	10.8	1.6	12.4	100.0
대재 이상	(581)	40.6	48.0	88.6	10.6	0.9	11.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65.4	30.8	96.2	3.8	0.0	3.8	100.0
자영업	(260)	48.7	42.4	91.2	7.3	1.5	8.8	100.0
블루 칼라	(250)	37.6	50.1	87.7	10.7	1.6	12.3	100.0
화이트칼라	(228)	42.5	45.1	87.7	11.9	0.4	12.3	100.0
전업 주부	(247)	51.6	37.9	89.5	9.7	0.8	10.5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4.3	48.3	82.6	16.3	1.1	17.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3.3	41.9	85.2	13.0	1.8	14.8	100.0
200~299만원	(353)	51.7	37.8	89.5	9.6	0.8	10.5	100.0
300~399만원	(352)	41.5	46.6	88.1	11.3	0.6	11.9	100.0
400만원 이상	(268)	37.7	51.4	89.1	9.4	1.5	10.9	100.0
모름/무응답	(5)	19.4	61.2	80.5	19.5	0.0	19.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3.0	47.4	90.4	9.0	0.7	9.6	100.0
중부권	(118)	54.2	37.3	91.5	5.9	2.5	8.5	100.0
호남권	(119)	39.5	46.2	85.7	11.8	2.5	14.3	100.0
영남권	(324)	41.7	42.0	83.6	15.7	0.6	16.4	100.0
강원	(36)	50.0	36.1	86.1	11.1	2.8	13.9	100.0
제주	(13)	69.2	30.8	100.0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2.2	45.5	87.7	11.3	1.0	12.3	100.0
중도	(581)	43.9	44.5	88.4	10.6	1.0	11.6	100.0
보수적	(323)	45.5	42.7	88.3	10.5	1.2	11.7	100.0



표 20-7.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가치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전체	(1202)	67.6	27.9	95.5	3.3	1.2	4.5	100.0
■ 성별								
남자	(605)	67.8	27.1	94.8	3.8	1.3	5.2	100.0
여자	(597)	67.4	28.7	96.2	2.7	1.2	3.8	100.0
■ 연령별								
19~29세	(304)	65.2	29.8	95.0	3.3	1.7	5.0	100.0
30대	(313)	71.1	24.4	95.5	3.2	1.3	4.5	100.0
40대	(305)	67.9	27.2	95.1	3.6	1.3	4.9	100.0
50대 이상	(280)	65.9	30.6	96.5	2.8	0.7	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0.7	34.1	94.8	4.5	0.8	5.2	100.0
고졸	(491)	67.4	27.0	94.5	4.1	1.4	5.5	100.0
대재 이상	(580)	69.3	27.2	96.5	2.3	1.2	3.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6.9	19.2	96.2	3.8	0.0	3.8	100.0
자영업	(260)	71.2	25.4	96.5	1.6	1.9	3.5	100.0
블루 칼라	(249)	64.3	30.5	94.8	4.4	0.8	5.2	100.0
화이트칼라	(228)	69.4	27.6	96.9	3.1	0.0	3.1	100.0
전업 주부	(247)	66.9	30.3	97.2	1.6	1.2	2.8	100.0
학생/무직/기타	(191)	64.6	26.4	91.0	6.4	2.6	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65.3	26.7	92.0	5.3	2.7	8.0	100.0
200~299만원	(353)	73.1	23.8	96.9	2.5	0.6	3.1	100.0
300~399만원	(352)	63.3	33.3	96.6	2.6	0.9	3.4	100.0
400만원 이상	(267)	68.5	26.6	95.1	3.4	1.5	4.9	100.0
모름/무응답	(5)	38.8	61.2	10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68.0	28.2	96.3	2.7	1.0	3.7	100.0
중부권	(118)	70.3	24.6	94.9	1.7	3.4	5.1	100.0
호남권	(119)	65.5	25.2	90.8	7.6	1.7	9.2	100.0
영남권	(324)	66.0	30.6	96.6	2.8	0.6	3.4	100.0
강원	(36)	66.7	25.0	91.7	5.6	2.8	8.3	100.0
제주	(13)	84.6	7.7	92.3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9.5	25.5	95.0	4.0	1.0	5.0	100.0
중도	(580)	66.9	28.6	95.5	3.1	1.4	4.5	100.0
보수적	(323)	67.2	28.7	95.9	2.8	1.2	4.1	100.0

표 2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3)	26.9	47.4	74.3	20.6	5.1	25.6	0.1	100.0
■ 성별									
남자	(606)	23.8	45.0	68.8	23.6	7.4	31.0	0.2	100.0
여자	(597)	30.0	49.9	79.8	17.5	2.7	20.2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2.0	43.3	75.3	19.5	5.0	24.4	0.3	100.0
30대	(313)	25.0	46.9	71.9	22.0	6.1	28.1	0.0	100.0
40대	(305)	24.4	47.5	71.9	24.8	3.3	28.1	0.0	100.0
50대 이상	(280)	26.0	52.4	78.4	15.5	6.0	21.6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8.2	49.2	77.4	18.0	4.6	22.6	0.0	100.0
고졸	(491)	28.2	47.8	76.0	18.9	5.1	24.0	0.0	100.0
대재 이상	(581)	25.4	46.7	72.1	22.6	5.2	27.7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5	46.2	84.6	11.5	3.8	15.4	0.0	100.0
자영업	(260)	22.0	50.8	72.8	21.0	6.2	27.2	0.0	100.0
블루 칼라	(250)	27.3	44.5	71.8	23.1	5.2	28.2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5.9	45.2	71.1	22.8	6.1	28.9	0.0	100.0
전업 주부	(247)	31.6	51.2	82.7	15.3	2.0	17.3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6.4	44.7	71.1	22.1	6.3	28.4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30.4	43.7	74.1	19.6	6.3	25.9	0.0	100.0
200~299만원	(353)	25.9	49.1	74.9	19.7	5.4	25.1	0.0	100.0
300~399만원	(352)	24.5	51.4	75.9	19.3	4.8	24.1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28.0	43.3	71.3	24.2	4.1	28.3	0.4	100.0
모름/무응답	(5)	39.5	39.4	78.9	21.1	0.0	21.1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6.7	49.5	76.1	20.0	3.7	23.7	0.2	100.0
중부권	(118)	25.4	45.8	71.2	22.0	6.8	28.8	0.0	100.0
호남권	(119)	27.7	42.0	69.7	22.7	7.6	30.3	0.0	100.0
영남권	(324)	25.3	47.5	72.8	20.7	6.5	27.2	0.0	100.0
강원	(36)	41.7	44.4	86.1	11.1	2.8	13.9	0.0	100.0
제주	(13)	38.5	23.1	61.5	38.5	0.0	38.5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5.5	45.7	71.2	21.4	7.3	28.8	0.0	100.0
중도	(581)	26.7	50.1	76.8	20.3	2.8	23.0	0.2	100.0
보수적	(323)	28.3	44.2	72.5	20.3	7.1	27.5	0.0	100.0



표 22.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3)	43.6	40.1	83.7	9.5	4.8	14.3	2.1	100.0
■ 성별									
남자	(606)	46.5	39.5	86.0	8.7	3.5	12.2	1.8	100.0
여자	(597)	40.6	40.7	81.3	10.2	6.2	16.4	2.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2.0	37.6	79.6	10.9	6.2	17.2	3.3	100.0
30대	(313)	43.1	42.8	85.9	8.7	4.1	12.8	1.3	100.0
40대	(305)	42.6	40.9	83.5	10.9	4.0	14.9	1.6	100.0
50대 이상	(280)	46.8	39.0	85.8	7.1	5.0	12.1	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7.2	39.3	76.5	11.4	8.3	19.7	3.7	100.0
고졸	(491)	45.1	40.4	85.5	7.8	4.1	11.9	2.7	100.0
대재 이상	(581)	43.7	40.0	83.7	10.4	4.7	15.1	1.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50.0	26.9	76.9	3.8	11.5	15.4	7.7	100.0
자영업	(260)	48.2	39.5	87.7	5.4	4.3	9.7	2.7	100.0
블루 칼라	(250)	41.2	43.5	84.7	7.3	5.2	12.5	2.8	100.0
화이트칼라	(228)	47.0	40.2	87.2	9.3	1.8	11.0	1.8	100.0
전업 주부	(247)	42.0	38.7	80.7	12.9	6.0	18.9	0.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7.3	40.1	77.4	14.2	6.3	20.5	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3.9	34.7	78.6	13.0	5.4	18.4	3.1	100.0
200~299만원	(353)	42.5	40.2	82.7	8.5	6.5	15.0	2.3	100.0
300~399만원	(352)	43.8	43.9	87.7	8.3	3.7	12.0	0.3	100.0
400만원 이상	(268)	44.4	39.0	83.5	9.4	3.7	13.1	3.4	100.0
모름/무응답	(5)	38.8	61.2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2.2	44.8	86.9	8.0	2.5	10.6	2.5	100.0
충부권	(118)	57.6	27.1	84.7	8.5	4.2	12.7	2.5	100.0
호남권	(119)	44.5	37.0	81.5	9.2	7.6	16.8	1.7	100.0
영남권	(324)	40.4	37.0	77.5	13.0	8.3	21.3	1.2	100.0
강원	(36)	47.2	41.7	88.9	5.6	2.8	8.3	2.8	100.0
제주	(13)	38.5	46.2	84.6	7.7	7.7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1.1	44.3	85.5	10.8	2.7	13.5	1.0	100.0
중도	(581)	41.0	41.0	81.9	10.0	5.3	15.3	2.7	100.0
보수적	(323)	50.5	34.6	85.1	7.2	5.9	13.0	1.9	100.0

표 23.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3)	8.0	37.6	45.6	38.5	15.9	54.4	100.0
■ 성별								
남자	(606)	8.1	40.1	48.2	35.6	16.2	51.8	100.0
여자	(597)	7.8	35.2	43.0	41.3	15.7	57.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8.2	35.0	43.2	41.9	14.9	56.8	100.0
30대	(313)	8.9	34.7	43.7	40.7	15.6	56.3	100.0
40대	(305)	7.5	44.7	52.2	34.4	13.4	47.8	100.0
50대 이상	(280)	7.1	36.1	43.2	36.5	20.3	56.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9	33.9	40.8	35.6	23.6	59.2	100.0
고졸	(491)	6.1	36.9	43.0	40.8	16.2	57.0	100.0
대재 이상	(581)	9.8	39.1	48.9	37.2	14.0	51.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30.8	38.5	38.5	23.1	61.5	100.0
자영업	(260)	6.9	38.4	45.2	37.6	17.2	54.8	100.0
블루 칼라	(250)	7.2	39.4	46.6	38.6	14.8	53.4	100.0
화이트칼라	(228)	12.3	36.0	48.2	36.0	15.8	51.8	100.0
전업 주부	(247)	6.4	34.3	40.7	42.8	16.5	59.3	100.0
학생/무직/기타	(191)	7.4	41.6	48.9	36.8	14.3	5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1.2	36.2	47.4	36.2	16.5	52.6	100.0
200~299만원	(353)	6.5	36.8	43.3	40.3	16.4	56.7	100.0
300~399만원	(352)	5.6	39.3	44.9	38.9	16.2	55.1	100.0
400만원 이상	(268)	10.1	38.1	48.2	37.0	14.8	51.8	100.0
모름/무응답	(5)	20.0	19.5	39.5	60.5	0.0	6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6.9	41.4	48.3	38.9	12.8	51.7	100.0
중부권	(118)	9.3	29.7	39.0	32.2	28.8	61.0	100.0
호남권	(119)	20.2	40.3	60.5	28.6	10.9	39.5	100.0
영남권	(324)	4.0	32.4	36.4	44.8	18.8	63.6	100.0
강원	(36)	11.1	38.9	50.0	33.3	16.7	50.0	100.0
제주	(13)	23.1	38.5	61.5	23.1	15.4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2.3	46.5	58.8	30.8	10.3	41.2	100.0
중도	(581)	6.5	37.8	44.3	39.7	16.0	55.7	100.0
보수적	(323)	6.5	29.2	35.7	43.3	21.0	64.3	100.0



표 24-1. 현재 대복지원 수준의 적절성

문) ○○님은 현재의 대복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	%	%	%	%	%	%	%
■ 전체	(1203)	4.2	14.7	18.9	40.9	24.7	15.6	40.2	100.0
■ 성별									
남자	(606)	5.7	16.2	21.9	38.6	21.8	17.7	39.6	100.0
여자	(597)	2.7	13.2	15.9	43.2	27.5	13.4	40.9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6	18.2	21.8	38.9	24.4	14.9	39.3	100.0
30대	(313)	4.2	14.0	18.1	37.7	27.8	16.3	44.1	100.0
40대	(305)	7.0	15.7	22.7	40.3	22.2	14.8	37.0	100.0
50대 이상	(280)	1.8	10.6	12.4	47.2	24.1	16.3	4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3	15.1	17.4	46.2	23.5	13.0	36.5	100.0
고졸	(491)	2.7	12.8	15.5	40.8	25.0	18.7	43.7	100.0
대재 이상	(581)	5.9	16.2	22.1	39.8	24.6	13.5	38.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11.5	23.1	30.8	19.2	26.9	46.2	100.0
자영업	(260)	6.2	13.4	19.6	35.8	22.8	21.8	44.7	100.0
블루 칼라	(250)	3.2	13.9	17.1	43.2	26.5	13.2	39.7	100.0
화이트칼라	(228)	4.8	13.5	18.4	41.2	27.2	13.2	40.4	100.0
전업 주부	(247)	1.2	11.7	13.0	47.1	27.4	12.6	4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7	23.2	27.9	37.9	18.8	15.4	34.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5.4	14.2	19.7	40.6	20.9	18.8	39.8	100.0
200~299만원	(353)	2.5	14.4	16.9	43.7	23.2	16.2	39.3	100.0
300~399만원	(352)	3.7	13.9	17.6	41.1	26.7	14.5	41.2	100.0
400만원 이상	(268)	5.6	16.8	22.4	36.7	27.1	13.8	40.9	100.0
모름/무응답	(5)	20.0	0.0	20.0	59.9	20.0	0.0	2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6	14.0	17.6	41.3	26.1	15.1	41.1	100.0
충부권	(118)	5.1	16.9	22.0	33.9	24.6	19.5	44.1	100.0
호남권	(119)	15.1	28.6	43.7	34.5	16.0	5.9	21.8	100.0
영남권	(324)	0.3	9.9	10.2	47.2	24.4	18.2	42.6	100.0
강원	(36)	5.6	13.9	19.4	25.0	33.3	22.2	55.6	100.0
제주	(13)	15.4	23.1	38.5	30.8	23.1	7.7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9.5	21.0	30.5	37.9	21.6	10.1	31.7	100.0
중도	(581)	3.1	14.1	17.2	43.3	24.3	15.2	39.5	100.0
보수적	(323)	1.2	9.9	11.2	39.3	28.1	21.3	49.5	100.0

표 24-2.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문) 현대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의 세금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타	계
		%	%	%	%		
■ 전체	(484)	59.9	16.0	12.8	9.1	2.3	100.0
■ 성별							
남자	(240)	57.6	17.7	13.0	8.8	2.9	100.0
여자	(244)	62.1	14.3	12.5	9.4	1.6	100.0
■ 연령별							
19~29세	(120)	54.5	19.4	12.6	11.0	2.5	100.0
30대	(138)	62.5	15.2	11.4	9.5	1.4	100.0
40대	(113)	59.1	17.9	11.5	9.7	1.7	100.0
50대 이상	(113)	63.2	11.4	15.7	6.1	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48)	56.2	12.5	18.8	8.4	4.2	100.0
고졸	(215)	61.4	13.5	8.9	14.0	2.3	100.0
대재 이상	(221)	59.2	19.1	15.3	4.5	1.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2)	58.3	8.3	25.0	8.3	0.0	100.0
자영업	(116)	61.8	18.0	11.7	6.8	1.7	100.0
블루 칼라	(99)	57.4	17.4	12.1	10.0	3.0	100.0
화이트칼라	(92)	56.4	15.3	15.2	12.0	1.1	100.0
전업 주부	(99)	65.7	12.1	12.1	8.1	2.0	100.0
학생/무직/기타	(65)	56.7	18.4	10.9	9.4	4.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89)	56.1	10.1	18.0	12.5	3.4	100.0
200~299만원	(139)	62.5	16.7	10.0	9.3	1.4	100.0
300~399만원	(145)	62.1	18.7	8.1	9.6	1.4	100.0
400만원 이상	(110)	56.3	16.2	18.3	5.6	3.7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244)	58.5	17.3	11.8	9.5	2.9	100.0
충부권	(52)	61.5	9.6	19.2	5.8	3.8	100.0
호남권	(26)	69.2	23.1	0.0	3.8	3.8	100.0
영남권	(138)	55.8	17.4	14.5	11.6	0.7	100.0
강원	(20)	80.0	0.0	15.0	5.0	0.0	100.0
제주	(4)	100.0	0.0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95)	65.4	13.7	14.6	5.3	1.1	100.0
중도	(230)	58.0	15.9	12.5	9.2	4.4	100.0
보수적	(160)	59.3	17.4	12.0	11.3	0.0	100.0



표 25.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1)	12.8	53.5	66.3	27.0	6.5	33.5	0.2	100.0
■ 성별									
남자	(605)	15.4	51.7	67.1	25.2	7.6	32.8	0.2	100.0
여자	(596)	10.2	55.3	65.5	28.9	5.4	34.3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4)	11.2	55.7	66.9	25.8	7.3	33.1	0.0	100.0
30대	(312)	12.5	54.9	67.4	25	7.0	32.0	0.6	100.0
40대	(305)	16.4	53.2	69.6	25.8	4.6	30.4	0.0	100.0
50대 이상	(280)	11.0	50.0	60.9	32	7.1	39.1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0	47.6	53.7	37.9	8.4	46.3	0.0	100.0
고졸	(489)	11.8	49.0	60.8	30.4	8.7	39.2	0.0	100.0
대재 이상	(581)	15.2	58.6	73.8	21.8	4.1	25.9	0.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42.3	53.8	38.5	7.7	46.2	0.0	100.0
자영업	(259)	14.3	51.2	65.5	27.3	6.9	34.1	0.4	100.0
블루 칼라	(250)	13.6	52.1	65.7	26.8	7.6	34.3	0.0	100.0
화이트칼라	(227)	15.3	57.7	73.1	24.3	2.2	26.5	0.4	100.0
전업 주부	(247)	9.7	52.4	62.1	30.7	7.3	37.9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1.0	56.4	67.4	24.1	8.5	32.6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4.8	44.2	58.9	32.1	8.5	40.6	0.4	100.0
200~299만원	(353)	8.8	57.6	66.4	26.5	7.1	33.6	0.0	100.0
300~399만원	(352)	15.3	52.0	67.3	27.3	5.4	32.7	0.0	100.0
400만원 이상	(267)	13.1	58.5	71.5	22.5	5.6	28.1	0.4	100.0
모름/무응답	(5)	20.0	21.1	41.1	58.9	0.0	58.9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0.0	59.1	69.1	25.0	5.6	30.6	0.3	100.0
중부권	(118)	22.0	48.3	70.3	21.2	8.5	29.7	0.0	100.0
호남권	(119)	26.1	58.0	84.0	13.4	2.5	16.0	0.0	100.0
영남권	(324)	8.6	44.8	53.4	37.7	9.0	46.6	0.0	100.0
강원	(36)	19.4	38.9	58.3	33.3	8.3	41.7	0.0	100.0
제주	(13)	23.1	61.5	84.6	15.4	0.0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8)	21.5	56.3	77.8	18.5	3.7	22.2	0.0	100.0
중도	(580)	10.5	56.3	66.7	27.1	6.0	33.1	0.2	100.0
보수적	(323)	9.0	45.9	54.9	34.9	9.9	44.8	0.3	100.0

표 26.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
■ 전체	(1203)	2.7	29.0	31.7	52.6	15.6	68.2	0.1	100.0
■ 성별									
남자	(606)	3.9	27.5	31.4	50.4	18.2	68.6	0.0	100.0
여자	(597)	1.5	30.5	32.0	54.9	12.9	67.8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6	26.3	28.9	53.9	16.8	70.7	0.3	100.0
30대	(313)	1.3	25.9	27.2	55.6	17.2	72.8	0.0	100.0
40대	(305)	0.6	32.5	33.2	49.1	17.8	66.8	0.0	100.0
50대 이상	(280)	6.7	31.5	38.2	51.8	9.9	61.8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8	33.4	40.2	49.2	10.6	59.8	0.0	100.0
고졸	(491)	2.4	33.0	35.5	51.5	13.0	64.5	0.0	100.0
대재 이상	(581)	2.1	24.6	26.7	54.4	18.8	73.2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30.8	38.5	46.2	15.4	61.5	0.0	100.0
자영업	(260)	5.3	27.6	32.9	49.1	18.0	67.1	0.0	100.0
블루 칼라	(250)	2.0	34.9	36.9	48.3	14.8	63.1	0.0	100.0
화이트칼라	(228)	0.9	27.7	28.5	53.6	17.5	71.0	0.4	100.0
전업 주부	(247)	2.4	31.4	33.8	56.8	9.3	66.2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1	21.4	23.5	57.5	19.0	76.5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3.5	27.3	30.8	49.5	19.7	69.2	0.0	100.0
200~299만원	(353)	2.5	30.5	33.0	54.8	12.2	67.0	0.0	100.0
300~399만원	(352)	1.7	32.0	33.7	52.3	13.7	66.0	0.3	100.0
400만원 이상	(268)	3.4	24.7	28.1	52.6	19.3	71.9	0.0	100.0
모름/무응답	(5)	19.4	20.0	39.4	60.6	0.0	60.6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1	29.2	31.3	54.7	14.0	68.7	0.0	100.0
중부권	(118)	2.5	20.3	22.9	59.3	17.8	77.1	0.0	100.0
호남권	(119)	0.8	18.5	19.3	48.7	31.1	79.8	0.8	100.0
영남권	(324)	4.9	36.7	41.7	46.9	11.4	58.3	0.0	100.0
강원	(36)	0.0	25.0	25.0	58.3	16.7	75.0	0.0	100.0
제주	(13)	0.0	15.4	15.4	61.5	23.1	84.6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0	26.1	27.1	49.2	23.8	72.9	0.0	100.0
중도	(581)	1.7	30.5	32.2	54.6	13.1	67.6	0.2	100.0
보수적	(323)	6.2	29.0	35.2	52.4	12.4	64.8	0.0	100.0



표 27.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문) ○○님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	%	%	%	%	%
■ 전체	(1202)	1.0	21.2	22.2	58.6	19.2	77.8	100.0
■ 성별								
남자	(606)	1.5	22.7	24.2	53.5	22.3	75.8	100.0
여자	(596)	0.5	19.7	20.2	63.7	16.1	79.8	100.0
■ 연령별								
19~29세	(305)	0.3	17.4	17.7	60.5	21.8	82.3	100.0
30대	(312)	1.9	17.7	19.6	61.2	19.2	80.4	100.0
40대	(305)	1.4	25.0	26.3	54.9	18.7	73.7	100.0
50대 이상	(280)	0.4	25.1	25.5	57.5	17.0	74.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25.7	25.7	57.7	16.6	74.3	100.0
고졸	(490)	1.2	23.4	24.6	58.4	16.9	75.4	100.0
대재 이상	(581)	1.1	18.3	19.4	58.9	21.7	80.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26.9	30.8	61.5	7.7	69.2	100.0
자영업	(260)	1.9	21.1	23.0	54.4	22.6	77.0	100.0
블루 칼라	(250)	2.4	24.8	27.3	53.2	19.6	72.7	100.0
화이트칼라	(228)	0.0	18.4	18.4	62.8	18.8	81.6	100.0
전업 주부	(246)	0.0	23.5	23.5	65.6	10.9	76.5	100.0
학생/무직/기타	(191)	0.0	16.2	16.2	56.8	26.9	83.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4	21.4	22.8	57.1	20.1	77.2	100.0
200~299만원	(353)	0.6	22.6	23.1	60.7	16.2	76.9	100.0
300~399만원	(351)	0.6	24.7	25.3	57.6	17.1	74.7	100.0
400만원 이상	(268)	1.9	14.6	16.5	57.9	25.7	83.5	100.0
모름/무응답	(5)	0.0	20.0	20.0	80.0	0.0	8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0.9	22.1	23.0	59.1	17.9	77.0	100.0
중부권	(118)	1.7	12.7	14.4	66.1	19.5	85.6	100.0
호남권	(119)	0.0	12.6	12.6	52.9	34.5	87.4	100.0
영 권	(324)	0.6	27.5	28.1	55.6	16.4	71.9	100.0
강원	(36)	5.6	13.9	19.4	61.1	19.4	80.6	100.0
제주	(13)	7.7	0.0	7.7	84.6	7.7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0	18.7	20.7	52.2	27.1	79.3	100.0
중도	(581)	0.3	22.1	22.4	58.8	18.8	77.6	100.0
보수적	(322)	1.3	21.9	23.2	64.0	12.7	76.8	100.0

표 28.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3)	10.9	39.2	50.1	35.2	7.5	42.7	7.2	100.0
■ 성별									
남자	(606)	14.3	36.7	51	34	9.1	43.2	5.8	100.0
여자	(597)	7.5	41.7	49.2	36.4	5.9	42.3	8.5	100.0
■ 연령별									
19~29세	(305)	6.9	40.5	47.4	34.1	8.2	42.3	10.2	100.0
30대	(313)	12.1	42.1	54.2	32.1	6.4	38.4	7.4	100.0
40대	(305)	15.4	35.6	51	36.4	7.7	44.1	4.9	100.0
50대 이상	(280)	9.2	38.4	47.6	38.6	7.8	46.4	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9.8	39.4	49.2	37.1	5.3	42.5	8.4	100.0
고졸	(491)	8.5	36.7	45.2	39.8	9	48.9	5.9	100.0
대재 이상	(581)	13.2	41.2	54.5	30.9	6.7	37.6	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38.5	46.2	34.6	7.7	42.3	11.5	100.0
자영업	(260)	16.1	30.2	46.3	37.6	10.3	47.9	5.8	100.0
블루 칼라	(250)	11.1	38	49	37.7	8.9	46.6	4.4	100.0
화이트칼라	(228)	10.9	47.6	58.5	29.2	5.8	34.9	6.6	100.0
전업 주부	(247)	6.1	42.4	48.4	38.7	5.3	43.9	7.7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0.5	38.9	49.4	31.6	6.8	38.5	1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3.4	29.4	42.7	39.8	6.8	46.5	10.7	100.0
200~299만원	(353)	9.0	42.3	51.3	37.1	6.5	43.6	5.1	100.0
300~399만원	(352)	11.1	39.5	50.6	34.4	8.5	42.9	6.5	100.0
400만원 이상	(268)	11.5	42.8	54.3	30.3	8.3	38.6	7.1	100.0
모름/무응답	(5)	0.0	39.5	39.5	21.1	0	21.1	39.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8.3	38.8	47.2	37.7	9.2	46.9	5.9	100.0
중부권	(118)	16.9	43.2	60.2	29.7	6.8	36.4	3.4	100.0
호남권	(119)	24.4	52.1	76.5	17.6	1.7	19.3	4.2	100.0
영남권	(324)	6.8	33.6	40.4	39.8	7.7	47.5	12	100.0
강원	(36)	16.7	41.7	58.3	33.3	2.8	36.1	5.6	100.0
제주	(13)	38.5	30.8	69.2	23.1	0	23.1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1.1	45	66.1	24.1	5.7	29.9	4	100.0
중도	(581)	6.9	42.8	49.8	36.4	5.9	42.3	7.9	100.0
보수적	(323)	8.7	27.2	35.9	43.3	12.1	55.4	8.7	100.0



표 29-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㉞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전체	(1203)	11.5	37.1	48.6	31.0	15.6	4.8	20.4	100.0
■ 성별									
남자	(606)	14.1	33.8	47.9	31.6	14.5	6.0	20.5	100.0
여자	(597)	8.8	40.4	49.3	30.4	16.6	3.7	20.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6.6	38.0	44.5	35.3	14.9	5.3	20.2	100.0
30대	(313)	12.4	34.8	47.2	34.6	15.0	3.2	18.2	100.0
40대	(305)	13.8	40.6	54.4	26.5	13.8	5.3	19.1	100.0
50대 이상	(280)	13.2	35.0	48.2	27.3	18.8	5.7	24.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	33.2	46.2	28.0	19.7	6.1	25.8	100.0
고졸	(491)	10.6	35.7	46.2	31.2	17.3	5.3	22.6	100.0
대재 이상	(581)	11.9	39.2	51.1	31.6	13.1	4.1	17.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23.1	26.9	50.0	30.8	19.2	0.0	19.2	100.0
자영업	(260)	13	34.3	47.4	27.7	17.2	7.6	24.9	100.0
블루 칼라	(250)	8.8	34.8	43.6	35.5	15.7	5.2	20.9	100.0
화이트칼라	(228)	14.5	38.1	52.6	33.8	10.1	3.5	13.6	100.0
전업 주부	(247)	9.7	41.9	51.6	28.2	17.0	3.2	20.2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0	37.9	47.9	30.0	17.3	4.8	2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3.4	29.4	42.8	36.2	17.4	3.6	21.0	100.0
200~299만원	(353)	10.7	42.7	53.4	26.8	14.9	4.8	19.8	100.0
300~399만원	(352)	13.1	33.8	46.9	32.7	16.5	4.0	20.5	100.0
400만원 이상	(268)	8.6	40.6	49.2	30.3	13.4	7.1	20.5	100.0
모름/무응답	(5)	20	38.8	58.9	21.1	20.0	0.0	2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0.6	43.9	54.5	29.2	10.8	5.4	16.2	100.0
중부권	(118)	16.1	32.2	48.3	28.0	16.1	7.6	23.7	100.0
호남권	(119)	25.2	30.3	55.5	31.1	11.8	1.7	13.4	100.0
영권	(324)	5.6	28.1	33.6	36.4	26.2	3.7	29.9	100.0
강원	(36)	13.9	47.2	61.1	22.2	8.3	8.3	16.7	100.0
제주	(13)	23.1	30.8	53.8	30.8	15.4	0.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9.7	43.5	63.2	24.1	9.7	3.0	12.8	100.0
중도	(581)	9.1	37.3	46.3	35.7	14.9	3.1	18.0	100.0
보수적	(323)	8.1	31.0	39.1	29.1	22.2	9.6	31.8	100.0

표 29-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④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전체	(1203)	15.8	31.6	47.4	30.0	18.4	4.2	22.6	100.0
■ 성별									
남자	(606)	16.3	29.8	46.1	27.3	22.0	4.6	26.6	100.0
여자	(597)	15.4	33.4	48.8	32.7	14.8	3.7	18.5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3.6	31.7	45.3	30.3	20.5	3.9	24.4	100.0
30대	(313)	12.7	31.3	44.0	31.4	21.4	3.2	24.6	100.0
40대	(305)	17.1	31.9	49.0	26.1	18.1	6.9	24.9	100.0
50대 이상	(280)	20.3	31.6	51.9	32.2	13.4	2.5	15.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0.6	34.1	54.7	32.4	11.4	1.5	12.9	100.0
고졸	(491)	17.1	32.8	49.8	29.8	16.9	3.5	20.3	100.0
대재 이상	(581)	13.7	30.1	43.7	29.5	21.4	5.3	26.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0.8	19.2	50.0	34.6	11.5	3.8	15.4	100.0
자영업	(260)	15.3	32.7	48.0	28.3	16.9	6.9	23.8	100.0
블루 칼라	(250)	18.4	32.0	50.4	28.4	18.0	3.2	21.2	100.0
화이트칼라	(228)	12.8	32.4	45.2	29.4	20.1	5.3	25.4	100.0
전업 주부	(247)	16.6	32.3	48.8	35.8	13.8	1.6	15.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3.8	29.5	43.3	26.8	26.2	3.7	29.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7.4	27.7	45.1	35.2	16.1	3.6	19.7	100.0
200~299만원	(353)	17.3	32.5	49.7	30.8	15.2	4.2	19.5	100.0
300~399만원	(352)	13.1	34.4	47.5	26.4	21.6	4.5	26.2	100.0
00만원 이상	(268)	16.5	30.6	47.1	28.7	20.0	4.1	24.1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0.0	59.4	40.6	0.0	40.6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5.7	34.3	50.0	29.8	17.0	3.2	20.2	100.0
중부권	(118)	19.5	34.7	54.2	21.2	17.8	6.8	24.6	100.0
호남권	(119)	6.7	28.6	35.3	35.3	23.5	5.9	29.4	100.0
영남권	(324)	17.3	28.1	45.4	31.8	19.8	3.1	22.8	100.0
강원	(36)	25.0	22.2	47.2	25.0	13.9	13.9	27.8	100.0
제주	(13)	7.7	23.1	30.8	38.5	23.1	7.7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3.7	28.4	42.1	26.0	23.1	8.7	31.8	100.0
중도	(581)	15.0	31.3	46.3	32.8	18.1	2.8	20.8	100.0
보수적	(323)	19.2	35.1	54.3	28.4	14.8	2.5	17.3	100.0



표 29-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 빼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 전체	(1203)	17.2	34.1	51.4	34.2	11.9	2.2	14.1	0.3	100.0
■ 성별										
남자	(606)	19.0	32.8	51.9	31.8	13.7	2.3	16.0	0.3	100.0
여자	(597)	15.4	35.5	50.9	36.6	10.0	2.2	12.2	0.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3.5	33.0	46.5	40.9	10.3	1.3	11.6	1.0	100.0
30대	(313)	16.9	32.2	49.1	35.9	13.1	1.9	15.0	0.0	100.0
40대	(305)	20.4	31.5	51.9	32.0	13.4	2.3	15.7	0.3	100.0
50대 이상	(280)	18.1	40.4	58.6	27.3	10.6	3.5	14.1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8.3	38.7	57.0	33.2	6.8	3.0	9.8	0.0	100.0
고졸	(491)	15.7	37.7	53.4	29.8	14.0	2.6	16.6	0.2	100.0
대재 이상	(581)	18.2	30.1	48.4	38.1	11.2	1.7	13.0	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34.6	50.0	42.3	7.7	0.0	7.7	0.0	100.0
자영업	(260)	21.1	36.0	57.1	25.3	14.1	3.4	17.6	0.0	100.0
블루 칼라	(250)	17.3	33.9	51.2	32.8	14.0	2.0	16.0	0.0	100.0
화이트칼라	(228)	18.0	30.8	48.8	39.8	9.6	1.3	11.0	0.4	100.0
전업 주부	(247)	17.3	36.6	54.0	33.1	9.7	3.2	12.9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1.0	32.7	43.7	41.6	12.0	1.0	13.1	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8.4	27.2	45.6	40.5	11.2	2.7	13.9	0.0	100.0
200~299만원	(353)	16.7	39.8	56.5	27.7	14.1	1.7	15.8	0.0	100.0
300~399만원	(352)	13.4	37.4	50.8	32.5	13.9	2.6	16.4	0.3	100.0
400만원 이상	(268)	22.4	28.4	50.8	39.2	6.7	2.2	8.9	1.2	100.0
모름/무응답	(5)	0.0	20.0	20.0	59.9	20.0	0.0	2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7.4	33.5	50.9	34.3	12.6	1.7	14.3	0.5	100.0
충부권	(118)	28.0	31.4	59.3	27.1	11.0	2.5	13.6	0.0	100.0
호남권	(119)	20.2	38.7	58.8	27.7	9.2	3.4	12.6	0.8	100.0
영남권	(324)	9.9	36.7	46.6	38.9	12.3	2.2	14.5	0.0	100.0
강원	(36)	33.3	27.8	61.1	25.0	5.6	8.3	13.9	0.0	100.0
제주	(13)	23.1	0.0	23.1	61.5	15.4	0.0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9.7	30.4	50.2	35.1	11.3	3.4	14.7	0.0	100.0
중도	(581)	16.5	32.8	49.3	36.3	13.0	0.7	13.7	0.7	100.0
보수적	(323)	16.2	40.0	56.2	29.4	10.4	4.0	14.4	0.0	100.0

표 29-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 전체	(1203)	16.6	44.8	61.5	29.8	7.5	1.2	8.6	0.1	100.0
■ 성별										
남자	(606)	16.6	46.7	63.3	26.8	8.1	1.6	9.7	0.2	100.0
여자	(597)	16.7	42.9	59.6	32.9	6.9	0.7	7.5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6.5	42.3	58.8	33.2	6.9	0.7	7.6	0.3	100.0
30대	(313)	19.4	43.2	62.6	28.5	7.7	1.3	9.0	0.0	100.0
40대	(305)	16.8	47.5	64.4	26.2	7.8	1.6	9.5	0.0	100.0
50대 이상	(280)	13.5	46.4	59.9	31.6	7.4	1.1	8.5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0	40.9	53.8	39.4	6.7	0.0	6.7	0.0	100.0
고졸	(491)	15.4	44.5	59.9	31.9	6.5	1.6	8.2	0.0	100.0
대재 이상	(581)	18.5	46.0	64.5	25.9	8.4	1.0	9.5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50.0	53.8	38.5	7.7	0.0	7.7	0.0	100.0
자영업	(260)	18.7	42.2	60.9	29.6	8.4	1.1	9.5	0.0	100.0
블루 칼라	(250)	17.7	47.6	65.3	26.3	6.4	2.0	8.4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2.8	44.8	67.7	24.0	7.0	1.3	8.3	0.0	100.0
전업 주부	(247)	10.9	46.3	57.2	35.1	6.5	1.2	7.7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4.2	42.1	56.3	33.6	9.5	0.0	9.5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3.9	35.3	49.2	40.5	9.3	0.9	10.2	0.0	100.0
200~299만원	(353)	16.4	47.1	63.5	30.3	5.1	1.1	6.2	0.0	100.0
300~399만원	(352)	16.2	47.4	63.7	26.1	9.4	0.9	10.2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19.7	46.0	65.7	25.3	6.7	1.8	8.6	0.4	100.0
모름/무응답	(5)	21.1	58.9	80.0	2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8.1	47.3	65.3	26.4	6.9	1.2	8.1	0.2	100.0
충부권	(118)	25.4	52.5	78.0	12.7	7.6	1.7	9.3	0.0	100.0
호남권	(119)	15.1	38.7	53.8	39.5	5.0	1.7	6.7	0.0	100.0
영남권	(324)	10.5	41.7	52.2	37.3	9.6	0.9	10.5	0.0	100.0
강원	(36)	22.2	36.1	58.3	36.1	5.6	0.0	5.6	0.0	100.0
제주	(13)	23.1	23.1	46.2	46.2	7.7	0.0	7.7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3.3	45.9	69.2	22.8	7.0	1.0	8.0	0.0	100.0
중도	(581)	12.2	45.3	57.6	34.0	7.4	0.8	8.2	0.2	100.0
보수적	(323)	18.4	42.9	61.3	28.8	8.1	1.9	9.9	0.0	100.0



표 29-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㉓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 전체	(1203)	14.0	42.4	56.4	30.9	9.3	3.3	12.6	0.1	100.0
■ 성별										
남자	(606)	14.8	41.9	56.7	28.3	10.2	4.6	14.9	0.2	100.0
여자	(597)	13.1	42.9	56.0	33.6	8.3	2.0	10.3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4.2	43.6	57.8	31.7	7.9	2.6	10.5	0.0	100.0
30대	(313)	11.8	42.4	54.2	31.7	11.5	2.6	14.1	0.0	100.0
40대	(305)	15.6	43.3	58.8	26.5	9.2	5.5	14.7	0.0	100.0
50대 이상	(280)	14.5	40.1	54.6	34.1	8.5	2.5	10.9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9.8	33.3	43.2	44.8	9.8	1.4	11.3	0.8	100.0
고졸	(491)	13.5	42.9	56.4	31.6	8.7	3.3	12.0	0.0	100.0
대재 이상	(581)	15.3	44.0	59.3	27.3	9.7	3.8	13.4	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38.5	38.5	50.0	7.7	3.8	11.5	0.0	100.0
자영업	(260)	13.7	43.4	57.1	30.4	8.4	4.2	12.6	0.0	100.0
블루 칼라	(250)	15.3	40.8	56.1	31.1	8.8	4.0	12.7	0.0	100.0
화이트칼라	(228)	17.2	40.3	57.5	26.8	12.7	3.1	15.8	0.0	100.0
전업 주부	(247)	11.3	44.7	56.0	34.3	7.7	2.0	9.7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4.2	43.1	57.4	29.5	9.5	3.2	12.7	0.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2.5	31.7	44.2	40.2	11.2	4.0	15.1	0.4	100.0
200~299만원	(353)	14.7	47.7	62.4	29.1	6.5	2.0	8.5	0.0	100.0
300~399만원	(352)	11.3	48.3	59.7	27.5	9.7	3.1	12.8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18.0	36.6	54.6	29.5	11.1	4.8	15.9	0.0	100.0
모름/무응답	(5)	0.0	39.4	39.4	60.6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5.0	45.0	60.1	29.9	7.7	2.3	10.1	0.0	100.0
중부권	(118)	18.6	46.6	65.3	21.2	8.5	5.1	13.6	0.0	100.0
호남권	(119)	10.1	28.6	38.7	35.3	16.8	8.4	25.2	0.8	100.0
영남권	(324)	11.4	42.3	53.7	34.9	9.3	2.2	11.4	0.0	100.0
강원	(36)	19.4	41.7	61.1	25.0	8.3	5.6	13.9	0.0	100.0
제주	(13)	7.7	15.4	23.1	46.2	23.1	7.7	30.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4.6	41.5	56.2	26.5	12.0	5.3	17.4	0.0	100.0
중도	(581)	12.1	42.0	54.1	35.3	7.4	3.1	10.5	0.2	100.0
보수적	(323)	16.8	43.9	60.6	27.3	10.2	1.9	12.1	0.0	100.0

표 30-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	조금 크다 %	%	중간 %	별로 크지 않다 %	거의 없다 %	%	%
■ 전체	(1203)	57.8	30.3	88.1	10.2	1.4	0.3	1.7	100.0
■ 성별									
남자	(606)	58.7	28.0	86.7	10.8	1.8	0.7	2.5	100.0
여자	(597)	56.9	32.6	89.5	9.5	1.0	0.0	1.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9.6	33.3	82.9	15.8	1.3	0.0	1.3	100.0
30대	(313)	59.3	28.8	88.1	10.6	0.6	0.6	1.3	100.0
40대	(305)	58.0	28.9	86.9	9.9	2.9	0.3	3.2	100.0
50대 이상	(280)	64.9	30.2	95.0	3.9	0.7	0.4	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59.8	32.7	92.5	6.7	0.8	0.0	0.8	100.0
고졸	(491)	60.9	27.2	88.1	10.1	1.6	0.2	1.8	100.0
대재 이상	(581)	54.7	32.3	87.1	11.0	1.4	0.5	1.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6.9	19.2	96.2	0.0	0.0	3.8	3.8	100.0
자영업	(260)	62.7	28.4	91.1	7.8	0.7	0.4	1.1	100.0
블루 칼라	(250)	58.5	29.2	87.6	10.0	1.6	0.8	2.4	100.0
이트칼라	(228)	57.1	29.4	86.5	10.5	3.0	0.0	3.0	100.0
전업 주부	(247)	58.3	30.7	89.1	10.5	0.4	0.0	0.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7.9	36.3	84.2	14.2	1.6	0.0	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57.6	28.1	85.6	11.7	1.8	0.9	2.7	100.0
200~299만원	(353)	60.7	28.0	88.7	9.7	1.4	0.3	1.7	100.0
300~399만원	(352)	56.8	33.9	90.7	8.0	1.1	0.3	1.4	100.0
400만원 이상	(268)	55.2	30.6	85.8	12.7	1.5	0.0	1.5	100.0
모름/무응답	(5)	78.9	21.1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62.0	28.9	90.9	7.8	1.3	0.0	1.3	100.0
충부권	(118)	66.9	23.7	90.7	8.5	0.8	0.0	0.8	100.0
호남권	(119)	42.0	35.3	77.3	18.5	2.5	1.7	4.2	100.0
영남권	(324)	54.3	32.7	87.0	11.7	0.9	0.3	1.2	100.0
강원	(36)	44.4	36.1	80.6	11.1	5.6	2.8	8.3	100.0
제주	(13)	53.8	30.8	84.6	15.4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56.5	31.4	87.9	10.1	1.6	0.3	2.0	100.0
중도	(581)	56.8	29.3	86.0	12.2	1.6	0.2	1.7	100.0
보수적	(323)	60.9	31.1	91.9	6.5	0.9	0.6	1.5	100.0



표 3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④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3)	13.9	39.5	53.4	30.7	13.6	2.3	15.9	100.0
■ 성별									
남자	(606)	15.3	39.5	54.8	29.2	12.8	3.2	16.0	100.0
여자	(597)	12.4	39.5	51.9	32.3	14.5	1.3	15.8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2.2	33.3	45.5	42.5	10.6	1.3	11.9	100.0
30대	(313)	17.5	41.6	59.1	25.9	12.1	2.9	15.0	100.0
40대	(305)	15.6	39.5	55.1	29.6	13.7	1.7	15.3	100.0
50대 이상	(280)	9.6	43.9	53.6	24.5	18.7	3.2	21.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7.6	44.7	52.3	25.7	19.7	2.3	22.0	100.0
고졸	(491)	11.6	38.4	50.0	30.1	17.2	2.7	19.8	100.0
대재 이상	(581)	17.2	39.2	56.4	32.4	9.3	1.9	11.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38.5	53.8	30.8	11.5	3.8	15.4	100.0
자영업	(260)	17.2	38.8	56.0	25.7	15.7	2.7	18.4	100.0
블루 칼라	(250)	14.4	38.5	52.9	29.2	15.1	2.8	17.9	100.0
화이트칼라	(228)	16.6	43.5	60.1	26.8	10.9	2.2	13.1	100.0
전업 주부	(247)	8.9	39.8	48.7	33.6	16.4	1.2	17.7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1.6	36.8	48.3	40.5	9.0	2.1	11.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1.2	40.6	51.7	29.5	13.8	5.0	18.8	100.0
200~299만원	(353)	11.6	38.9	50.5	33.7	13.8	2.0	15.7	100.0
300~399만원	(352)	14.0	41.6	55.5	28.9	14.1	1.4	15.5	100.0
400만원 이상	(268)	18.8	36.6	55.4	30.0	13.0	1.5	14.5	100.0
모름/무응답	(5)	20.0	40.6	60.6	39.4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7.3	39.7	57.0	27.1	14.0	1.9	15.9	100.0
중부권	(118)	16.1	39.0	55.1	32.2	10.2	2.5	12.7	100.0
호남권	(119)	19.3	42.0	61.3	31.9	6.7	0.0	6.7	100.0
영남권	(324)	5.6	40.4	46.0	36.1	15.4	2.5	17.9	100.0
강원	(36)	8.3	25.0	33.3	33.3	22.2	11.1	33.3	100.0
제주	(13)	7.7	30.8	38.5	30.8	23.1	7.7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1.0	38.9	59.9	27.4	11.7	1.0	12.7	100.0
중도	(581)	12.5	39.6	52.1	33.2	13.2	1.6	14.7	100.0
보수적	(323)	9.6	40.0	49.6	29.5	16.3	4.7	21.0	100.0

표 30-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3)	18.3	43.0	61.3	28.9	7.8	2.0	9.8	100.0
■ 성별									
남자	(606)	18.8	42.9	61.7	27.1	8.3	3.0	11.2	100.0
여자	(597)	17.8	43.1	60.9	30.7	7.3	1.0	8.3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9.8	40.9	60.7	34.6	3.6	1.0	4.6	100.0
30대	(313)	18.4	46.8	65.1	24.3	8.0	2.6	10.6	100.0
40대	(305)	19.9	43.3	63.2	27.4	7.8	1.6	9.4	100.0
50대 이상	(280)	14.9	40.8	55.7	29.4	12.1	2.8	14.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5	37.1	51.6	32.6	13.6	2.2	15.8	100.0
고졸	(491)	16.5	43.6	60.1	28.7	8.4	2.8	11.2	100.0
대재 이상	(581)	20.8	43.8	64.6	28.2	6.0	1.2	7.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26.9	46.2	34.6	11.5	7.7	19.2	100.0
자영업	(260)	17.6	43.6	61.2	25.8	10.0	3.1	13.0	100.0
블루 칼라	(250)	16.4	46.4	62.7	26.9	8.0	2.4	10.4	100.0
화이트칼라	(228)	22.3	42.3	64.5	28.9	4.8	1.8	6.5	100.0
전업 주부	(247)	16.1	43.6	59.7	30.6	9.3	0.4	9.7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0.0	40.0	60.0	32.6	5.8	1.6	7.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4.4	34.3	48.7	35.7	11.6	4.0	15.6	100.0
200~299만원	(353)	16.4	44.0	60.4	30.3	7.4	2.0	9.3	100.0
300~399만원	(352)	18.8	46.8	65.6	25.3	7.7	1.4	9.1	100.0
400만원 이상	(268)	24.0	43.9	67.9	26.1	4.9	1.1	6.0	100.0
모름/무응답	(5)	0.0	40.6	40.6	20.0	39.4	0.0	39.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9.7	47.1	66.7	26.6	5.7	1.0	6.7	100.0
중부권	(118)	19.5	34.7	54.2	35.6	8.5	1.7	10.2	100.0
호남권	(119)	29.4	40.3	69.7	23.5	3.4	3.4	6.7	100.0
영남권	(324)	12.0	40.7	52.8	31.8	12.7	2.8	15.4	100.0
강원	(36)	11.1	27.8	38.9	41.7	11.1	8.3	19.4	100.0
제주	(13)	23.1	53.8	76.9	15.4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6.7	43.1	69.8	24.5	5.0	0.7	5.7	100.0
중도	(581)	16.2	43.2	59.4	31.7	7.0	1.9	8.9	100.0
보수적	(323)	14.5	42.5	57.0	27.9	11.7	3.4	15.1	100.0



표 30-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3)	13.0	34.3	47.4	40.7	10.1	1.8	12.0	100.0
■ 성별									
남자	(606)	13.1	33.9	47.0	40.6	9.8	2.6	12.4	100.0
여자	(597)	13.0	34.8	47.8	40.7	10.5	1.0	11.5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4.2	27.5	41.7	47.1	9.5	1.6	11.2	100.0
30대	(313)	11.5	38.7	50.2	39.3	8.0	2.6	10.6	100.0
40대	(305)	14.5	40.2	54.6	33.9	9.8	1.6	11.5	100.0
50대 이상	(280)	12.1	30.6	42.6	42.5	13.5	1.4	14.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2.9	28.1	41.1	40.1	16.6	2.2	18.8	100.0
고졸	(491)	12.0	36.0	48.0	39.8	10.0	2.2	12.3	100.0
대재 이상	(581)	14.0	34.4	48.3	41.5	8.8	1.4	1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11.5	26.9	50.0	15.4	7.7	23.1	100.0
자영업	(260)	10.4	39.9	50.3	35.9	11.9	1.9	13.8	100.0
블루칼라	(250)	14.8	32.0	46.8	37.1	12.8	3.2	16.0	100.0
화이트칼라	(228)	17.5	30.7	48.1	45.3	4.8	1.8	6.6	100.0
전업주부	(247)	9.3	40.0	49.2	40.4	9.6	0.8	10.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3.7	30.1	43.7	45.2	10.5	0.5	1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7.4	26.0	43.4	40.1	14.7	1.8	16.5	100.0
200~299만원	(353)	10.8	35.6	46.4	42.3	9.3	2.0	11.3	100.0
300~399만원	(352)	12.2	38.6	50.8	38.4	9.1	1.7	10.8	100.0
400만원 이상	(268)	13.3	33.6	46.9	42.3	8.9	1.9	10.8	100.0
모름/무응답	(5)	20.0	59.9	80.0	2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2.6	38.5	51.1	41.0	7.2	0.7	7.9	100.0
중부권	(118)	11.0	34.7	45.8	43.2	9.3	1.7	11.0	100.0
호남권	(119)	19.3	33.6	52.9	33.6	10.9	2.5	13.4	100.0
영남권	(324)	13.3	28.4	41.7	40.1	14.5	3.7	18.2	100.0
강원	(36)	5.6	22.2	27.8	50.0	19.4	2.8	22.2	100.0
제주	(13)	7.7	30.8	38.5	53.8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4.1	36.8	50.9	40.1	8.0	1.0	9.0	100.0
중도	(581)	12.2	32.5	44.7	44.6	8.8	1.9	10.6	100.0
보수적	(323)	13.6	35.3	48.9	34.0	14.6	2.5	17.1	100.0

표 30-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㉞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3)	8.8	29.6	38.4	45.4	13.1	3.1	16.2	100.0
■ 성별									
남자	(606)	9.6	27.9	37.5	44.3	13.9	4.3	18.2	100.0
여자	(597)	8.0	31.2	39.3	46.6	12.4	1.8	14.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9.5	24.7	34.3	49.6	13.2	3.0	16.1	100.0
30대	(313)	9.2	34.2	43.5	42.1	11.2	3.2	14.4	100.0
40대	(305)	10.9	33.3	44.2	41.7	11.8	2.3	14.1	100.0
50대 이상	(280)	5.3	25.6	30.8	48.6	16.7	3.9	20.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9	20.5	27.3	53.0	15.9	3.7	19.6	100.0
고졸	(491)	8.3	30.1	38.4	44.5	14.1	3.0	17.1	100.0
대재 이상	(581)	9.6	31.2	40.9	44.5	11.7	2.9	14.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23.1	30.8	42.3	19.2	7.7	26.9	100.0
자영업	(260)	8.4	30.7	39.1	42.9	15.4	2.7	18.0	100.0
블루 칼라	(250)	8.4	29.2	37.6	44.4	14.0	4.0	18.0	100.0
화이트칼라	(228)	12.3	29.3	41.6	45.3	9.6	3.5	13.1	100.0
전업 주부	(247)	5.7	31.5	37.1	49.2	12.1	1.6	13.6	100.0
학생/무직/기타	(191)	9.9	27.3	37.3	45.9	13.7	3.2	16.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9.0	25.9	34.9	47.3	13.8	4.0	17.8	100.0
200~299만원	(353)	7.9	29.9	37.8	47.8	11.6	2.8	14.4	100.0
300~399만원	(352)	9.1	30.4	39.5	44.9	13.6	2.0	15.6	100.0
400만원 이상	(268)	9.6	30.9	40.5	41.6	13.8	4.1	17.9	100.0
모름/무응답	(5)	0.0	38.8	38.8	41.1	20.0	0.0	2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9.3	32.2	41.4	46.0	10.6	2.0	12.6	100.0
중부권	(118)	11.9	33.9	45.8	40.7	11.9	1.7	13.6	100.0
호남권	(119)	13.4	32.8	46.2	39.5	10.1	4.2	14.3	100.0
영남권	(324)	5.9	22.5	28.4	48.8	17.9	4.9	22.8	100.0
강원	(36)	0.0	22.2	22.2	44.4	27.8	5.6	33.3	100.0
제주	(13)	15.4	38.5	53.8	38.5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1.0	32.7	43.7	42.5	12.4	1.3	13.8	100.0
중도	(581)	7.6	30.1	37.7	47.2	11.0	4.1	15.1	100.0
보수적	(323)	9	25.8	34.7	44.9	17.6	2.8	20.4	100.0



표 3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2)	3.1	33.2	36.3	55.3	8.0	63.2	0.5	100.0
■ 성별									
남자	(606)	4.3	33.9	38.2	53.7	7.1	60.8	1.0	100.0
여자	(596)	1.8	32.4	34.3	56.9	8.8	65.7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3	32.3	34.6	57.4	7.0	64.4	1.0	100.0
30대	(312)	3.2	29.5	32.7	55.5	11.5	67.0	0.3	100.0
40대	(305)	3.3	35.6	38.8	55.3	5.8	61.2	0.0	100.0
50대 이상	(280)	3.5	35.7	39.2	52.6	7.5	60.1	0.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	33.8	35.4	57.8	6.9	64.6	0.0	100.0
고졸	(490)	4.1	31.8	35.9	54.2	9.6	63.7	0.4	100.0
대재 이상	(581)	2.6	34.2	36.8	55.6	6.8	62.5	0.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26.9	30.8	65.4	3.8	69.2	0.0	100.0
자영업	(259)	1.5	33.9	35.4	54.2	9.6	63.8	0.8	100.0
블루 칼라	(250)	5.2	34.0	39.2	52.4	8.0	60.4	0.4	100.0
화이트칼라	(228)	3.0	35.1	38.1	54.0	7.9	61.9	0.0	100.0
전업 주부	(247)	1.6	31.1	32.7	58.5	8.8	67.3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2	32.6	36.8	56.3	5.3	61.5	1.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5.8	35.6	41.4	52.8	5.8	58.6	0.0	100.0
200~299만원	(353)	2.6	33	35.6	55.9	7.6	63.6	0.9	100.0
300~399만원	(352)	2.2	33.9	36.1	56.8	7.1	63.9	0.0	100.0
400만원 이상	(267)	2.6	30.7	33.3	54.0	11.5	65.5	1.2	100.0
모름/무응답	(5)	0.0	20.0	20.0	80.0	0.0	8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2.9	32.6	35.5	55.6	7.9	63.5	1.0	100.0
충부권	(118)	1.7	42.4	44.1	49.2	6.8	55.9	0.0	100.0
호남권	(119)	7.6	34.5	42.0	43.7	14.3	58.0	0.0	100.0
영남권	(324)	1.9	30.9	32.7	60.5	6.8	67.3	0.0	100.0
강원	(36)	0.0	36.1	36.1	58.3	5.6	63.9	0.0	100.0
제주	(13)	23.1	15.4	38.5	61.5	0.0	61.5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8)	5.7	37.7	43.3	51.3	5.3	56.7	0.0	100.0
중도	(581)	2.6	34.2	36.8	54.3	8.2	62.5	0.7	100.0
보수적	(323)	1.5	27.3	28.8	60.7	9.9	70.5	0.6	100.0

표 32-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전체	(1203)	2.4	12.4	14.8	40.1	35.6	9.5	45.1	100.0
■ 성별									
남자	(606)	3.2	10.8	14.0	38.8	35.7	11.6	47.3	100.0
여자	(597)	1.7	14.0	15.7	41.4	35.6	7.3	42.9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7	9.3	12.9	42.2	33.2	11.6	44.8	100.0
30대	(313)	2.9	11.2	14.1	42.8	36.4	6.7	43.1	100.0
40대	(305)	0.7	14.1	14.8	38.0	35.4	11.8	47.2	100.0
50대 이상	(280)	2.5	15.3	17.8	36.9	37.6	7.8	45.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8	19.7	23.5	36.3	30.3	9.8	40.1	100.0
고졸	(491)	2.9	13.3	16.1	40.9	35.7	7.3	43.0	100.0
대재 이상	(581)	1.7	10.0	11.7	40.2	36.8	11.3	48.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23.1	30.8	34.6	19.2	15.4	34.6	100.0
자 영 업	(260)	1.9	14.9	16.8	42.6	32.2	8.4	40.6	100.0
블루 칼라	(250)	4.0	10.5	14.5	39.6	36.7	9.2	45.9	100.0
화이트칼라	(228)	2.7	11.5	14.2	37.6	38.1	10.1	48.2	100.0
전업 주부	(247)	1.2	14.9	16.1	41.9	37.5	4.4	41.9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6	7.9	9.5	38.5	35.6	16.4	52.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2	12.5	14.7	42.1	33.0	10.2	43.2	100.0
200~299만원	(353)	2.6	12.5	15.1	36.1	38.0	10.8	48.8	100.0
300~399만원	(352)	2.0	11.7	13.6	39.8	38.3	8.3	46.6	100.0
400만원 이상	(268)	3.0	13.0	16.0	43.7	31.3	9.0	40.3	100.0
모름/무응답	(5)	0.0	19.5	19.5	60.5	20.0	0.0	2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4	13.5	15.9	38.6	36.0	9.5	45.5	100.0
중부권	(118)	1.7	13.6	15.3	40.7	28.8	15.3	44.1	100.0
호남권	(119)	3.4	6.7	10.1	45.4	34.5	10.1	44.5	100.0
영남권	(324)	2.5	11.4	13.9	41.0	37.0	8.0	45.1	100.0
강원	(36)	2.8	13.9	16.7	38.9	41.7	2.8	44.4	100.0
제주	(13)	0.0	23.1	23.1	30.8	38.5	7.7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0	10.4	12.4	40.2	35.7	11.7	47.4	100.0
중도	(581)	2.4	11.0	13.5	39.9	37.8	8.8	46.6	100.0
보수적	(323)	2.8	16.7	19.5	40.3	31.6	8.6	40.2	100.0



표 32-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
■ 전체	(1202)	2.8	13.5	16.3	40.0	33.1	10.5	43.6	0.1	100.0
■ 성별										
남자	(605)	3.5	11.3	14.8	38.3	34.4	12.4	46.9	0.0	100.0
여자	(597)	2.2	15.7	17.8	41.8	31.8	8.5	40.2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3	11.9	16.2	40.6	30.6	12.2	42.9	0.3	100.0
30대	(313)	2.5	11.5	14.1	42.8	33.6	9.5	43.1	0.0	100.0
40대	(305)	1.0	13.8	14.8	38.0	35.8	11.4	47.2	0.0	100.0
50대 이상	(279)	3.6	17.1	20.6	38.5	32.3	8.5	40.9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4.6	21.4	26.0	40.5	23.7	9.9	33.6	0.0	100.0
고졸	(491)	3.5	15.1	18.6	40.7	32.8	7.9	40.7	0.0	100.0
대재 이상	(581)	1.9	10.3	12.3	39.3	35.5	12.8	48.3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23.1	30.8	38.5	15.4	15.4	30.8	0.0	100.0
자영업	(259)	3.9	13.8	17.6	41.9	32.8	7.7	40.5	0.0	100.0
블루 칼라	(250)	4.4	13.6	18.0	36.9	32.7	12.4	45.1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2	11.0	13.3	38.1	37.7	11.0	48.6	0.0	100.0
전업 주부	(247)	1.2	16.5	17.7	44.8	31.9	5.6	37.5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6	10.5	12.1	37.9	32.5	16.9	49.4	0.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3)	1.8	13.8	15.6	43.2	28.7	12.5	41.2	0.0	100.0
200~299만원	(353)	3.4	14.8	18.2	37.2	34.2	10.5	44.7	0.0	100.0
300~399만원	(352)	2.5	12.2	14.8	39.5	36.3	9.4	45.7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3.4	13.4	16.8	41.1	31.4	10.4	41.8	0.4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0.0	80.0	20.0	0.0	2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1	13.8	16.9	39.3	33.7	9.9	43.6	0.2	100.0
중부권	(118)	1.7	15.3	16.9	38.1	28.8	16.1	44.9	0.0	100.0
호남권	(119)	2.5	10.1	12.6	45.4	28.6	13.4	42.0	0.0	100.0
영남권	(323)	3.1	13.9	17.0	40.9	33.7	8.4	42.1	0.0	100.0
강원	(36)	2.8	5.6	8.3	44.4	41.7	5.6	47.2	0.0	100.0
제주	(13)	0.0	23.1	23.1	7.7	46.2	23.1	69.2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7	13.4	15.1	37.8	34.4	12.7	47.1	0.0	100.0
중도	(580)	2.9	12.6	15.5	40.3	34.5	9.7	44.2	0.0	100.0
보수적	(323)	3.7	15.1	18.8	41.5	29.4	9.9	39.3	0.3	100.0

표 32-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 전체	(1202)	11.1	27.3	38.4	36.3	18.7	6.4	25.2	0.1	100.0
■ 성별										
남자	(605)	10.0	25.0	35.0	37.1	19.3	8.6	27.9	0.0	100.0
여자	(597)	12.3	29.6	41.9	35.6	18.2	4.2	22.4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3.2	22.8	36.0	40.6	15.8	7.3	23.1	0.3	100.0
30대	(313)	8.6	28.8	37.4	37.3	19.8	5.4	25.3	0.0	100.0
40대	(305)	8.9	25.8	34.7	34.7	23.0	7.5	30.6	0.0	100.0
50대 이상	(279)	14.2	32.1	46.3	32.3	16.0	5.4	21.4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16.7	31.4	48.1	31.3	14.4	6.1	20.6	0.0	100.0
고졸	(491)	11.4	28.9	40.3	36.6	17.9	5.3	23.1	0.0	100.0
대재 이상	(581)	9.7	25.0	34.7	37.2	20.4	7.5	27.9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34.6	50.0	26.9	11.5	11.5	23.1	0.0	100.0
자영업	(260)	12.7	32.9	45.5	33.3	18.1	3.1	21.2	0.0	100.0
루 칼라	(250)	11.6	24.1	35.7	38.4	17.1	8.8	25.9	0.0	100.0
화이트칼라	(228)	10.1	23.7	33.8	40.7	19.8	5.7	25.5	0.0	100.0
전업 주부	(247)	10.0	31.9	41.9	33.0	21.0	4.0	25.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0.6	21.2	31.8	38.1	18.4	11.2	29.6	0.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3)	8.4	24.2	32.7	37.7	21.6	8.1	29.6	0.0	100.0
200~299만원	(353)	10.8	26.9	37.7	37.5	18.1	6.8	24.9	0.0	100.0
300~399만원	(352)	9.6	28.9	38.6	37.6	18.7	5.1	23.8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16.0	28.7	44.7	31.6	16.9	6.4	23.3	0.4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0.0	60.6	39.4	0.0	39.4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1.8	28.7	40.5	34.5	19.8	5.1	24.8	0.2	100.0
충부권	(118)	5.9	25.4	31.4	44.1	16.1	8.5	24.6	0.0	100.0
호남권	(119)	13.4	26.9	40.3	28.6	19.3	11.8	31.1	0.0	100.0
영남권	(323)	11.1	26.0	37.2	39.3	17.0	6.5	23.5	0.0	100.0
강원	(36)	13.9	25.0	38.9	38.9	19.4	2.8	22.2	0.0	100.0
제주	(13)	0.0	23.1	23.1	38.5	30.8	7.7	38.5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9.7	22.4	32.1	38.5	23.4	6.0	29.4	0.0	100.0
중도	(581)	9.7	28.2	37.9	37.6	18.1	6.4	24.5	0.0	100.0
보수적	(322)	15.2	30.2	45.3	32.0	15.5	6.8	22.3	0.3	100.0



표 32-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
■ 전체	(1202)	20.4	28.1	48.5	28.9	16.5	6.1	22.6	0.1	100.0
■ 성별										
남자	(605)	16.4	24.6	41.0	30.2	20.1	8.6	28.7	0.1	100.0
여자	(597)	24.5	31.7	56.1	27.5	12.9	3.5	16.4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2.4	30.1	52.5	27.1	14.8	5.6	20.5	0.0	100.0
30대	(313)	19.7	31.4	51.1	29.1	14.1	5.7	19.8	0.0	100.0
40대	(305)	16.3	23.9	40.2	30.8	19.4	9.5	28.9	0.0	100.0
50대 이상	(279)	23.4	26.8	50.2	28.4	17.8	3.2	21.0	0.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23.6	26.1	49.7	28.9	16.7	4.6	21.3	0.0	100.0
고졸	(491)	19.3	28.7	48.0	31.9	15.1	4.9	19.9	0.2	100.0
대재 이상	(581)	20.6	28.0	48.6	26.3	17.6	7.4	25.1	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38.5	57.7	19.2	15.4	7.7	23.1	0.0	100.0
자영업	(260)	24.3	26.1	50.5	26.1	17.3	5.7	23.0	0.3	100.0
블루 칼라	(250)	20.8	22.0	42.9	32.7	16.4	8.0	24.4	0.0	100.0
화이트칼라	(228)	19.4	28.5	47.9	27.1	19.7	5.3	25.0	0.0	100.0
전업 주부	(247)	18.9	33.6	52.4	29.4	14.9	3.2	18.1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7.9	29.7	47.6	30.1	13.8	8.5	22.3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3)	13.9	26.9	40.8	31.8	21.5	5.8	27.4	0.0	100.0
200~299만원	(353)	17.5	31.5	48.9	28.4	15.0	7.6	22.6	0.0	100.0
300~399만원	(352)	21.0	27.6	48.5	29.3	17.0	5.1	22.2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29.3	25.5	54.8	26.1	13.1	5.6	18.7	0.3	100.0
모름/무응답	(5)	0.0	19.5	19.5	41.1	39.4	0.0	39.4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1.6	29.1	50.8	29.2	15.4	4.6	19.9	0.1	100.0
중부권	(118)	22.9	21.2	44.1	29.7	14.4	11.9	26.3	0.0	100.0
호남권	(119)	17.6	26.1	43.7	27.7	18.5	10.1	28.6	0.0	100.0
영남권	(323)	18.6	30.3	48.9	28.8	16.7	5.6	22.3	0.0	100.0
강원	(36)	22.2	22.2	44.4	27.8	25.0	2.8	27.8	0.0	100.0
제주	(13)	7.7	23.1	30.8	23.1	38.5	7.7	46.2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8.3	24.9	43.1	34.5	16.4	6.0	22.4	0.0	100.0
중도	(581)	18.2	29.5	47.7	29.2	16.9	6.2	23.1	0.0	100.0
보수적	(322)	26.3	28.6	54.9	23.0	15.9	5.9	21.8	0.3	100.0

표 33.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계
		%	%	%	%
■ 전체	(1203)	46.6	43.1	10.3	100.0
■ 성별					
남자	(606)	48.2	42.7	9.1	100.0
여자	(597)	44.9	43.6	11.5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3.9	47.2	8.9	100.0
30대	(313)	42.4	47.6	9.9	100.0
40대	(305)	55.2	35.7	9.2	100.0
50대 이상	(280)	44.7	41.8	1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7.0	44.8	18.1	100.0
고졸	(491)	44.5	43.1	12.4	100.0
대재 이상	(581)	50.5	42.8	6.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0.8	50.0	19.2	100.0
자영업	(260)	48.7	40.2	11.1	100.0
블루 칼라	(250)	44.4	45.2	10.4	100.0
화이트칼라	(228)	51.3	43.8	4.9	100.0
전업 주부	(247)	42.4	43.2	14.5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8.4	42.6	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4.3	42.4	13.3	100.0
200~299만원	(353)	43.2	46.0	10.7	100.0
300~399만원	(352)	46.6	44.9	8.5	100.0
400만원 이상	(268)	52.2	38.1	9.8	100.0
모름/무응답	(5)	80.5	19.5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7.6	44.3	8.1	100.0
중부권	(118)	43.2	47.5	9.3	100.0
호남권	(119)	47.1	44.5	8.4	100.0
영남권	(324)	43.8	39.5	16.7	100.0
강원	(36)	55.6	41.7	2.8	100.0
제주	(13)	69.2	30.8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51.5	42.1	6.4	100.0
중도	(581)	46.8	42.9	10.3	100.0
보수적	(323)	41.5	44.5	14.0	100.0



표 34-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3)	5.4	49.4	54.8	41.2	4.0	45.2	100.0
■ 성별								
남자	(606)	6.7	48.4	55.0	40.6	4.3	45.0	100.0
여자	(597)	4.2	50.4	54.6	41.7	3.7	45.4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3	53.1	57.4	36.0	6.6	42.6	100.0
30대	(313)	6.1	46.9	53.0	45.1	1.9	47.0	100.0
40대	(305)	7.3	53.2	60.4	36.0	3.6	39.6	100.0
50대 이상	(280)	3.9	43.9	47.8	48.2	3.9	52.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3	40.8	43.1	51.5	5.3	56.9	100.0
고졸	(491)	4.5	49.0	53.5	41.4	5.1	46.5	100.0
대재 이상	(581)	6.9	51.6	58.6	38.6	2.8	41.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46.2	50.0	42.3	7.7	50.0	100.0
자영업	(260)	6.2	45.6	51.8	44.0	4.2	48.2	100.0
블루 칼라	(250)	7.3	48.0	55.3	37.9	6.8	44.7	100.0
화이트칼라	(228)	5.3	54.7	60.0	37.4	2.6	40.0	100.0
전업 주부	(247)	3.2	46.8	50.1	47.9	2.0	49.9	100.0
학생/무직/기타	(191)	5.3	53.6	58.9	37.4	3.7	4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5	53.5	58.0	36.2	5.8	42.0	100.0
200~299만원	(353)	7.1	46.4	53.5	42.6	4.0	46.5	100.0
300~399만원	(352)	5.7	49.2	54.9	41.4	3.7	45.1	100.0
400만원 이상	(268)	3.8	50.3	54.1	42.9	3.0	45.9	100.0
모름/무응답	(5)	0.0	40.1	40.1	59.9	0.0	59.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9	49.1	54.0	44.3	1.7	46.0	100.0
충부권	(118)	6.8	58.5	65.3	30.5	4.2	34.7	100.0
호남권	(119)	7.6	46.2	53.8	42.0	4.2	46.2	100.0
영남권	(324)	4.9	44.4	49.4	43.2	7.4	50.6	100.0
강원	(36)	2.8	72.2	75.0	13.9	11.1	25.0	100.0
제주	(13)	15.4	69.2	84.6	15.4	0.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7.7	56.2	63.9	34.8	1.3	36.1	100.0
중도	(581)	4.3	48.4	52.7	42.1	5.2	47.3	100.0
보수적	(323)	5.3	44.9	50.2	45.5	4.4	49.8	100.0

표 34-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㉞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전체	(1203)	9.4	44.0	53.3	40.7	5.9	46.7	100.0
■ 성별								
남자	(606)	10.2	45.8	56.0	38.0	6.0	44.0	100.0
여자	(597)	8.5	42.1	50.6	43.6	5.8	49.4	100.0
■ 연령별								
19~29세	(305)	7.6	48.4	56.0	36.1	7.9	44.0	100.0
30대	(313)	9.5	43.3	52.8	41.8	5.4	47.2	100.0
40대	(305)	10.1	45.8	55.9	39.8	4.3	44.1	100.0
50대 이상	(280)	10.3	38.0	48.3	45.7	6.0	51.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8	37.0	40.8	49.3	9.8	59.2	100.0
고졸	(491)	9.7	36.3	46.0	47.1	6.9	54.0	100.0
대재 이상	(581)	10.3	52.0	62.4	33.5	4.2	37.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30.8	42.3	34.6	23.1	57.7	100.0
자영업	(260)	13.3	37.1	50.4	43.0	6.6	49.6	100.0
블루 칼라	(250)	6.4	40.5	46.8	48.0	5.2	53.2	100.0
화이트칼라	(228)	8.3	57.4	65.7	31.2	3.1	34.3	100.0
전업 주부	(247)	7.7	38.8	46.5	47.1	6.4	53.5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1.1	50.4	61.5	32.1	6.3	38.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0.3	39.7	49.9	42.5	7.5	50.1	100.0
200~299만원	(353)	10.7	38.9	49.6	43.3	7.1	50.4	100.0
300~399만원	(352)	7.1	48.1	55.2	39.4	5.4	44.8	100.0
400만원 이상	(268)	9.9	48.3	58.2	38.0	3.8	41.8	100.0
모름/무응답	(5)	0.0	78.9	78.9	21.1	0.0	21.1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1.6	44.2	55.8	41.3	2.9	44.2	100.0
충부권	(118)	6.8	50.0	56.8	29.7	13.6	43.2	100.0
호남권	(119)	11.8	46.2	58.0	37.8	4.2	42.0	100.0
영남권	(324)	3.4	39.5	42.9	48.1	9.0	57.1	100.0
강원	(36)	16.7	50.0	66.7	22.2	11.1	33.3	100.0
제주	(13)	38.5	53.8	92.3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7.6	44.3	61.9	34.7	3.4	38.1	100.0
중도	(581)	7.2	45.1	52.3	41.1	6.6	47.7	100.0
보수적	(323)	5.6	41.6	47.2	45.7	7.1	52.8	100.0



표 34-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3)	1.9	21.8	23.7	58.0	18.3	76.3	100.0
■ 성별								
남자	(606)	2.2	20.4	22.5	59.7	17.7	77.5	100.0
여자	(597)	1.6	23.3	24.9	56.2	18.9	75.1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0	21.2	24.1	56.1	19.8	75.9	100.0
30대	(313)	0.9	21.1	22.1	59.8	18.1	77.9	100.0
40대	(305)	2.3	21.2	23.5	58.4	18.0	76.5	100.0
50대 이상	(280)	1.4	23.8	25.2	57.7	17.1	74.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	24.4	25.8	60.5	13.7	74.2	100.0
고졸	(491)	2.3	23.6	25.9	55.9	18.3	74.1	100.0
대재 이상	(581)	1.7	19.7	21.4	59.3	19.4	78.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26.9	26.9	69.2	3.8	73.1	100.0
자영업	(260)	1.9	20.3	22.2	59.4	18.3	77.8	100.0
블루 칼라	(250)	2.0	24.1	26.1	57.6	16.4	73.9	100.0
화이트칼라	(228)	1.3	16.2	17.5	60.5	22.0	82.5	100.0
전업 주부	(247)	1.6	25.8	27.4	54.0	18.6	72.6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2	21.6	24.8	57.3	18.0	75.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0.9	26.4	27.3	54.9	17.9	72.7	100.0
200~299만원	(353)	3.1	19.5	22.6	59.3	18.1	77.4	100.0
300~399만원	(352)	1.7	20.2	21.9	61.7	16.5	78.1	100.0
400만원 이상	(268)	1.5	23.5	25	53.3	21.7	75.0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0.0	100.0	0.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2	19.9	22.1	58.1	19.7	77.9	100.0
충부권	(118)	0.8	14.4	15.3	60.2	24.6	84.7	100.0
호남권	(119)	0.8	20.2	21.0	60.5	18.5	79.0	100.0
영남권	(324)	2.2	27.2	29.3	56.8	13.9	70.7	100.0
강원	(36)	2.8	33.3	36.1	47.2	16.7	63.9	100.0
제주	(13)	0.0	23.1	23.1	69.2	7.7	76.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0	21.4	23.5	59.1	17.4	76.5	100.0
중도	(581)	1.0	23.6	24.6	56.4	18.9	75.4	100.0
보수적	(323)	3.4	18.8	22.2	59.8	18.0	77.8	100.0

표 34-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3)	14.0	54.5	68.4	28.0	3.6	31.6	100.0
■ 성별								
남자	(606)	15.7	53.3	69.0	26.7	4.3	31.0	100.0
여자	(597)	12.2	55.6	67.8	29.4	2.8	32.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2.8	51.8	64.6	29.4	6.0	35.4	100.0
30대	(313)	14.4	51.8	66.2	30.6	3.2	33.8	100.0
40대	(305)	14.4	54.8	69.1	28.6	2.3	30.9	100.0
50대 이상	(280)	14.2	60.0	74.2	23.0	2.8	25.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5.2	57.0	72.2	25.6	2.2	27.8	100.0
고졸	(491)	14.2	54.7	69.0	27.4	3.6	31.0	100.0
대재 이상	(581)	13.4	53.6	67.1	29.1	3.8	32.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73.1	88.5	11.5	0.0	11.5	100.0
자영업	(260)	14.9	55.9	70.8	24.9	4.2	29.2	100.0
블루 칼라	(250)	14.8	54.9	69.8	27.1	3.2	30.2	100.0
화이트칼라	(228)	13.2	54.7	67.9	28.6	3.5	32.1	100.0
전업 주부	(247)	12.9	55.7	68.6	29.9	1.5	31.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3.7	47.3	61.0	32.6	6.4	3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7.0	52.8	69.8	26.3	4.0	30.2	100.0
200~299만원	(353)	16.4	50.5	66.9	29.7	3.4	33.1	100.0
300~399만원	(352)	11.4	57.7	69.1	27.8	3.1	30.9	100.0
400만원 이상	(268)	11.9	56.7	68.6	27.3	4.1	31.4	100.0
모름/무응답	(5)	0.0	59.5	59.5	40.5	0.0	4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2.1	53.6	65.8	30.5	3.7	34.2	100.0
충부권	(118)	18.6	58.5	77.1	18.6	4.2	22.9	100.0
호남권	(119)	18.5	53.8	72.3	24.4	3.4	27.7	100.0
영남권	(324)	13.3	56.2	69.4	27.5	3.1	30.6	100.0
강원	(36)	16.7	55.6	72.2	22.2	5.6	27.8	100.0
제주	(13)	23.1	15.4	38.5	61.5	0.0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3.7	53.2	66.9	30.1	3.0	33.1	100.0
중도	(581)	12.9	55.4	68.3	28.4	3.3	31.7	100.0
보수적	(323)	16.1	53.9	70.0	25.3	4.6	30.0	100.0



표 35.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없다	계
		%	%	%	%	%	%	%
■ 전체	(1202)	68.2	15.9	8.7	6.1	1.0	0.2	100.0
■ 성별								
남자	(606)	71.7	14.6	7.2	5.0	1.5	0.2	100.0
여자	(596)	64.7	17.3	10.2	7.2	0.5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60.4	18.5	12.2	7.9	0.7	0.3	100.0
30대	(313)	67.8	17.3	9.2	4.4	1.3	0.0	100.0
40대	(305)	66.3	17.3	7.2	7.9	1.3	0.0	100.0
50대 이상	(279)	79.3	10.0	5.7	3.9	0.7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74.1	15.2	4.5	5.4	0.8	0.0	100.0
고졸	(491)	68.4	14.0	8.8	7.3	1.0	0.4	100.0
대재 이상	(581)	66.7	17.6	9.5	5.2	1.0	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69.2	19.2	3.8	7.7	0.0	0.0	100.0
자영업	(260)	74.7	11.8	6.2	5.8	1.2	0.4	100.0
블루 칼라	(250)	63.2	17.6	10.8	6.7	1.2	0.4	100.0
화이트칼라	(228)	66.7	20.7	6.1	4.8	1.8	0.0	100.0
전업 주부	(246)	71.6	11.3	10.1	6.5	0.4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63.2	19.0	11.0	6.3	0.5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67.9	17.0	7.1	6.7	1.3	0.0	100.0
200~299만원	(353)	65.8	16.6	9.6	6.8	0.8	0.3	100.0
300~399만원	(351)	70.6	13.1	9.5	6.3	0.6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68.6	17.6	7.4	4.5	1.5	0.4	100.0
모름/무응답	(5)	58.9	21.1	2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73.3	14.8	7.1	4.0	0.5	0.2	100.0
중부권	(118)	63.6	16.1	9.3	8.5	1.7	0.8	100.0
호남권	(118)	54.2	24.6	9.3	10.2	1.7	0.0	100.0
영남권	(324)	67.0	14.8	9.6	7.1	1.5	0.0	100.0
강원	(36)	58.3	8.3	25.0	8.3	0.0	0.0	100.0
제주	(13)	61.5	30.8	0.0	7.7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3.2	20.1	10.4	5.0	1.0	0.3	100.0
중도	(580)	70.2	14.5	7.4	6.9	1.0	0.0	100.0
보수적	(323)	69.3	14.5	9.3	5.6	0.9	0.3	100.0

표 36.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모름/ 무응답	없다	계
		%	%	%	%	%	%	%	%
■ 전체	(1203)	52.7	17.6	15.8	12.4	1.1	0.2	0.1	100.0
■ 성별									
남자	(606)	54.5	15.5	17.7	11.5	0.5	0.0	0.2	100.0
여자	(597)	50.9	19.7	13.8	13.4	1.7	0.5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51.6	17.4	9.6	20.1	1.0	0.3	0.0	100.0
30대	(313)	49.9	17.6	17.9	13.4	1.0	0.3	0.0	100.0
40대	(305)	51.9	19.3	15.4	12.1	1.3	0.0	0.0	100.0
50대 이상	(280)	58.1	16.0	20.6	3.5	1.1	0.4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53.0	21.9	18.3	4.5	1.5	0.8	0.0	100.0
고졸	(491)	55.4	17.7	16.4	9.3	1.0	0.0	0.2	100.0
대재 이상	(581)	50.5	16.6	14.7	16.9	1.0	0.3	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61.5	19.2	7.7	7.7	3.8	0.0	0.0	100.0
자영업	(260)	57.1	16.5	17.6	8.0	0.4	0.0	0.4	100.0
블루 칼라	(250)	47.7	20.4	19.6	11.5	0.8	0.0	0.0	100.0
화이트칼라	(228)	49.6	20.1	15.4	12.7	1.7	0.4	0.0	100.0
전업 주부	(247)	54.9	15.7	16.1	11.3	1.2	0.8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53.2	14.7	9.5	21.5	1.0	0.0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53.2	18.2	14.7	11.6	2.2	0.0	0.0	100.0
200~299만원	(353)	52.6	19.8	17.2	8.7	1.1	0.3	0.3	100.0
300~399만원	(352)	52.9	16.4	16.8	13.0	0.6	0.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53.1	16	13.4	16.4	0.7	0.4	0.0	100.0
모름/무응답	(5)	20.0	0.0	20.0	59.9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56.1	18.0	13.5	10.7	1.3	0.2	0.2	100.0
중부권	(118)	44.9	19.5	20.3	13.6	0.8	0.8	0.0	100.0
호남권	(119)	37.8	21.8	14.3	22.7	2.5	0.8	0.0	100.0
영남권	(324)	54.3	14.5	19.8	11.1	0.3	0.0	0.0	100.0
강원	(36)	63.9	16.7	8.3	11.1	0.0	0.0	0.0	100.0
제주	(13)	38.5	23.1	15.4	23.1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9.6	18.4	13.0	18.3	0.7	0.0	0.0	100.0
중도	(581)	53.9	18.4	15.3	11.0	1.0	0.3	0.0	100.0
보수적	(323)	53.5	15.5	19.2	9.6	1.5	0.3	0.3	100.0



표 37.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멋진플레이 보이는 팀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체	(1199)	68.0	8.4	9.8	13.6	0.1	0.1	100.0
■ 성별								
남자	(605)	69.3	8.8	9.6	12.2	0.2	0.0	100.0
여자	(594)	66.6	8.0	10.1	15.1	0.0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0.4	8.3	9.3	21.9	0.0	0.0	100.0
30대	(312)	70.5	5.1	8.0	15.8	0.3	0.3	100.0
40대	(304)	76.1	5.2	11.1	7.5	0.0	0.0	100.0
50대 이상	(280)	64.5	15.6	11.0	8.9	0.0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62.9	18.9	8.4	9.8	0.0	0.0	100.0
고졸	(490)	66.2	9.8	11.6	12.3	0.2	0.0	100.0
대재 이상	(578)	70.6	4.9	8.7	15.7	0.0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5)	64.0	20.0	12.0	4.0	0.0	0.0	100.0
자영업	(260)	71.3	8.4	10.3	9.2	0.4	0.4	100.0
블루 칼라	(250)	69.4	7.5	9.1	14.0	0.0	0.0	100.0
화이트칼라	(228)	71.4	4.4	10.5	13.7	0.0	0.0	100.0
전업 주부	(246)	64.8	10.9	9.3	15.0	0.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89)	62.1	9.6	9.6	18.6	0.0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3)	60.6	12.5	10.3	16.1	0.0	0.4	100.0
200~299만원	(352)	69.7	9.0	9.3	12.0	0.0	0.0	100.0
300~399만원	(350)	67.4	7.7	10.9	14.0	0.0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72.7	5.2	8.7	13.2	0.4	0.0	100.0
모름/무응답	(5)	60.5	0.0	19.5	2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66.8	8.3	10.3	14.3	0.2	0.2	100.0
중부권	(118)	72.9	10.2	8.5	8.5	0.0	0.0	100.0
호남권	(118)	82.2	3.4	6.8	7.6	0.0	0.0	100.0
영남권	(324)	62.7	9.9	11.1	16.4	0.0	0.0	100.0
강원	(36)	66.7	8.3	8.3	16.7	0.0	0.0	100.0
제주	(13)	84.6	7.7	0.0	7.7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74.3	9.0	8.3	8.0	0.0	0.3	100.0
중도	(577)	66.6	6.4	10.9	16.0	0.2	0.0	100.0
보수적	(323)	64.6	11.4	9.3	14.6	0.0	0.0	100.0

표 38-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3)	73.6	13.7	11.7	0.9	100.0
■ 성별						
남자	(606)	74.6	14.9	9.6	0.8	100.0
여자	(597)	72.6	12.5	13.9	1.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71.6	13.2	13.5	1.6	100.0
30대	(313)	70.6	17.9	10.6	0.9	100.0
40대	(305)	72.8	13.8	12.7	0.7	100.0
50대 이상	(280)	80.1	9.6	10.0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78.0	11.3	10.7	0.0	100.0
고졸	(491)	75.2	13.0	10.8	1.0	100.0
대재 이상	(581)	71.3	14.9	12.8	1.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3.1	15.4	11.5	0.0	100.0
자영업	(260)	78.5	12.6	8.4	0.4	100.0
블루 칼라	(250)	73.7	13.1	12.4	0.8	100.0
화이트칼라	(228)	71.9	16.3	11.0	0.9	100.0
전업 주부	(247)	73.8	12.1	13.3	0.8	100.0
학생/무직/기타	(191)	68.9	14.8	14.2	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71.0	17.8	10.3	0.9	100.0
200~299만원	(353)	74.8	12.2	12.4	0.5	100.0
300~399만원	(352)	75.6	13.1	10.2	1.1	100.0
400만원 이상	(268)	72.3	13.1	13.4	1.1	100.0
모름/무응답	(5)	39.5	19.4	41.1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77.2	12.5	9.8	0.5	100.0
중부권	(118)	68.6	15.3	13.6	2.5	100.0
호남권	(119)	63.0	14.3	21.0	1.7	100.0
영남권	(324)	74.1	14.8	10.2	0.9	100.0
강원	(36)	63.9	19.4	16.7	0.0	100.0
제주	(13)	69.2	7.7	23.1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8.9	13.4	16.7	1.0	100.0
중도	(581)	72.8	14.6	11.9	0.7	100.0
보수적	(323)	79.5	12.5	6.8	1.2	100.0



표 38-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3)	19.6	49.3	26.2	4.9	100.0
■ 성별						
남자	(606)	19.6	50.6	25.2	4.6	100.0
여자	(597)	19.6	48.0	27.3	5.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6.9	51.7	25.5	5.9	100.0
30대	(313)	19.6	53.6	22.7	4.1	100.0
40대	(305)	22.7	44.8	27.0	5.6	100.0
50대 이상	(280)	19.1	46.9	30.1	3.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4	44.6	35.7	5.3	100.0
고졸	(491)	21.4	46.3	26.8	5.5	100.0
대재 이상	(581)	19.2	52.9	23.5	4.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46.2	34.6	7.7	100.0
자영업	(260)	21.1	51.6	21.4	5.8	100.0
블루 칼라	(250)	18.0	45.9	31.3	4.8	100.0
화이트칼라	(228)	21.1	51.7	23.3	3.9	100.0
전업 주부	(247)	21.8	48.8	27.0	2.3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5.9	48.9	27.4	7.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3.5	47.7	34.3	4.5	100.0
200~299만원	(353)	21.6	48.7	23.8	5.9	100.0
300~399만원	(352)	19.9	51.5	23.8	4.8	100.0
400만원 이상	(268)	21.6	48.9	25.4	4.1	100.0
모름/무응답	(5)	20.0	38.8	41.1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2.3	49.8	23.2	4.7	100.0
중부권	(118)	19.5	48.3	25.4	6.8	100.0
호남권	(119)	15.1	40.3	34.5	10.1	100.0
영남권	(324)	15.4	52.2	29.0	3.4	100.0
강원	(36)	13.9	63.9	22.2	0.0	100.0
제주	(13)	53.8	7.7	38.5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7.4	51.1	26.1	5.4	100.0
중도	(581)	20.4	49.3	26.2	4.1	100.0
보수적	(323)	20.1	47.7	26.3	5.8	100.0

표 38-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3)	21.1	41.9	33.4	3.6	100.0
■ 성별						
남자	(606)	21.0	41.8	33.1	4.1	100.0
여자	(597)	21.2	42.0	33.7	3.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7.5	44.2	33.4	4.9	100.0
30대	(313)	21.7	43.0	33.3	1.9	100.0
40대	(305)	26.9	38.9	29.9	4.2	100.0
50대 이상	(280)	18.0	41.6	37.3	3.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4.5	43.8	37.1	4.6	100.0
고졸	(491)	21.5	39.7	35.2	3.6	100.0
대재 이상	(581)	22.3	43.4	31.0	3.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38.5	42.3	0.0	100.0
자영업	(260)	24.5	42.2	28.7	4.6	100.0
블루 칼라	(250)	20.8	39.0	36.9	3.2	100.0
화이트칼라	(228)	20.6	43.0	33.4	3.0	100.0
전업 주부	(247)	20.6	42.3	34.7	2.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8.4	44.2	32.2	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5.3	45.1	36.1	3.6	100.0
200~299만원	(353)	19.0	41.4	36.0	3.6	100.0
300~399만원	(352)	21.8	42.3	33.3	2.6	100.0
400만원 이상	(268)	27.9	39.6	27.7	4.8	100.0
모름/무응답	(5)	20.0	38.8	41.1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2.6	41.2	32.5	3.7	100.0
중부권	(118)	26.3	39.0	33.9	0.8	100.0
호남권	(119)	21.8	37.0	35.3	5.9	100.0
영남권	(324)	14.5	47.2	34.3	4.0	100.0
강원	(36)	19.4	41.7	38.9	0.0	100.0
제주	(13)	69.2	15.4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1.0	41.8	33.2	4.0	100.0
중도	(581)	20.9	44.7	32.2	2.2	100.0
보수적	(323)	21.6	37.2	35.7	5.5	100.0



표 38-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3)	28.0	39.8	29.8	2.3	100.0
■ 성별						
남자	(606)	28.3	40.6	29.4	1.8	100.0
여자	(597)	27.8	39.1	30.3	2.8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8.7	42.5	26.8	2.0	100.0
30대	(313)	31.1	40.3	26.3	2.2	100.0
40대	(305)	28.6	38.6	29.9	2.9	100.0
50대 이상	(280)	23.3	37.6	37.0	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9.8	39.3	39.4	1.5	100.0
고졸	(491)	26.7	38.1	31.4	3.8	100.0
대재 이상	(581)	31.0	41.4	26.3	1.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9.2	46.2	34.6	0.0	100.0
자영업	(260)	31.7	36.9	28.4	3.0	100.0
블루 칼라	(250)	25.6	36.8	35.6	2.0	100.0
화이트칼라	(228)	29.3	44.8	24.2	1.7	100.0
전업 주부	(247)	25.4	41.5	31.1	2.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9.4	39.0	28.5	3.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1.5	44.2	32.1	2.2	100.0
200~299만원	(353)	27.1	37.5	32.6	2.8	100.0
300~399만원	(352)	26.3	41.2	30.5	2.0	100.0
400만원 이상	(268)	36.8	37.8	23.2	2.2	100.0
모름/무응답	(5)	39.5	19.4	41.1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31.6	38.1	28.6	1.6	100.0
중부권	(118)	30.5	36.4	32.2	0.8	100.0
호남권	(119)	30.3	31.9	31.9	5.9	100.0
영남권	(324)	18.8	46.6	31.5	3.1	100.0
강원	(36)	22.2	52.8	25.0	0.0	100.0
제주	(13)	69.2	15.4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9.5	39.9	29.9	0.7	100.0
중도	(581)	27.7	42.5	27.4	2.4	100.0
보수적	(323)	27.3	35.0	34.1	3.6	100.0

표 39-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 전체	(1203)	65.0	0.7	32.3	2.0	100.0
■ 성별						
남자	(606)	66.4	0.8	31.6	1.1	100.0
여자	(597)	63.7	0.5	33.0	2.8	100.0
■ 연령별						
19~29세	(305)	60.0	1.3	36.4	2.3	100.0
30대	(313)	62.6	0.0	34.2	3.2	100.0
40대	(305)	60.0	1.0	37.6	1.3	100.0
50대 이상	(280)	78.7	0.4	19.9	1.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76.4	0.8	21.3	1.4	100.0
고졸	(491)	68.2	1.2	28.1	2.4	100.0
대재 이상	(581)	59.7	0.2	38.4	1.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3.1	0.0	26.9	0.0	100.0
자영업	(260)	70.7	0.8	26.5	1.9	100.0
블루 칼라	(250)	65.4	0.8	32.2	1.6	100.0
화이트칼라	(228)	61.0	0.4	36.4	2.2	100.0
전업 주부	(247)	64.8	0.8	32.0	2.3	100.0
학생/무직/기타	(191)	60.8	0.5	36.5	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64.2	1.4	32.7	1.8	100.0
200~299만원	(353)	65.5	0.3	32.5	1.7	100.0
300~399만원	(352)	69.6	0.9	27.3	2.3	100.0
400만원 이상	(268)	59.6	0.4	37.8	2.2	100.0
모름/무응답	(5)	39.5	0.0	60.5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65.5	0.9	31.8	1.8	100.0
충부권	(118)	66.9	0.0	32.2	0.8	100.0
호남권	(119)	58.0	0.8	39.5	1.7	100.0
영남권	(324)	66.0	0.6	30.2	3.1	100.0
강원	(36)	69.4	0.0	30.6	0.0	100.0
제주	(13)	53.8	0.0	46.2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68.1	1.7	28.5	1.7	100.0
중도	(581)	63.8	0.2	34.3	1.7	100.0
보수적	(323)	64.3	0.6	32.3	2.7	100.0



표 39-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㉔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모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무응답	
		%	%	%	%	%	%
■ 전체	(1202)	24.5	3.8	66.0	5.6	0.1	100.0
■ 성별							
남자	(606)	27.0	3.7	65.0	4.3	0.0	100.0
여자	(596)	22.0	3.9	67.0	7.0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2.5	3.3	68.0	6.2	0.0	100.0
30대	(313)	23.6	4.2	65.8	6.4	0.0	100.0
40대	(305)	23.3	4.6	69.1	3.0	0.0	100.0
50대 이상	(279)	29.0	2.9	60.7	7.1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20.5	3.1	68.9	7.5	0.0	100.0
고졸	(491)	29.2	5.1	59.6	6.1	0.0	100.0
대재 이상	(581)	21.4	2.8	70.8	4.8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7.7	80.8	0.0	0.0	100.0
자영업	(259)	27.5	5.1	60.5	6.9	0.0	100.0
블루 칼라	(250)	26.5	2.4	62.3	8.8	0.0	100.0
화이트칼라	(228)	21.5	3.1	71.9	3.5	0.0	100.0
전업 주부	(247)	24.2	4.4	65.8	5.2	0.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3.6	3.2	69.6	3.7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3)	24.1	5.0	67.8	3.1	0.0	100.0
200~299만원	(353)	24.6	2.3	66.4	6.5	0.3	100.0
300~399만원	(352)	28.3	3.1	62.3	6.3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19.7	5.6	68.7	6.0	0.0	100.0
모름/무응답	(5)	20.0	0.0	8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26.8	3.9	63.9	5.4	0.0	100.0
충부권	(118)	21.2	2.5	71.2	5.1	0.0	100.0
호남권	(119)	22.7	3.4	68.9	5.0	0.0	100.0
영남권	(324)	20.4	4.0	68.8	6.8	0.0	100.0
강원	(36)	38.9	5.6	47.2	5.6	2.8	100.0
제주	(13)	30.8	0.0	69.2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8)	25.2	4.4	66.7	3.7	0.0	100.0
중도	(581)	25.3	3.5	64.9	6.2	0.2	100.0
보수적	(323)	22.5	3.7	67.3	6.5	0.0	100.0

표 39-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㉔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모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무응답	
		%	%	%	%	%	%
■ 전체	(1201)	3.1	38.4	50.8	7.7	0.1	100.0
■ 성별							
남자	(606)	3.0	39.3	51.0	6.6	0.0	100.0
여자	(595)	3.2	37.4	50.5	8.7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9	37.3	49.2	8.6	0.0	100.0
30대	(313)	3.5	29.9	58.6	8.0	0.0	100.0
40대	(304)	2.7	40.4	50.1	6.9	0.0	100.0
50대 이상	(279)	1.1	46.9	44.6	7.1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1.5	48.8	39.0	10.7	0.0	100.0
고졸	(490)	4.1	40.6	47.4	7.9	0.0	100.0
대재 이상	(581)	2.6	34.2	56.3	6.8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46.2	50.0	3.8	0.0	100.0
자영업	(259)	1.9	46.3	44.0	7.7	0.0	100.0
블루 칼라	(250)	3.2	39.3	48.3	9.2	0.0	100.0
화이트칼라	(228)	3.5	32.9	55.3	8.3	0.0	100.0
전업 주부	(246)	3.3	34.3	55.7	6.4	0.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2	37.3	51.7	6.9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2)	3.6	33.8	52.2	10.3	0.0	100.0
200~299만원	(353)	2.8	36.0	54.9	5.9	0.3	100.0
300~399만원	(352)	3.1	42.9	47.8	6.2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3.1	39.8	47.5	9.7	0.0	100.0
모름/무응답	(5)	0.0	20.0	8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2.2	42.2	48.4	7.1	0.0	100.0
충부권	(118)	5.9	32.2	56.8	5.1	0.0	100.0
호남권	(119)	2.5	26.1	59.7	11.8	0.0	100.0
영남권	(324)	3.4	39.5	49.4	7.7	0.0	100.0
강원	(35)	2.9	34.3	51.4	8.6	2.9	100.0
제주	(13)	15.4	15.4	53.8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7)	4.1	35.7	53.9	6.4	0.0	100.0
중도	(581)	3.3	38.7	50.0	7.9	0.2	100.0
보수적	(323)	1.9	40.4	49.4	8.4	0.0	100.0



표 39-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모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무응답	
		%	%	%	%	%	%
■ 전체	(1201)	4.4	22.4	57.6	15.5	0.1	100.0
■ 성별							
남자	(606)	3.8	22.8	59.5	13.8	0.0	100.0
여자	(595)	4.9	22.0	55.7	17.3	0.2	100.0
■ 연령별							
19~29세	(305)	7.2	23.5	52.1	17.2	0.0	100.0
30대	(313)	4.8	16.2	64.0	15.0	0.0	100.0
40대	(304)	2.7	21.0	61.8	14.6	0.0	100.0
50대 이상	(279)	2.5	29.7	52.1	15.3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0)	3.1	27.3	48.9	20.7	0.0	100.0
고졸	(490)	4.1	26.2	53.8	15.9	0.0	100.0
대재 이상	(581)	4.8	18.1	62.8	14.0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3.8	23.1	65.4	7.7	0.0	100.0
자영업	(259)	1.5	27.2	54.3	17.0	0.0	100.0
블루 칼라	(250)	3.3	22.4	57.4	16.9	0.0	100.0
화이트칼라	(228)	6.6	16.2	63.6	13.6	0.0	100.0
전업 주부	(246)	4.9	22.1	58.5	14.1	0.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6.3	23.6	53.2	16.8	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2)	4.1	23.0	59.5	13.5	0.0	100.0
200~299만원	(353)	4.8	20.8	59.7	14.5	0.3	100.0
300~399만원	(352)	4.5	26.4	55.4	13.7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3.8	18.9	56.4	21.0	0.0	100.0
모름/무응답	(5)	0.0	20.0	60.5	19.5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3.3	25.2	55.8	15.8	0.0	100.0
중부권	(118)	6.8	20.3	59.3	13.6	0.0	100.0
호남권	(119)	3.4	16.8	64.7	15.1	0.0	100.0
영남권	(324)	5.6	20.7	57.4	16.4	0.0	100.0
강원	(35)	5.7	22.9	57.1	11.4	2.9	100.0
제주	(13)	7.7	7.7	69.2	15.4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7)	5.4	19.9	60.1	14.5	0.0	100.0
중도	(581)	4.2	24.0	55.6	16.0	0.2	100.0
보수적	(323)	3.7	21.8	59.0	15.5	0.0	100.0

표 4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전체	(1203)	4.4	29.0	33.4	55.1	11.5	66.6	100.0
■ 성별								
남자	(606)	4.6	27.3	31.9	53.7	14.4	68.1	100.0
여자	(597)	4.2	30.8	35.0	56.5	8.5	65.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9	24.7	28.6	55.8	15.5	71.4	100.0
30대	(313)	4.4	28.1	32.5	55.1	12.4	67.5	100.0
40대	(305)	2.7	30.1	32.8	56.1	11.2	67.2	100.0
50대 이상	(280)	6.7	33.7	40.4	53.2	6.3	59.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8	28.8	32.6	57.5	9.9	67.4	100.0
고졸	(491)	5.9	33.8	39.6	52.8	7.5	60.4	100.0
대재 이상	(581)	3.3	25.1	28.4	56.4	15.2	71.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30.8	30.8	50.0	19.2	69.2	100.0
자영업	(260)	6.4	30.4	36.8	53.3	9.9	63.2	100.0
블루 칼라	(250)	6.1	30.1	36.1	53.1	10.8	63.9	100.0
화이트칼라	(228)	1.8	28.1	29.9	55.2	14.9	70.1	100.0
전업 주부	(247)	4.1	32.6	36.6	58.1	5.3	63.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7	22.1	25.8	56.8	17.4	74.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7.1	28.2	35.4	54.8	9.9	64.6	100.0
200~299만원	(353)	3.9	31.4	35.3	55.0	9.7	64.7	100.0
300~399만원	(352)	3.9	28.5	32.5	55.7	11.9	67.5	100.0
400만원 이상	(268)	3.4	27.9	31.3	54.2	14.5	68.7	100.0
모름/무응답	(5)	0.0	0.0	0.0	80.0	20.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5.4	31.1	36.5	53.1	10.5	63.5	100.0
중부권	(118)	5.1	22.9	28.0	52.5	19.5	72.0	100.0
호남권	(119)	5.0	17.6	22.7	61.3	16.0	77.3	100.0
영남권	(324)	1.9	29.9	31.8	59.3	9.0	68.2	100.0
강원	(36)	5.6	41.7	47.2	41.7	11.1	52.8	100.0
제주	(13)	7.7	38.5	46.2	46.2	7.7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6	31.6	35.2	49.8	15.0	64.8	100.0
중도	(581)	4.6	26.8	31.5	58.5	10.0	68.5	100.0
보수적	(323)	4.6	30.7	35.3	53.8	10.9	64.7	100.0



표 4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④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3)	1.4	18.7	20.2	60.2	19.6	79.8	100.0
■ 성별								
남자	(606)	2.0	17.1	19.1	56.9	24.0	80.9	100.0
여자	(597)	0.8	20.4	21.2	63.6	15.2	78.8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6	19.2	20.8	56.7	22.4	79.2	100.0
30대	(313)	1.0	20.1	21.1	58.5	20.5	78.9	100.0
40대	(305)	1.6	14.6	16.2	64.8	19.0	83.8	100.0
50대 이상	(280)	1.4	21.3	22.7	60.9	16.3	77.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21.2	21.2	61.2	17.5	78.8	100.0
고졸	(491)	1.6	23.5	25.1	57.8	17.1	74.9	100.0
대재 이상	(581)	1.5	14.2	15.7	62.0	22.3	84.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19.2	19.2	53.8	26.9	80.8	100.0
자영업	(260)	2.7	17.3	19.9	61.7	18.4	80.1	100.0
블루 칼라	(250)	1.6	20.9	22.5	59.1	18.4	77.5	100.0
화이트칼라	(228)	1.3	15.4	16.7	62.6	20.7	83.3	100.0
전업 주부	(247)	0.8	21.8	22.6	62.5	14.9	77.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0.5	18.0	18.5	54.7	26.8	81.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2	21.9	24.1	59.8	16.1	75.9	100.0
200~299만원	(353)	1.4	19.6	21.0	60.3	18.7	79.0	100.0
300~399만원	(352)	0.9	17.3	18.2	60.6	21.3	81.8	100.0
400만원 이상	(268)	1.5	16.9	18.3	60.1	21.6	81.7	100.0
모름/무응답	(5)	0.0	19.5	19.5	60.5	20.0	8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3	23.4	24.7	57.2	18.1	75.3	100.0
중부권	(118)	0.8	11.0	11.9	61.9	26.3	88.1	100.0
호남권	(119)	3.4	15.1	18.5	61.3	20.2	81.5	100.0
영남권	(324)	0.6	12.7	13.3	65.7	21.0	86.7	100.0
강원	(36)	2.8	33.3	36.1	52.8	11.1	63.9	100.0
제주	(13)	7.7	23.1	30.8	53.8	15.4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1.3	20.8	22.1	53.2	24.7	77.9	100.0
중도	(581)	1.7	17.4	19.2	63.3	17.6	80.8	100.0
보수적	(323)	0.9	19.2	20.1	61.2	18.6	79.9	100.0

표 4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3)	1.2	12.8	13.9	65.7	20.3	86.1	100.0
■ 성별								
남자	(606)	1.0	11.3	12.3	63.7	24.0	87.7	100.0
여자	(597)	1.3	14.2	15.6	67.8	16.7	84.4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6	13.8	15.4	62.7	21.8	84.6	100.0
30대	(313)	1.3	10.8	12.1	67.8	20.1	87.9	100.0
40대	(305)	1.0	11.0	11.9	68.1	20.0	88.1	100.0
50대 이상	(280)	0.7	15.7	16.4	64.2	19.4	83.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16.7	16.7	59.0	24.2	83.3	100.0
고졸	(491)	1.4	15.5	17.0	66.2	16.8	83.0	100.0
대재 이상	(581)	1.2	9.5	10.7	66.8	22.4	89.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7.7	7.7	76.9	15.4	92.3	100.0
자영업	(260)	1.5	11.6	13.1	65.2	21.7	86.9	100.0
블루 칼라	(250)	0.8	15.4	16.2	61.5	22.4	83.8	100.0
화이트칼라	(228)	0.4	9.6	10.1	71.0	18.9	89.9	100.0
전업 주부	(247)	1.6	13.7	15.4	69.3	15.3	84.6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6	14.2	15.7	59.6	24.7	84.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2	18.4	20.6	59.3	20.1	79.4	100.0
200~299만원	(353)	1.4	11.6	13.0	68.3	18.7	87.0	100.0
300~399만원	(352)	0.9	10.9	11.7	66.8	21.5	88.3	100.0
400만원 이상	(268)	0.4	12.0	12.4	66.4	21.2	87.6	100.0
모름/무응답	(5)	0.0	19.5	19.5	60.5	20.0	8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0	12.6	13.6	66.7	19.7	86.4	100.0
중부권	(118)	0.0	12.7	12.7	66.1	21.2	87.3	100.0
호남권	(119)	4.2	16.8	21.0	60.5	18.5	79.0	100.0
영남권	(324)	0.3	9.9	10.2	66.0	23.8	89.8	100.0
강원	(36)	2.8	25.0	27.8	63.9	8.3	72.2	100.0
제주	(13)	7.7	23.1	30.8	61.5	7.7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0.7	12.4	13.1	62.6	24.3	86.9	100.0
중도	(581)	1.7	12.4	14.1	68.5	17.4	85.9	100.0
보수적	(323)	0.6	13.7	14.3	63.8	21.9	85.7	100.0



표 4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전체	(1203)	1.2	15.2	16.4	68.5	15.1	83.6	100.0
■ 성별								
남자	(606)	1.3	14.5	15.8	67.2	17.0	84.2	100.0
여자	(597)	1.0	15.9	16.9	69.9	13.2	83.1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3	15.2	17.5	67.7	14.9	82.5	100.0
30대	(313)	1.0	14.1	15.0	67.7	17.2	85.0	100.0
40대	(305)	0.6	14.3	14.9	70.4	14.7	85.1	100.0
50대 이상	(280)	0.7	17.5	18.2	68.4	13.4	81.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0.0	18.3	18.3	66.6	15.1	81.7	100.0
고졸	(491)	1.6	17.8	19.4	67.8	12.8	80.6	100.0
대재 이상	(581)	1.0	12.3	13.3	69.6	17.0	86.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0.0	11.5	11.5	76.9	11.5	88.5	100.0
자영업	(260)	1.5	15.4	16.9	67.1	16.0	83.1	100.0
블루 칼라	(250)	0.4	16.6	17.0	68.2	14.8	83.0	100.0
화이트칼라	(228)	0.4	12.7	13.1	71.9	15.0	86.9	100.0
전업 주부	(247)	1.2	15.4	16.6	70.9	12.4	83.4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6	16.4	19.0	62.6	18.4	8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2	21.6	23.8	61.9	14.3	76.2	100.0
200~299만원	(353)	1.1	15.4	16.5	68.0	15.5	83.5	100.0
300~399만원	(352)	1.1	9.7	10.8	74.2	15.0	89.2	100.0
400만원 이상	(268)	0.4	16.8	17.2	67.6	15.2	82.8	100.0
모름/무응답	(5)	0.0	19.5	19.5	60.5	20.0	8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2	15.2	16.3	68.7	14.9	83.7	100.0
중부권	(118)	0.0	13.6	13.6	67.8	18.6	86.4	100.0
호남권	(119)	2.5	24.4	26.9	59.7	13.4	73.1	100.0
영남권	(324)	0.6	10.2	10.8	72.8	16.4	89.2	100.0
강원	(36)	2.8	33.3	36.1	63.9	0.0	63.9	100.0
제주	(13)	7.7	23.1	30.8	53.8	15.4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0.3	15.5	15.8	62.9	21.3	84.2	100.0
중도	(581)	1.7	14.9	16.6	70.8	12.6	83.4	100.0
보수적	(323)	0.9	15.5	16.5	69.6	13.9	83.5	100.0

표 41.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문)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체	(1202)	43.5	46.9	90.3	6.8	2.7	9.5	0.2	100.0
■ 성별									
남자	(605)	45.6	44.1	89.7	7.2	2.8	10.0	0.3	100.0
여자	(597)	41.3	49.7	91.0	6.4	2.7	9.0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1.9	45.6	87.5	8.6	4.0	12.5	0.0	100.0
30대	(313)	45.7	43.8	89.5	7.0	3.5	10.5	0.0	100.0
40대	(304)	44.8	47.6	92.4	6.0	1.3	7.3	0.3	100.0
50대 이상	(280)	41.2	51.0	92.2	5.4	2.1	7.5	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0.5	58.9	89.3	8.4	2.3	10.7	0.0	100.0
고졸	(490)	38.7	51.9	90.6	6.2	3.0	9.2	0.2	100.0
대재 이상	(581)	50.4	39.9	90.3	6.9	2.6	9.5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76.9	92.3	3.8	3.8	7.7	0.0	100.0
자영업	(259)	46.9	44.6	91.5	5.5	3.1	8.5	0.0	100.0
블루 칼라	(250)	42.2	47.5	89.7	7.6	2.4	9.9	0.4	100.0
화이트칼라	(228)	51.3	41.7	92.9	6.2	0.9	7.1	0.0	100.0
전업 주부	(247)	38.4	51.9	90.3	6.5	3.2	9.7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1.5	44.8	86.3	9.0	4.2	13.2	0.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1.6	44.9	86.5	8.6	4.5	13.0	0.4	100.0
200~299만원	(353)	39.6	50.5	90.1	6.5	3.4	9.9	0.0	100.0
300~399만원	(352)	43.8	49.7	93.5	4.5	2.0	6.5	0.0	100.0
400만원 이상	(267)	49.6	39.8	89.4	8.7	1.5	10.2	0.4	100.0
모름/무응답	(5)	38.8	61.2	100.0	0.0	0.0	0.0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2.7	49.0	91.7	6.0	2.2	8.1	0.2	100.0
중부권	(118)	51.7	37.3	89.0	8.5	2.5	11.0	0.0	100.0
호남권	(119)	52.1	39.5	91.6	6.7	1.7	8.4	0.0	100.0
영남권	(323)	37.5	50.2	87.6	8.4	4.0	12.4	0.0	100.0
강원	(36)	44.4	44.4	88.9	2.8	5.6	8.3	2.8	100.0
제주	(13)	69.2	30.8	100.0	0.0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52.8	37.8	90.6	6.4	2.6	9.0	0.3	100.0
중도	(580)	40.9	50.3	91.2	6.9	1.9	8.8	0.0	100.0
보수적	(323)	39.4	49.1	88.5	6.9	4.3	11.2	0.3	100.0



표 42-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03)	45.1	47.8	92.9	5.2	1.8	7.1	100.0
■ 성별								
남자	(606)	47.2	46.0	93.2	4.0	2.8	6.8	100.0
여자	(597)	43.0	49.6	92.6	6.5	0.8	7.4	100.0
■ 연령별								
19~29세	(305)	42.9	47.5	90.4	6.6	3.0	9.6	100.0
30대	(313)	39.5	53.1	92.6	4.5	2.9	7.4	100.0
40대	(305)	48.5	45.6	94.1	5.2	0.7	5.9	100.0
50대 이상	(280)	50.2	44.5	94.6	4.6	0.7	5.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40.1	53.9	93.9	6.1	0.0	6.1	100.0
고졸	(491)	43.6	49.3	92.9	5.9	1.2	7.1	100.0
대재 이상	(581)	47.6	45.2	92.7	4.5	2.8	7.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46.2	42.3	88.5	11.5	0.0	11.5	100.0
자영업	(260)	53.9	42.2	96.1	2.7	1.2	3.9	100.0
블루 칼라	(250)	42.4	48.8	91.2	6.4	2.4	8.8	100.0
화이트칼라	(228)	45.0	47.9	93.0	4.4	2.7	7.0	100.0
전업 주부	(247)	40.2	53.0	93.1	6.5	0.4	6.9	100.0
학생/무직/기타	(191)	43.1	47.9	91.0	5.8	3.2	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4.1	47.8	92.0	6.7	1.3	8.0	100.0
200~299만원	(353)	41.7	50.9	92.7	6.8	0.6	7.3	100.0
300~399만원	(352)	46.8	46.9	93.8	3.1	3.1	6.2	100.0
400만원 이상	(268)	48.7	44.6	93.2	4.5	2.3	6.8	100.0
모름/무응답	(5)	19.5	60.5	80.0	20.0	0.0	2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46.9	47.9	94.7	3.7	1.5	5.3	100.0
중부권	(118)	48.3	44.1	92.4	5.9	1.7	7.6	100.0
호남권	(119)	40.3	49.6	89.9	6.7	3.4	10.1	100.0
영남권	(324)	44.4	45.7	90.1	7.7	2.2	9.9	100.0
강원	(36)	27.8	69.4	97.2	2.8	0.0	2.8	100.0
제주	(13)	46.2	53.8	100.0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48.1	44.6	92.6	5.0	2.3	7.4	100.0
중도	(581)	43.8	49.3	93.1	5.3	1.6	6.9	100.0
보수적	(323)	44.9	48.0	92.9	5.3	1.9	7.1	100.0

표 42-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전체	(1203)	20.3	59.0	79.3	16.2	4.5	20.7	100.0
■ 성별								
남자	(606)	21.4	57.9	79.3	15.0	5.7	20.7	100.0
여자	(597)	19.2	60.1	79.3	17.4	3.4	20.7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7.5	57.2	74.6	18.4	7.0	25.4	100.0
30대	(313)	16.6	63.2	79.8	15.7	4.5	20.2	100.0
40대	(305)	25.0	58.4	83.4	13.7	2.9	16.6	100.0
50대 이상	(280)	22.6	56.8	79.4	17.0	3.6	20.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7.4	59.7	77.2	17.5	5.3	22.8	100.0
고졸	(491)	19.5	59.0	78.5	17.8	3.7	21.5	100.0
대재 이상	(581)	21.7	58.8	80.5	14.5	5.1	19.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1.5	61.5	73.1	23.1	3.8	26.9	100.0
자영업	(260)	23.3	58.0	81.3	14.1	4.6	18.7	100.0
블루 칼라	(250)	22.0	55.7	77.7	18.3	4.0	22.3	100.0
화이트칼라	(228)	22.8	56.6	79.3	14.9	5.8	20.7	100.0
전업 주부	(247)	19.0	62.9	81.8	16.6	1.6	18.2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4.1	62.1	76.3	16.3	7.5	2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1.0	55.8	76.8	18.8	4.5	23.2	100.0
200~299만원	(353)	17.5	65.0	82.5	14.4	3.1	17.5	100.0
300~399만원	(352)	21.0	58.6	79.6	15.9	4.6	20.4	100.0
400만원 이상	(268)	22.6	54.6	77.2	16.4	6.4	22.8	100.0
모름/무응답	(5)	19.5	41.1	60.6	39.4	0.0	39.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9.3	62.5	81.8	13.9	4.3	18.2	100.0
중부권	(118)	24.6	50.0	74.6	20.3	5.1	25.4	100.0
호남권	(119)	21.8	50.4	72.3	19.3	8.4	27.7	100.0
영남권	(324)	19.8	59.3	79.0	17.0	4.0	21.0	100.0
강원	(36)	19.4	55.6	75.0	25.0	0.0	25.0	100.0
제주	(13)	30.8	61.5	92.3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2.4	55.5	77.9	16.1	6.0	22.1	100.0
중도	(581)	19.6	61.7	81.2	14.6	4.2	18.8	100.0
보수적	(323)	19.8	57.4	77.1	19.1	3.8	22.9	100.0



표 42-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3)	29.6	53.6	83.2	13.3	3.4	16.7	0.1	100.0
■ 성별									
남자	(606)	32.8	51.1	83.9	11.6	4.3	15.9	0.2	100.0
여자	(597)	26.4	56.1	82.5	15.0	2.5	17.5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28.0	51.6	79.6	15.4	4.7	20.1	0.3	100.0
30대	(313)	25.8	59.2	85.0	11.5	3.5	15.0	0.0	100.0
40대	(305)	35.4	50.2	85.6	12.1	2.3	14.4	0.0	100.0
50대 이상	(280)	29.4	53.2	82.6	14.2	3.2	17.4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22.0	58.2	80.3	15.9	3.8	19.7	0.0	100.0
고졸	(491)	27.4	55.9	83.3	14.0	2.7	16.7	0.0	100.0
대재 이상	(581)	33.2	50.5	83.8	12.1	4.0	16.1	0.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15.4	65.4	80.8	19.2	0.0	19.2	0.0	100.0
자영업	(260)	37.1	48.3	85.4	11.9	2.7	14.6	0.0	100.0
블루 칼라	(250)	31.6	51.6	83.2	12.4	4.4	16.8	0.0	100.0
화이트칼라	(228)	32.8	52.3	85.1	10.9	4.0	14.9	0.0	100.0
전업 주부	(247)	21.8	60.5	82.3	16.1	1.6	17.7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25.2	54.3	79.4	14.7	5.3	20.0	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28.2	52.2	80.4	14.7	4.9	19.6	0.0	100.0
200~299만원	(353)	25.7	56.3	82.0	15.8	2.0	17.7	0.3	100.0
300~399만원	(352)	31.2	54.9	86.1	10.2	3.7	13.9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34.2	49.7	83.9	12.3	3.8	16.1	0.0	100.0
모름/무응답	(5)	19.5	40.1	59.5	40.5	0.0	40.5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29.6	56.7	86.3	10.9	2.6	13.5	0.2	100.0
중부권	(118)	34.7	48.3	83.1	13.6	3.4	16.9	0.0	100.0
호남권	(119)	30.3	47.9	78.2	15.1	6.7	21.8	0.0	100.0
영남권	(324)	29.0	50.9	79.9	16.0	4.0	20.1	0.0	100.0
강원	(36)	11.1	61.1	72.2	25.0	2.8	27.8	0.0	100.0
제주	(13)	46.2	53.8	100.0	0.0	0.0	0.0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30.4	51.8	82.2	14.4	3.4	17.8	0.0	100.0
중도	(581)	28.2	56.7	84.9	11.8	3.3	15.1	0.0	100.0
보수적	(323)	31.5	49.6	81.1	14.8	3.7	18.6	0.3	100.0

표 42-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전체	(1203)	19.8	53.7	73.5	22.6	3.9	26.5	100.0
■ 성별								
남자	(606)	22.3	52.8	75.0	20.5	4.5	25.0	100.0
여자	(597)	17.4	54.6	72.0	24.7	3.4	28.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18.8	50.2	68.9	26.1	5.0	31.1	100.0
30대	(313)	18.1	53.2	71.3	24.9	3.8	28.7	100.0
40대	(305)	22.7	56.7	79.4	18.3	2.3	20.6	100.0
50대 이상	(280)	19.8	54.7	74.5	20.9	4.6	25.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13.0	60.5	73.5	21.9	4.6	26.5	100.0
고졸	(491)	17.7	54.7	72.4	24.8	2.9	27.6	100.0
대재 이상	(581)	23.3	51.2	74.5	20.9	4.7	25.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7.7	61.5	69.2	30.8	0.0	30.8	100.0
자영업	(260)	25.3	53.3	78.6	17.2	4.2	21.4	100.0
블루 칼라	(250)	20.4	51.2	71.6	24.4	4.0	28.4	100.0
화이트칼라	(228)	24.1	52.3	76.3	20.1	3.5	23.7	100.0
전업 주부	(247)	12.5	58.1	70.7	26.9	2.4	29.3	100.0
학생/무직/기타	(191)	17.8	52.1	69.9	23.7	6.4	30.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17.5	56.7	74.2	20.9	4.9	25.8	100.0
200~299만원	(353)	19.2	52.0	71.2	26.2	2.5	28.8	100.0
300~399만원	(352)	19.6	56.8	76.4	19.9	3.7	23.6	100.0
400만원 이상	(268)	23.0	49.5	72.5	22.3	5.3	27.5	100.0
모름/무응답	(5)	19.5	40.1	59.5	40.5	0.0	4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3)	18.5	56.1	74.6	22.2	3.2	25.4	100.0
중부권	(118)	28.0	48.3	76.3	19.5	4.2	23.7	100.0
호남권	(119)	21.0	47.9	68.9	23.5	7.6	31.1	100.0
영남권	(324)	19.4	52.8	72.2	24.1	3.7	27.8	100.0
강원	(36)	11.1	55.6	66.7	27.8	5.6	33.3	100.0
제주	(13)	30.8	61.5	92.3	7.7	0.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9)	22.4	48.2	70.5	25.8	3.7	29.5	100.0
중도	(581)	18.9	57.5	76.4	19.8	3.8	23.6	100.0
보수적	(323)	19.2	51.8	71.0	24.6	4.4	29.0	100.0



표 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02)	39.0	19.0	41.8	0.2	100.0
■ 성별						
남자	(605)	39.2	22.4	38.0	0.3	100.0
여자	(597)	38.7	15.6	45.7	0.0	100.0
■ 연령별						
19~29세	(305)	35.9	20.8	42.6	0.7	100.0
30대	(312)	41.0	18.9	40.1	0.0	100.0
40대	(305)	44.8	16.6	38.6	0.0	100.0
50대 이상	(280)	33.7	19.9	46.4	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1)	37.1	14.5	48.5	0.0	100.0
고졸	(490)	37.2	21.6	41.2	0.0	100.0
대재 이상	(581)	40.9	17.9	40.9	0.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6)	50.0	15.4	34.6	0.0	100.0
자영업	(259)	35.7	18.9	45.4	0.0	100.0
블루 칼라	(250)	40.2	20.5	39.3	0.0	100.0
화이트칼라	(228)	40.8	17.6	41.6	0.0	100.0
전업 주부	(247)	37.9	19.0	43.1	0.0	100.0
학생/무직/기타	(191)	39.4	19.4	40.0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24)	40.6	18.8	40.6	0.0	100.0
200~299만원	(353)	41.6	19.6	38.8	0.0	100.0
300~399만원	(352)	39.7	21.1	39.2	0.0	100.0
400만원 이상	(268)	33.6	15.7	49.9	0.8	100.0
모름/무응답	(5)	21.1	19.4	59.5	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2)	35.2	19.7	44.7	0.4	100.0
중부권	(118)	42.4	13.6	44.1	0.0	100.0
호남권	(119)	47.1	13.4	39.5	0.0	100.0
영남권	(324)	40.4	21.9	37.7	0.0	100.0
강원	(36)	36.1	19.4	44.4	0.0	100.0
제주	(13)	76.9	15.4	7.7	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98)	46.2	17.2	36.6	0.0	100.0
중도	(581)	39.7	17.1	42.8	0.4	100.0
보수적	(323)	30.9	24.1	45.0	0.0	100.0

3. 설문지

A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Gallup 200916072

2009 통일의식조사

A1-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기관:



소장: 박 명 규 교수
전화: 880-4052

2009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홍승효
실사연구원 진신영
주소 서울시 중로구 서직동 208
전화 02-3702-2665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A6-7 15. 경남 16. 제주

지역크기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성별 :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10-11 만 _____ 세 → 만 19세 이상만 조사 진행하십시오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2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13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료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4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16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17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18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19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20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21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22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23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2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26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을 것 : _____)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7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8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29	㉠ 빈부격차	1	2	3	4	5
30	㉡ 부동신투기	1	2	3	4	5
31	㉢ 실업문제	1	2	3	4	5
32	㉣ 범죄문제	1	2	3	4	5
33	㉠ 지역갈등	1	2	3	4	5
34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35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36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37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가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3)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8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9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0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1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7)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2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43	㉠ 선군정치	1	2	3	4
44	㉡ 주체사상	1	2	3	4
45	㉢ 천리마운동	1	2	3	4
46	㉣ 고난의 행군	1	2	3	4
47	㉠ 정미당	1	2	3	4
48	㉡ 이리랑 축전	1	2	3	4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49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적	1	2
50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1	2
51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셜 등을 접해본 적	1	2
52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1	2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53	㉠ 선거방식	1	2	3	4
54	㉡ 생활수준	1	2	3	4
55	㉢ 법률제도	1	2	3	4
56	㉣ 언어사용	1	2	3	4
57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58	㉡ 가치관	1	2	3	4

문 21)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9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2)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0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3)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1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4)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2
1. 대폭 늘려야 한다
 2.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 조금 줄여야 한다
 5. 대폭 줄여야 한다

문 25)로 기입시오

문 24-1) (보기카드 5 제시)

현재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63-64
1.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2.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4.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25)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5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6)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6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7) ○○님은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7
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 28) ○○님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협정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8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29)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회색이 따르더라도 개선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69 ㉠ 약간의 회색이 따르더라도 개선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70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2	3	4	5
71 ㉢ 대북 배려 실효를 정부가 미아야 한다	1	2	3	4	5
72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73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1	2	3	4	5

문 30)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74	㉠ 북한의 책임	1	2	3	4	5
75	㉡ 한국의 책임	1	2	3	4	5
76	㉢ 미국의 책임	1	2	3	4	5
77	㉣ 중국의 책임	1	2	3	4	5
78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1)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79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2)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80	㉠ 동네 이웃	1	2	3	4	5
81	㉡ 직장 동료	1	2	3	4	5
82	㉢ 사업 동업자	1	2	3	4	5
83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3)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86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8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9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10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5)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11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6) (보기카드 7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2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7)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13-14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38)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15	㉠ 미국	1	2	3	4
16	㉡ 일본	1	2	3	4
17	㉢ 중국	1	2	3	4
18	㉣ 러시아	1	2	3	4

문 39) (보기카드 9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19	㉠ 미국	1	2	3	4
20	㉡ 일본	1	2	3	4
21	㉢ 중국	1	2	3	4
22	㉣ 러시아	1	2	3	4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	㉠ 미국	1	2	3	4
24	㉡ 일본	1	2	3	4
25	㉢ 중국	1	2	3	4
26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7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하지 편이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28	㉠ 미국	1	2	3	4
29	㉡ 일본	1	2	3	4
30	㉢ 중국	1	2	3	4
31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2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33	㉠ 4·19	1	2	3	4	5
34	㉡ 5·16	1	2	3	4	5
35	㉢ 10월 유신	1	2	3	4	5
36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37	㉠ 6월 항쟁	1	2	3	4	5
38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5)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9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
5. 잘 모름

문 46)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40	㉠ 빈부격차	1	2	3	4
41	㉡ 부동신투기	1	2	3	4
42	㉢ 실업문제	1	2	3	4
43	㉣ 범죄문제	1	2	3	4
44	㉠ 지역갈등	1	2	3	4
45	㉡ 이념갈등	1	2	3	4
46	㉢ 반미정서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 문 47)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7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 문 48)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8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 문 49)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9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 문 50)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0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문 51) ○○님은 다음의 행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가끔씩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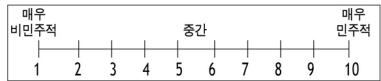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가끔씩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51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1	2	3	4
52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1	2	3	4
53 ㉢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	1	2	3	4

- 문 52) ○○님은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4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 문 53) (보기카드 10 제시)
그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 문 54)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7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58-59

-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 가정주부
-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 군인/경찰
- 무직
- 기타 (적용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다?
 조사원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60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조사원 중되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1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62-63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 (적을 것 : _____)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64-65 1. 월 49만원 이하 7. 월 300 - 349만원
 2. 월 50 - 99만원 8. 월 350 - 399만원
 3. 월 100 - 149만원 9. 월 400 - 499만원
 4. 월 150 - 1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5. 월 200 - 24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6. 월 250 - 2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맥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66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7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68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69-70 1. 서울 10. 충청북도
 2. 부산 11. 충청남도
 3. 대구 12. 전라북도
 4. 인천 13. 전라남도
 5. 광주 14. 경상북도
 6. 대전 15. 경상남도
 7. 울산 16. 제주도
 8. 경기도 17. 북한
 9. 강원도 18. 외국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71-73) - (74-77) - (78-81) 2. 휴대폰 지역번호 82-84 국 85-88 번호 89-92 () - () - ()
조사 일시	93 월 94-95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96-97
협조 정도	1. 상 2. 중 3. 하 98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99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100-104

Supervisor	검 증 원
105-107	

2009 통일외식조사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